

실업과 지역사회

박준식 편

한림대학교출판부

실업과 지역사회

차 례

서문 /	5
------------	---

제1부 경제위기와 실업 상황의 조망

제1장 IMF 경제위기 이후의 노동시장과 실업현황	방하남 · 19
-----------------------------------	----------

제2부 지역사회와 실업

제2장 춘천의 노동시장과 실업구조 및 실업자 상황	신광영·박준식 · 55
제3장 전북지역의 실업문제와 지역사회의 대응	남춘호 · 101
제4장 울산지역의 실업문제와 지역사회의 대응	이성균 · 147
제5장 부산지역의 실업과 지역사회의 대응	김석준 · 177

제3부 실업자의 사회적·심리적 상황

제6장 실직자들의 심리적 반응: 춘천지역 사례	조은경 · 213
제7장 실업의 사회적 측면: 춘천지역 사례	이재혁 · 259

서 문

IMF 경제위기 직후 2년여 기간동안 한국사회는 전례 없는 고용 불안을 경험하였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휴·폐업과 도산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가장 급격하고 대규모적인 진행 양상을 보여주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로 진행된 급격한 구조조정의 충격파는 대규모 실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업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로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대응은 거시 경제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국적 수준의 하향적 프로그램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나머지 정작 실업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지역의 실정과 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실업자 대책 사업의 경우 중앙 정부에서 지역 인구를 감안하여 정부 예산을 할당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렇게 할당된 예산을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집행하는 수동적 집행 기관 역할만 수행했다. 그러나 실업의 충격이 지역에 미친 영향은 그 내용적 시간적 측면에서 대단히 다양한 내용을 지닌 것이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 역시 지역의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업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지역의 실업 문제에 대한 체계

적인 이해를 위한 노력은 매우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실업의 문제를 고민해 온 지역의 사회과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중앙에 의존하는 하향적 실업 대책이 아니라 지역의 구체적 상황과 요구에 긴밀히 연관된 밑으로부터의 실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역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실업의 충격이 지역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실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증 연구로 이어졌던 것이다. 지역에서 이루어진 실업 연구들은 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지역의 연구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결합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그러한 점에서 기존의 중앙 중심적, 하향적 대응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이었다.

이 책은 실증적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실업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연구 자료와 경험을 함께 공유한 결과를 정리해 본 것이다. 연구자들은 98년 겨울부터 전국의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진행되었던 실업 상황에 대한 연구를 종합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연구 작업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99년 10월 15일 한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한 「실업과 지역사회의 대응」이라는 학술 토론회를 통해 종합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이 학술 토론회에 발표된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모아 하나의 단행본으로 엮어 낸 것이다.

이 책의 1부를 구성하는 첫 번째 글에서 방하남은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과 실업의 전국적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방하남은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가 선진국과는 달리 자영업부문이 상대적으로 넓어 공식 부문에서의 실업 충격의 완충작용을 해 왔으나 이번 경제위기에서는 자영업부문마저 기반이 무너짐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대량

실업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하남은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가 하나의 일회적 사건이라기보다 구조적 뿌리를 지닌 것임을 지적한다.

그 첫 번째 이유로 그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그간 세계 경제 체제로 보다 깊숙이 편입되면서 세계화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체제의 세계화는 자본과 노동의 국가간 이동의 광역화 및 가속화를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의 유동적이고 초국가적인 이동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유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러한 운동원리에 의해 한국의 노동시장도 고용 및 실업구조에 있어서 앞으로 상당부분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짧은 기간에 급격한 실업률 상승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한국 노동시장의 취약한 취업 구조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의 경우 아직도 취업계층 중 자영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만큼 임금부문의 일자리가 제한적이다. 또한 임금부문 내에서도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간에 보상수준의 차이와 이동 벽이 높아 직장이동이 자유롭지 못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경직성도 취업구조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는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개별 노동자의 요구임금에 있어서의 경직성에서만 찾아서는 안 되고 구조 자체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그는 IMF 경제위기가 노동시장 내에서 기술과 학력수준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충격을 미쳤다는 것을 지적한다. 저학력-저기술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한계계층들은 앞으로 진행될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경기변동에 따라서 고용의 안정성이 가장 크게 위협받는 계층이며, 산업구조가 선진화되고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안정적 재취업은 쉽지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는 경제의 세계화와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한계계층의 고용불안정 문제와 함께 저성장—고실업시대가 정착될 경우 장기실업자의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책의 2부에서부터는 실업이 산업 및 고용 구조의 특성을 달리하는 지역사회들마다 어떠한 특성을 갖고 전개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지역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거시 수준에서 발견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거시와 미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논문인 신광영과 박준식의 글은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 특성 및 IMF 이후 실업의 전개 과정, 실업자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지역 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주목한다. 이들은 동일한 지역에서도 전혀 성격이 다르고 서로간에 노동력 이동이나 정보의 교환이 존재하지 않는 두 개의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춘천의 경우 그 하나는 노동력의 이동이 높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임금 수준이 낮으면서, 지역 자체의 내부적 순환 구조를 갖는 업종의 노동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은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 중소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대표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노동력 이동은 주로 사적 연결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는 다른 한 축에서는 안정된 고용과 낮은 노동 이동,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 조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업종의 노동시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은 공공 부문에서 주로 발견된다. 공공 부문에서의 노동시장은 IMF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노동력의 이동은 지역 내 순환보다는 지역간 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다.

구인 및 구직 방식에서도 이 부분은 사적 연결망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훨씬 공식적 성격이 강한 경향을 보인다. 결국 동일한 지역에서도 노동시장의 작동 방식, 정보의 흐름은 부문에 따라 큰 분절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고, 노동시장 정책 역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역 노동시장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구직 및 구인 혹은 정부 정책 등의 전달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공공부문, 민간 대기업 부문을 제외한 여타의 부문들에서 사회적 연결망은 구직과 구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 사회복지의 전달과 관련된 정보의 흐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의 전달, 채용 정보 등에서 개별 노동시장별로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연고적 관계망의 작동 방식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춘천 지역의 경우 실업자의 84.3%가 춘천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는 지역 실직자들의 절대 다수가 토착민들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실업 남성들의 절대 다수는 기혼·가장들이므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미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실업의 영향을 받고, 그 위협에 노출되는 사람들 역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인구층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도 실직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기관의 실업 대책 사업에 기대하는 경우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개인이나 국가가 아닌 사회 단체, 혹은 공동체 수준에서의 도움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부의 두 번째 논문은 전북지역의 실업과 지역사회의 대응 분석에 할애되고 있다. 여기에서 남춘호는 전북지역의 실업률이 99년 2월 8.4%를 피크로 점차 하락하여 99년 10월에는 2.8%대로 내려가 표면상 실업

의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98년 하반기부터 99년의 기간 동안 고용회복을 주도한 것은 임시직 일용직과 공공근로사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IMF 이후 고용의 질적 수준은 도리어 악화되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고용의 원충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농업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의 기능 역시 기대와는 달리 고용 흡수력이 예상보다 적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여성실업자의 경우 50% 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에 비해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저학력층과 고령층, 생산직, 임시고·일고 등의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생산적 복지'(workfare)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춘호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 역시 일정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실업극복활동에 참여해 왔으나, 활동의 무게중심이 실업문제 전반에 대한 대정부 대자본 비판자의 역할로부터 실업자들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로 이동하게 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기관들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운동단체들의 실업극복 활동은 한국의 민간복지모형을 새롭게 수립하는 실험이 될 수도 있으나, 자칫하면 자원 동원을 위한 일과성 행사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울산지역의 실업과 지역사회의 대응을 다루고 있는 이성균의 논문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대규모 사업장들이 집중된 지역을 다루고 있다. 울산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도시로서, 대공장과 하청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매우 높지만,

사회간접자본이나 사회서비스산업은 다른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광공업 대공장이나 하청계열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의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며, 대공장의 고용조정은 대규모 인원을 실업자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일부 사업체의 경영위기와 고용조정이 실업자 발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지닌다.

IMF 경제위기가 닥치자 울산시를 비롯한 공공 기관에서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직업훈련·저소득층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민간사회단체들은 '실업극복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상담·무료진료·실직자쉼터·실직자교육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필자는 제한된 예산으로 참가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업대책참가 인원선정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직업훈련 수료자들의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을 나타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필자는 산업구조가 갖는 특성상 여성과 일용직 출신자의 실업문제가 지속될 것이므로,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실업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취업 경력이 있는 실업자를 중심으로 생산적 분야로의 취업 알선을 강화하고, 취업 경력이 없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직업교육과 취업 알선을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2부의 네 번째 논문은 부산지역의 실업과 지역사회의 대응 문제를 다룬다. 이 논문의 필자인 김석준에 따르면 부산지역 경제는 80년대에 들어서면 주종산업인 신발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서서히 침체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주변 공업지역의 독자성이 강화되면서 동남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도 현저히 위축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특히 제조업 부문이 침체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일상화됨에 따라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급속히 줄어들고 그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수준도 점차 열악해졌다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있다.

필자에 따르면 부산지역은 주종산업인 신발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제조업 종사자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IMF 이전부터도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였다. IMF의 충격과는 기뻝이나 취약한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부산지역의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IMF 직후인 1998년 한해 동안으로 실업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99년 1/4분기에는 전국 최고 수준인 11.4%로 두 자리를 넘기게 된다.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시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여러 가지 실업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였지만,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업대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부산의 실업 문제가 IMF 사태 이전부터 만성화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인 데다가, 그나마 정부의 실업 정책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여지나 행정적 의지, 그리고 조직적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부산 지역실업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활동과 역할에 주목한다. 그러나 민간 차원의 실업대책 활동은 자발성과 적극성, 효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마련의 어려움, 행정기관의 협조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사회 운동과 실업 대책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 책의 제3부는 지역 실직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실직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실직 상황에 대해 어떠한 심리적·사회적 대응을 보이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논문인 「실직자들의 심리적 상태와 적응」이라는 글에서

조은경은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정서적 반응, 인지적 반응, 행동적 반응의 형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춘천에 대한 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여성 가장 실직자, 40대~50대 실직자, 저학력 실직자 집단이 실직의 충격을 더 강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더 강하게 하고 있었으며 구직에 대한 자신감은 훨씬 낮았고 재취업에 대한 희망도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실업에 대한 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직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취약한 집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다음으로 필자는 가족 외부로부터 기대하는 금전적 도움이나 구직·창업의 도움이 우울감이나 적대감 등의 부정적 정서 경험을 완화시킬 수 있고 재취업의 기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난 완화 정책이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의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직자들 사이에 정부의 실업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직자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직업훈련이나 공공근로사업 등 불안정 고용 형태를 통한 실업 대책은 일시적인 생계 대책이 될 수는 있지만 실직자들의 재활의지를 고양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하는 실업 대책 사업들이 실질적 취업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실직자들의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는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필자는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인 반응들은 경제적 곤란이 해소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회복되겠지만 그 해결 방법이 안정된 취업과 궁극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심리적 붕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3부의 두 번째 이재혁의 논문은 실직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실직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하는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실업의 사회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

료를 제공한다. 예상했던 바 실직자들은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의 사회적 관계가 다소 악화되고, 사회적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실직자들이 가족 성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수록 실업으로 인한 부정적 행동 양식들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 가정이 실업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붕괴되지 않았다면 사회와의 연결도 살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직자들이 경험하는 실직 후 사회적 관계를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계와 부모·형제 관계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를 벗어나서 친인척 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모두 다소의 악화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 관계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으며 기타 가족관계, 친인척과 친구관계, 그리고 이웃관계 등 사회적 거리가 멀수록 비교적 덜 타격을 받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사회적 관계의 타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업의 상황에서 실직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통한 기대 수준 역시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실직자들은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 기능성에 대해 담보능력의 제한 등으로 인해 상당히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연고관계를 통한 기대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웃, 동호인이나 옛 직장동료 등을 통한 대출의 어려움도 금융권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친인척과 친구, 그리고 형제의 순서로 기대수준이 나아지다가 부모, 자녀의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대출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대출의 경우 공식적인 금융제도의 통로가 크게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 자녀나 형제 등 가족 관계에 보다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의존도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기대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한 도움의 여지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관계의 도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직자들의 사회관계를 통한 도움에 대한 기대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사적 관계를 통한 실업극복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각 측면들에 대해 혈연관계와 비혈연관계를 비교해 보면 각 측면들에서 공통적으로 혈연관계의 도움이 비혈연관계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출과 특히 격려의 경우 혈연적 관계에서의 도움은 상대적으로 확연히 높은 편이지만, 구직의 경우는 혈연과 비혈연 간의 구분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업자들은 사적 관계를 통한 도움을 별로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대수준 안에서는 혈연을 통한 도움을 비혈연을 통한 도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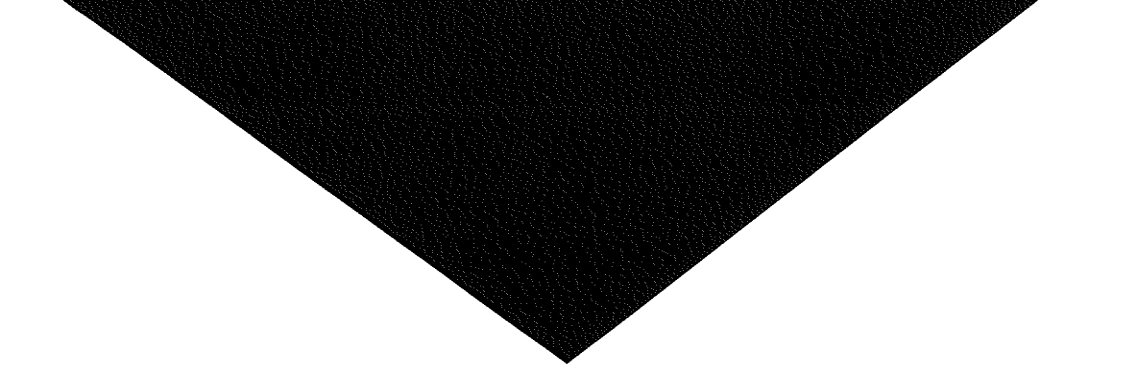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는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IMF 경제위기라는 초유의 상황은 한국사회에 실업이라는 상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의 경험은 한국의 다양한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는 그 충격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견디어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조금씩 사라져갈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는 다시 지난 2년 여의 기간을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어두운 기억 정도로 망각 속에 파묻어 두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실업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절실한 문제의식을 남겨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현실을 냉철히 파악하고, 지역의 실정에 걸맞는 실업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밑으로부터의 노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자들은 실업의 현실을 심각하게 인

식하고, 이에 진지하게 대처하려는 각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얼마 안 되는 조직적 역량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의 사회운동 조직들은 앞으로 실업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자생적 노력들과 연구자들의 진지한 관심,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의 노력이 함께 연결되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실업에의 대응 방안을 창조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실업의 경험은 커다란 역사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연구가 이러한 방향에서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0년 7월 10일 저자 대표

박 준 식



제 1 부

경제위기와 실업 상황의 조망

IMF 경제위기 이후의 노동시장과 실업현황 / 방하남

IMF 경제위기 이후의 노동시장과 실업현황

방하남*

I. 문제제기

지난 30여 년간 고속성장 속에서 저실업을 구가해 왔던 한국경제는 1997년 12월 IMF 구제 금융체제로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대량실업사태와 노사갈등, 가족해체, 자살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사실상 저성장과 고실업의 문제는 세계경제적으로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가들도 공통적으로 겪어왔던 문제이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서구경제는 정치적 안정과 고성장에 힘입어 실업률이 2~4% 수준에 머무르는 소위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을 추구하거나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오일쇼크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적인 경제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실업률이 6~10%에 이르는 고실업시대를 겪어 왔다. 지속적인 고실업과 함께 소득불평등 정도의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증가와 노동계층의 양극화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특히 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펼쳐왔던 영국과 미국에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ILO, 1996). 그러나 선진국가들은 오랜 자본주의 발전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공황과 대량실업의 문제를 겪으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나름대로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장기적 고실업을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그 동안 60년대 이후 고성장 과정 속에서 대량실업의 문제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실업에 대비한 제도가 미비하였다. IMF 외환 위기에서 시작된 기업의 대량부도 사태에 따라 실업률이 갑자기 6~7%를 웃도는 대량실업사태를 겪게 되자 우리 사회는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위기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실업은 개별 근로자의 소득원의 상실로 인한 빈곤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계형 범죄, 가족해체,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이탈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노사갈등 등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면서 우리가 쉽게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정치적·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 더욱이 한국 경제가 경기회복기에 접어들더라도 고실업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WTO체제의 출범 이후 가속화되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실업과 고용안정문제에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생산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신속한 이동은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과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세계화 시대의 부작용으로서 고실업과 고용불안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실업문제는 외환위기라는 일과성의 쇼크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국내경제(생산과 분배)의 구조적인 모순과 한국경제의 세계경제체제로의 보다 깊은 편입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과정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MF 사태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대

량실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실업의 문제를 살펴본다. 둘째,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와 실업구조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본다. 셋째, IMF 이후 최근의 실업률 추이 및 그 구조를 살펴본 후 실업정책의 대안들을 제시해 본다.

Ⅱ. 세계화시대 노동시장의 변화와 실업문제

1. 세계화의 특징

21세기는 세계화 시대(globalization) 또는 글로벌 경제(global economy)로 특징 지워진다. 소위 글로벌 경제의 특징은 생산 및 교통,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로 세계 경제가 급속히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면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기업간 국가간의 산업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는 시대를 의미한다(Kanter and Pittinsky, 1997: 1-2). 즉 글로벌 경제란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증대, 금융 및 자본의 자유로운 국가간 이동, 노동의 국가간 이동성 증가,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팽창을 의미한다.

사실상, 세계화 과정은 어느 한시기에 급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세계적 사회변동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와 WTO체제의 출범은 세계경제를 하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만들면서 경제의 세계화과정을 더욱 가속시키는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세계화의 특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속히 증가하는 세계 무역량을 보면 여실히 증명이 된다. 그러나 무역거래량의 증가만큼,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거나 고용의 증대를 가져오지

〈표 1〉 세계 무역량 증가 추이(재화와 서비스), 1974~95

(단위 : %, 연평균)

	1974~83	1984~89	1990~93	1994	1995
무 역 량	3.1	6.4	4.6	8.7	8.0
가 치	8.9	3.0	1.2	2.1	8.0
수 출 량	3.9	5.9	4.2	8.1	6.9
수 입 량	2.8	3.3	9.5	8.5	11.1

자료 : World Employment 1996/97.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시대에 나타나는 생산부문의 중요한 특징은 생산의 유연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 현상일 것이다. 산업경쟁과 생산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인 포드주의(Fordism)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 또는 네오포디즘(Neo-Fordism)으로 불리는 생산의 유연화 현상이다(Blyton and Morris, 1991). 이러한 생산의 유연화는 노동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세계화시대의 노동시장과 실업에 대한 전망

세계화시대에 대한 낙관론자들은 세계경제가 개방화될수록 교역량의 증대에 따라 경제성장이 회복되고 그 동안의 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표 2>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화가 획기적인 경제성장이나 고용의 증가를 가져오기는 힘들듯 하다. 오히려 생산기술의 발전과 산업경쟁의 심화는 생산조직의 유연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고용불안 및 실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Brunhe, 1989).

이러한 현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로로 나타날 가능성이

〈표 2〉 세계 경제성장률(실질 GDP), 연평균 증가율

	1981~90	1991~93	1994	1995
세 계 전 체	1.2	-0.4	1.2	1.4
O E C D 국 가	2.2	0.6	2.3	2.3
동구유럽/중앙아시아	1.6	-9.8	-7.9	-0.8
발 전 도 상 국 가	1.2	2.6	2.7	3.2

자료 : World Employment 1996/97.

〈표 3〉 OECD국가들의 고용증가율과 실업률

	고용증가(employment)			노동력(labor force)			실업률(unemployment)		
	1984~ 1994	1995	1996	1984~ 1994	1995	1996	1984~ 1994	1995	1996
북 미	1.6	1.5	1.8	1.4	1.3	1.5	6.6	6.0	5.8
동 아 시 아	1.6	0.7	0.9	1.6	0.8	1.1	2.6	2.9	3.0
중앙, 서구유럽	0.6	0.5	0.0	0.6	-0.2	0.1	8.6	9.6	9.8
남 부 유 럽	0.7	1.0	1.6	0.9	0.8	1.2	11.1	12.7	12.3
노 르 디 국 가	-0.6	1.8	0.8	0.9	0.8	0.2	6.1	9.8	9.3
오 세 아 니 아	1.7	4.2	1.7	1.8	2.8	1.6	8.2	8.2	8.1
O E C D 유 럽	0.5	0.7	0.6	0.6	0.2	0.5	9.3	10.6	10.5
전체 O E C D	1.1	1.1	1.0	1.1	0.7	1.0	7.1	7.6	7.5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1977.

높다. 첫째로, 시장경쟁의 심화로 노동비용의 절약에 대한 강한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둘째로, 노동의 협상력 약화로 노동의 수요곡선이 점점 탄력적으로 되며, 셋째로, 국제자본이 노동비용이 큰 지역에서 작은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과거의 보호무역시대와는 달리 정부의 규제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ILO, 1996: 4-5).

이와 같은 세계화가 노동시장구조에 미치는 압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추세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로, 노동시장의 양극화현상이다. 이는 과거의 포디즘에서는 표준화된 생산작업에 의해 단순기술을 요구하는 다수의 노동자를 필요로 하였으나, 생산과정의 컴퓨터화

는 다기능을 요구하는 핵심 고급기술인력과 다수의 파트타임 주변노동자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산업구성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식산업의 증가로 인해 서비스업의 노동자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계화가 노동에 미치는 극단적인 비판론은 차치하고라도 앞의 <표 2>,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으리라는 것이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진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율에서도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렵고 다만, 오히려 서구의 경우 장기적인 고실업시대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제기되는 이슈는 이제는 과거의 “완전고용”의 시대는 지나가고 변화하는 생산시장과 노동시장의 논리에 따라 자연실업률도 훨씬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에 대한 비판적인 전망이 반드시 과거의 케인즈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완전고용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각 국가의 노동시장의 제도적 특징에 따라 좀더 낙관적인 고용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실업에 의해 비롯되는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과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완전고용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ILO, 1996).

Ⅲ.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 및 실업구조

1. 장기실업률 추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문제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동시장과 실업구조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과 실업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IMF사태 이후 최근의 실업현황에 관한 자료들을 제시한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경제개발 30 여 년 동안 초기(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 왔다. 제 1차 오일쇼크 이후 1980년대에도 실업률은 4~5% 수준으로 현재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실업률은 그 후에도 계속 하락하여 호황이던 1980년대 말에 3.0%대 이하로 내려온 이후 1990년대 전반 IMF 이전까지 2.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표 4> 참조).

<표 4> 한국의 장기 실업률 추이 : 1963~1995

(단위 : 천명, %)

연도	15~65세 인구	경제활동 인구 (참여율)	실업률 (전산업)	실업률 (비농전산업)
1963	14,551	8,230 (56.6)	8.2	16.3
1970	17,468	10,062 (57.6)	4.4	7.4
1975	20,918	12,193 (58.3)	4.1	6.6
1980	24,463	14,431 (59.0)	5.2	7.5
1985	27,553	15,592 (56.6)	4.0	4.9
1988	29,602	17,305 (58.7)	2.5	3.0
1990	30,887	18,539 (59.9)	2.4	2.9
1995	33,558	20,797 (62.0)	2.0	2.2

자료 : KLI 노동통계, 1994~1997 (한국노동연구원)

그러나 IMF 이후 경제의 전반적인 위축과 급격히 증가하는 기업의 도산-폐업, 공포효과(panic effect)에 의한 잔존 기업들의 대량 인원감축 사례들로 인하여 실업률은 아주 짧은 시간에 급등을 하여 7.0%대를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IMF 쇼크 이전에도 1996년 말부터 실업률이, 아래 <표 5>에서 보여주는 대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1997년 초의 실업률이 1년 전 같은 시기의 실업률에 비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의 고용사정을 실업률보다 더 정확히 나타내 주는

연간 고용증가율은 이미 1994년 이후부터 매년 서서히 감소하고 있었고 특히 1996에서 1997년으로 오면서 증가율이 급락하고 있었다(즉, 1994=3.0%, 1995=2.6%, 1996=2.7%, 1997=1.8%).

〈표 5〉 우리나라 1996~1997년 초의 실업률 비교(%)

	1996	1996	1997	1997
	1월	2월	1월	2월
경 활 인 구 (참여 %)	20,294 (59.9)	20,322 (59.9)	20,948 (60.7)	20,930 (60.6)
# 실업자수	428	476	551	662
% 실업률	2.1	1.9	2.6	3.2

자료 : KLI 노동통계, 1998 (한국노동연구원)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국제경쟁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임금은 1980년 후반 이후 계속 상승하는 상태에서 기술 개발은 제조업 내의 몇몇 산업을 제외하고는 국제경쟁에서 뒤쳐짐으로써 그간 한국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해 왔던 제조업의 생산력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적인 경기침체로 IMF 이전에도 이미 한국경제는 침체의 조짐들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IMF 이전부터 이미 상당기간 진행되어 왔던 노동대체적 기술의 도입 및 기술의 변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의존하던, 섬유·의류업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사양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이미 오래 전부터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구조적 실업의 문제를 잠재적으로 누적해 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노동시장에 곧 바로 현시되지 않았던 것은 우선, 비록 거품성이 짙었지만, 경제의 호황상태에 힘입은 바 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간의 원충효과, 특히 기형적으로 커진 서비스업의 고용흡수효과와 자영업부문으로의 흡수효과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제의 전반적인 불황은 불황의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건설

업 포함), 자영업부문의 완충기제마저 무력하게 만듦으로써 총실업률의 상승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실업구조의 과정적 현황에 대한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은 실업구조의 주요 특징에 관하여 항목별로 개관하기로 한다. '실업구조'라는 개념 자체가 정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느슨한 의미에서의 일반적 특징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실업은 고용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므로 하나의 경제 내에서의 실업구조는 고용구조를 거꾸로 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용구조는 다시 노동시장구조를 논하지 않고는 논할 수 없을 것이다.

2. 고용 및 실업구조의 특징

(1)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으로는 아래 <표 6>에서 보여 주듯이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해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약 61%)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크기, 근로자들의 퇴직 행태 등에 영향을 받는 전체 참여율 보다 더 특징적인 것은 연령-성별 참여율이다. 한국의 경우는 여성과 청년층의 참여율이 아주 낮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참여율을 보면 약 47%로 같은 동양권인 일본(50.7%)보다 낮다. 이러한 낮은 참여율은 (1) 적절한 일자리의 부족, (2)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사회제도적 장치들의 미비 (특히 성차별, 탁아시설의 부족 혹은 고비용, 가정에서의 불리한 분업구조 등), (3) 제한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Part-Time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 (4) 육아,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유보임금이 높은 것 등에 연유한다(어수봉, 1993).

〈표 6〉 한국과 주요국의 노동시장 참여율 비교, 1992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영국
참 여 율	61.1	63.8	64.0	65.3	62.8
남 성	76.0	72.2	77.9	79.9	72.5
여 성	47.2	56.0	50.7	51.3	51.7
남성 20-24	56.5	74.6	74.5	82.3	85.4
여성 20-24	64.5	69.1	75.6	80.2	72.5

자료 : KLI 해외노동통계, 1994 (한국노동연구원)

아래 <표 7>에서 보여 주듯이, 우리나라 20~24세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이수 낮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남녀 같은 연령 청년층의 참여율이 75%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57~65% 수준으로 약 10% 정도의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낮은 참여율은 (1)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높은 대학진학률¹⁾, (2)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Part-Time 일자리의 부족, (3) 병역의무제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표 7〉 주요국 20~24세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가율 및 실업률(1994기준)

(단위 :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한국
남 자	실 업 률	10.2	5.0	18.3	9.0	19.3	9.4
	참 가 율	74.6	74.5	85.4	77.8	80.0	57.7
여 자	실 업 률	9.2	5.0	10.7	8.7	13.9	8.3
	참 가 율	69.1	75.6	72.5	73.4	80.3	65.3

자료 : KLI 해외노동통계, 1994 (한국노동연구원)

전통적으로 잠재실업률이 높은 여성과 청년층의 낮은 참여율은 전체 실업률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할 경우 전체 실업률도

1) 1994년 현재 인문계 졸업자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 만큼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높은 영세 자영업부문의 비중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후발국이 가지는 중요한 경제구조의 특징 중 하나는 비공식부문이 크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비공식부문이 크다는 것은 노동의 이동이 높아 실업자로 잡힐 확률이 높은 임금 근로자들의 비율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사업실패의 경우 구직활동보다는 다른 자영업 준비를 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고, 따라서 실업자로 잘 잡히지 않는 특징이 있다.

아래 <표 8>에서 보듯이, 1995년 현재 우리나라 전 취업자의 62.5%만이 임금근로자이고 나머지 27.9%는 자영업자, 약 10%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비율에 비하여 자영업의 비율이 2~4배까지 높은 것을 보여준다. 이들 중에는 안정적인 자영업으로 고소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매우 불안정한 저소득 자영업자들이다. 이렇게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부문이 크다는 것은 공식부문의 실업에 대한 충격흡수역할(buffering function)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자영업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체 고용안정구조 및 소득구조가 악화돼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8> 한국과 선진국의 자영업 비율 비교

국 가	% 자영업	% 무급가족 종사자	% 임금근로자
한 국 (1995)	27.9	9.6	62.5
미 국 (1991)	7.4	0.2	92.4
스 웨 덴 (1991)	8.6	0.3	91.1
독 일 (1991)	8.9	1.8	89.3
일 본 (1991)	13.5	7.7	78.8

자료 : KLI 해외노동통계 1995

(3) 산업구조의 변화: 제조업의 감소와 서비스업의 급속한 증가

최근 한국의 산업구조는 고용탄력성이 높은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탄력성과 안정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로 상대적 불안정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 더욱이 최근 취업형태의 다양화로 임시(계약직근로자), 파견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고찰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글로벌 경제구조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아래 <표 9>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증가 추이를 보여준다.

<표 9>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증가 추이: 1986~1993

산 업	'86	'88	'90	'91	'92	'93
제 조 업	3,039	3,712	3,876	3,877	3,632	3,428
(% 증가)	10.5	5.0	0.2	0.3	-6.3	-5.6
건 설 업	738	856	1,121	1,275	1,350	1,328
(% 증가)	-2.5	12.0	17.4	13.7	5.9	-1.6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과, <지난 30년간의 고용사정추이, 1994>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의 고용이 1980년대에는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1990년 초를 지나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건설경기 호황으로 고용성장률이 높았으나 1993년 이후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전반적인 불황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서비스업의 고용은 연 7~8%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종합해 볼 때 전통적인 3D 업종으로부터 노동력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³⁾ 이러한 현상

2) 특히 호텔/레스토랑업에 취업되어 있는 근로자의 43%는 자영업이었고, 4.3%는 일용직, 15.6%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비정규/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약 63%에 이르고 있다.

3) 3D 분야의 노동력이 어디로 흘러들어 가는가에 대해서는 서비스업으로의 흡

은 뒤에서 논의하게 될 IMF 이후의 실업양상에도 반영되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특히 건설업의 실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분절된 노동시장(Segmented Labor Market)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의 분절화 여부 및 구조에 대한 논의들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대체로 1980년대에 들어 우리의 중화학산업화 전략이 성숙되면서 고용조건, 임금, 승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두드러지게 다른 분절된 노동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⁴⁾ 만약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러한 분절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고 두 시장의 경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분변수를 찾는다면 그것은 기업의 규모 - 즉 대기업 대 중소기업 - 일 것이다. 이는 한국의 대기업중심의 경제개발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시장관련 법-제도들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으며 노동의 조직력 또한 규모에 따라서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우리의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규모는 단지 숫자를 넘어서는 질적인 차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방하남, 1997). 실제로 한국의 기업들은 규모에 따라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교육 정도, 근속년수, 기술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두 부문 사이의 이동율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남춘호, 1995; 이주호, 1992).

대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임금(복지) 등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중심의 2차 노동시장은 고용안정,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상태에 있다. 더욱이 최

수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나 조우현 강창희(1996)에 의하면 제조업 저임금 부문에서 비정규직, 즉 무급가족종사자나 무직으로 방대한 양의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4)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대한 논의들로는 남춘호(1995), 이주호(1992), 이효수(1984), 조우현·강창희(199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근의 추세는 특히 임금 및 복지에 있어서 두 부문간의 차이가 점차 벌어져 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규모별 총임금의 격차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고 있다. 500인 이상 고용 사업체의 근로자 평균임금을 100으로 할 경우 30~99인 사업장의 경우 1980년에는 93.2, 1985년에는 91.5, 1990년에는 75.1, 1994년에는 75.3을 기록하고 있어 1990년 이후의 격차 증가가 급격한 것을 보여준다. 중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100~299인 규모기업의 경우도 정도는 조금 약하지만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0>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추이 : 1980~1994

규 모	1980	1985	1986	1987	1990	1991	1992	1993	1994
전규모	97.2	94.8	94.5	95.9	83.9	84.2	86.0	84.9	83.3
10~29	94.8	89.0	89.2	87.8	69.4	71.9	75.3	74.0	73.4
30~99	93.2	91.5	91.7	92.0	75.1	75.3	78.9	77.1	75.3
100~299	96.4	93.2	91.9	95.8	81.0	81.9	85.9	85.6	84.7
300~499	100.7	99.0	99.6	106.5	90.9	91.0	88.8	91.5	89.3
500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임금 = 기본급여 + 각종수당 + 연간상여금/12.

자료: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기업의 규모간 노동보상에 있어서의 차이는 법정 외 복리비의 지급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 11>를 보면 1000인 이상 기업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중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00~299인 규모의 기업의 법정 외 복리비는 1985년 77.5, 1990년 71.7, 1993년 61.4로 점차 그 차이가 커져가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보면 1980년 말 이후의 변화가 급격하다. 이는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노조의 조직률이 높고 1987년 이후 노조활동이 급격히 활성화되었던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1〉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법정 외 복리비의 격차 추이(%)

	1985	1986	1989	1990	1991	1992	1993
전규모	94.3	95.3	95.7	93.9	93.8	93.1	91.6
30-99인	64.2	61.1	64.6	60.6	62.5	51.6	51.5
100-299인	77.5	80.4	73.3	71.7	81.2	61.4	61.4
300-499인	70.4	78.1	76.4	76.0	82.2	55.7	55.6
500-999인	90.9	92.7	91.0	78.2	66.8	70.9	70.8
1000 이상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법정 외 복리비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주거, 식사, 의료, 보건, 문화와 관련
돼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수당을 포함한다.

자료: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 년도

기업의 규모간의 보상수준에 있어서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겠으나, 무엇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낳은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의 독과점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우현 강창희, 1996).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노동의 조직력 및 협상력에 있어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도 주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유경준, 1996; 정이환, 1992). 기업별 노조체제하에서 대기업의 노동조합은 강한 조직력을 무기로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대기업은 생산의 규모가 큰 만큼 파업으로 인한 이익의 손실이 커서 노조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면서 그 부담의 상당부분을 생산물시장의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부품시장의 중소 하청업체들에게 전가하게 되고 그 결과는 소비자의 고부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산업별로는 일부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일용의 경우)에 3D 직종의 비율이 높아 다른 산업과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단시간, 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약 45% 이상) 상용직과 뚜렷이 구분되는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래 <표 12>는 7%의 실업률 하에서의 고용상의 지위별 실업자의 구성비를 보여준다. 가장 실업률이 높은 집단은 임시/단시간 근로자들로써 실업률이 23.3% 정도이고, 다음은 일용직 근로자들로 10%대에 이

르고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보호법과 노조의 지원을 받는 상용근로자는 4.4%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12〉 실업률 7.0%하의 종사지위별 실업자 구분

구분	신규 실업자	자영업주	상용 근로자	임시/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
종사지위별 근로자수	—	595만	956만	198만	180만	187만	2,105만
종사지위별 실업자	22만 (14.5%)	20.4만 (13.6%)	42.1만 (28.0%)	46.2만 (30.8%)	18.6만 (12.4%)	1만 (0.7%)	150만 (100%)
종사지위별 실업률	—	3.4%	4.4%	23.3%	10.3%	0.5%	7.0%

자료 : 노동연구원 추계(동향분석실, '98. 4)

노동시장이 갖는 이러한 이중구조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각종 노동시장의 결과에 개별 근로자들의 특성상의 차이에 의한 것과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비공식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나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안 되고, 각종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에 불황시 실업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부분이고 생계유지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집단이다. 또한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낮은 노동보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에의 투자가 미약해 인적자본이나 기술의 습득이 용이하지 않아 산업의 기술변화에의 적응력이 약해지고 그 결과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이 자꾸 떨어져 가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5) 고실업과 인력난 공존의 취업구조

한국 실업의 또 다른 특징은 지금과 같은 고실업 시대에도 일부 2차 노동시장부문에서는 인력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실업과 인력난이 병존하는 이유를 조우현·강창희(1996)는 분절노동시장구

조에서 찾고 있다. 노동시장이 이중적이지 않다면 앞의 신고전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확립되는 경쟁적인 단일 노동시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1차 부문의 임금과 고용조건이 2차 부문의 임금과 고용조건보다 현저히 높거나 좋을 경우 2차 부문은 인력난을 겪는 반면 1차 부문의 입구에는 잠재실업상태에 있는 취업 대기자들의 줄이 길어지게 될 것이다.

조우현 강창희(1996)의 대우패널조사자료(1993)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고임금-고기술의 1차 부문과 저임금-저기술의 2차 부문이 병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상당한 비중의 잠재실업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 규모는, 1993년 현재, 18세 이상 전경제활동인구 대비 1.9%(약 20만)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표 13> 참조). 이는 당시의 공식실업률이 2.5%인 반면 실질적인 전체 실업률은 4.3% 정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IMF 이후 실업률이 6%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면 잠재실업률까지 합할 경우 실질실업률이 10% 이상 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3〉 연령계층별 노동력상태 분포(%)

구 분	경제활동상태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전연령층
전 체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48.1 (39.8)	67.8 (38.1)	49.2 (31.5)	59.4 (37.5)
	실업자	4.5 (3.7)	1.7 (2.2)	1.5 (1.0)	2.5 (2.5)
	비경제활동인구				
	잠재실업자	4.2 (3.8)	1.2 (1.9)	0.5 (0.2)	1.9 (2.2)
	순수비경제활	43.1 (52.7)	29.3 (58.0)	48.8 (67.3)	36.2 (57.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N = 2,864 (대우패널조사자료, 1993)

자료 : 조우현·강창희(1996: 157)

특히 이러한 잠재실업자가 비경제활동 청년층 가운데 높게 나타나고 있다(4.2%)는 사실은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망실업자의 비율이 이

계층가운데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가운데서 잠재실업률이 약간 높다(2.2% v.s. 1.9%).

IV. IMF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실업현황

1. 경제활동참가율변화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하므로 먼저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의 변화를 살펴본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로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취업자와 실업자의 증감에 따라서 변동하는 비율이다. 취업자의 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업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게 되며 반대로 실업자 중 구직을 포기하고 실망실업자로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숫자가 많을 경우 참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아래 <표 14>는 IMF 이후 월별 고용지표 추이를 보여준다.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8년 2/4분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는 97년 동분기에 비해 0.9% 정도 감소한 반면, 취업자의 수는 5.3%나 감소하여 실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97년 평균 2.6%(55만 6천명)이던 실업률이 98년 2/4분기 6.8%(148만 1천명)로 증가하였고 99년 1/4분기에는 8.4%(174만 9천명)까지 증가하였다. 99년 1/4분기에는 98년의 동분기에 비해서도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인구가 이처럼 크게 감소한 원인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고용흡수력의 둔화와 아울러 극심한 고용사정 악화로 비정규직계층을 중심으로 구직을 단념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적으

로 '98년 4월 중 성별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남자는 12,946천명으로 전년 동월 보다 127천명(1.0%) 증가하였으나, 여자는 8,615천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 보다 무려 389천명(-4.3%)이 감소하였다.

과거 실업률 상승 원인은 취업자가 감소해서라기보다는 취업자는 증가하는데 그 증가폭이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8~1999년에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취업자가 크게 줄어듦으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표 14〉 IMF 이후 월별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명, %)

	1997		1998	1999	1999
		12월	2/4분기	1/4분기	2/4분기
15세 이상인구	34,736(1.6)	34,981(1.5)	35,304(1.5)	35,616(1.2)	35,717(1.2)
경제활동인구	21,604(2.0)	24,340(0.6)	21,725(-0.9)	20,854(-0.4)	21,797(0.3)
참가율	62.2	61.0	61.5	58.6	61.0
취업자	21,048(1.4)	20,682(-0.2)	20,244(-5.3)	19,105(-3.3)	20,362(0.6)
실업자	556	658	1,481	1,749	1,435
(실업률)	2.6	3.1	6.8	8.4	6.6
비경제활동인구	13,132(1.1)	13,641(3.0)	13,579(5.7)	14,762(3.6)	13,91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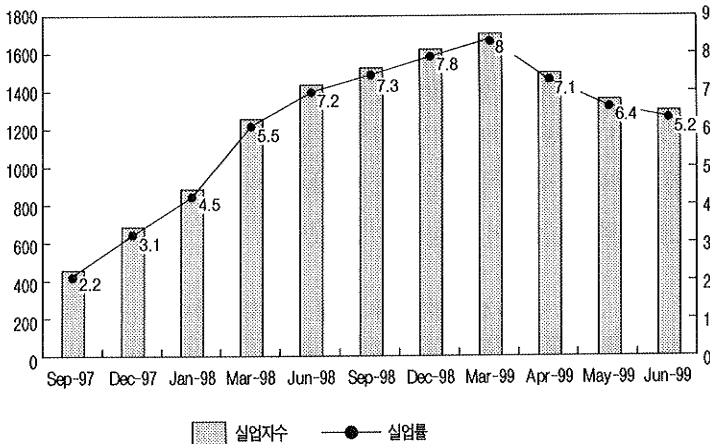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1998, 1999-1/4, 2/4)

2. IMF 이전-이후의 실업률 추이

[그림 1]은 IMF 이전-이후의 실업률과 실업자수 추이를 보여준다. 97년 중반기까지 2%대에 머물던 실업률은 후반기(10월)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97년 말에는 3.1%(약 65만), 98년 1월에는 4.5%(약 93만)로 한달 동안 급증하였고 이후 한해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여 98년 말에는 7.8%(약 167만)까지 증가하였다. 99년 들어서는 경기가 부분적인 회복의 조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경기후행적인 성격 때문에

초반에 8.0%(약 176만)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99년 6월 현재 6.2%(약 130만)에 머물고 있다.



[그림 1] IMF 이전-이후의 실업률추이 : 1997. 9~1999. 6

3. IMF 이후 실업구조의 특징

(1) 전직실업자 비중의 상승추세 심화

IMF 이후 최근의 실업구조를 살펴보면, 전체실업자 중 전직실업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반대로 신규실업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표 15> 참조). 전직실업자 중 이직시기가 1년 미만인 전직실업자는 98년 1월 71.6%에서 98년 6월에는 84.8%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실업의 스톡(stock)중 실직으로 실업풀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이 완료된 99년 6월에 이르러서는 신규실업자의 비율은 여전히 7.0%에 머물고 있는 반면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전직실업자의 비율이 17.8%로 98년 6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규실업자의 비율보다는 장기실업자들의 비율이 늘

면서 실업자 스톡에 정체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5〉 전직유무 및 기간별 실업자 구성비율 추이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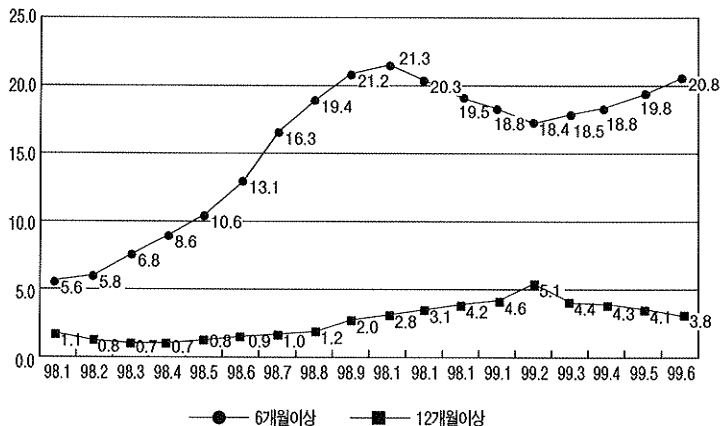
	1998~1999			
	98년 1월	98년 2월	98년 6월	99년 6월
전 체	934 (100.0)	1,235 (100.0)	1,529 (100.0)	1,356 (100.0)
신 규	141 (15.1)	155 (12.6)	102 (6.7)	95 (7.0)
전 직	793 (84.9)	1,079 (87.4)	1,427 (93.3)	1,261 (93.0)
— 1년 이상	124 (13.3)	140 (11.3)	130 (8.5)	242 (17.8)
— 1년 미만	669 (71.6)	939 (76.1)	1,297 (84.8)	1,019 (75.2)

주 : () 안의 수치는 전체실업자에 대한 비중임.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과, 각 년도-각 월 고용동향.

(2) 장기실업자 비율의 증가 및 실업기간의 장기화

아래 [그림 2]는 실업자 중 구직기간이 6개월 및 12개월 이상인 자들의 비율 추이를 보여준다. 통계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의 비율이 지난 98년 1/4분기 이후 크게 늘었다.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98년 1/4분기에는 5~6% 정도였으나 그 이후 1년간 지속



[그림 2] 구직기간 6개월 이상 및 12개월 이상 실업자의 비율 추이

적으로 증가하여 98년 말에는 20% 이상 증가하였다가 99년 들어 전반기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4분기 들어 다시 20%를 상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구조조정 이후 실업기간의 장기화와 함께 재취업에 실패하고 낙오된 실업자중 일부는 장기실업자군을 형성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정리해고 및 경영사정 악화에 의한 이직비율의 증가

1998년 전반기 이후 전직실업자 중 경영상 해고에 의한 실업자 비중은 늘어나고, 직장의 휴·폐업에 의한 실업자 비중은 '97년 말에 비해 감소하고 있었다(<표 16> 참조). 이러한 추세는 직장의 휴·폐업은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97년 말 이전부터 진행이 된 반면 주로 대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는 98년 초반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 경영상 해고에 의한 실업자 비중은 98년 1월 14.5%를 차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7월에는 16.9%를 기록하였고 99년 들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실직의 비율이 전직실업자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98년 1월에 29.7%이었던 비율이 7월에는 43.6%까지 증가하였다가 99년 7월에 이르러서는 다시 29.7%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98년 초반 이후 건설업(특히 일용직)이나 자영업 부문에서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99년 7월에는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를 포함하는 '기타'가 19.3%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98년 한해 동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인력이 다시 실업상태로 전락한 결과로 보인다.

〈표 16〉 이직사유별 전직실업자 구성비율 추이

(단위: 천명, %)

	1998~1999			
	1998년 1월	1998년 2월	1998년 7월	1999년 7월
전직실업자 ¹⁾	669(100.0)	939(100.0)	1,381(100.0)	1,029(100.0)
개인적 이유 ²⁾	179(26.8)	200(21.3)	289(20.9)	335(32.6)
직장의 휴·업	123(18.4)	165(17.6)	173(12.5)	65(6.3)
경영상 해고	97(14.5)	158(16.8)	234(16.9)	123(12.0)
일거리가 없음, 사업경영악화	199(29.7)	324(34.5)	602(43.6)	306(29.7)
기타 ³⁾	71(10.6)	93(9.8)	83(6.0)	199(19.3)

주: 1) 전체 전직실업자 중 이직시기가 1년 미만 전직실업자에 대한 수치임.

2) 개인적 이유 항목에는 개인·가족적 이유, 정년퇴직, 연로, 작업여건 불만족 등이 속함.

3) 기타항목에는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가 속함.

4) ()안의 수치는 1년 미만 전직실업자에 대한 비중임.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과, 1998.

(4) 한계 노동계층의 고용구조 불안정화

계층별로 볼 때 경제위기의 충격이 취업률의 감소에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크게 작용한 취업계층은 일용직 노동자계층이다. 상용직의 경우도 97년 하반기부터 취업률의 감소가 5% 이상 기록되고 있고 98년 중반기 이후에는 10% 이상이 되었으나 일용직의 경우는 상용직의 경우보다 취업자 감소의 폭이 더 커서 98년 1월 이후부터 12% 대를 상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에 들어서는 전년 동기에 비해 상용직의 취업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일용직의 취업률은 38.5%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98년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공공근로사업의 영향 때문으로 보이며 부분적으로는 일용직의 실업과 취업률이 상용직 보다 경기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변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불안정한 취업구조는 임시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주의 취업률은 98년 한해 동안 계

속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던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변화율은 정반대의 추이를 보이고 있어 고용사정이 나빠질수록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증가한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고실업시대에 임금근로자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전환률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98년 7월 대비 99년 7월 현재 실업률은 7.6%에서 6.2%로 1.4% 줄어들며 따라서 취업자의 수가 약 48만 명 증가하였으나 상용근로자의 수는 오히려 작년 동월 대비 약 38만 명(약 6%)이 줄어들었고 임시직 근로자가 약 22만 명, 일용직 근로자가 약 66만 명 증가함으로써 취업자수의 증가를 낳았다. 이는 IMF와 구조조정 이후 경기의 회복과 함께 실업률이 줄어들었으나 고용의 질은 더 나빠지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통계이다. 급격한 고실업의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감과 동시에 고용구조의 불안정화, 즉 고용형태의 임시직 및 일용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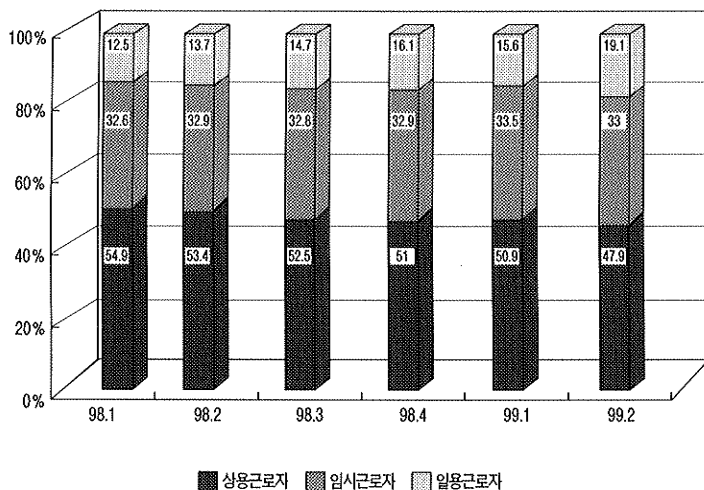
〈표 17〉 IMF 이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변화율(작년 동월 대비) 추이
(단위 : %)

	전 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1997. 9	0.6	-5.4	9.6	2.4	2.8	-3.1
1997. 12	-0.2	-6.0	11.8	-2.7	0.3	-2.2
1998. 1	-3.4	-5.9	2.3	-12.4	-4.1	6.7
1998. 2	-3.7	-7.9	2.0	-12.9	-2.7	7.6
1998. 3	-4.1	-9.1	-0.4	-12.7	-2.7	10.6
1998. 4	-5.1	-10.0	-2.1	-12.3	-4.2	10.5
1998. 7	-6.5	-10.0	-6.3	-13.4	-4.8	8.2
1999. 7	2.4	-5.9	5.5	38.5	1.6	-5.5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과, 각년도-각월 고용동향.

아래 [그림 3]은 IMF 이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의 추이를 보다 자세히 보여준다.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98년 1/4분기 54.9%에서 99년 2/4분기 47.9%까지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은 동기간 동안 32.6%, 12.5%에서 33.0%, 19.1%로 증

가하여 전체 근로자 중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99년 1/4분기 이후에는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함께 취업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취업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기의 회복과 함께 고용사정이 나아지더라도 고용안정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98. 1 ~ '99. 2)

(5) 청소년-저학력층의 실업률 급증

<표 18>은 97년~99년 해당 월의 연령계층별 실업률추이를 보여준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 연령계층은 15~29세의 청소년층이다. 15-19세의 경우 97년 중반에 7.2%이던 실업률이 98년 중반에는 24.7%까지 급상승하였고 99년 들어서는 다소 감소하여 7월 기준 22.2%에 머물고 있다. 20~29세의 경우도 97년에 4.2%에 지나지 않던 실업률이 98년에는 12.3%로 3배 가량 증가하였고 역시 99년 들어서는 9.7%까지 감소하였다. 청소년층 중 15~19세 연령층의 경우 중·고등학교 재학 중 취업자들이거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규 진입자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령계층은 노동시장 내에서 상대적 저학력-저숙련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경기하강의 충격이 곧바로 실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계층이다. 한편 20~29세 연령층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신규 진입자들이 대부분으로서 이들은 불경기로 인하여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다수가 실업자로 남아 있게 됨으로써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표 18〉 연령계층별 실업률 추이: '97. 8 ~ '99. 7

(단위: %, 천명)

	97. 8월	98. 7월	99. 7월
전 체	2.1 (465)	7.6 (1,651)	6.2 (1,349)
15~19세	7.2 (31)	24.7 (112)	22.2 (111)
20~29세	4.7 (234)	12.3 (576)	9.7 (438)
30~39세	1.6 (99)	6.6 (415)	4.9 (303)
40~49세	1.2 (58)	6.2 (315)	5.1 (273)
50~59세	1.0 (33)	5.8 (183)	5.5 (174)
60세 이상	0.5 (10)	2.4 (49)	2.3 (50)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과, 각년도-각월 고용동향.

한편 학력별 실업률 추이를 보면(<표 19>참조) 학력이 낮을수록 실업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저학력자의 취업난이 심각한 것을 보여준다. 대졸 이상 학력계층의 실업률이 97년 중반기준 2.8%에서 98년 중반 6.1%로 약 3.5배 증가한 반면, 중졸학력계층의 경우 97년 중반 1.2%에서 98년에는 6.4%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통계청의 고용동향(1998년)에 나타난 취업자 변화율을 보더라도 IMF 이후 중졸 이하의 취업자수는 급감한 반면 대졸이상의 취업은 오히려 급증한 것이 이를 반영해 준다. 여기에서 대졸 이상 학력자들의 취업증가는 신규취업자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졸자들이 하향취업하면서 중졸 및 고졸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학력자들의 경우 저기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직종 및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정규-상용직 보다는 임시 및 일용직

의 비율이 높아 취업률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불안정 취업층
이어서 저학력자들의 높은 실업률 증가는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9〉 학력계층별 실업률 추이 : '97. 8 ~ '99. 7

(단위 : %, 천명)

	97. 8월	98. 7월	99. 7월
전 체	2.1 (465)	7.6 (1,651)	6.2 (1,349)
중졸이하	1.2 (93)	6.4 (456)	5.1 (371)
고졸	2.6 (247)	9.4 (888)	7.4 (711)
대졸이상	2.8 (125)	6.1 (308)	5.2 (267)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과, 각년도-각월 고용동향.

4. 산업별 취업자 감소추세 및 내용

'97년 동월 대비 98년 전반기의 취업자수는 1월, -3.4%, 2월, -3.7%, 3월, -4.1%에 이어 4월에는 -5.1%를 기록하여 감소 추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내수산업의 극심한 경영난과 아울러 신규채용 억제,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다발 때문으로 판단된다. 98년 4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분 1,092천명 중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619천명, 건설업 392천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34천명 차지하고 있는 반면 (〈표 20〉 참조) 농

〈표 20〉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 천명)

	1997	1998		
	4월	4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전 산 업	21,219 (2.3)	20,127	-1,092 (-5.1)	235 (1.2)
농림어업	2,457 (-1.5)	2,673	216 (8.8)	329 (14.0)
제조업	4,525 (-3.3)	3,906	-619 (-13.7)	-92 (-2.3)
건설업	2,028 (2.8)	1,636	-392 (-19.3)	-6 (-0.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97 (3.7)	5,563	-234 (-4.0)	4 (0.1)
기타 ¹⁾	6,383 (6.6)	6,328	-55 (-0.9)	0 (0.0)

주 : 1) 기타산업에는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 등이 속함.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과, 1998-4.

림업부문의 취업자는 전년 동월 보다 216천명(8.8%) 증가하여 98년 1월이후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이는 비농부문의 실업자들이 구직난이 심각해지자 귀농하여 농업부문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지역별 실업률 추이

경제위기 이전-이후 지역별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지역에서 실업률이 2~3배씩 상승한 것을 보여준다. 실업률의 전국적인 상승과 함께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은 도-농간, 지역간 실업률의 편차가 작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라는 일반적 충격이 지역 특수적인 충격의 효과를 압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실업률(<표 21> 참조)은 98년 3월을 기준으로 보면 부산이 8.5%로 가장 높고, 서울(7.3%), 대구(7.4%), 광주(7.2%), 인천(7.0%) 등 서울과 지방의 대도시들이, 7.9%를 기

〈표 21〉 지역별 실업률 추이

지	역	1996년 1/4분기	1997년 1/4분기	1998년 3월
서	울	2.7	3.5	7.3
부	산	3.6	4.4	8.5
대	구	3.6	4.7	7.4
인	천	3.2	3.7	7.0
광	주	3.0	3.2	7.2
대	전	3.6	3.0	6.3
울	산	—	—	6.2
경	기	1.6	3.4	7.9
강	원	0.9	0.9	3.4
충	북	1.6	2.0	4.7
충	남	1.5	1.4	4.4
전	북	2.6	3.3	5.0
전	남	0.9	1.5	4.4
경	북	1.4	1.7	4.6
제	남	1.2	2.2	4.3
	주	0.8	0.7	3.3
전	국	1.9	3.1	6.5
지역별 편차(%)		31.8	16.2	6.6

자료 : KLI 노동통계, 1998 (한국노동연구원)

특한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를 포함한 도시지역의 실업률은 6.2~8.5%인 반면 농촌지역의 실업률은 3.3~5.0% 수준으로서 도농간의 실업률 격차는 약 3% 정도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실업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의 노동시장구조는 선진국과 달리 비임금 자영업부문이 상대적으로 넓어 임금부문에서의 경기하향 및 실업발생충격의 완충작용을 해 왔으나 이번 IMF 경제위기에서는 자영업 부문마저 기반이 무너짐으로써 전체적으로 대량실업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98년 이후의 대량실업 사태가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가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보다 구조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 점차적인 경기회복과 함께 고실업의 피크(peak)가 지나간 이후 실업률 자체는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리며 감소할 것이지만 그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실업구조자체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므로 IMF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외부충격이 주어질 경우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첫째로 한국 경제 및 노동시장의 세계경제체제로의 보다 깊은 편입이라는 세계화의 과정을 IMF 고실업사태의 국제적 환경으로 보고 그 특징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경제체제의 세계화는 자본과 노동의 국가간 이동의 광역화 및 가속화를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금융자본주의시대에 자본의 유동적이고 초국가적인 이동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유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러한 운동원리에 의해 한국의 노동시장도 고용 및 실업구

조에 있어서 앞으로 상당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 예견되는 결과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과 노동계층의 양극화이다. 양극화된 체제에서는 핵심 노동계층과 주변화된 노동계층 간에 고용안정 및 노동의 보상에 있어서 과거 포드주의적인 생산체제에서 관측되었던 것보다 더 큰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취약한 취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취업계층 중 자영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부문의 일자리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임금부문 내에서도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간에 보상수준의 차이와 이동벽이 높아 직장이동이 자유롭지 못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경직성도 취업구조의 비효율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개별 노동자의 요구임금에 있어서의 경직성에서만 찾아서는 안 되고 구조자체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로 앞에서 지적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IMF 경제위기는 노동시장 내에서 기술과 학력수준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저학력-저기술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한계계층들은 앞으로 진행될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구 과정에서 경기변동에 따라서 고용의 안정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계층이다. 산업구조가 앞으로 선진부문으로 옮겨 갈수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한계계층의 안정적 재취업은 쉽지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은 경제의 세계화와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한계계층의 고용불안정 문제와 함께 저성장-고실업시대가 정착될 경우 장기실업자의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김장호 1998. 『여성실업의 구조와 행태: 이행확률 추정을 통한 유량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남춘호 1995. “제조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사회학』 제 29집.
- 방하남 1997. “한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노동복지: 현황과 과제.” 『사회정책논총』 제9집. 한국사회정책연구원.
- 어수봉 1992. 『韓國의 女性勞動市場』.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1993. 『韓國의 失業構造와 新人力政策』. 한국노동연구원
- 이주호 1992.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제15권(1).
- 이효수 1984. 『노동시장구조론—한국노동시장의 이론과 실증』. 법문사.
- 조우현·강창희 1996. “유희인력과 인력난 병존의 경제분석.” 『노동경제논집』 제19권(1).
- 한국노동연구원 1994. 『KLI 해외노동통계』.
- _____. 1998. 『KLI 노동통계』.
- Allen, S. 1984. “Trade Unions, Absenteeism and Exit-Voic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7: 331-45.
- Azariadis, C. 1975. “Implicit Contracts and Unemployment Equilibri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 119-155.
- Bailey, M. 1974. “Wages and Employment Under Uncertain Demand.” *Review of Economic Studies* 41: 37-50.
- Berg, I. ed. 1981.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Labor Markets*. New York: Academic Press.
- Blanchard, O. and L. Summers. 1987. “Hysteresis in Unemployment.”

- European Economic Review* 31: 288-95.
- Bowles, S. 1985. "The Production Process in a Competitive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75 (1) : 16-36.
- Bulow, L. and L. Summers. 1986. "A Theory of Dual Labor Markets with Applications to Industrial Policy, Discrimination and Keynesian Un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4: 377-414.
- Davidson, C. 1990. *Recent Developments in the Theory of Involuntary Unemployment*. W. E. Upjohn Institute.
- Doeringer, P. B. and M. J. Piore. 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Mass: Heath.
- Edwards, R. M. Reich, and D. Gordon eds. 1975. *Labor Market Segmentation*.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 Feldstein, M. 1975. "The Importance of Temporary Layoffs: An Empirical Analysi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3: 725-744.
- Freidman, M. 1968. "The Role of Monetary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58: 1-17.
- Granovetter, 1974.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ll, R. 1982. "The Importance of Lifetime Jobs in the U. S.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72: 716-724.
- Hamermesh, D. 1977. "Economic Aspects of Job Satisfaction." In *Essays in Labor Market Analysis*, eds. by O. Ashenfelter and W. Oates. New York : Halstead.
- ILO. 1997. *World Employment 1996/97*.
- Katz, L. F. 1986. "Efficiency Wage Theory: A Partial Evaluation." In S. Fischer ed. *NBER Macroeconomics Annual 1986*. Cambridge, MA: MIT Press, forthcoming.

- Lang et al.. 1987. "Labor Market Structure, Wages and Unemployment." *Unemployment and the Structure of Labor Markets*, ed. by K. Lang and J. S. Leonard. Oxford, U. K.: Basic Blackwell.
- Lilien, D. 1980. "The Cyclical Patterns of Temporary Layoffs in United States Manufactur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2: 24-31.
- Lucas, R. E. 1972. "Expectations and the Neutrality of Money." *Journal of Economic Theory* 4 (2): 103-24.
- Mincer, J. and B. Janovic. 1981. "Labor Mobility and Wages." Rosen, S. ed. *Studies in Labor Marke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helps, E. S. et al. 1970.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Employment and Inflation Theory*. New York: Norton.
- Piore, M. J. 1979. "Unemployment and Inflation: An Alternative View." M. J. Piore ed. *Unemployment and Inflation: Institutional and Structuralist Views*. NY: M. E. Sharpe.
- Rosen, S. 1985. "Implicit Contrast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3: 1144-1175.
- Rosenberg, S. 1989. "Labor Market Restructuring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Search for Flexibility." in S. Rosenberg ed. *The State and the Labor Market*. New York: Plenum Press.
- Schervish, P. G. 1981. "The Structure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Berg, I. ed.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Labor Markets*. New York: Academic Press.
- Shaked, S. and J. Sutton. 1984. "Involuntary Unemployment as a Perfect Equilibrium in a Bargaining Model." *Econometrica* 52: 1351-64
- Shapiro, C. and J. Stiglitz. 1984. "Equilibrium Unemployment as a Worker

Discipline Device." *American Economic Review* 74: 433-44.

Snower, D. 1996. "Evaluating Unemployment Policies: What Do the Underlying Theories Tell U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11: 110-134.

Thurow, L. G. 1975. *Generating In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Todaro, M. P. 1989.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New York: Longman.

제 2 부

지역사회와 실업

춘천의 노동시장과 실업구조 및 실업자 현황 / 신광영·박준식

전북지역의 실업문제와 지역사회의 대응 / 남춘호

울산지역의 실업문제와 지역사회의 대응 / 이성균

부산지역의 실업과 지역사회의 대응 / 김석준

춘천의 노동시장과 실업구조 및 실업자 상황

신광영* · 박준식**

I. 문제제기

실업은 전국적이며 동시에 지역적인 현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실업이 지역사회 나름의 독특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전개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의 실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체의 독특한 노동시장 구조와 연결된 지역 실업 구조의 특성과 실업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연구들은 전국적 현상으로서의 실업 문제를 다루는데 초점이 두어져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실업 조사 자료들은 주로 전국적 수준의 상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지역’이라는 미시적 단위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직면하고 느끼는 실업의 구체적인 상황들은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지역 차원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에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업의 문제를 지역 노동시장 및 그 구조와 연관시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 연구는 실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조사에서 간과되고 있는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면서 춘천이라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실업의 구조와 실업자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우리는 춘천지역이라는 지역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성들을 살펴본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역 노동시장이 단일 시장이라기보다는 부문별로 커다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특히 공공부문은 IMF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내부노동시장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고 있다는 점, 서비스 부분에서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원자화된 시장 경쟁 대신 사회적 연줄망이 노동력 수급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다. 다음으로 우리는 IMF 이후 지역에서 전개된 실업의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을 지역 공공근로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실업자들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이들의 실태 변화를 살펴본다.

II. 연구 자료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자료가 활용된다. 그 첫 번째는 1998년 11월에 진행된 춘천 지역의 피고용자 378명과 사업체 178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이다. 이 조사는 한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관 하에 춘천 도심권(춘천군 지역을 제외)에서 사업체와 이들 사업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춘천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와 사업체는 직종별 사업체와 종사자 비

을에 따라서 할당 표집 방법(quarter sampling)을 이용하여 선정되었다.

두 번째 자료는 1999년 봄에 이루어진 춘천지역 실직자 실태 조사 자료이다(실업극복을 위한 춘천시민운동 협의회, 1999). 이 조사 자료는 춘천 YMCA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강원대학교 사회학과와의 공동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는 주로 춘천시의 협조를 얻어 통반장을 통해 실직자로 파악된 가구를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방문 조사의 결과 모두 219(56.9%)개의 유효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그러나 실직자 가정에 대한 방문 조사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조사팀은 노동부 춘천지역 사무소에 등록된 125명의 실직자들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연구팀은 강원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실직자 재취업 교육 대상자 41(10.6%)명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이렇게 해서 수집되어 분석에 활용된 유효 설문지는 총 385개였다. 이 조사의 주요 결과는 실업극복을 위한 춘천시민운동 협의회에 의해 1999년 6월 『춘천실업리포트』 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바 있다.

Ⅲ.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1. 산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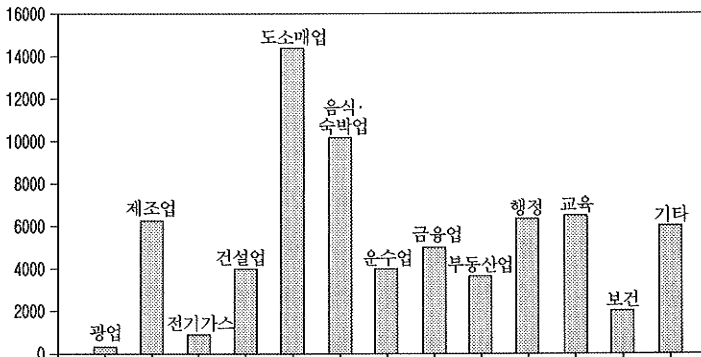
춘천지역 경제는 지방도시로서는 매우 특이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중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소규모 3차 산업의 과잉 발달, 지역의 수부로서 공공 행정 종사자들의 비중이 큰 점, 제조업의 미발달 등을 들 수 있다. 전체 사업체의 94% 이상이 3차 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이다. 춘천시 전체 사업체 수는 1996년 현재 16,447개이며 65,754명의 종사자가 이들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 이상

이 도소매업체로서 5,734개에 달하고 있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도 가장 많아서 14,041명에 이르고 있다. 그 다음 가장 많은 업체는 4,262개에 달하는 음식 및 숙박업으로 9,834명을 고용하고 있다.

강원도 수부도시로서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도 6,145명에 달하여, 전체 종사자의 9.3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제조업체는 942개로서 종사자수는 6,368명에 불과하여 전체 사업체 가운데 5.73%이고 종사자수는 전체 종사자수의 9.68%에 불과하였다. 이는 춘천지역에서 제조업 기반이 대단히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IMF의 영향은 피고용자보다는 영세 자영업 부문의 매출 감소와 사업체 도산의 특성을 강하게 지닌다.

사업체 종사자 65,754명 가운데 자영업자와 고용주를 제외한 피고용자는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도시 자영업자는 약 1만 5천 명에 이르고 농촌 자영업자는 약 7천 명에 달하고 있다. 고용주는 약 1천 5백 명 정도로 추산된다. 1997년 12월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는 공식부문의 노동력보다는 영세 사업체들과, 이러한 사업체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훨씬 큰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실업 상태에 내몰리지는 않지만, 소비 위

(단위: 명)



(그림 1) 춘천지역 산업별 종사자수 분포

축의 결과로 인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지닌 대도시들과 춘천 지역의 중요한 차이로 볼 수 있다.

지역 사업체들의 성격은 여기에 고용된 피고용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춘천 지역의 산업 구조를 사업체의 생존 기간을 중심으로 보면 상당히 주목할만한 특징을 볼 수 있다. 춘천 지역 사업체의 업종별 평균 연령 평균값과 중앙값을 정리한 <표 1>을 보면 중요한 특징들을 볼 수 있다. 한 예로 부동산업의 경우 평균 사업체 연령의 중앙값이 3.00년으로 가장 낮아서 대부분 신규 사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도 평균 연령이 낮았고 중앙값도 가장 낮아서 사업체들의 부침이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연령이 높은 운수 및 창고업과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다른 업종 평균 연령의 2~4 배 정도에 달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업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업종별 사업체의 평균 연령 (단위 : 년)

업종별	제조업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	공공행정	금융/보험	부동산
평균값	9.43	15.60	7.90	6.03	15.21	38.20	20.17	5.29
중앙값	7.50	14.00	4.00	3.00	7.00	33.00	20.50	3.00

춘천지역의 노동시장도 지역의 산업구조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먼저 공공행정이나 서비스에 종사하는 약 10% 정도의 피고용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노동력이기 때문에 시장경쟁으로부터 벗어난 내부노동시장의 피고용자들인 셈이다. 이들은 주로 시험을 통해서 고용되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쟁이나 불황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겪지 않는다. 실제로 이 부문에서 IMF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임금 소득 감소를 제외하면 고용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나머지 90%는 사적 부문의 종사자들로서 시장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불황시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다.

2. 노동시장 구조

(1) 구직·구인 관행

춘천지역의 채용 관행은 업종에 따라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공공행정과 같이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건설업과 같이 동업자들간의 '사적 연결망'을 통해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공공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 부문에서 아는 사람을 통한 사적 연결망은 구인 및 구직의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연고 중심의 채용 관행은 건설업, 운수창고업, 교육 분야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60%, 운수창고업의 경우 약 37% 정도가 아는 사람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52%만이 공개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44%), 인력회사를 통해서(4%) 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분야의 경우 2/3가 사원을 통하여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설학원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설학원 강사 충원의 경우도 대부분 비공식적 연결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 금융업, 보험업의 경우도 약 1/3 정도는 연고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마을금고나 지역의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사원을 선발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개채용을 중심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기존의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의 채용방식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연고 중심의 구직 및 구인 방식은 일반적인

시장 기제와는 다른 방식의 직무결합(job matching)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인 조사에서 밝혀진 신규채용 방식은 구직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피고용자의 약 40%가 친구나 친척의 소개로 현재의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직 방법은 업종에 따라 큰 차별성을 보인다.

〈표 2〉 업종별 종사자들의 구직 방법 (단위 : %)

업종/구직방법	친구/친척 소개	직업소개소	모집광고	업체직접방문
제조업	37.1	0	37.1	25.7
건설업	72.7	0	22.7	4.5
도소매	41.4	2.8	31.4	24.3
음식/숙박	37.9	3.4	36.2	22.4
운수/창고	60.9	4.3	21.7	13.0
금융/보험	26.1	4.3	56.5	13.0
부동산	38.5	0	23.1	38.5
행정	20.7	3.4	72.4	3.4
교육	23.3	0	60.0	16.7
보건/사회서비스	45.5	0	27.3	27.3

〈표 2〉에서 주목되는 것은 건설업 종사자의 구직 방법 중 압도적으로 친구나 친척의 소개(72.7%)가 많다는 점이다. 운수 및 창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친구나 친척을 통하여 일자리(60.9%)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37.1%), 도소매업(41.4%), 음식 및 숙박업(37.9%), 부동산업(38.5%),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45.5%)에서도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역 노동시장에서 비공식적 연결망이 공식적 연결망과 더불어 대단히 중요한 구인 및 구직 방식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른 한편 모집 공고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은 행정(72.4%)과 금융 및 보험업(56.5%), 교육 부문 종사자들(60.0%) 가운데서 높게 나

타났고, 그 외의 업종에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 채용은 전체적으로는 약 39%에 불과하여 춘천시 지역 노동시장의 경우 비공식적 연결망을 통한 구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구직을 하는 경우도 약 19%에 달하여 구직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25.7%), 도소매업(24.3%), 부동산업(38.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7.3%)에서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취직을 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 행정, 교육 분야에서는 여성들의 경우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취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취업

〈표 3〉 업종별 증여자들의 구직 방법 (단위: %)

업종/구직방법	친구/친척 소개	직업소개소	모집광고	업체직접방문
제조업	50.0	0	25.0	25.0
	20.0	0	53.3	26.7
건설업	68.5	0	25.0	6.3
	83.3	0	16.7	0
도소매	38.7	6.4	32.3	22.6
	43.6	0	30.8	25.6
음식/숙박	45.8	8.3	29.2	16.7
	32.4	0	41.2	26.5
운수/창고	62.5	0	18.8	18.8
	57.1	14.3	28.6	13.0
금융/보험	16.7	0	75.0	8.3
	36.4	9.1	36.4	18.2
부동산	45.5	0	18.2	36.4
	0.0	0	50.0	50.0
행정	13.0	4.3	78.3	4.3
	50.0	0	50.0	0
교육	11.8	0	64.7	23.5
	38.5	0	53.8	7.7
보건/사회서비스	33.3	0	16.7	50.0
	60.0	0	27.3	0
기타	16.7	0	33.3	50.0
	66.7	0	33.3	0

주: 각 업종별로 위의 수치는 남성 그리고 아래의 수치는 여성의 응답에 기초

자들은 승진의 가능성이 없는 하급 사무직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구인 및 구직 방식에서 공식적·제도적 시장 기제를 통한 채용보다는 친인척 등 연고적 관계망을 동원하는 구직이 더 중요한 방식임을 보여준다. 반면, 모집공고나 공개 채용을 통한 노동력의 수급은 공공부문, 교육, 보험 등 일부 업종에서만 한정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구직 및 구인 관행이 지배적인 부문과 공개 경쟁을 통해 구직 및 구인 결정되는 부문간에는 노동력의 이동은 물론 사적 연결망에 있어서도 거의 완전한 ‘분절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노동력 이동과 결정 요인

지역 노동시장에서 피고용자들의 평균 직장 이동 횟수는 약 2.4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력의 이동은 업종과 부문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직장 이동이 심한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으로 평균 거의 4회 정도의 직장 이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직장 이동이 적은 곳은 공공행정 부문으로 평균 1.03회에 불과하였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종사자들도 직장 이동이 각각 3.43과 3.04회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과 전기, 가스 및 상수도 업종의 경우 1.38회와 1.33회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직장 이동의 차이는 사업체의 안정성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업체의 부침이 심한 업종의 경우 피고용자들의 직장 이동도 당연히 높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직장안정성이 높은 직종으로 알려진 공공행정이나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예상대로 직장 이동이 대단히 낮았고, 직장 불안정한 음식 및 숙박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에서 직장 이동은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의 평균 연령과 직장 이동 횟수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이동을 춘천 지역 내에서만 볼 경우 이 지역의 특성을 보다 잘 볼 수 있다. <표 4>는 춘천지역에서 직장을 옮긴 횟수를 직종별로 보여주고 있다. 춘천 지역에서 직장 이동 횟수가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1인당 평균 2.45회에 이르고 있다. 그 다음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들의 직장 이동이 평균 2.34회로 건설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춘천지역 내 직장 이동이 가장 낮은 업종은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업종으로 0.50이었으며, 그 다음 공공행정으로 0.56회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제조업에서 춘천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장 이동이 1.13회로 다른 직종보다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난 점이다.

직장 이동이 많다는 것은 해당 직종의 불안정성을 말해 준다. 이러한 직종의 노동시장은 전형적인 외부노동시장(external labor market)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춘천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대단히 불안정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춘천 지역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널리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4> 산업별 직장이동 횟수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창고	금융/ 보험	부동산	행정	교육	보건/ 사회	기타
1.13a	1.33	2.45	1.42	2.34	1.80	1.33	1.50	0.56	2.07	0.50	1.67
0.00b	2.00	1.50	1.00	2.00	1.00	0.50	0.00	0.00	1.00	0.00	1.00
1.82c	1.15	2.91	1.91	2.34	2.27	1.63	1.08	1.08	2.84	1.00	2.47

주 : a는 평균회수, b는 중앙값, c는 표준편차를 각각 의미한다.

춘천지역 내에서 직장 이동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신규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여 높은 이동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건설 공사와 토목공사들이 주로 임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이동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육 부문에서 이동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주기적으로 교사 이동이 있어왔고, 사설 학원의 경우에도 강사의 이동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5〉 춘천지역에서의 직장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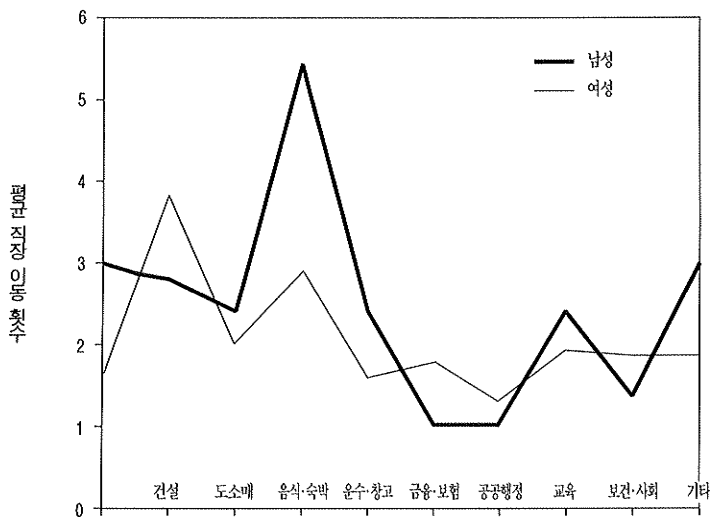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창고	금융/ 보험	부동산	공공 행정	교육	보건/ 사회	기타
2.38a	1.33	3.09	2.10	3.93	2.08	1.38	3.43	1.03	2.17	1.50	2.39
2.00b	2.00	2.50	2.00	3.00	2.00	1.00	3.00	0.00	2.00	2.00	2.50
2.24c	1.15	2.49	2.16	3.49	1.82	1.61	2.21	1.48	1.48	1.08	2.30

주 : a는 평균회수, b는 중앙값, c는 표준편차를 각각 의미한다.

직장 이동 횟수를 성별로 분석할 경우 업종별로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2]는 성별로 구분한 업종별 직장 이동 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음식 및 숙박업 남성이 가장 높은 직장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음식 및 숙박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경우 5.4회의 직장 이동 횟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2.8회의 직장 이동을 보여주고 있는 여성의 두 배에 가깝다. 여성의 경우 건설업에서 약 3.9회에 이르는 직장 이동을 보여 다른 직종 여성뿐만 아니라 음식 및 숙박업을 제외한 남성에게 비해서도 더 높은 직장이동 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금융 및 보험업과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직장 이동이 남성들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이동이 산업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직장의 안정성이 산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안정성이 높은 직종으로 알려진 공공행정이나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직장 이동이 낮았고, 부침이 심한 음식 및 숙박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에서 직장 이동은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

직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업종별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는 평균 직장 이동 횟수는 업종의 특성으로만 설명될 수 있



[그림 2] 산업 및 성별 직장 이동 횟수

는 것인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은 지역의 범위를 넘어선 직장 이동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장 이동에 대해 각각 이루어졌다. <표 6>은 평균 직장 이동 횟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우선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직장 이동에 대한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면((4), (5) 및 (6)을 참조), 직장 이동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조업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과 공공행정 분야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에 따른 차별성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준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이동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직장 이동은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직장이동의 경우는 약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4), (5) 및 (6)을 참조). 춘천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장이동은 음식 및 숙박업과 교육부문에서 제조업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 따르더라도 차이가 커서 학력이 낮을수록 직장 이동이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나 혼인 상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직장 이동 및 지역 내 직장 이동 결정 요인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직장이동			춘천지역 내 직장이동		
독립변수	(1)	(2)	(3)	(4)	(5)	(6)
업종 제조업(=0)						
건설	.706	.818	.811	1.326	1.489	1.496
도소매	-.283	-.004	-.005	.295	.442	.442
음식/숙박	1.548**	1.723***	1.801***	1.211**	1.274**	1.259**
운수/창고	-3.05	-.364	-.354	.672	.715	.727
금융/보험	-1.010	-.734	-.777	.205	.384	.393
부동산	1.044	1.106	.871	.372	.586	.630
행정	-1.358***	-1.341***	-1.373***	-.573	-.401	-.389
교육	-.218	.355	.252	.943	1.309**	1.329***
보건/사회	-.885	-.324	-.433	-.628	-.272	-.237
기타	.004	.529	.513	.538	.849	.841
성별						
남성 (1)		.881***	.773**		.074	.099
여성 (0)						
교육수준 중학교이하(=0)						
고등학교		-.868	-.611		-1.066	-1.123*
대학교이상		-1.850**	-1.543*		-1.531**	-1.598**
연령			.025			
혼인상태						
미혼 (1)			-.033			.071
기혼 (0)						
R-Square	.122	.184	.191	.073	.096	.097

주 : 유의수준 * p < .05, ** p < .005, *** p < .001

직장 이동과 춘천 내 직장 이동이 차별성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행정과 교육부문의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무원, 군인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경우 정기적인 근무지 이동 관행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 부문의 경우 춘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장 이동이 제조업보다 더 높은 이유는 학교 이동과 학원 강사진의 잦은 교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춘천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 직장 이동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동은 종사자들의 개인적 특성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이는 해당 업종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다. 음식 및 숙박 업종이 춘천 지역의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서의 고용 불안은 곧바로 지역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반면 공공 행정 부분의 상대적 안정성은 지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상쇄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춘천 지역은 매우 이질적이고 격차가 큰 노동시장이 함께 공존하면서 그 고유한 특성들을 발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득 및 고용 안정

춘천지역 피고용자들의 임금수준도 업종에 따라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업종별 월 소득 분포를 소득 수준별로 구분한 것이다. 가장 많은 피고용자들이 60~99만원 대와 100~149만원 대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약 80%의 피고용자들이 149만원 이하의 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정도의 춘천지역 피고용자들의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월 소득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 85%의 피고용자가 99만원 이하의 월 소득으로 업종 가운데 가장 낮은 월 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도 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다.

월 소득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50%가 150만원 이상의 월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의 경우도 약 70% 이상이 100만원 이상의 월 소득을 얻고 있어서 소득수준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부동산업의 경우로 업종 내 월 소득 격차가 가장 큰 경향을 보인다.

〈표 7〉 춘천지역 업종별 월 소득 수준별 분포 (단위 : %)

산업/소득수준(만원)	~50	60~99	100~149	150~199	200~249	250~299	300+
제조업	25.6	33.3	28.2	10.3	2.6		
건설업	4.5	27.3	45.5	4.5	9.1	9.1	
도소매	19.2	41.1	31.5	6.8		1.4	
음식/숙박	53.3	31.7	8.3	6.7			
운수/창고	16.0	36.0	40.0	8.0			
금융/보험		25.0	25.0	12.5	20.8	4.2	12.5
부동산	7.1		42.9	28.6	7.1	14.3	
공공행정	11.1	19.4	33.3	22.2	8.3	5.6	
교육	11.9	23.8	38.1	14.3	7.1	4.8	
보건/사회		25.0	33.3	8.3	25.0		8.3
기타	5.9	41.2	35.3	5.2			11.8
합계	19.8	30.2	29.9	10.4	5.2	2.7	1.6

동일한 업종 내에서도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라 월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 일반에서 관찰되는 성 차별적 임금 구조와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월 평균 소득의 성별 격차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가 적은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간의 격차가 가장 큰 업종은 건설업과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업 분야이다.

사업체 조사에 응한 178개 사업체 가운데 IMF로 인하여 인력을 축소

시킨 기업은 약 43%로 많은 기업들이 IMF 이후 인력을 축소할 것을 알 수 있다. 인력 변화가 큰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71.4%), 제조업(63.2%), 건설업(60.0%),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60.0%), 공공행정(55.6%)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변화가 적은 부문은 교육과 도소매업으로 각각 30.0%와 28.8%로 나타났다. 춘천 지역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들이 전체 피고용자들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에서의 고용 조정이 미치는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큰 편은 아니었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충격 역시 더 늦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등에서 이루어진 광범위한 고용 상태의 변화는 이 지역에서 실업의 충격이 결국 '자기 착취'(self-exploitation)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고용 불안감과 관련하여 1998년 11월 현재 전체 피고용자의 33% 정도가 현재 일자리가 불안정하다고 응답하였다. 고용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업종의 종사자들은 건설업으로, 59% 정도의 피고용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이 음식 및 숙박업으로 44.8%, 도소매업 39.0%이었다. 이들 업종들은 IMF 이전에도 고용이 불안하였다. 고용 불안이 적은 업종 종사자들은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8.2%, 운수 및 창고업 12.0%, 공공행정 16.2%로 나타났다.

IV. 실업의 전개와 실직자 상황

1. 실업의 전개

IMF의 파장이 지역사회에 밀려들면서 춘천 지역에서도 실업 문제가 발등의 현안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표는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구인 및 구직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 5월 16일 현재 춘천지방노동사무소에 등록된 실업자들의 구인 및 구직 현황을 정리한 자료가 <표 8>이다. 이 표를 보면 구인자수는 87년 말의 791명에서 98년 5월에는 476명으로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구직자수는 770명에서 무려 2,504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97년 말의 경우 구인자수가 구직자수보다 많았던 반면, 불과 6개월 남짓한 사이에 구직자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나타내는 구인율은 1.03에서 0.19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표 8> 98년 5월 16일 현재 춘천지방노동사무소 구인·구직 현황

(단위 : 명, %)

	구 인	구 직	알 선	취 업	구인율
97년 말	791	770	1,311	100	1.03
98년 5월16일	476	2,504	1,293	115	0.19

자료 : 춘천지방노동사무소, 1998, 「구인·구직현황자료」.

지역의 구직 상황이 급속한 속도로 악화되면서 지역 수준의 실업 대책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게 되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예산 제약이 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업 대책은 사실상 속 빈 강정에 불과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업 대책은 중앙 정부에서 기계적으로 할당해 준 예산을 중앙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들을 선발하고, 정해진 예산 사업을 집행하는 것 이상의 내용을 지닐 수 없었던 것이다. 중앙 정부에서 실업 대책을 명분으로 실시한 사업들로는 공공근로사업, 각종 공공사업 조기 발주, 구인·구직 만남의 광장 개최, 생활보호자 선정·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영농창업자금 지원, 외국인력의 내국인 대체 자금지원, 실직자 대부사업, 고용 유지를 위한 실업보험 사업, 직업 훈련,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실업급여 혜택 확충 등이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무관하게 중앙 부처 차원에서 시행된 것들

이었다.

시 수준에서 행해진 실업 대책 역시 내용적으로는 중앙 정부에서 할 당한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 이상의 내용을 지닐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실업 대책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다. 시에서는 98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차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해 왔다. 1차 사업에서는 전체 368명이 신청하여 이 중 56명이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고 312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인원을 보면 남자가 224명, 여자가 144명, 연령별로 보면 20세 미만인 5명, 20대가 43명, 30대가 82명, 40대가 65명, 50대가 가장 많은 102명, 60대 이상이 71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차 공공근로 요원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정 절차 역시 미비한 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공공근로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비수혜자로 구직등록자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되어 있다. 연령은 신청일 현재 15세 이상 65세 이상인자이며, 실직자의 범위에는 전직실직자와 신규실직자가 모두 포함된다. 시에서는 이들 중 우선 선정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을 보면 우선 선정 대상자는 1) 구직등록서류 제출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 최근 10개월 이내에 실직한자, 2) 31세 이상 50세 이하의 실직자, 3) 부양가족수가 많고 재산상태가 적은 자, 4)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등 비수혜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전체 사업비는 1차와 2차를 합하여 433,357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 중 국비가 250,120천 원, 도비가 73,080천 원, 시비가 110,157천 원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 시에서 실시하는 자체의 실업대책 사업에는 '98 공공 투자사업의 조기 발주, 실업대책상황실 설치 운영, 재취업 교육시 민방위교육 면제, 고용안정취로사업 추진, 실직자를 위한 쉼터 방 개설 운영, 고용촉진 직업훈련사업 추진, 구인사업장 조사, 중소기업에 위한 후원인 결

연 사업, 도시실업 귀농자 실업대책, 실직자 무료진료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의 대부분은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 실효성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규모의 실업 대책은 실직자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었다. 공공근로사업을 중심으로 한 1차 년도의 실업대책 사업은 처음 시행했던 관계로 상당한 시행 착오가 있었다. 99년, 시에서는 1월 11일~3월 31일까지 3개월 기간으로 99년 1단계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고, 99년 4월 6일~6월 30일까지 3개월 기간에 걸쳐 99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사업 내용은 보다 내실성을 갖게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9〉 99년 1단계 및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및 배치 현황

(단위 : 명)

99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및 배치 현황							
신 청 인 원			연 령 별				
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062	724	338	136	207	246	356	117
배 치 인 원			연 령 별				
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651	440	211	118	168	196	157	12
			118	168	196	157	12
99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및 배치 현황							
신 청 인 원			연 령 별				
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332	735	597	331	276	319	389	17
배 치 인 원			연 령 별				
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951	605	346	244	168	196	157	

자료 : 춘천시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표 9〉는 99년 1단계 공공근로 사업 신청 및 배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062명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들 중 배치된 인원은 651명이

었다. 신청자 선정 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의 결과 1)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여성세대주 우선), 2) 세대주인 자(여성세대주 우선),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그리고 4) 선발시 30~55세, 저소득자를 우선 선발하였다.

이들에 대한 임금 단가는 단순실내사무보조(19,000원) 및 옥외근로(22,000원), 일정기술·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27,000원), 전문기술직종(3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외에 부대 비용으로 식대 및 왕복 교통비가 3,000원 이하에서 지급 가능토록 하였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99년 2단계 사업에 들어서면서 보다 내실화 되었고, 추진 사업의 내용도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선발 기준 역시 보다 정밀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고용 계약 및 근로 조건에 대한 내용들도 보다 분명한 법적 규정성을 갖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의 제약과 시행 과정상의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실업 대책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의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데 공공근로사업이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사업은 근본적으로 중앙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중앙 정부에서 설정한 기준과 예산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정도의 일을 벗어날 수 없었다.

2. 실직자 상황

(1) 인구·사회적 특성

실직자 조사 자료를 통해 실직자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보면 남성이 60.5%, 여성이 3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들의 평균 연령은 37.6세였고,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35.9%, 30대가

24.5%, 40대가 17.7%, 50대 이상이 21.9%를 차지하였다. 주거 형태별로 실직자들의 상태를 보면,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30.3%로 나타났고, 부모 소유인 경우가 27.4% 정도로 나타났다. 전·월세 거주자는 31.9%였고, 임대·사택·기숙사·기타를 포함한 응답자는 10.0%였다.

실직 전의 근로 지역을 보면, 춘천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75.0%로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춘천 이외의 강원도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경인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10.4%를 차지하였고, 기타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5.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84.3%에 이르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실직을 당하기 전 춘천을 포함한 인근 강원도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외지에서 일하다 춘천 지역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의 비율도 15.6%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춘천 지역 실직자들의 절대 다수가 춘천 혹은 인근 지역에서 삶의 기반을 닦아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 지역 실직자들의 상당수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실직자들의 춘천 지역 거주 기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춘천 지역 거주 기간을 물어 본 질문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춘천 지역 평균 거주 기간은 평균 22.7년이다. 이는 실직자들의 지역 거주 기간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만큼 토착 지역 주민들의 실업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실직자들의 학력 수준을 보면, 초등학교 이하가 12.6%, 중학교 졸업자가 11.8%, 고등학교 졸업자가 38.0%,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37.7% 정도로 나타났다. 자격증 혹은 면허증을 갖고 있는 응답자들이 전체의 68.0% 정도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30.0%였다.

응답자들의 실직 전 직업 분포를 보면, 실직 전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들의 비율이 3.7%, 관리직이 2.1%로 나타나 전문 관리직 실직자의

비율이 6.0%로 매우 낮은 것을 보여준다. 반전문 기술직 종사자들의 비율은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직 전 사무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비율은 16.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판매직 종사자의 비율은 10.3%였으며,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18.6%로 나타났다. 서비스직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직업군은 생산직 종사자들로 전체 응답자의 17.5%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민 층의 비율은 1.7%에 지나지 않았다. 이 외에 아직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미취업 실직자의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1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응답자들의 성별 혼인 상태

		미 혼	기 혼	별거·사별·이혼
남	성	82 (35.2)	143 (61.4)	8 (3.4)
여	성	65 (42.8)	67 (44.1)	20 (13.2)
전	체	147 (38.2)	210 (54.5)	28 (7.3)

$$\chi^2=18.365$$

$$p=.000$$

응답자들을 혼인 상태별로 보면, 미혼이 38.2%, 기혼이 54.5%, 이혼·별거·사별 등이 7.3%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혼인 상태를 성별로 보면, 남성들의 경우 기혼자들이 61.4%인 반면, 여성들은 기혼자가 44.1%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 남성들의 절대 다수가 기혼·가장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미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들의 경우 별거·이혼·사별 등으로 남편이 없는 응답자들이 13.2%나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 실직자들의 가족 내 사회적 지위가 남성들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응답자들의 동거 가족 수와 가족 성원 중 근로 가족 수를 남녀별로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가족 중 본인이 직접 부양하는 가족 수는 남녀별로 상당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자들의 직접 부양가족 수는 2.07명인 반면 여성 실직자들

의 부양가족 수는 1.14명으로 여성보다 남성들의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F=30.388$ $p=.000$).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 여부를 성별로 보면, 자격증을 소지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현저히 많은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 실직자들이 기술과 기능 면에서 남성들보다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실직자들의 근로 경력을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자들의 평균 근로 경력이 180.04개월인 반면 여성들의 평균 근로 경력은 111.33개월로 나타나 실직을 당하기 전 남성들의 근로 경력이 여성들보다 현저히 많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F=22.907$ $p=.000$). 실직을 당하기 전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로 경력 역시 남성들이 긴 것을 보여주는데, 남성들이 최종 직장에서 평균 69.24개월을 근무한 반면, 여성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43.63개월로 나타났다($F=8.522$ $p=.004$).

본인을 포함한 동거 가족 수는 평균 3.750명으로 나타났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본인이 직접 부양하는 가족의 수는 평균 1.70명이었다. 또한 현재 가족 성원들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가족 성원은 평균 0.9명으로 나타났다.

(2) 경제 생활의 변화

실직자들이 지금까지 일을 한 총 경력을 보면 평균 12.7년 정도에 달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실직을 당하기 바로 직전의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4.92년 정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장을 옮긴 이직 횟수를 보면, 전체 평균 2.32회 정도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실직한 시기를 평균적으로 보면 97년 7월로 나타났고, 구직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97년 6월이었다. 이는 실직자들이 실직을 당하기 전에 이를 미리 알고 1개월 정도 먼저 구직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이 가장 최근에 근무한 직장에서의 고용 형태를 보면 '정규직 피고용자'의 신분으로 일했다는 응답이 42.0%(147명) 정도였고, 각

각 19.1%(67명)의 응답자들이 '임시직 피고용자', 혹은 '일용직 피고용자'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신분이었던 사람들은 10.0%(35명)로 나타났으며,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6%(30명)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중 별다른 보수 없이 가족의 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는 1.1%(4명) 정도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직자들의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 형태 역시 상당히 불안정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실업의 영향을 받고, 그 위협에 노출되는 사람들 역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인구 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에 일하던 직장에서의 지위는 성별로 일정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남성들의 경우 정규직 피고용자였던 비율이 45.8%에 달하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응답자의 비율은 36.2%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성들의 28.3%가 임시직 피고용자인 데 반해 남성들의 13.2%가 임시직 피고용자로 일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정부 기관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한 적이 있거나, 등록할 예정으로 있는 사람은 53.5%, 구직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4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구직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면접 조사에 응한 실직자들의 62.3%가 아직 정부 기관에 구직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직 훈련을 받고 있는 교습생의 53.8%가 구직 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다. 실직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업 정책 및 실업자 대책에 대한 정확한 홍보 및 실직자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장을 그만 둔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들이 16.7%였

고, '실업 급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급여 지급이 완료된' 사람들이 6.3%이었다.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사람들'은 3.0%였다. 놀라운 것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이 무려 74.0%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실업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도 사실상 실업 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직자들의 절대 다수에 이른다는 것을 뜻하며, 그 만큼 실직자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들이 실업 급여를 받지 않고 있거나 거절당한 이유를 보면,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7.7%(58명)이었고,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7.1%(56명)이었다. 다른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자격이 안 되어서'라는 응답이 10.4%(34명)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의 내용을 잘 몰라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11.6%(38명)에 이르렀다.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7.3%(24명)이었으며, '곧 취직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8.6%(28명)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취업할 생각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3.7%(12명)였다.

이렇게 볼 때 실업 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들의 대부분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자격에 미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실직자들의 상당수가 실직 이전에도 실업보험에 가입하기 힘들 정도로 영세하거나 열악한 고용 및 근로조건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케 해 준다. 이들은 실업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업보험을 실시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에 다녀 수혜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실업보험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를 잘 몰라서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소득의 변화

응답자들의 월 평균 소득을 보면, 조사 시점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가 무려 68.1%(245명)에 달하고 있었다. 29만원 이하의 소득밖에 없다는 응답은 5.8%(21명)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30~59만원 정도의 소득을 번다는 응답자는 15.0%(54명) 정도였다. 60~99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는 9.2%(33명)이었다. 반면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는 응답자는 전부 합쳐 2%(7명)에 지나지 않았다.

〈표 11〉 응답자들의 실직 전 및 현재 소득 수준 비교

(단위 : 만원)

	현재의 본인소득	현재의 본인 외 가족소득***	현재의 전체 가족소득***	실직 전 본인소득***	실직 전 본인 외 가족소득***	실직 전 전체 가족소득
남성평균	19.65	55.67	71.93	123.03	62.64	182.45
여성평균	14.21	93.54	106.26	78.80	109.71	188.66
전체평균	17.50	70.79	85.60	105.41	81.14	184.89

*** p<.000 수준에서 유의미

이러한 실직자들의 본인 소득을 평균 액수로 추정해 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월 평균 본인 소득은 약 17.5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절대 다수의 실직자들이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직자들의 현재 소득을 남녀별로 보면 남성들의 소득이 19.65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들의 현재 소득은 14.21만원으로 나타나 남녀간에 일정한 차이가 발견된다($F=2.596$ $p=.108$).

실직자들이 실직 전 월 소득의 평균을 추정해 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실직 전 월 평균 본인 소득은 약 105.4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실직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약 87.9만원 정도나 감소한 것을 보여 준다. 실직자들의 현재 개인 소득은 실직 전에 비해 약 16.6%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직 전 본인 소득을 남

녀별로 보면, 남자들의 경우 123.03만원이었던 반면, 여성들의 실직 전 본인 소득은 78.80만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소득 감소 폭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41.473$ $p=.000$).

다음으로 본인 외 가족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을 보면, 전혀 없다는 응답이 41.1%(147명) 정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9만원 이하 소득 수준에 있는 경우가 2.8%(10명)이었고, 30~59만원 정도의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7.5%(27명) 정도로 나타났다. 본인 이외의 가족이 소득을 올리는 경우 가장 많은 부분이 60~99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17.3%, 62명). 다음으로 100~150만원대의 본인 외 가족 소득이 있는 경우가 16.8%(60명) 정도로 나타났다. 150~199만원 정도의 가족 소득이 있는 경우가 7.8%(28명) 정도였다. 반면, 본인 외 가족 소득이 200만원을 상회한다는 응답자들은 전부 합해 6.7%(24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실직자 본인 외 가족의 소득을 평균 액수로 추정해 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월 평균 본인 외 가족 소득은 약 79.8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절대 다수의 실직자들이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의 소득을 남녀별로 보면 남성 실직자들의 본인 외 가족 소득은 55.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실직자들의 본인 외 가족 소득은 95.5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실직자들의 소득이 가족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F=19.215$ $p=.000$).

실직하기 전에 실직자 본인 외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의 평균 액수를 추정해 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실직 전 본인 외 소득은 약 81.3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본인 외 가족 평균 소득 액수인 79.8만원보다 약간 적은 액수이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성들의 실직 전 본인 외 가족 소득이 62.64만원이었던 반면, 여성들의 실직 전 본인 외 가족 소득은 109.71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F=21.911$ $p=.000$)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들조차 수입이 없어서 가족 전체가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실직자들의 비율도 27.1%(92명) 정도에 이르는 것을 보여 준다. 실직자들의 본인을 포함한 가족 성원들의 총 소득을 합산해서 추정해 보면 조사 대상자들 가족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은 약 85.6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성들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평균 소득이 71.93만원에 머무는 반면 여성들의 가족 소득은 78.80만원으로 나타나 여성 실직자 가족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실직하기 전에 실직자들의 가족이 별던 가족 전체 소득의 평균 액수를 추정해 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실직 전 월 평균 가족 소득은 약 184.9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본인 외 가족 평균 소득 액수인 79.8만원보다 훨씬 적은 액수이다.

실직자들의 소득 변화를 연령대별로 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연령대별 실직 전 및 현재 소득 수준 비교

(단위 : 만원)

	현재의 본인소득	현재의 본인 외 가족소득***	현재의 전체 가족소득***	실직 전 본인소득***	실직 전 본인 외 가족소득***	실직 전 전체 가족소득
20대	14.51	119.32	132.98	76.32	138.29	216.61
30대	17.66	50.07	67.15	118.14	68.59	182.57
40대	18.70	35.63	51.89	112.01	35.52	145.79
50대 이상	21.27	44.18	58.31	128.54	48.14	174.08

*** p<.000 수준에서 유의미

우선 현재의 본인 소득은 연령이 높을수록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가 정도는 매우 완만하여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본인 외 가족 소득을 보면, 20대와 그 이상 연령대 실직자들간에 커다

란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실직자들의 경우 현재의 본인 외 가족들의 소득 수준은 평균 119.32만원으로 다른 연령대 실직자들의 가족 소득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20대 실직자들의 대부분이 현재 가계 성원들의 소득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성원들이며, 이들이 가족 소득에서 차지하는 역할 역시 부차적인 반면, 30대 이상 실직자들의 경우 이들이 가족의 소득 구성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 소득 역시 20대 실직자들의 가구 소득과 30대 이상 실직자들의 가구 소득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실업 대책은 20대와 그 이상의 연령대로 차별화 시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직자들의 성격과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집단은 별거, 사별 혹은 이혼 등으로 인해 가족 단위의 사회적 지지를 거의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별거, 사별, 이혼 등의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추정 소득은 17.7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혼자들의 가족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은 64.65만원으로 나타났고, 미혼자들의 가족을 포함한 총소득은 130.04만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 대책의 최우선 순위는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지지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현재 동거 가족이 있는 미혼 실직자들의 경우는 본인의 생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가족 성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들의 소득은 학력에 따라서도 일정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본인의 소득은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별성을 찾기 힘들었지만, 본인 외 가족 소득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집단과 고졸 이하 집단간에 상당한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직 전 본인

소득의 경우 고졸 집단이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실직 전의 가족 소득은 전문대졸 이상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졸 이상의 실직자들 상당수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연령대 인구 층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직자들의 소득을 실직 전 직업에 따라 구분해 보면 본인 소득의 경우 사무직 종사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28.62만원). 그 다음으로 전문관리직 종사자로 26.00만원이었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직업에 종사하던 실직자들의 평균 소득은 20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들의 가족 소득을 직업별로 볼 때 흥미로운 결과의 하나는 실직 전 학생, 주부, 무직 등으로 있던 응답자들의 평균 가구 소득이 134.7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 직업군은 사무직이었고,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나머지 직업에 종사하던 실직자들은 대부분 평균 소득 수준이 100만원 미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들의 희망하는 수입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께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최저 월수입이 어느 수준이면 일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해 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보면, ‘3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2.1%, ‘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22.7%, ‘7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45.8%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70.6%의 응답자들은 월수입이 70만원 이상이면 일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100만원 이상’이면 일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도 21.6% 정도로 나타났고, ‘150만원 이상’이 되어야 일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는 7.8% 정도였다.

〈표 13〉 성별 응답자들의 근로 희망 수입 수준 (단위 : 원)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
남	성	5 (2.0)	28 (12.1)	107 (46.1)	66 (28.4)	26 (11.0)
여	성	3 (2.0)	87 (22.7)	176 (45.8)	83 (21.6)	30 (7.8)

$\chi^2=50.329$

$p=.000$

흥미로운 것은 실직자들의 희망 최저 월수입 수준이 남녀별로 일정한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50만원 이상이면 일하겠다는 응답이 12.1%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22.7%로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남성들의 경우 150만원 이상이면 일하겠다는 응답자가 11.2% 정도였던 반면, 여성들은 그 비율이 2.6%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에도 일할 용의가 많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14〉 연령별 응답자들의 근로 희망 수입 수준 (단위: 원)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
20대	1 (1.1)	37 (26.6)	76 (54.7)	21 (15.1)	5 (3.6)
30대	1 (1.5)	14 (15.1)	37 (39.8)	29 (31.2)	12 (12.9)
40대	6 (7.1)	15 (22.1)	29 (42.6)	18 (26.5)	5 (7.4)
50대이상	8 (2.1)	21 (25.0)	34 (40.5)	15 (17.9)	8 (8.5)

$\chi^2=35.666$

p=.000

응답자들의 근로 희망 최저 월수입을 연령별로 보면 일정한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연령층의 경우 70만원 이상이면 일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가 54.7%에 달하는 반면, 30대에는 이 비율이 39.8%로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40대 실직자들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에서 일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50대 연령층의 경우에는 50만원 미만 수준에서도 일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이 32.1%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젊은층과 노년층은 비교적 낮은 임금 수준에서도 일할 용의가 있는 반면, 생애 소득이 극대점에 달한 30대와 40대 연령층 실직자들의 경우 이들보다는 좀 더 높은 수입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직을 당하기 전 빛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0.0%, ‘아니다’라는 응답이 70.0%로 나타났다. 그런데, 채무 상

황에 대한 응답은 20대 실직자들과 30대 이상 실직자들간에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 주고 있다. 20대 실직자들의 경우 실직 전에 빛이 있었다는 응답이 13.6%로 나타난 반면, 30대 이상 실직자들에서는 빛이 있었다는 응답이 38.8%로 현저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hi^2=25.83$ $p=.000$).

반면 “실직을 당한 이후 빛이 새로 생기거나 늘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빛이 새로 생겼다’(16.9%), 혹은 ‘빛이 늘어났다’(16.7%)라고 답해서 새로 발생하거나 늘어났다는 응답자가 33.6% 정도에 달했다. 반면 ‘빛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자는 1.6%에 불과하였다. 다른 한편 ‘현재 빛이 없다’는 응답자는 55.6%였으며, ‘빛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응답은 9.1%로 나타났다. 실직자들의 채무 변동 상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빛이 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반면 20대에서 빛이 늘었다는 응답은 12.2%에 지나지 않았다.

실직자들의 채무 상황도 20대와 그 이상의 연령층 사이에 상당한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빛이 증가한 실직자들이 생계의 주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30대 이상의 남성 가장 연령층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부양 및 지지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채무의 출처와 관련하여 “현재 빛을 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표 15〉 응답자들의 채무출처 (단위 : %)

채무 대상	1순위	2순위	3순위	전 체
은행·금융기관	55.4 (93)	2.1 (1)	7.1 (1)	42.1 (95)
가족·친지	26.2 (44)	37.5 (18)	7.1 (1)	27.3 (63)
이웃	6.5 (11)	22.9 (11)	28.6 (4)	11.3 (26)
친구·동창	5.4 (9)	20.8 (10)	14.3 (2)	9.1 (21)
사채업자	3.0 (5)	6.3 (3)	21.4 (3)	4.8 (11)
거래처	1.8 (3)	6.3 (3)	7.1 (1)	3.0 (7)
기타	1.8 (3)	4.2 (2)	14.3 (2)	3.5 (8)

빚을 지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 있다는 응답이 55.4%(93명)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가족이나 친지’라는 응답으로 26.2%(44명)로 나타났다. ‘친구나 동창’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다는 응답자는 5.4%(9명) 정도였고, ‘이웃’도 6.5%(11명)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지고 있다는 응답은 3.0%(5명)이었으며, 거래처에 대해 빚을 지고 있다는 응답이 1.8%였다. 거래처에 대해 빚을 지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아주 낮은 것은 응답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적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기타 사람들이라는 응답이 1.8%(3명)이었다.

응답자들이 지고 있는 빚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빚을 지고 계시다면 대략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라는 질문을 해 보았다. 조사의 결과 ‘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2.7%, ‘500~1000만원’ 사이라는 응답이 22.0%, ‘1000~2000만원’ 사이라는 응답이 15.9%에 이르렀다. ‘2000만원 이상’ 빚을 지고 있다는 응답자도 19.5%에 달하였다. 채무의 규모 역시 연령대별로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빚의 규모가 작아지는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빚의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고, 특히 가게의 경제적 수요가 아주 큰 40대 연령층에서 빚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4) 생계 유지

실직자들은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현재 가구의 생계 유지 방식을 물어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직자들은 다양한 생계 유지 방식들 중 평균 1.47개 정도의 방식으로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생계 유지 방식도 없는 사람이 0.5%(2명), 한 가지 방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63.9%(244명), 두 가지 정도의 방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26.2%(100명),

세 가지 방식을 동원하는 사람이 7.3%(28명), 네 가지 방식에 의존하는 사람이 1.8%(7명), 다섯 가지 방식에 의존하는 사람이 0.3%(1명)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들의 생계 유지 방식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역시 '본인이나 가구원의 소득'(58.4%)이었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그 동안의 저축'(25.7%)이었으며, '퇴직금이나 퇴직 수당'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11.0%였다. 이렇게 볼 때 실직자들의 절대 다수는 본인이나 가구원의 소득에 덧붙여 그 동안 모아 둔, 혹은 퇴직금 등을 조금씩 지출하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응답자들 중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그 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한다는 응답자가 13.1% 정도로 나타나 실직자들의 일시적 생계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업 급여에 의존한다는 응답은 9.7%였다. 정부의 대부사업에 의존한

〈표 16〉 실직자들의 생계 유지 방식 (단위: %)

	그렇다	아니다
본인이나 가구원의 소득	58.4	41.6
퇴직금 또는 퇴직 수당	11.0	89.0
친척이나 친지의 도움	6.3	93.7
그 동안의 저축	25.7	74.3
이자, 집세 등 재산소득	5.2	94.8
집, 토지 등 재산을 팔거나 줄여서	0.8	99.2
빚을 얻어서	9.7	90.3
종교단체나 사회기관의 도움	0.5	99.5
이웃의 도움	1.8	98.2
실업 급여	7.6	92.4
공공근로사업	13.1	86.9
정부의 대부사업(생활안정자금 등)	0.3	99.7
영세민 생활보호사업 등 정부보조금	2.9	97.1
직업훈련수당	1.8	98.2
기타	1.8	98.2

사람은 0.3%, 영세민 생활보호사업 등 정부 지원에 의존한다는 응답자가 2.9%, 그리고 직업훈련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1.8% 정도였다. 이렇게 볼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통해 생계를 이어 가는 실직자들의 비중은 약 27.8% 정도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직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 국가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한 비중을 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응답자들 중 '종교단체나 사회기관의 도움'(0.5%), 혹은 '이웃의 도움'(1.8%)을 받는 사람들의 응답은 불과 2.3%에 불과하였다. 결국 실직자들은 개인이나 가족의 소득, 그 동안 모아온 돈이나 퇴직금, 이자 집세 등의 재산소득(5.2%), 그리고 재산 축소(0.8%)나 부채(9.5%) 등에 의존하는 등 본인이나 가족 차원에도 동원 가능한 온갖 경제적 수단들에 의존하면서, 다른 한편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나 실업자 지원 제도 등의 수단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생계를 꾸려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이나 국가가 아닌 사회 단체, 혹은 공동체 수준에서의 도움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와 같은 미취업 상태가 지속될 때 현재의 생활 수준 유지 가능성에 대해 '1개월 미만' 정도를 버틸 수 있다는 응답이 10.9% (41명), '1~3개월 미만' 정도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24.0% (90명), '3~6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16.5% (62명), '6개월~1년 미만'이 14.7% (55명), '1년~2년 미만'이 12.8% (48명), 그리고 '2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21.1% (79명)로 나타났다.

실직자들의 생활 유지 기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미취업 상태가 계속될 때 실직자들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얼마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를 실직 가능 기간을 측정하기 위한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실직 가능 기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고자 하였다. 실직 가능 기간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주요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측정해 본 <표 17>

〈표 17〉 실직자들의 실직 가능 기간 및 취업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실직가능 기간	취업 의사
본인의 평균소득	3.533E-03* (.104)	6.676E-03* (.109)
본인 외 가족소득	-1.00E-03 (-0.085)	6.345E-03*** (-.297)
교육수준	.280*** (.230)	.125 (.057)
실직기간	4.809E-03 (.059)	3.358E-03 (.023)
성	.528*** (.280)	.423*** (.124)
연령	-2.51E-04 (-.016)	1.290E-03 (.023)
전체 R ²	.157 (.138)	.119 (.099)

주 : 1) 유의 수준 (* p<.01; ** p<.05; *** p<.001); 2)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3) 성의 경우 여성은 0으로, 남성은 1로 가변인(dummy variable) 처리하였음.

에 따르면 우선 성별로 볼 때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실직 가능기간이 더 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이 실직가능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실직가능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의 평균 소득 역시 실직 가능 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실직자들의 소득 수준이 대부분 매우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본인의 가족 소득이나 응답자들의 실직 기간, 혹은 연령 등은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실직 가능 기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 분석한 결과를 보자. 분석의 결과 취업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는 본인의 가족 소득과 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본인의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실직자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기대 소득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 낮은 임금 수준에서도 취업할 의사가 강한 반면, 남성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들이 대체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본인의 평균 소득 역시 약간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인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대 취업 시 기대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 수준, 실직 기간, 연령 등은 취업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정부 대책의 인지와 평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실업 대책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실직자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업별로 인지도에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8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재취업 교육 사업’으로 75.0% 였다. 반면 ‘실직자를 위한 대부 사업’(50.3%), ‘생활보호 사업’(40.3%), 그리고 ‘실업보험 사업’(35.2%)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것을 보여준다. 특히 실업보험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다른 한편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실제 그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경험을 비교해 보면, 큰 격차가 발견된다.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업들 중 가장 큰 것이 공공근로사업이지만,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2.6% 정도에 머물렀다. 재취업 교육의 경우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8.5%

〈표 18〉 정부가 실업 대책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인지 여부 및
혜택 경험 (단위 : %)

	정부의 실업대책 사업을 아는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실직자를 위한 대부 사업	50.3	49.7	3.5	96.5
생활보호사업	40.3	59.7	3.8	96.2
공공근로사업	85.0	15.0	22.6	77.4
실업보험사업	35.2	64.8	6.5	93.5
재취업 교육	75.5	24.5	18.5	81.5

정도였다. 반면, 실직자를 위한 대부 사업(3.5%)이나 생활보호 사업(3.8%), 그리고 실업보험사업(6.5%) 등의 혜택을 입은 경험이 있는 실직자들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실직자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공공근로사업과 실직자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실직자들이 해당 사업의 내용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직업훈련 사업의 훈련 과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훈련 과정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3.00 정도로 나타나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일반적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직업훈련이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진술에 대한 평가를 보면 2.85 정도로 나타나 직업훈련이 재취업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내용의 충실도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직업훈련 내용이 충실하고 알차다’라는 문항에 대한 평가는 3.08 정도로 나타나 양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기간 중 보조금 지원이 너무 적다’는 평가에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는 3.80 정도로 나타나 보조금 증액을 바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우선 수당에 대한 평가를 보면, '수당이 너무 적다'는 진술에 대해 3.80 정도의 동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수당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말해 준다.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으로 '선발 과정이 공정치 못하다'는 진술에 대해 응답자들의 평가는 3.65 정도로 나타나 대상자들의 선발 과정에 대한 불만이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정보 취득에 대해 '잘 몰라서 신청 못한 적이 있다'는 평가에 대해 3.14 정도의 동의를 보이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정보가 실직자들간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우리는 춘천지역의 고용 구조와 노동시장 특성, IMF 이후 실업의 전개 과정과 실업자들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거시 수준의 자료나 분석을 통해 발견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추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실태 연구는 거시와 미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춘천 지역의 노동시장과 실업문제에 대해 얻을 수 있었던 주요한 발견점들과 함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에서 발견된 중요한 특징은 자체의 이질성이다. 우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서로간에 노동력 이동이나 정보의 교환이 존재하지 않는 두 개의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하나는 노동력의 이동이 높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임금 수준이 낮으면서, 지역 자체의 내부적 순환 구조를 갖는 업종의 노동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은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 중소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대표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장의 노동력 이동은 주로 사적 연결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다른 한 축에서는 안정된 고용과 낮은 노동 이동,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 조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업종의 노동시장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은 공공 부문에서 주로 발견된다. 춘천 지역의 경우 공공부문의 노동시장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이 도시가 강원도의 수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공 부문에서의 노동시장은 IMF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노동력의 이동은 지역 내 순환보다는 지역간 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다. 구인 및 구직 방식에서도 이 부분은 사적 연결망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훨씬 공식적 성격이 강한 경향을 보인다. 결국 동일한 지역에서도 노동시장의 작동 방식, 정보의 흐름은 부문에 따라 상당히 큰 분절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고, 노동시장 정책 역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동시장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구직 및 구인 혹은 정부 정책 등의 전달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공공부문, 민간 대기업 부문을 제외한 여타의 부분들에서 사회적 연결망은 구직과 구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 사회복지의 전달과 관련된 정보의 흐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의 전달, 재취업 정보 등에서 개별 노동시장별로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연고적 관계망의 작동 방식들을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MF로 인하여 해고가 단행되었던 사업체는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건설업 등이었으며, 춘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고용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에서는 해고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해고가 적었다는 것이 지역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비공식 부문에서의 고용 조정은 대규모 감원이나 해고와 같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기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공식적 조사에서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비공식, 영세 부문에서의 극심한 부침과 고용 변동의 기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로 남는다.

실직자들의 인구 사회적 특성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조사의 주요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직자들의 75.0%가 실직 전 춘천 지역에서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인근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합할 경우 8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춘천 지역 실직자들의 절대 다수가 춘천 혹은 인근 지역에서 삶의 기반을 닦아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응답자들의 춘천 지역 평균 거주 기간도 22.7년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토착 지역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실업 남성들의 절대 다수는 기혼·가장들이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미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 별거·이혼·사별 등으로 남편이 없는 응답자들이 13.2%나 달하고 있었다. 남자들의 직접 부양가족 수는 2.07명인 반면 여성 실직자들의 부양가족 수는 1.14명으로 여성보다 남성들의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크다. 실직자들의 근로 경력을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자들의 평균 근로 경력이 180.04개월인 반면 여성들의 평균 근로 경력은 111.33개월로 나타나 실직을 당하기 전 남성들의 근로 경력이 여성들보다 현저히 많았다. 본인을 포함한 동거 가족 수는 평균 3.750명으로 나타났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본인이 직접 부양하는 가족의 수는 평균 1.70명이었다. 또한 현재 가족 성원들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가족 성원은 평균 0.9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가장 최근에 근무한 직장에서의 고용 형태를 보면 '정규직 피고용자'의 신분으로 일했다는 응답이 42.0%(147명) 정도였고, 각각 19.1%(67명)의 응답자들이 '임시직 피고용자', 혹은 '일용직 피고용자' 신분이었다. 다음으로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신분이었었던 사람들은 10.0%(35명)로 나타났으며,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6%(30명)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중 별다른 보수 없이 가족의 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는 1.1%(4명) 정도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직자들의 이전 직장에서 고용 형태 역시 상당히 불안정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실업의 영향을 받고, 그 위협에 노출되는 사람들 역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인구 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업 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들의 대부분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자격에 미달하고 있었다. 이는 실직자들의 상당수가 실직 이전에도 실업보험에 가입하기 힘들 정도로 영세하거나 열악한 고용 및 근로조건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춘천지역 노동자들의 봉급은 업종을 불문하고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IMF 체제가 춘천 지역에서도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IMF 상황은 업종을 불문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을 감소시키는 강력한 충격을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소득의 감소 폭도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감소폭은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임금 업종에서 소득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실직자들의 본인 소득을 평균 액수로 추정해 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월 평균 본인 소득은 약 17.5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현재 소득을 남녀별로 보면 남성들의 소득이 19.65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들의 현재 소득은 14.21만원으로 나타나 남녀간에 일정한 차이가 발견된다. 실직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실직 전에 비해 약 87.9만원 정도나

감소하였다.

실직자들의 본인 외 가족 월 평균 가족 소득은 약 79.8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절대 다수의 실직자들이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남성 실직자들의 본인 외 가족 소득은 55.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실직자들의 본인 외 가족 소득은 95.54만원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들의 본인을 포함한 가족 성원들의 총 소득을 합산해서 추정해 보면 조사 대상자들 가족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은 약 85.6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평균 소득이 71.93만원에 머무는 반면 여성들의 가족 소득은 78.80만원으로 나타나 여성 실직자 가족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의 본인 외 가족 소득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그 이상 연령대 실직자들간에 커다란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실직자들의 경우 현재의 본인 외 가족들의 소득 수준은 평균 119.32만원으로 다른 연령대 실직자들의 가족 소득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20대 실직자들의 대부분이 현재 가계 성원들의 소득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성원들이며, 이들이 가족 소득에서 차지하는 역할 역시 부차적인 반면, 30대 이상 실직자들의 경우 이들이 가족의 소득 구성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실업 대책은 20대와 그 이상의 연령대로 차별화 시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직자들의 성격과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집단은 별거, 사별 혹은 이혼 등으로 인해 가족 단위의 사회적 지지를 거의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별거, 사별, 이혼 등의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추정 소득은 17.7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 대책의 최우선 순위는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가족

의 경제적 지지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현재 동거 가족이 있는 미혼 실직자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본인의 생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가족 성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들은 다양한 생계 유지 방식들 중 평균 1.47개 정도의 방식으로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들의 생계 유지 방식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역시 '본인이나 가구원의 소득' (58.4%)이었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그 동안의 저축' (25.7%)이었으며, '퇴직금이나 퇴직 수당'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11.0%였다. 이렇게 볼 때 실직자들의 절대 다수는 본인이나 가구원의 소득에 덧붙여 그 동안 모아 둔, 혹은 퇴직금 등을 조금씩 지출하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응답자들 중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그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한다는 응답자가 13.1% 정도로 나타나 실직자들의 일시적 생계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업 급여, 정부의 대부사업, 영세민 생활보호사업 등 정부 지원, 직업 훈련 수당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통해 생계를 이어 가는 실직자들의 비중은 약 27.8% 정도에 달하였다. 실직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 국가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한 비중을 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응답자들 중 '종교단체나 사회기관의 도움' (0.5%), 혹은 '이웃의 도움' (1.8%)을 받는 사람들의 응답은 불과 2.3%에 불과하였다. 결국 실직자들은 개인이나 가족의 소득, 그 동안 모아온 돈이나 퇴직금, 이자 집세 등의 재산소득(5.2%), 그리고 재산 축소(0.8%)나 부채(9.5%) 등에 의존하는 등 본인이나 가족 차원에도 동원 가능한 온갖 경제적 수단들에 의존하면서, 다른 한편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나 실업자 지원 제도 등의 수단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생계를 꾸려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이나 국가가 아닌 사회 단체, 혹은 공동체 수준에서의 도움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미취업 상태가 계속될 때 실직자들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얼마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를 실직 가능 기간을 측정하기 위한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실직 가능 기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고자 하였다. 회귀 분석의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실직 가능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이 실직 가능 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실직 가능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의 평균 소득 역시 실직 가능 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보여 준다.

실직자들이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취업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는 본인의 가족 소득과 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실직자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기대 소득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 낮은 임금 수준에서도 취업할 의사가 강한 반면, 남성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들이 대체로 가게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본인의 평균 소득 역시 약간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인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대 취업시 기대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 수준, 실직 기간, 연령 등은 취업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사태는 지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도 여러 차원에서 충격을 미쳤다.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실직 위협에 노출되었고, 노동조건은 전반

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역시 전보다 악화되었다. 안정된 직장을 상실할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항상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준비가 용이한 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실업극복을 위한 춘천시민운동 협의회. 1999. 『춘천실업리포트』.
한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춘천문화방송. 1991. 『춘천리포트: 지방자치와 전환의 모색』. 나남출판사.
한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춘천문화방송. 1999. 『'99 춘천리포트: 춘천의 삶과 꿈』. 나남출판사.

전북지역의 실업문제와 지역사회의 대응

남춘호*

I. 서 론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전반적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국제통화기금의 관리 하에 들어간지 만 2년이 경과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기아와 대우의 붕괴와 같은 엄청난 충격에 시달렸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부문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만 100조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99년 이후 우리경제는 거시경제지표상으로는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9년 3/4분기의 GDP 성장률은 12%를 상회하고 외환보유고도 700억 달러에 달하여 오히려 급격한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를 우려할 형편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99년 2월에는 실업자수가 전국적으로 178만 명을 헤아리고 실업률도 8.6%에 달하였으나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 2월 현재 5.3%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정점에 달하였으나 2000년 2월 현재 3.8%까지 하락하였다. 공식지표상으로는 보면 이제 실업의 문제는 상당 부분 극복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경기회복으로 이제 실업문제는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은 정부의 2000년도 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직접적인 실업관련 예산은 99년도의 3조2천5백억 원에서 1조5천6백억 원으로 50% 이상 삭감되었다¹⁾

그러나 외형상의 경제지표들이 우리경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과연 실업문제가 안심할 단계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실업현장의 체감지표는 정부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사실 공식지표상으로는만 판단하더라도 부도율의 하락이나 산업생산의 회복, 종합주가지수의 변화 등과 비교해 볼 때 고용의 회복은 상당히 더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은 99년 상반기에 3.8%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이전보다 1.5%나 높아졌으며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2000년에는 4%대로 올라설 수도 있다고 한다²⁾. 각종 경기지표들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가 급속하게 해

1) 그렇지만 정부의 실업관련 예산은 그 동안 자의적으로 부풀려 발표되어온 점이 적지 않다. 사실 노동수요가 상품수요의 파생수요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정책 전반의 예산을 모두 실업예산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까지 실업예산에 자의적으로 포함시켜 발표해 온 점은 '통계는 권력'이라는 점을 절실히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실업관련 직접예산만 비교해 보았다. 2000년도 실업관련 예산안을 세부항목별로 보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2조1천억 원에서 9천억 원으로 57% 감소하였으며, 한시적 생활보호예산이 6천3백억 원에서 4천6백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분야의 예산 역시 3,296억 원에서 2,710억 원으로 15% 가량 삭감되었다(기획예산처, 1999).

2) 자연실업률이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가운데 달성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실업률로 완전고용실업률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은행의

소되지 않는 것은 첫째, 실업률이 가지는 경기후행적 특성 때문이며, 둘째로는 현재의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라는 성격 외에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라는 특성 또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1년간 우리기업들이 주로 고용감소를 통한 성장전략을 펴온 점에 비추어 본다면 경제의 회복에 따른 고용의 실질적 회복과 실업문제의 해소는 아직은 낙관할 수만은 없다.³⁾

실업 상황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발표한 실업통계에는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되어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는 빠져 있다.⁴⁾ 또한 실업문제는 취업자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취업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당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어서 최소한의 생계비 수입도 올리지 못하는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위기를 경과해 오면서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의 결과 정규직이 대폭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직, 시간제 근무 등과 같은 각종 비정규직이 급증하여 고용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점 역시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IMF 사태이후 2년 이상 경과하면서 실업자들 중에서 재취업하지 못한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빈곤층이 점차 퇴적되고 있다. 많은 OECD 국가들은 과거 1980년대에 이미 장기실업의 고통을

의 발표에 의하면 96년의 자연실업률은 2.3%였으나 99년 상반기에는 3.8%로 나타났다(한국경제, 99.11.30).

- 3) 여기에 덧붙여 외환위기를 우리보다 앞서 경험했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란 함정까지 고려한다면 고용회복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 4) 경제활동 참가율의 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실망노동자로 전락한 실업자의 수는 전라북도의 경우 약 10만 명에 달하며, 따라서 전북지역의 경우 실업대책은 3만명이 아니라 13만 명을 대상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성제환, 1999).

겪은 바 있고 일부 국가들은 아직도 그 병폐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장기실업률은 6개월을 장기실업의 기준으로 할 때 1998년에는 15.7%이었으나 1999년 7월에는 21.1%로 높아졌다. 우리사회의 경우에도 실업자의 특정계층이 경기회복시기에도 재취업되지 못하고 장기실업자로 전락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하겠다.

1997년 말 집권에 성공한 국민의 정부는 당면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멕시코의 세디요 정부와 그 정책들을 모범으로 따르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워싱턴 컨센서스를 충실히 따른 결과 IMF의 장학생으로까지 불렸던 멕시코의 실상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엄청난 규모의 실업 및 반실업, 바닥을 모르는 저임금 등으로 광범위한 계급갈등과 정치불안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이성형 1998). 통계청의 1999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7만9천900원으로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 82만8천400원의 5.3배로 나타났다. 이는 97년 3/4분기의 4.5배에 비해 그 격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중위소득계층과 상위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 역시 85년 이후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자의 급증과 장기실업자의 퇴적,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등에서 이미 우리사회 전반에 빈부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고, 그것이 가구소득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결국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무원칙하게 답습할 경우 우리사회도 빈부의 양극화와 계층갈등의 심화라는 함정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외환위기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초기의 경제적 위기에서 사회적 위기로 급속히 전화해왔다. 실업은 단순히 경제적 현상만은 아니며 더욱이 실직자 개인에 한정된 문제는 더 더욱 아니다. 한 가정을 책임진 가정의 실직은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직자 자신의 심리적 파탄과 자아분열, 이혼, 가출, 범죄, 자살,

약물중독, 청소년 문제 등으로 이어져 가정을 파괴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안병철, 1999). 또한 멕시코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경제 위기에 따른 실업자의 양산을 방치할 경우 이는 자칫 빈부격차의 확대와 계층간 갈등의 심화로 이어져 결국 우리 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성경룡,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MF 관리체제 2년을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전북지역의 실업문제의 그간의 동향을 되짚어보고,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업률 통계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실업문제와 고용불안의 실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실망노동자의 증대와 고용불안의 심화, 장기실업자의 퇴적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편 실업문제는 경제적 위기만이 아니라 사회적 위기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생활세계 속에서의 제반 문제들, 예컨대 사회심리적 고통, 가족문제, 자아정체성의 문제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농업부문의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크기 때문에 지표상의 실업률은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고, 일부에서는 농업부문이 실업자를 흡수하는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구당 평균 수 천 만원씩의 농가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부문의 고용흡수 잠재력 또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의 높은 비중이나 중소기업 위주의 사업체 구성 등 전북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이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지역의 노동시장구조에 미친 영향을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99년 5월에 전주에서 실시한 실업자 실태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전북지역 실업문제의 실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문제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기로 하겠다.

II. 전북지역의 산업 및 노동시장 동향

1. 전북의 지역경제와 산업구조

전국의 모든 지역과 국민들 중에서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었던 경우는 없다. 그렇지만 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지역불균등 발전의 결과 각 지역의 경제구조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⁵⁾, 이에 따라 IMF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가 미치는 영향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라북도 지역경제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작고 농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1998년을 기준으로 산업별 취업자 비율은 보면 농업부문은 25.4%(전국: 12.2%)이고 제조업은 11.7%(전국: 19.5%)이며 건설업은 7.6%(전국: 7.9%), 기타 SOC 및 서비스업은 55.3%(전국: 60.3%)이다⁶⁾.

한편 전북지역 경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영세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1997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중 종업원 규모 500명 이상의 대기업에 취업한 노동자의 비율은 7.1%(전국: 13.4%)에 불과하며 반대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비율은 71.6%(전국: 64.1%)이다.⁷⁾ 전북지역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외부 대기업과

5)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98년 기준으로 인구는 전국의 4.3%이며, 면적은 8.1%인데 비해, 광공업 부가가치생산액은 2.78%, 광공업 사업체 수는 2.45%, 수출액은 2.0%, 예금액은 2.1%, 내국세수입은 1.36%를 점하고 있다(전북도청, 1999).

6) 1997년도 산업별 지역 내 총생산액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은 14.1%(전국: 5.1%), 광공업은 27.8%(전국: 29.8%), SOC 및 서비스업은 58.1%(전국: 65.1%)이다.(통계청, 1998).

7) 제조업의 사업체 수를 보면 전북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체 수는 전체의 79.0%(전국: 68.8%)나 되고 5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 수는 97년 현재 모두 15개에 불과하다.(통계청, 1997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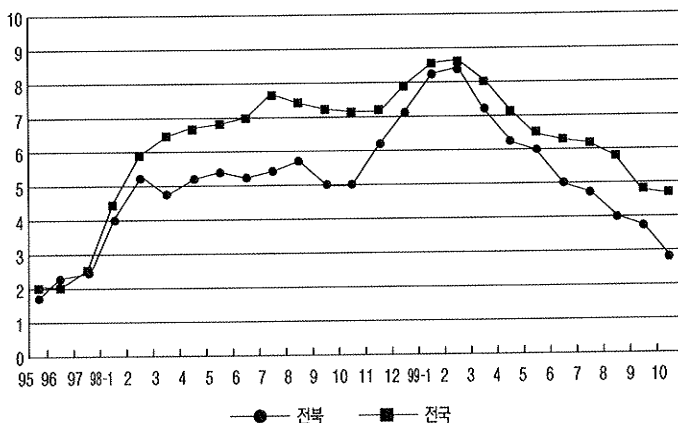
의 하청관계를 통해 한계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견디어낼 수 있는 경제적 경쟁력이나 정치적 교섭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극심한 경기침체나 공황시기에는 노동자들은 그 동안 이룩해 온 성과를 모두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된다. 특히 한국처럼 기업별 노조가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들, 그리고 비조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게된다. 전라북도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볼 때 전북지역의 노동자들이 겪고있는 고용불안과 실업, 그리고 임금삭감의 고통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⁸⁾

2. 고용 동향과 실업

전북의 실업률은 2000년 2월 현재 3.8%이고 실업자수는 3만이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 5.3%에 비해 낮은 편이다. 97년까지 2% 내외에 머물던 실업률은 98년에는 5%대로 증가한 후 계절적 변동을 보이다가 99년 2월에는 실업자수 6만 6천, 실업률 8.4%로 정점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99년 3월 이후에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II-1] 참조). 실업자의 절대수로는 아직 95~6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지만 실업률이 3.8%까지 하락하였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3.8%라는 실업률 지표의 이면에 가려져 있을 지 모르는 실업의 실상을 천착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우선 현재의 실

8) 전북지역 경제의 취약성은 기업부도율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부도규모가 아니라 부도기업의 수로 보았을 경우에는 전북지역은 인천, 울산과 함께 외환위기 직후인 97년 12월에 가장 많은 부도를 기록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지역과 함께 자금경색이 가장 빨리 확산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재훈, 1999).



[그림 II-1] 95년 이후 실업률 추이

업률에는 오랫동안 취업이 안되어 ‘구직활동을 단념한 채’ 집에서 쉬고 있는 실망노동자들이 제외되어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97년 3/4분기와 99년 3/4분기의 2년 사이에 경제활동인구는 1만4천명이 감소하였으나 비경제활동 인구는 2만2천명이 증가하였다. 동기간에 1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1만 2천명 정도의 비경제활동 인구의 순증가가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 동기간에 경제활동인구는 1만5천명이 감소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2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15세 이상의 인구증가를 감안할 때 최소한 1만6천 명 이상의 여성들이 경제위기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화한 것으로 추정된다⁹⁾. 겉으로 드러난 실업자만이 아니라 이들

9) 물론 비경제활동 인구의 순증가는 실망노동자 효과로 경제활동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한 사람 수에서 부가노동자 효과로 인하여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다가 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한 사람의 수를 뺀 것이므로 실제로 실망노동자의 수는 비경제활동 인구의 순증가분 보다 많을 것이다. 게다가 15세 이상 인구는 모두 비경제활동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여기서 추정한 실망노동자의 수는 최소한의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정태적 분석으로는 곤란하고 동태적인 이동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

실망노동자들의 고용문제도 주요한 정책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표 II-1> 참조).

<표 II-1>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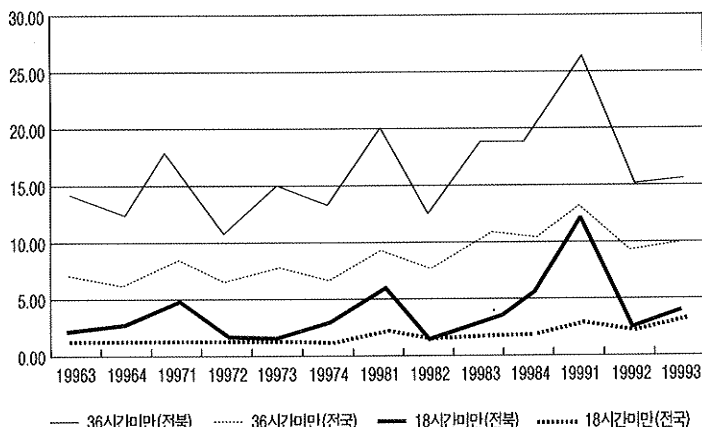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97.3/4	'98.3/4	전년동기대비		'99.3/4	전년동기대비		'97년동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 15세 이상 인구	1,479	1,487	8	0.5	1,489	2	0.1	10	0.7
┌ 남자	710	714	4	0.6	715	1	0.1	5	0.7
└ 여자	770	773	3	0.4	774	-	0.1	4	0.5
- 경제활동인구	911	902	-9	-1.0	897	-5	-0.6	-14	-1.5
┌ 남자	508	524	16	3.1	510	-14	-2.7	2	0.4
└ 여자	402	377	-25	-6.2	387	-10	-2.7	-15	-3.7
- 비경제활동인구	569	585	16	2.8	591	6	1.0	22	3.8
┌ 남자	201	190	-11	-5.5	204	14	7.4	3	1.5
└ 여자	367	395	28	7.6	387	-8	-2.0	20	5.4

자료 : 매월 고용동향 각 월호(통계청 및 전북통계청)에서 재작성.

실업문제는 취업자의 고용의 '질'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97년 3/4분기부터 99년 3/4분기까지 2년 동안의 주당노동시간별 취업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경우 생계유지가 가능한 최저수준의 임금 조차 확보하기 힘든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가 무려 76.4%나 증가하여 불완전 취업자가 크게 늘어났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질적으로 반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불완전 취업자들의 경우에는 현재의 정부 실업자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그림 II-2]에서 나타났듯이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전체취업자중에서 주당 36시간미만 취업자나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불완전취업자의 문제가 전라북도가 당면한 심각한 과제로 드러났다. 한편 임금근로자중에서 상용직의 비율도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 역시 고용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98년 6월부터 99년 7월 사이에 실업상태에 있다가 재취업한 사람들의 77.1%가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취업하였고, 상용직에 취업한 사람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남춘호, 1999). 그 결과 IMF 관리체제 초기인 98년 1월에는 상용근로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54.2%였으나 99년 10월에는 49.2%로 감소하고 반대로 임시직과 일용직은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더 만들어서 지표상의 실업률을 낮추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림 II -2] 단시간취업자 비중 추이

이번에는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추이를 통해서 경제위기가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지난 2년 사이에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는 전국적인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2년간 2만 8천명(25%)의 취업자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은 1만 5천명(19.7%)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2년 동안에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사업/개

인/공공서비스업 뿐인데 이는 공공근로사업의 실행으로 공공서비스업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 경제가 거의 전 산업에 걸쳐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표 II-2> 참조)

한편 이러한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를 전반기(97년 3/4분기부터 98년 3/4분기까지)와 후반기(98년 3/4분기부터 99년 3/4분기까지)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전반기 1년 동안에 급격하게 취업자 감소가 이루어지다가 후반기에는 건설업은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나 제조업에서는 아직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제조업 분야가 후반기에 8.8% 증가하여 최근의 고용회복을 주도하고 있으나 전북지역에서는 후반기에도 여전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전북지역 제조업의 회복속도가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는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1~1.5%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농림어업에서는 전반기에는 1.9% 증가하였으나 후반기에는 1.1%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사업개입공공서비스업에서는 전반기에는 0.6%의 감소가 있었으나 후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힘입어 14.1%나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기, 운수, 창고, 금융업에서는 전반기에는 6.9%가 증가하였으나 후반기에는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10.4%나 대폭 감소하였다.

여기서 흔히 실업자를 흡수하는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온 농업부문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농업부문의 경우 전라북도에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취업자 감소를 보여왔으나 초반기 1년간은 감소세가 멈추고 5천명의 고용증가를 보여서 어느정도 완충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후반 1년 동안은 3천명의 감소로 돌아서 농업부문의 고용흡수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 일각에서 귀농을 실업대책으로 요란하게 내세운 것과는 달리 실제 실업자들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귀농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볼 수 있

듯이 농업부문의 역할은 실제로는 별로 크지 않았으며 이는 후반기 1년간의 농업 취업자수의 감소에서 바로 드러났다고 하겠다. 그리고 생계형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전후반기 모두 작으나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실업자 흡수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점들은 농업이나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적어도 전북지역에서는 얼마나 무책임한 환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¹⁰⁾

〈표 II-2〉 산업별 취업자 변동 (단위 : 천명, %)

	'97.3/4	'98.3/4	전년동기대비		'99.3/4	전년동기대비		'97년동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체>	892	853	-39	-4.4	861	8	0.9	-31	-3.5
○ 농림어업	266	271	5	1.9	268	-3	-1.1	2	0.8
○ 광공업	116	89	-27	-23.3	85	-4	-4.5	-31	-26.7
— 제조업	112	88	-24	-21.4	84	-4	-4.5	-28	-25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510	493	-17	-3.3	508	15	3.0	-2	-0.4
— 건설업	76	57	-19	25.0	61	4	7.0	-15	-19.7
— 도소매, 음식숙박	197	195	-2	-1.0	192	-3	-1.5	-5	-2.5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64	163	-1	-0.6	186	23	14.1	22	13.4
— 전기, 운수창고, 금융	72	77	5	6.9	69	-8	-10.4	-3	-4.2

자료 : 매월 고용동향 각월호(통계청 및 전북통계청)에서 재작성.

10) 김재훈(1999)에 의하면 97년 1/4분기부터 98년 1/4분기 사이에 전국적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 감소가 있었으며, 98년 1/4분기부터 99년 1/4분기사이에는 대체로 광역시도에서는 취업자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도지역에서는 소위 '생계형 서비스업'의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국적 추세와 일치하지 않으며, 김재훈의 글에서도 경기도 지역이나 강원·전북 등은 이외는 다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형 서비스업의 취업자 동향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직업별 취업자수의 변화를 보면 IMF 구제금융 이후 전반기에는 기농·기계조작, 단순노무 등 생산직이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98년 3/4분기 이후 후반기에는 생산직은 고용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반대로 사무직이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전국적으로는 전문기술관리직이 최근 1년 사이에 4.0%나 증가하였으나, 전북지역에서는 후반기 1년 사이에 3.7%나 감소하였다.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전문기술관리직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식기반산업의 유치에 힘쓰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전북지역은 적어도 고용구조에 있어서만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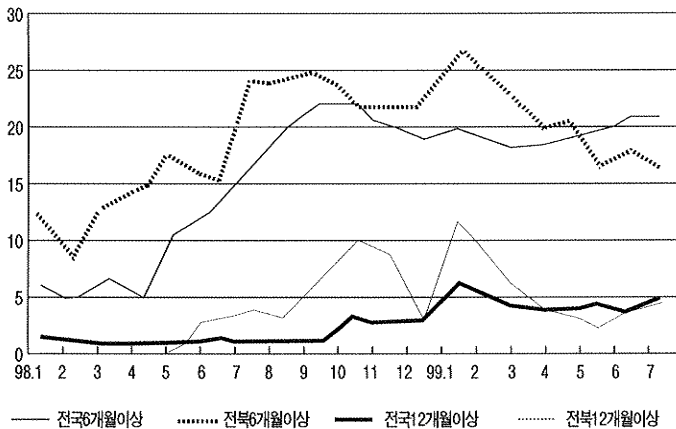
연령별 취업자수의 변화를 보면 전반기 1년간의 극심한 고용감소는 주로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에 양극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IMF 체제 후반기 들어서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에서 급격한 취업자 증가를 보였으며, 30세에서 59세 사이의 핵심연령층에서는 후반 1년 동안에도 취업자가 2.7%나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의 고용회복이 주로 임시직·일용직 위주로 이루어진 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외형상의 고용회복 속에서 전반적인 고용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 주목할 점은 장기실업자의 퇴적 현상이다. 장기실업자의 전국적 추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IMF사태 직후에는 쏟아지는 신규실업자로 인하여 전체 실업자 중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98년 2/4분기 이후 이 비율은 급격히 상승하여 99년 상반기 이후에는 전체 실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그림 II-3]을 보면 6개월 기준 장기실업자의 비율은 98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급증하였으며, 12개월 기준 장기실업자의 비율은 98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급증하여 99년 1월 이후로는 그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장기실업자 비율은 6개월 이상 실업자나 12개월 이상 실업자 모두 전국

수준을 대체로 웃돌고 있어서 장기실업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다만 99년 2/4분기 이후에는 전국수준보다 다소 하락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 행이라고 하겠다.¹¹⁾ 하위집단별로 장기실업자의 비중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장기실업률이 여성의 장기실업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¹²⁾ 이는 여성의 경우 실직이 실업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으로 퇴장하는 실망노동자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최화정, 1999). 실업률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장기실업률이 낮을 경우에는 장기실업률이 높을 경우에 비해서 문제가 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장기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높고 실업자 내부의 유동성이 커서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가 가져다줄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다(신동균, 1999). 그러나 실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실업으로부터의 탈출 확률은 낮아진다.¹³⁾ 한국에서 특히 장기실업 문제가 우

- 11) 장기실업문제는 월평균 구직기간의 분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전라북도의 경우 실업자들의 평균구직기간이 전국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별 노동력 이동확률 분석에서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전북의 경우가 전국보다 낮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남춘호 이성호, 1999).
- 12)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된 표본의 사례수가 적어서 하위집단별 장기실업자의 비중을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대체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학력별로는 고졸이상이 중졸이하보다 장기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학력자층에서 장기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고학력 실업자들의 경우 의중 임금이 높고, 또 고학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숙련수준에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한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직유무별로 살펴보면 IMF 이전에는 대체로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전직실업자 중에서 더 높았으나 IMF 직후부터는 신규실직자층에서 장기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기 하강기에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99년 이후부터는 이런 경향은 다시 조금씩 바뀌어서 양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하거나 혹은 역전되고 있다.
- 13) 장기실업자들은 흔히 이중문제(dual problem)에 직면하게 된다.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실업자들 스스로도 의욕상실로 인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되고, 고용주들 역시 장기실업자들은 기피하게 된다.

려되는 이유는 한국은 아직 사회 안전망이 발달되지 않아서 장기실업자들의 생계위협 문제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장기실업자의 발생은 저성장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기 후퇴에 따른 총체적 고용흡수력의 감소에 의해 실업이 발생하고, 이후 경기가 반전되어도 단기실업자나 신규 진입자들이 장기실업자보다 우선적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결국 장기 실업의 규모는 경기 후퇴를 경험할 때마다 누적되는 성향을 보인다(Walsh, 1987; Sorrentino, 1995; Jackman and Layard, 1991). 만약 실업자 중 일부가 장기실업자층으로 퇴적된다면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커다란 사회적 부담으로 남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자료 : <표 II-1>과 동일.

[그림 II-3]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고용주들이 장기실업자들을 기피하는 이유는 기간의존성효과(duration dependence effect)와 이질성효과(heterogeneity effect) 때문이다(Layard and Nickel, 1986; Heckman and Borjas, 1980). 또한 장기실업은 산업구조조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구조조정은 양적인 면에서의 슬림화 뿐만 아니라 노동 수요의 성격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신동균, 1998).

Ⅲ. 전북지역 실업자 실태조사 결과

1. 전북지역 실업자 조사 개요

본 장에서는 전북지역의 실업자 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실업자들의 이전 직장, 구직활동, 정부실업대책에 대한 태도, 생활실태, 사회심리적 고통, 자녀문제, 가족문제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실태조사는 99년 4월 20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전주시에서 실시되었으며, 표집은 노동사무소 구직신청자, 재취업 직업훈련생, 공공근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의 조사결과를 98년도의 실업자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¹⁴⁾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남자는 59.3% 여자는 40.7%이다. 그리고 학력별·연령별 분포를 보면 상대적으로 99년 표본이 고학력, 20대가 많은 편이다.

14) 98년도 조사는 전주, 익산, 군산의 3 도시에서 지방노동사무소 구직신청자, 재취업훈련생, 공공근로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98년 전북조사와 99년도 전주시 조사는 가구조사가 아니므로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99년 전주시 조사에서는 99년 4월 경제활동인구 조사자료에서 전북지역 실업자들의 연령별, 성별, 학력별 구성비를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표집시 표본을 할당하였다. 상대적으로 99년 조사에서는 98년 조사에 비하여 20대와 대졸층이 많이 표집되었는데 이는 실제 실업자 구성비가 1년 동안에 변한 데 기인하는 부분도 있고, 표본이 다른데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 다만 98년도 자료를 99년도의 자료와 동일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한 후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원래의 결과와 서로 비교해 본 결과 응답의 경향성은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나 이후부터는 가중치를 주지 않은 결과를 그대로 비교에 사용하였다(남춘호, 1998). 다만 전북지역의 실업자 실태조사는 비체계적 할당표집 방식을 사용하였으므로, 확률표집에 기초한 전국조사자료, 예컨대 노동연구원과 보사연의 1998년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전주시 실업자 실태조사자료의 이용을 허락해준 전주시 실업자취업지원센터에 감사를 표한다.

2. 실직 이전 직장에 관한 사항들

(1) 실직 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산업분포

98년 전북조사에서는 제조업과 SOC산업, 건설업 출신이 많고 99년 전주조사에서는 SOC산업, 제조업, 개인서비스업 출신이 많다. 성별로는 남성은 제조업, 건설업 출신이 많고 여성은 개인서비스업 출신이 많다. 구직희망산업은 이전 산업에 비해서 제조업과 건설업이 줄고 SOC산업과 개인서비스업이 늘어났다. 이는 이전의 제조업, 건설업 종사자 중 상당수가 해당산업에서의 구직을 포기하고 개인서비스업이나 SOC산업에서 새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실직 이전 직장의 직종과 희망직종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98년 조사에서는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블루칼라 직종으로의 하향구직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다. 그러나 99년 조사에서는 연령별로 50대 미만층이 하향구직 성향을 보이거나 전체적으로는 하향구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2) 실직 이전의 급여

실직 이전의 급여를 보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출신이 전체 응답자의 51.2%를 차지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85%가 저소득층 출신인데 이들 중 50.2%가 자신이 생계책임자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성가장의 경우에는 91.5%가 자신이 가족의 생계주책임자라고 응답하여 여성저소득 실업가구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표 Ⅲ-1> 참조).

한편 이전 직장의 임금과 의증임금(reservation wage)을 비교한 결과 재취업을 위해서는 임금의 삭감을 감수하겠다는 하향구직 경향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98년에 비해 99년에는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Ⅲ-1〉 실질 이전의 급여

(단위 : %)

	98 전북			99 전주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70만원 미만	6.1	46.8	17.4	9.9	58.5	28.3
70~100 미만	20.9	28.9	23.1	20.6	26.5	22.9
100~150 미만	36.5	18.5	31.5	34.9	8.6	25.0
150~200 미만	22.2	2.9	16.8	16.6	3.5	11.6
200만원 이상	14.3	2.9	11.1	18.0	2.9	12.3
합 계	446	173	619	616	373	989

자료 : 98 전북조사와 99 전주조사.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14를 참고하기 바람. 이하에서는 별도의 출처표시는 생략함.

(3) 실직 사유

실직 사유를 보면 도산, 휴폐업, 조업단축이 28.2%로 가장 많다¹⁵⁾. 그 다음이 정리해고(14.9%)이다. 그리고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 비자발적 실업을 모두 합하면 63.2%이다. 98년 조사에서는 65.6%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타났다(<표 Ⅲ-2> 참조).

3. 실업대책과 구직활동

(1) 퇴직금

퇴직금제도는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한 한국의 상황에서 마련된 특수한 제도이다. 사회복지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된 실업자

15) 경제위기에 중소기업의 도산과 어음부도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로는 기업간의 전근대적 하청관계를 들 수 있다. 전근대적 하청관계 속에서는 대체로 모기업과 하청기업, 하청기업과 재하청기업사이의 대금결제 가 6개월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한 기업의 부도가 지역의 관련 기업 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농후하다. 전근대적인 하청관계를 정비하는 것이 지역 중소기업의 부도율을 낮추고 그로 인한 실업자의 양산을 막는 근본적 대책의 하나로 판단된다.

〈표 Ⅲ-2〉 직장을 그만 둔 이유

(단위 : %)

	98 전북	99 전주		98 전북	99 전주
직 장 이 전	5.4	6.2	도 산	25.2	28.2
결 혼 출 산	4.1	2.9	기 간 만료	1.3	3.4
질 병	3.1	5.2	정 년 퇴 직	3.6	0.6
개 인 사 업	3.1	2.0	명 예 퇴 직	6.0	5.2
인 사 조 치	8.3	9.3	정 리 해 고	21.4	14.9
개 인 사 유	7.4	10.5	권 고 사 직	7.5	5.4
정 계 해 고	2.1	1.9	기 타	1.5	4.2

들은 퇴직금을 기반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아보거나 이를 밑천 삼아 자영업업을 모색하곤 했다. 실제로 99년 전주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1.9%가 실직 이후 자영업업을 해보았다고 응답했으며, 23.6%는 자영업업을 해 볼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그 동안의 사회이동 연구에서 노동자층으로부터 자영업층으로의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재열, 1999)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98년 조사에서 24.9%가 실직시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99년 조사에서도 15%가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98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7.4%가 체불임금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99년 조사에서도 12.6%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¹⁶⁾ 퇴직금의 액수는 천만 원 미만이 70.1%이나 4.9%는 1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퇴직금이 1억 이상인 층과 1000만원 미만인 층에 대한 실업대책은 달리 강구되어야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표 Ⅲ-3>).

16)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노사정합의하에 임금채권변제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의 변제금 상한액 등에서 한계가 뚜렷하여 아직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성균, 1999).

〈표 Ⅲ-3〉 퇴직금 수령 여부

(단위 : %)

	98 전북	99 전주
반 음	51.9	42.9
곧 반 음	9.5	5.3
반 지 못 함	24.9	9.6
해 당 없 음	13.7	42.2
합 계	611	991

(2) 실직년도와 구직기간

실직년도 분포를 보면 98년 조사에서는 60.4%가 98년 이후 실직하였으나 99년 조사에서는 77.8%가 IMF 이후에 실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의 평균구직기간은 6.4개월이며, 구직여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 둔 이후 현재까지의 실직기간은 평균 7.6개월이다.¹⁷⁾ 실업자의 특성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평균구직기간이 길며, 연령별로는 노령층일수록 구직기간과 무업기간이 길다. 한편 구직기간은 신규실업자가 더 길고 실업기간은 전직실직자가 더 길다. 직종별로는 생산직 출신이 사무직 출신보다 구직과 실직기간이 더 길고, 실직 사유별로는 구직기간은 비자발적 이직자가 더 길지만, 실업기간은 자발적 이직자가 더

17) 비정상적인 장기실업자들이 평균실업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구직이나 실직기간이 24개월 이하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다. 참고로 1998년 9월 기준으로 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는 구직기간이 4.71개월, 실업기간이 6.59개월로 나왔으며(금재호, 1999),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구직기간을 가지고 본인이 계산해 본 결과는 99년 4월 현재 전국이 3.54개월 전북은 3.45개월로 나왔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실업자 실태조사는 비체계적 할당표집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구조사를 기초로 체계적 확률표집을 이용한 노동연구원조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의 엄밀한 비교는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한편 노동연구원 자료의 실직기간과 본 연구의 실직기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실직기간이라기보다는 무업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구직기간보다는 길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길다. 이전산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구직기간이 가장 길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일용직과 임시직 출신이 구직기간이 길다. 그렇지만 하위 집단별 실직기간과 구직기간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므로 그 원인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나 이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¹⁸⁾

전체적으로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수준에 비해 구직기간이나 실업기간이 길어서 장기실업이 우려되며, 하위집단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장기실업이 특정한 층에 집중되는 경향도 감지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80년대 경기침체에 대량실업이 발생한 이후 경기회복기에 도 이들 중 상당수가 재취업되지 못하고 장기실업자로 전락하여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장기실업은 한 번 발생한 후에는 대책을 강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음을 유럽국가들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한국의 경우에는 장기실업화 현상에 대해 더욱 세밀한 분석과 대책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표 Ⅲ-4>참조).

(3) 구직활동

구직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4.5%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끝까지 구직활동을 해보겠다고 대답하였고, 26.0%는 취업이 안되면 자영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농업을 해보겠다는 응답자는 3.3%에 불과하여 귀농을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업자들은 아주

18) 우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전북 표본은 모두 3000명 정도이며 따라서 그 중 실업자수는 150명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150명을 가지고 하위집단별 구직기간과 실직기간을 분류할 경우 각 셀에 해당되는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 반면에 본 조사는 엄밀한 의미의 확률표집이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세밀한 차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표 Ⅲ-4〉 실직기간 및 구직기간

(단위 : 개월)

전 체		실직기간	구직기간
		9.4개월 ^a	7.5개월 ^a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12.2	9.0
	고졸	9.5	7.6
	대졸이상	7.5	6.3
연 령	20대	7.9	6.7
	30대	8.7	6.6
	40대	10.7	8.0
	50대	12.6	10.1
취 업 자 유 무	취업자 있는 가구	8.6	6.6
	취업자 없는 가구	10.2	8.5
신 규 출 업 자	신규출업자(비신규)	11.4(9.2)	6.7(7.6)
생 계 책 임 자	주책임자(비책임자)	10.0(8.6)	8.3(6.5)
직 종	사무직(생산직)	8.2(11.1)	6.6(8.7)
실 직 사 유	자발(비자발)	10.7(8.9)	6.9(7.7)
최저생계비이하 빈곤가구	빈곤가구(기타가구)	10.6(7.5)	8.6(5.9)
혼 인 상 태	기혼자(미혼자)	10.1(8.2)	7.9(6.9)
이 전 산 업	제조업	11.2	8.3
	건설업	8.9	7.7
	SOC	7.7	6.5
	개인서비스업	8.3	7.2
	음식숙박업	14.3	8.0
종 사 상 지 위	정규직	8.9	6.9
	임시직	11.1	8.9
	일용직	9.5	9.1
	자영업	12.9	8.8

a : 2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나 구직자를 제외하면 실업기간은 평균 7.6개월, 구직기간은 6.4개월이다.

적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취업이 안되면 경제활동을 포기하겠다는 응답은 여성이 10.3%로 남성의 3.4% 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실망노동자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 방법으로는 신문, TV, 생활정보지 등의 구인광고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98년과 99년 모두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친구나 친지의 소개에 의존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98년 조사에 비해 99년 조사에서는 공공구직창구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27.5%에서 52.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상의 구인광고 이용자가 증가한 점 역시 눈에 띄는데 이는 99 전주조사에 20대 대졸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6개월 이내의 재취업 가능성을 질문한 결과 46.8%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98년 조사의 29.1%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54.7%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실업자들도 98년에 비해 자신의 재취업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위집단별로는 대졸, 20대, 남성층이 낙관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중졸, 40~50대, 여성일수록 비관적 전망을 표명하였다.

4. 실직자들의 생활실태와 사회적 위기

(1) 가구소득 분포와 소득감소율

실직자들의 이전 직장 소득분포에서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51.1%나 됨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실직한 이후 현재의 가구소득을 살펴봐도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59.1%나 된다. 98년 조사(48.4%)에 비해서 99년 조사에서는 저소득가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7년 10월과 99년 4월의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가구소득 감소율(99년 소득/97년 소득)을 계산해본 결과 전체 응답자들의 가구소득은 평균적으로 58.1%로 줄어들었다. 가구소득의 감소폭은 저소득가구일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생계책임자인 경우(46.0%)가 생계책임자가 아닌 경우(73.0%)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응답

자에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실업자의 54%가 자신이 생계책임자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47.5%는 가구원 중 다른 취업자가 전혀 없다고 답하여 실업자 가구의 소득감소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응답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90만6천 원이었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최소생계비는 월평균 88만9천 원이었다. 그런데 여성가장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소득 평균이 37만원인데 비해 주관적 최소생계비는 76만5천 원이라고 응답하여 생계유지가 매우 곤란함을 보여주었고, 50대이상 실업자 가구의 경우에도 가구소득은 57만3천 원인데 주관적 최소생계비는 97만2천 원이라고 응답하여 양자간의 차이가 매우 컸다. 한편 이들 가구 중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이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98년 10월에 발표한 최소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45.6%가 최소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가구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가장가구는 81.7%, 50대 이상 실업자가구는 70.3%가 빈곤가구로 드러났다(<표 Ⅲ-5> 참조).

〈표 Ⅲ-5〉 가구소득 (단위: 만원, %)

	가구소득 (평균)	주관적 최소생계비	주관적 최소생계비 미달가구 비율	최소생계비 미달가구 비율a
전체	90.6만원	88.9만원	59.9%	45.6%
취업자 없는 가구	49.4	81.2	81.4%	67.6%
여성가장 가구	37.0	76.5	87.7%	81.7%
환자가정	58.3	81.9	76.6%	65.0%
일용직 실직자 가구	64.3	81.3	71.1%	66.2%
20대 실업자 가구	133.8	86.2	34.2%	21.7%
30대 실업자 가구	78.1	82.0	62.9%	47.0%
40대 실업자 가구	54.5	94.9	81.1%	69.3%
50대 실업자 가구	57.3	97.2	84.0%	70.3%

a: 보건사회연구원발표 1998년 10월 지역별 가족규모별 최소생계비 기준

(2) 경제적 고통과 생계유지 방법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상태에서 생계유지 방법을 물어본 결과 '그 동안의 저축'(55.3%)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가족 중 다른 취업자의 소득'(43.2%)에 의존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체로 퇴직금, 실업급여, 가끔씩 낚시나 아르바이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다고 응답하였다(<표 Ⅲ-6> 참조).

<표 Ⅲ-6> 생계유지 방법

(단위 : %)

	98 전북	99 전주		98 전북	99 전주
다른 식구의 소득	36.5	43.2	실업급여	19.0	26.6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29.0	25.6	공공근로사업	—	34.0
친척, 친지의 도움	6.9	10.6	정부의 대부사업	—	6.3
그 동안의 저축	46.1	55.3	영세민 생활보호사업	—	4.9
이자, 집세 등 재산소득	—	9.0	직업훈련 수당	—	10.8
부동산을 팔거나 줄여서	2.5	6.3	농산물재배, 판매	—	5.5
빚을 얻어서	8.5	30.9	가끔씩 낚시, 부업	21.7	25.6
사회기관의 도움	—	3.6	가계도구, 물품을 팔아서	—	5.7
이웃의 도움	—	2.4			

특기할 점은 '빚을 얻어서'라는 답변이 98년 조사에서는 8.5%였으나 99년 조사의 결과는 30.9%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실업의 장기화로 그 동안의 저축이 고갈되어 부채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밖에 실업급여에 의존한다는 응답자는 26.6%에 불과하였다.¹⁹⁾

공공근로사업 의존자는 38.6%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실업자 생계지원 사업 중,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영세민 생활보호사업 등은 그 역할이 별로 크지 않고 대부분의 실직자들이 저축, 다른 가구원의 소득, 부채, 퇴직금, 부업 등 사적 수단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19)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나 99년 6월말 현재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용자의 46.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용보험동향, 1999: 13)

는 실업자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여전히 미비함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정부에서는 2000년도 실업예산을 대폭 감축하면서 공공근로나 한시적 생활보호 등의 단기적 실업대책은 지양하고 대신 내년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법의 시행을 통해 저소득 실업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책을 정비해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도의 정부예산안을 보면 기존의 생계보호자와 한시생활보호자를 합하여 모두 166만 명을 수혜 대상으로 정하여 99년의 192만 명에 비하여 그 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99년도의 수준에서도 전북지역 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실업자 중 생활보호나 한시적 생활보호를 받은 사람은 5% 미만인데 2000년에는 그 수혜 범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99년 조사결과 최소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는 전체 응답자의 45.6%에 달하였으며, 이 같은 빈곤실업가구 45.6% 중 5%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생활보호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크게 의지했던 공공근로마저 50% 가까이 축소되고 나면 실제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공공근로나 다른 생계비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실업대책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질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래 취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선을 정하고 그 이하의 빈곤가구를 동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것임에 비해 정부에서는 거꾸로 예산에 맞추어 최저선을 산정하는 전도된 방식의 접근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겠다.

한편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겪는 금전적 어려움으로는 본인과 가족의 기본 생계비 부족을 가장 먼저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자녀교육비를 들고 있다. 그런데 98년 조사에 비해 99년 조사에서 달라진 점은 각종 공과금과 세금 지출의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36.9%에서 55.1%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98년 조사에서는 막연히 어려움을 예상하고 응답한 것이었다면 99년 조사에서는 보다 실제적인 경험에

기초한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채무변제의 어려움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도 14.2%에서 20.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7.1%가 단전·단수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4.5%는 경매로 차압을 당하였다는 응답과 상통하는 것이다(<표 Ⅲ-7> 참조).

〈표 Ⅲ-7〉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겪는 금전적 어려움 중 세 가지

(단위 : %)

	98 전북			99 전주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본인과 가족의 생계비	87.0	72.5	82.7	72.5	59.1	67.0
자녀의 교육비	50.1	54.5	51.4	41.3	48.1	44.1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25.8	17.5	23.3	18.6	18.2	18.5
각종 공과금, 세금	36.5	38.0	36.9	55.1	55.2	55.1
주택자금(전세금 등)	14.7	13.5	14.3	17.4	19.3	18.2
각종 채무의 변제	16.4	9.0	14.2	20.9	20.9	20.9
적금, 보험료 등	21.3	30.0	23.9	21.8	27.0	23.9
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8.1	11.0	9.0	13.9	13.6	13.8
용돈의 감소	14.7	16.0	15.1	17.9	22.0	19.5
기타	1.1	2.5	1.5	1.2	1.1	1.2
교통비				16.2	10.1	13.7
합 계	469	200	669	661	455	1,116

(3) 사회적 위기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경우 결국, 가족의 해체, 자아의 분열, 사회적 갈등과 같은 사회적 위기로 연결되기 쉽다. 특히 우리사회의 경우 아직 종합적인 복지체제의 미비로 초기의 경제적 위기가 사회적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늘 잠재해 있다고 하겠다.

먼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문제, 주거문제, 의료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원수강을 중단한 응답자는 31.8%로서 학령 아동이 없는 비해당자 55.1%를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휴학 및 군입대 10.2%, 진학포기 10% 등으로 나타났으며 결식의 경우도 9.6%도 나타났다. 한편 주거문제에서도 집을 팔고 전월세를 줄

인 경우가 15.6%, 단전·단수 경험자가 7.1%로 나왔다. 그리고 보건의료의 문제도 심각해서 22.4%는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였고 43.1%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실직자 가정의 보건의료 문제가 악화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심지어 장기질환자의 치료를 중단하였다는 응답자도 15.1%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탈선(3.5%, 피해당 64.6%)이나 학업성적 하락(14.3%, 피해당 59.9%)으로 이어졌으며, 하루종일 낮잠이나 TV시청만 하거나(39.8%), 음주소란을 벌이거나(15.2%), 가족이나 이웃간에 불화(13.2%)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편 실직자들은 장래전망에 대해서는 경제가 회복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데 81.7%가 동의하였으나 IMF 하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해 94.2%가 동의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46.4%는 실업자만 고통을 전담케 하고 있으므로 시위라도 벌여야 한다는데 46.4%가 동조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잠재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경제회복을 위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데 74.6%가 동조했으면서도 동시에 대책 없는 정리해고는 중단하고 실업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88.7%가 찬성함으로써 다소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표 Ⅲ-8> 참조).

마지막으로 실직자들의 사회심리적 고통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74.2%가 실직 이전에는 실직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54.6%의 응답자들이 실직 당한 후 '왜 하필 내가 실직 당해야 하는가'라는 분노와 배신감에 시달렸으며, 61.3%는 실직한 이후 공포감에 휩싸였고 50.5%는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48.5%는 대인 기피증을 보이고 있으며, 33.1%는 심각한 가정불화가 발생했다고 응답하였고 심지어 20.2%는 자살유혹을 느낀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물론 이러한 조사로 실직자들이 경험한 사회적·심리적 고통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

〈표 Ⅲ-8〉 경제전망, 상대적 박탈감, 구조조정에 대한 의식

(단위 : %)

	99 전주
	그렇다/매우 그렇다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81.7
IMF 시대에도 못 사는 사람만 더 못살게 될 뿐 잘 사는 사람은 걱정 없다	94.2
경제회복을 위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74.6
대책 없는 정리해고 중단해서 실업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	88.7
실업자만 고통전담 - 실업자 시위라도 벌여야	46.4

지만 위와 같은 조사결과는 실직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엿보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김재갑 외, 1998, 조은경, 1999) (〈표 Ⅲ-9〉 참조).

〈표 Ⅲ-9〉 실직을 전후하여 겪는 사회심리적 고통

(단위 : %)

질 문	98 전북		99 전주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실직을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26.0	22.3	32.5	41.7
실직한 이후 공포감을 느꼈다	35.0	33.3	26.8	34.5
실직한 이후 왜 하필이면 나일까 하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28.2	31.5	23.7	30.9
실직한 이후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	27.8	29.1	20.7	29.8
실직한 이후 심각한 가정불화가 발생했다	11.2	21.6	14.7	18.4
때로 자살의 유혹을 느낀다	10.0	12.5	9.2	11.0
실직한 이후 친구나 친지 등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	16.7	30.2	19.7	28.8
실직한 이후 한동안 가족에게는 실직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11.9	18.9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고통스럽다	44.9	24.8		
자녀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			8.7	16.1

IV. 실업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여기서는 실업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으로서 주로 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²⁰⁾. IMF 구제금융체제하의 대량실업사태는 지역 시민사회로서도 전혀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된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아직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고민이 채 성숙하지 않았던 98년 3월 2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평화와 인권연대, 호남사회연구회,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등의 지역 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실업문제에 대한 내부 워크숍을 가진 것이 전북지역에서의 실업문제에 대한 시민운동단체들의 조직적 대응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98년 4월 27일 제1회 전북지역 실업문제 공개토론회를 거친 후 98년 5월 22일 26개 단체의 참여로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가 설립되었으며, 그후 '실업극복 군산운동본부'와 '실업극복 익산운동본부' '실업극복 김제운동본부' 등 시군 단위 조직들도 결성되어 활동의 구체성과 현장성이 강화되어 왔다. 도민운동본부는 주로 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위원회와 실업자들에 대한 다양한 직접적 서

20) 실업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으로서 시민사회의 대응과 함께 당연히 지방정부의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검토되어야 하지만 실업대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활동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대책들을 집행하는 기능에 대체로 국한되어 있어서 전북지역의 경우 별다른 특성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정부차원의 실업대책 활동은 주로 지방노동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실시되었으며, 노동사무소에서는 주로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지급,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실업대책추진기구는 초기에는 포괄하는 사업범위도 비교적 광범위하였고 담당자 역시 비중 있는 인력으로 채워졌으나 시일이 경과하면서 노동사무소와 전북도청 사이의 협력은 형식에 그쳤으며, 도청 내에서도 실업대책사업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공공근로와 고용촉진훈련 및 생활보호사업에만 치중하는 양상을 드러내었다(전라북도, 1999).

비스를 제공하는 실업자 지원센터를 양 축으로 활동을 수행해 왔다. 그 동안의 활동을 살펴보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실업자 생활지원 조례제정 사업²¹⁾, 민간실업지원단체 네트워크 구성, 매 주 1회 거리캠페인활동, 부당 해고 저지 투쟁 지원, 실업자 조직화를 위한 거리행진, 결식아동돕기, 희망의 카드 사업, 저소득실직가정 결연 사업, 생활상담 및 법률상담, 구인구직 알선 등의 다양한 활동을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민관 단체들과의 연대 하에 수행하여 왔다.

고용실업극복 전북도민운동본부에 참여한 단체들은 최초 자신의 주요 활동방향을 IMF 반대, 차별개혁, 민중생존권,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운동을 수행하되 실업자 구호 지원사업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기 위해서 실업자지원센터²²⁾를 하위조직으로 별도로 수립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종교단체 및 복지기관들 사이에서 도민운동본부의 활동방향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정되면서 초기의 정책활동이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집회, 캠페인 등의 활동보다는 실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활동에 치중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단체들 사이에 갈등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98년 하반기에 고용실업극복 전북도민운동본부는 지역수준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의회에 '실업자 생활지원 조례'를 제안하였다. 비록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와 도의회가 예산조달등을 이유로 심의를 미루는 바람에 통과되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조례제정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지역차원에서 의 조례제정운동은 결국 중앙정부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케 하는데 커다란 압력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전북도의회 역시 조례제정운동 이후 시민운동단체들에 견인되어 '저소득실업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되었으며, 전북지역에서는 조례제정운동이 새로운 운동형식으로 그 의미를 부여받기도 하였다(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1999).

22) 실업자지원센터는 이후 전주시로부터 장소지원을 받고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게되면서 실업자종합지원센터로 개편되었다.

을 빚기도 하였다.²³⁾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위주로 활동 방향이 바뀌면서부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들이 비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과 온정주의적 활동으로 실업문제의 구조적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고용실업극복 전북도민운동본부 이외에도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지역 건설노동자 취업알선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터, 전주자활지원센터, 전주YWCA 아나바다 나눔터,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단체협의회 등 기존의 시민운동단체들이나 사회복지조직, 종교조직 등 다양한 민간비영리조직들은 전북지역의 경우 비교적 활발하게 실업극복활동에 참여해왔다. 이들의 실업극복활동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계지원형 사업(실직자가정 결연 사업, 무료급식사업, 노숙자 숙소제공, 실업자 컴퓨터운영, 모금활동, 자활공동체 지원, 희망의 카드, 기타 생계지원), 정서지원형 사업(실업가정 정서지원, 실업가정 자녀지원), 능력고취형 사업(취업상담, 일자리제공 및 알선, 취업교육, 귀농자교육)과 간접지원사업(정부실업정책평가 및 모니터링, 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실직자가정 결연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가장 많은 민간비영리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에서 제안된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담쟁이학교²⁴⁾와 희망의 카

23) 이는 중앙정부의 실업대책에 있어서도 고용유지나 부당 해고 방지, 노동 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보다는 이미 발생한 실업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고용알선이라는 사후적 대책에 치중하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24) 실업자 자녀지원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담쟁이학교’사업이다. ‘담쟁이 학교’ 사업은 전북대학교 실직자 사회복지 지원센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서 모범적인 민간 실업지원활동으로 인정되어 지금은 전주시에서도 동별로 실직자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확산되어 있다. 담쟁이학교사업은 부모의 실직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초·중학생 자녀들에게 학

드사업²⁵⁾을 들 수 있다. 홍경준(1999)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실업극복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 배경으로 두 가지 요인을 꼽고 있다. 첫째로는 90년대 이후에 달라진 시민운동의 양상을 들 수 있다. 90년대의 시민운동 조직들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관변조직이나 반정부-반체제 활동조직과는 달리 권력지향적이기보다는 문화 혁신적이며, 특정 계급의 이해를 반영하기보다는 공적인 가치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지향하며, 위계적 조직구조 대신에 느슨한 네트워크와 자발적 참여를 기축원리로 하고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국가에 대항했던 반정부-반체제적인 민간조직들은 민주주의나 불평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거시적이며,

습지도와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학습비 지출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한다. 또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부모의 실직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고통과 박탈감, 정서적 방황을 겪게 하고 부모의 관심 부족으로 탈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므로 정서지도를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자 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봄가을의 학기 중 프로그램이나 방학 중의 캠프활동이 일반 사설학원의 프로그램보다 내용면에서도 훨씬 우수하여 흔히 싸구려로 인식되어 외면 받기 쉬운 여타 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바 있으며, 참여하는 자원봉사 대학생들로서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동참하여 고민할 기회를 가지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

- 25) 희망의 카드 사업은 실직자들의 실직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서 전북 실업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제안하여 우수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지금은 전북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널리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희망의 카드 소지자들은 유통기관, 병·의원, 약국, 이·미용실, 학원, 음식점, 서점 등 가맹 회원업체를 이용할 경우 일정 비율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99년 9월 현재 전북지역의 회원업체는 모두 355개 업체이며, 희망카드 발급자수는 731명이다.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서는 가맹 회원업체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일부 업체의 할인이 낮아서 예상보다 이용률이 높지 않은 한계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현재는 실업자만이 아니라 생활보호 대상자까지 포함하는 복지카드로 성격이 확대 변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카드 발급자들에게 구체적인 생활상의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 1999. 11).

구조적인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기에,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고, 조직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해 왔다. 그런데 경제위기가 초래한 실업문제는 생활상의 문제이며, 동시에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이들 조직들이 참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복지국가의 위기국면에서 국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공급 주체의 다원화가 이루어지게 된 점이다. 한국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구현이라는 모델이 정책기조로 자리잡으면서 비영리민간조직들이 실업극복에 참여할 공간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업극복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비영리 조직들을 유형별로 시민운동단체, 시민운동단체에서 파생되어 나온 실업지원조직, 종교단체, 사회복지조직으로 나누어 본다면 시민운동단체나 여기서 비롯된 실업지원조직이 다소간 간접지원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점 이외에 실업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 활동에서는 조직유형별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²⁶⁾ 이는 앞에서 고용실업극복 도민운동본부의 활동에서도 99년도로 오면서 실직자에 대한 직접서비스 위주로 활동이 바뀌게 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전문원조기관인 사회복지 조직과 경제위기 이후에 대거 출현한 실업지원 조직의 실업극복활동이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목표와 구조, 주변환경이 서로 다른 조직들이 매우 유사한 실업지원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결국 자원의 낭비와 중복, 조직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실업자의 다차원적인 욕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역시 어렵게 한다. 그리고 국가부문에 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26) 홍경준(1999)은 전북지역에서 실업극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비영리조직 39개를 선정하여 이들의 실업극복활동과 이들 조직간의 네트워크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하에서의 논의는 주로 홍경준의 논문에 의존하였음을 밝혀둔다.

제공할 수 있다는 민간비영리 조직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게 된다.²⁷⁾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조직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뚜렷한 적소(niche)를 확보하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시민운동과 거기서 비롯된 실업지원조직들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도 스스로의 활동내용과 조직정체성에 대한 심사숙고를 요구한다. 실업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생활상의 문제이다. 구조적인 문제로서 그것은 고용안정성의 확보, 불합리한 해고기준의 정비, 자본의 전횡에 대한 대응, 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을 요구한다. 하지만 사회복지기관들은 그 동안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해 왔기 때문에, 실업문제의 구조적 측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맥락에서 시민운동 조직과 그로부터 분화된 실업지원 조직의 실업극복 활동은 매우 절실하며 정당성을 가진다. 시민운동조직과 실업지원조직이 당초에 상정했던 실업극복 활동은 이런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실업극복 활동에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면서 실업지원조직들의 실업극복 활동 역시 공공대행자인 사회복지조직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고 말았다.

27) 실업대책 활동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장점으로서는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크고,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의 자원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실업자들을 대변하여 정부서비스의 미비점이나 문제를 지적하여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서비스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으며, 범규에 의하여 엄격하게 활동의 제한을 받는 정부와는 달리 실업자들의 문제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 혁신자, 실험자, 비판감시자,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약점으로는 서비스의 지역적 분포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보편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되며, 대규모의 자원동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영역에만 치중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민간기관간의 서비스의 조정과 지역차원의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한정된 자원을 두고 지나친 경쟁과 서비스의 중복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백종만, 1998).

이제 실업지원조직들에게 제기되는 핵심적 과제는 IMF 사태 직후와 는 달리 실업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현저하게 적어진 지금의 시점에서 확대된 조직의 경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지금까지 수행했던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나름대로 적소를 확보해 나간다면, 우리사회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복지 제공자를 갖게될 것이다. 전적으로 공공대행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기존의 사회복지 조직들과는 또 다른 유형의 사회복지 조직들이 출현한다면, 이것은 한국의 민간복지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반면에 이 조직들이 자신의 확대된 경계를 다시 축소시킨다면, 이들의 실업극복 활동은 자원 동원을 위한 일과성 행사였다는 비판을 받게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실업극복 도민운동본부의 활동방향에 대한 내부적 논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은 이처럼 전북지역의 실업극복 민간비영리조직들 전반의 활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실업문제의 양상이 사회전반의 대량실업의 문제로부터, 장기실업자와 청년층 실업 및 정규직 감소와 비정규직 증대에 따른 고용의 질적 저하의 문제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실업문제에 대한 관심도 저하되고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특히 시민운동단체들은 실업극복활동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을 어떻게 새롭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확대된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시민운동단체들이 당면한 이와 같은 몇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공동체성'에 기반하여 '대량실업'이라는 사회적 위기를 해소하려는 민간시민운동단체들의 실업대책 활동은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이후 밀어닥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V. 요약 및 결론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 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이전에는 2% 내외에 머물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2000년 2월 현재 3.8%까지 하락하여 실업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을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실업상태에 있는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산업별로는 IMF 초반 1년 사이에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의 급감이 있었으며 최근 1년 사이에는 건설업은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제조업의 고용회복이 두드러지지만 전북지역의 제조업 취업자수는 아직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은 실업대란시대에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용흡수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IMF 초기에는 생산직의 감소가, 최근에는 사무직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취업 및 실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율을 살펴보면 남성과 핵심연령층에서는 취업정착률이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커서 실업률이 낮게 나오며, 이는 실망노동자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대적으로 상시고와 자영업자층에서 취업정착률이 높다.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로부터의 (재)취업시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고/일고로의 취업이 많아서 98년 하반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임시고/일고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한편 99년 전주 실업자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실

업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기실업자나 여성실업자들이 그들이다. 여성실업자의 경우 50% 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장기실업자로 퇴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저학력, 노령층, 임신·일용직 실업자들의 경우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정비해야 한다. 전북지역에서 장기실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고용동향분석에서나 실업자 실태조사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일반적으로 기간의존성효과나 이질성효과로 인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시장의 경쟁에 방치될 경우 재취업하기 힘든 계층을 표적집단으로 하는 직업능력의 개발과 채용장려제도의 정비가 신속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 복지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실업자의 상당수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체불임금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일정액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 법이 보장하는 퇴직금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가 1998년 8월까지 집계한 체불퇴직금은 3,358억 원(4,890업체 23만여 명)이나, 99년 상반기까지 동법에 의해 지급된 도산기업의 체불퇴직금 규모는 207억 원(278업체 1만2천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체가 많은 전북지역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실직사유 중 도산·휴폐업 등으로 인한 실업이 가장 많다. 따라서 이들 도산 기업의 실직자들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직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임시직 일용직 종사자들에게도 퇴직금 혜택이 주어지도록 퇴직금제도 자체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 실망노동자나 불완전취업자가 많은 전북지역의 실태를 고

려하면 실업대책은 통계작성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정부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과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취업자들의 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명시된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의 가입을 또한 매우 낮다. 점차 노동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해가고 있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반 제도적 보호장치들을 강화하는 한편, 법제화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의 강화 등을 통하여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정하게는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은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며, 실업대책 역시 그 내실을 다질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실 초기의 정부대책은 긴급구호적 생활보호대책이라는 성격이 강했고, 일정하게는 공공근로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기의 실업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물량채우기 식으로 진행된 측면이 적지 않다. 예컨대 그간의 직업훈련은 실업이라는 실망상태에 두지 않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직업훈련예산의 경우 생계보전비 보다는 훈련기관에 돌아가는 훈련비가 더 커서 긴급구호라는 목적에도 부적합할 뿐더러 훈련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만 조장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제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실업자들의 실질적인 직업능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대상자수는 줄이더라도 훈련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고 취업알선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고용창출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한다.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종합고용정보망이 부실

한 점은 전주시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실업관련 각종 수혜를 받기 위하여 공공구직창구에 등록하는 실업자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공공구직망을 이용하기보다는 신문, TV, 생활정보지의 광고나, 친구나 친지의 소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고용안정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취업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실업률의 하향안정화 전망 속에서 생계보전 위주의 단기적 실업대책은 축소하고 이를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흡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의 원래 취지대로 국민생활 최저선을 확정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빈곤가구를 선별하는 작업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99년도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몇 %를 더해서 빈곤가구로 지정하고 그에 맞추어 예산도 몇 % 늘이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취지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전주시 실업자 조사 결과 실업자의 45.6%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제시한 객관적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중 5%를 제외한 40.6%는 99년에도 생활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예산안 대로라면 빈곤선 이하에서 허덕이는 실업가구의 다수가 2000년에도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실업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실업대책의 수립과 집행 권한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어서 지방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노동부 등의 업무는 지방노동사무소가 관장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실업대책조정기구 존재하지만 형식적 기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실업문제의 현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지방정부로서는 '실험성', '유연성', '접근용이성', '신속성' 등의 장점을 최대한

으로 살릴 수 있는 대책의 수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역별 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주는 실업대책의 효과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²⁸⁾

그리고 실업전달체계에 있어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별로 실업자의 D/B가 구축되어야 하며, 실업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화된 대책이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실업대책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실업자를 대면 접촉하는 일선 현장에서 ‘직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선 공무원을 재훈련 담당, 공공근로 담당이 아니라 각 실업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업자의 최초 상담에서 유형별 서비스지원에 이르기까지 추적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도 지역 현장 공무원의 조정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시켜주어야 한다.

한편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는 고용실업극복 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하는 등 비교적 활발하게 실업극복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 주도한 ‘희망의 카드’ 사업이나 ‘담쟁이학교’ 프로그램은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고용실업극복 도민운동본부의 활동 방향을 둘러싼 내부 논쟁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시민운동단체들의 활동이 초기의 정책 활동이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집회, 캠페인 등 대정부 대자본 비판자 견제자의 역할로부터 실업자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위주로 활동 방향이 바뀌면서부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들이 비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과 온정주의적 활동으로 실업문제의 구조적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28) 일례로는 송파구와 부천시의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김봉겸, 1999; 김실련, 1999)

제기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 복지서비스 활동을 둘러싸고
 는 기존의 사회복지조직들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관계에 놓이기도 하였다. 만약 시민운동단체들이 실업자들에 대한 직
 접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확장된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적소를
 차지하고 유지시켜 간다면 이는 한국의 민간복지 지형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업문제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동원이 초기에 비해 어려워진 지금 확장된 영역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면 이는 실업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외면한 채 정부서비스의 대행
 자로 만족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자원동원을 위해 일과성 행사를 벌인
 데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사실 한국에서의 실업대책 활
 동은 정부에게도, 민간단체에게도 그 누구보다도 실업자 자신들에게도
 ‘역사적’ 실험이다. 이 역사적 실험을 얼마나 진지하고 멋지게 진행하
 냐가 다가올 21세기를 모양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9. 『정부의 실업대책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
 종합보고서』.
-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1998. 『제2차 전북지역 실업문제 해결
 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1999. 『98년 고용실업 정책자료집』.
- 국무총리실 외. 1999. 『중기실업대책』.
- 금재호·방하남. 1998. 『IMF 시대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불안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기획예산처. 1999. 『2000년 실업예산』.
- 김봉걸. 1999. “송파구 실업문제 해결에 행정력 집중.” 참여연대 사회

- 복지위원회. 『복지동향』 제3호 나남.
- 김장호. 1998. 『여성실업구조와 행태: 이행확률 추정을 통한 유량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재갑·김은미·이선이·최우영. 1998. 『실업스트레스의 변화』. LG 커뮤니케이션연구소
- 김재훈. 1999. “1997 경제위기의 지역적 전개구조” 한국산업사회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남성일·이화영. 1998. “최근 우리나라 실업의 특성 분석: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 통계청.
- 남춘호·이성호. 1998a. “IMF 경제위기와 전북의 실업문제.” 전북지역 실업문제 대책 제1차 토론회 발표문.
- 남춘호·이성호. 1998b. 『전북지역의 고용동향과 실업문제』. 도서출판 인간과복지.
- 남춘호. 1999. “종합주가지수 폭등에 묻혀버린 실업의 고통.” 『열린전북』 창간준비 2호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8. 『여성실직자 가정의 복지욕구와 '99 실업대책』.
- 문진영. 199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실직자 생활보장방안” 사회보장 정책협의모임 실업대책 정책공청회발표문. 1998. 6.29.
- 민주노총. 1998. 『한국 실업현황과 민주노총의 과제』. 1998.9.
- 방하남. 1998. 『실직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실태 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 백종만. 1998.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실업극복.”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전북지역 실업극복 심포지움』.
- 성경룡. 1999. “실업과 사회해체: 총체적 위험사회의 등장.” 『사회비평』 제19호: 247-275.

- 성제환. 1999. “실업과 지역경제.” 전라북도의회 저소득층 및 실업대책 토론회 발표문.
- 신광영·박준식. 1999. “춘천 노동시장구조” 1999년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 신동균. 1999.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1999.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창일 1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 실업자 종합지원 전북센터. 1999. 『실업현황과 정책대안』.
- 안병철. 1999. “경제적 고통과 가족.” 『사회비평』 제19호: 65-83.
- 어수봉. 1994. 『한국의 실업구조와 신인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임영일. 1999. “한국의 경제위기와 노사관계: 변화의 조건과 전망.” 한국산업사회학회 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유재우. 1984. “한국의 실업행태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진호. 1998. “실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경제와 사회』 제40호 한울.
- 이성균. 1999. “한국의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산업사회학회 제2회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문: 270-284.
- 이성호·남춘호.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실태와 문제-전주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실직자 사회복지센터.
- 이재열. 1999. “취업경력에 대한 동태적 분석.” 1999년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 장상환. 1998. “실업자운동의 의의와 과제.” 『IMF 체제하의 실업문제와 사회적 위기』 호남사회연구회 11주년 기념학술회의 발표논문집: 66-93.
- 전라북도. 1999. 『실업대책추진상황』.
- 전라북도청. 1999. 『전주권 경제의 위치』.

- 전북여성단체연합. 1998. 『실직여성가장 실태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전북여성단체연합. 1999. 『'99 전북지역 여성실업대책 토론회 자료집』.
- 전북여성노동자회. 1999. 『전북지역 미조직 여성노동자 고용현황과 여성노동조합의 역할』.
- 정이환. 1999. “미국의 고용불안과 실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 『경제와 사회』 제41호
- 조순경. 1998. “민주적 시장경제와 유교적 가부장제.” 『경제와 사회』 제38호: 169-188.
- 조은경. 1999. “춘천지역 실직자들의 심리적 반응.” 『춘천실업리포트』 실업극복 춘천시민운동 협의회: 121-154.
- 조우현·강창희. 1996. “고용정책 대상집단의 식별.” 『산업관계연구』 제6권.
- 최강식·이규용. 1998.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조정 실태』.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1997. 『사업체 기초 통계』.
- _____. 1998. 『지역내 총생산』.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여성단체연합. 1998. 『저소득 실직여성가장의 여성복지 강화방안』.
- 홍경준·백종만. 1999. “실업극복을 위한 민간네트웍의 구조적 특성: 전북지역의 민간비영리조직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실직자 사회복지 지원센터.
- 홍경준. 1999. “실업극복을 위한 민간 비영리조직의 활동—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실직자 사회복지 지원센터 『실업극복을 위한 NGO 활동의 성과』.

- Blanchard, O. J. and L. H. Summers, 1986. "Hysteresis and European Unemployment Problem." *NBER Macroeconomics Annual*. MIT Press. U. S. A.
- Heckman, J. and Borjas, G., 1980. "Does Unemployment Cause Future Unemployment?." *Economica* 47.
- Huddle, Donald L. 1997. "Review Article: Post-1982 Effects of Neoliberalism on Latin American Development and Poverty: Two Conflicting View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881-897.
- Jackman, R. and R. Layard. 1991. "Does Long-term Unemployment Reduce a Person's Chance of a Job? A time Series Test." *Economica* 58.
- Junankar, P. N. 1998. "Very Long Term Unemployment. Luxemburg: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Layard, R. E. and S. Nickel. 1986. "Unemployment in Britain." *Economica* 53. Supplement.
- Sorrentino, Constance. 1995. "International Unemployment Indicators, 1983~93." *Monthly Labor Review*. Bureau of Labor Statistics, Department of Labor. U. S. A.
- Walsh, K. 1987. *Long-Term Unemploy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London: MacMillan.

울산지역의 실업문제와 지역사회의 대응¹⁾

이성균*

1. 서 론

이 글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중화학공업 도시인 울산지역의 실업 문제와 실업대책을 살펴봄으로써 공업도시라는 ‘지역적 특징’에 적합한 실업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되자,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이병희, 1999; 한국노동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1999; 노동부, 1998; 윤진호, 1998; 한국노동연구원, 1998).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전국차원의 실업자 발생현황이나 중앙정부차원의 실업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실업문제와 실업정책에 관한 논의를 소홀히 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사회운동단체들도 전국적 수준에서

* 울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이 글은 『지역사회학』 창간호(1999)에 실린 필자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고용보험을 개선하고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²⁾ 실제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실업대책이 집행되는 지역차원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지역별 현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실업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지역경제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정책도 지역에 존재하는 인적·물적 자원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실업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전국 차원의 일반적 시각과 아울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관점에 기초해야 한다.³⁾ 특히 실업대책의 집행과 개선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지역'의 시각에서 실업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찾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실업대책의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이 집행되는 공간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실업자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실업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을 보면, 실업자는 거주지 행정기관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구청과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시기의 공공근로사업 내용을 선정하고 인원을 선발한다. 따라서 지역행정단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집행하는가에 따라서 실업대책의 성과가 나타난다. 한편 실업대책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현재의 실업대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행정단위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실업자 개인의 생존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동사무소, 구·군청, 시청 등 주민이 살아가

2) 실업대책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는 윤진호(1998)와 한겨레신문(1998년 10월 8일, 11일, 13일자 실업대책 대토론회 전문)을 참고할 것.

3) 실업률의 지역적 차이는 실업문제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명확한 지표이다. 예를 들어서 1998년 3월의 실업률은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9.8%, 9.0%를 기록하였으나, 울산은 이보다 낮은 7.8%에 불과하다. 또한 1999년 3월에도 부산(11.7%), 인천(10.9%), 울산(9.0%)의 순서로 실업률이 나타났다. 실업률의 지역별 격차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통계청의 고용동향보고서(매월호)를 참고할 것.

는 지역의 자치단체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실업대책 이외에도 실업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새로이 마련하는 일은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울산이라는 대규모 공업도시의 사례를 통하여 실업 문제의 현황과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울산지역의 특징에 적합한 실업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먼저 울산지역의 실업 현황을 살펴보고 실업문제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한다. 특히 경제위기가 시작된 1998년 초부터 1999년 중반까지의 기간에 나타난 울산지역의 고용동향을 전국적인 추이와 비교하여, 광공업중심의 공업도시에서 발생한 실업문제의 특징을 정리한다. 둘째, 현재 전국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업대책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실업대책이 울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고용보험과 같이 중앙행정부서가 주도하는 실업대책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여지가 있는 대책(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과 현재 시작단계에 있는 시민단체의 노력을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실업대책의 성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울산이라는 공업도시에 적합한 실업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역경제구조상의 특성과 현행 실업대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새로이 모색되어야 할 실업대책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II. 울산지역경제의 특징과 실업자 발생현황

1. 울산지역경제의 특징

최근에 울산지역에서 나타난 경제현황과 고용사정은 대규모 공업도시로서의 울산지역경제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울산은 1960년대에 시작된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업도시로서 한국 중화학공업 발전의 상징적 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1962년에 정유·비료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임해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한 후, 유공과 삼성석유화학 등 대기업체들이 울산지역공단에서 석유정제 및 화학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였다(전병유, 1989: 46). 또한 현대자동차(1967년)와 현대중공업(1975년) 등 현대그룹의 대규모 기계장치산업 공장들이 울산특정공업지구에 입주하는 것을 계기로, 울산 미포국가공업단지는 중공업·자동차·선박 등을 생산하는 대규모 중공업단지로 발전하였다.⁴⁾ 이러한 도시형성의 결과, 자동차 등 대규모 자본과 고용능력을 갖는 공장들과 이들의 하청계열사들이 울산지역경제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을 건설·관리하는 사회간접자본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산업 등은 주변적 지위를 차지한다.

울산지역경제와 고용구조에서 광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은 다른 대도시의 현황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1997년의 지역별 통계자료를 정리하면(표 1), 울산의 인구수 혹은 경제활동인구수는 주요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이지만 광공업종사자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인천 다음으로 높다. 특히 광공업부문 사업체들의 총생산액이나 1개 사업체당 평균 생산액을 기준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를 비교하면, 울산이 다른 광역시보다 훨씬 높다.⁵⁾ 반면 사회간접 자본 및 서비스산업이 울산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도시에 비

4) 이 밖에 울산 시내 온산국가공업단지는 비철금속 및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대공장중심의 산업단지로 성장하였다. 울산지역의 공단형성사는 울산광역시(1996: 337~338)를 참고할 것.

5) 또한 통계청의 『1997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보면, 울산지역이 대공장 중심의 공업도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5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지역 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광공업종사자의 수가 많은 부산과 인천이 각각 13.7%, 20.7%인데 반하여 울산은 이보다 훨씬 높은 67.7%를 기록하였다.

〈표 1〉 전국의 주요 도시와 비교한 울산의 지역경제현황(1997)

구 분	전국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인구							
주민등록인구(천명) ¹⁾	46,833	3,865	2,502	2,461	1,326	1,323	1,013
경제활동인구(천명)	21,604	1,747	1,039	1,120	561	561	765
◇ 광공업 ²⁾							
사업체 수(개)	98,119	9,494	7,117	7,889	1,344	1,392	1,017
종사자수(천명)	2,925	219	155	239	54	43	145
생산액(십억원)	403,778	18,091	13,179	32,130	7,213	5,188	45,538
수출액(백만불)	136,164	5,949	3,626	7,261	1,682	617	18,624
광공업의 비중 ³⁾							
종사자의 비중(%)	13.54	12.59	14.92	21.33	9.63	8.11	18.95
평균생산액(백만원)	4,115	1,906	1,852	4,073	5,367	3,727	44,777
◇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종사자 수(천명)	14,223	1,245	728	717	450	435	270
사회간접자본·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65.84	71.27	70.07	64.02	80.21	82.07	35.29

1) 주민등록인구는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연말기준, 외국인 포함)

2) 업체 및 종업원 수는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3) 종사자의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에서 광공업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생산액은 생산액 총액을 사업체 수로 나눈 수치를 의미한다.

자료 : 통계청(1998a, 1998c)

하여 매우 낮은 상황이다.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적으로 65%를 차지하고 다른 대도시에서도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울산의 경우에는 35%에 불과하다. 이것은 울산지역이 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거점지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로·전기·상하수도·주택 등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데 소홀해 왔음을 의미한다.⁶⁾ 또한 실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광공업 대공장이나 하청계열기

6)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실시한 구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시의 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중화학공업이 지배했던 구사회주의 국가 산업도시의 실

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의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울산과 같이 국가경제개발계획에 따라서 광공업도시로 변화한 지역의 경제는 환율·유가 등 제반여건이 호조를 보이는 경제성장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지만, 최근과 같이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그 동안의 압축성장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규모·업체가동률·수출액 등 대부분의 울산지역경제지표가 1997년 하반기부터 1998년 말까지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인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지역경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업종은 1997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생산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자동차생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현대자동차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본 공장 뿐 만 아니라 하청계열회사들도 조업단축 및 중단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1998년 8월의 울산지역 생산현황을 1년 전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산업생산이 축소된 상황이며 특히 자동차(-90%),⁷⁾ 기계장비(-42.7%), 조립금속(-33.1%) 등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였다(통계청 울산출장소, 1998a). 그 결과 1995년을 기준으로 한 울산의 1998년 8월중 산업생산지수는 전국평균(98.1)보다 낮은 89.1을 기록하였다.

울산의 경제현황을 살펴볼 때 한가지 다행스런 사실은 최근 들어서 자동차수요 증가로 생산활동이 크게 증가하였고 산업활동의 기초인 화학, 석유정제품의 생산이 회복되면서 울산지역경제가 최악의 위기상태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 5월을 기점으로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내수시장이 살아나면서 울산지역 주요 업종의 생산활동도

업문제에 대해서는 Fazekas and Gorzelak (1998)를, 특정기업이 해당지역경제를 지배하는 구사회주의국가 산업도시의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Huber and Ochotnický (1998)를 참고할 것.

7)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동월을 기준으로 한 업종별 생산증감지수를 의미한다.

성장세를 기록하였고,⁸⁾ 1998년에 1.12%에 달했던 어음부도율도 1999년 7월 들어서 0.14%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연간 4백 45개 사업체에 달하던 부도업체 수도 59개사로 크게 낮아졌다(울산상공회의소,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기회복이 그대로 취업기회의 확대를 낳은 것은 아니며, 특히 경제위기상태가 전국적으로 재현된다면 현재의 경기회복추세가 울산지역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⁹⁾

2. 울산지역 고용동향

울산지역의 경기변동 추세는 지역 내 고용사정, 특히 실업자 발생추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97년부터 본격화된 내수부진과 생산 및 설비투자의 감소로 인하여 영세·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1만 명 이상을 해고하는 대규모 고용조정을 단행하여 실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98년 1월에 1만 8천 여 명에 불과했던 실업자는 8개월만에 105.6% 증가한 3만 7천 여명으로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전국평균(7.4%)보다 높은 8.1%를 기록하였다(통계청 울산출장소, 1998b). 반면 1999년 5월부터 전국적인 경기회복추세에 따라서 울산지역의 고용사정도 점차로 호전되었고, 1999년 8월 현재 울산의 실업자도 2만 4천 여 명(실업률 5.3%)으로 감

8) 예를 들어서 1999년 7월에 발표된 울산지역 주요 업종의 전년동기대비 생산활동성장률은 자동차산업 153%, 기계장비제조업 41%, 화학산업 14%를 기록하였다 (통계청 울산출장소, 1999b).

9)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내 주요 사업체 151개사를 대상으로 “1999년 8월의 사업체별 생산·판매·경상이익 수준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가?”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의 90~100%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4.4%이지만, 70~80% 또는 80~90%라고 응답한 업체가 16.8%, 50~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9.6%를 차지했다(경상일보, 1999년 9월 30일자 보도). 이것은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수준이 ‘IMF관리체제’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소하였다.¹⁰⁾

〈표 2〉 고용동향 : 울산과 전국의 비교 (1998년 1월~1999년 8월)

(단위 : 천명, %)

구 분	울 산			전 국		
	1998년 1월	1999년 8월	고용 증감율	1998년 1월	1999년 8월	고용 증감율
경제활동인구	471	449	-4.67	20,645	21,767	5.43
취업자 총계	454	424	-6.61	19,711	20,527	4.14
◇ 산업별 분포						
- 농림어업	10	20	100	1,856	2,596	39.8
- 광공업	181	162	-10.49	4,219	4,028	-4.53
- 사회간접자본·서비스업	262	242	-7.63	13,637	13,902	1.94
<건설업>	<43>	<22>	<-48.83>	<1,761>	<1,534>	<-12.89>
◇ 종사상 지위별 분포						
-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115	111	-4.3	7,218	7,975	10.48
- 상용직 종사자	238	208	-12.61	6,859	6,027	-12.13
- 임시·일시직 종사자	101	106	4.95	5,635	6,525	15.79
실업자 (실업률, %)	18 (3.8)	24 (5.3)	33.3	934 (4.5)	1,241 (5.7)	32.9

자료 : 통계청(1999b) ; 통계청 울산사무소(1999b)

1998년 1월부터 1999년 8월까지의 기간에 나타난 울산의 고용동향을 전국평균 추이와 비교하면 울산지역 실업문제의 특징에 관하여 좀 더

10) 실업대책에 대한 논쟁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항은 실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수가 통계청이 발표한 것보다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구 직활동을 일정기간 동안 포기한 사람’을 실업자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이러한 쟁점은 건설업계의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명확히 나타나는데, 전국적으로 140만 여명에 달하는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 가운데 3월 한 달간 일한 기간은 평균 2.8일에 불과하지만 이 가운데 실업자로 분류된 사람은 32만 여명에 불과하다 (중앙일보, 1998년 4월 7일). 통계청 자료는 전국의 실업자 발생규모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업자집계자료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이 글에서도 통계청 자료를 주로 인용하면서 울산지역의 실업현황을 살펴본다.

자세히 알 수 있다. 첫째, 취업자 증감 추이를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부문의 취업자가 울산에서 10.49% 감소하였으나, 전국적으로는 4.53%의 감소율에 불과하다. 울산의 광공업 취업자 감소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광공업의 몰락이 울산에서 더욱 두드러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1998년에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고용조정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울산지역의 대공장에서 실시하는 고용조정은 대규모 인원을 실업자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일부 사업체에서의 경영위기와 고용조정이 실업자 발생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공장이 밀집된 울산지역에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규모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울산지역에서는 계속해서 감소하였고, 특히 울산의 건설업은 48.83%의 취업자 감소율을 기록하여 전국평균(12.89%)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이다.¹¹⁾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사회의 각 영역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기반이 낙후된 울산의 경우에는, 광공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광공업 이외의 분야에서 여전히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¹²⁾

둘째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감소 추이를 비교하면, 울산에서의 상용직 취업자감소율은 대략 12% 수준으로 전국평균과 비슷하지만,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임시직·일시직 등 비상용직의 경우에는 전국평균

11) 울산상공회의소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 어업, 국방, 외교,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사업체 수는 1997년에 비하여 7.7% 각각 감소하였으며, 업종별 사업체 증감율은 건설업(-11.5%), 제조업(-10.8%), 광업(-10.0%) 순으로 나타났다.

12) 이 글에서 고용동향을 산업별로 비교할 때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농림업의 변화에 대해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울산지역은 울주군 등 농어촌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표 1>의 조사대상기간에 농림어업 취업자가 증가한 것이 농한기인 1월에서 농번기인 8월로 변화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즉,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전국적으로 10% 정도 증가하였으나 울산에서는 반대로 4% 감소하였고, 임시·일시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15% 증가하였으나 울산에서는 5%에 불과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건설업 등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산업의 침체가 울산지역에서 지속됨에 따라서 임시·일시직으로의 재취업 기회와 자영업으로의 창업기회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훨씬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에 전국의 3,230명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실업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표 3>, 기업체의 도산이나 고용조정실시 등 기업경영상태의 악화로 인한 실업자발생이 다른 지역보다 울산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즉, '직장의 파산, 폐업, 휴폐업'에 의한 실직자 발생비율이 전국적으로는 22.9%에 불과하지만, 울산의 경우에는 39.8%를 기록하였다. 또한 '정리해고, 명예퇴직, 권고사직과 같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실직자 발생비율도 울산에서 31.3%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수치(22.8%)보다 훨씬 높다.

<표 3> 실업발생의 원인 ; 전국과 울산의 비교

(단위 : 명, %)

실 직 이 유	울 산	전 국
실업자 총계	83 (100)	2,323 (100)
실직이유별 분포		
-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33 (39.8)	532 (22.9)
-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26 (31.3)	529 (22.8)
- 결혼, 건강 등 개인적 이유	12 (14.5)	553 (23.8)
-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기타	12 (14.5)	709 (30.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1998)

결국 산업도시로서의 성장과 고용기회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했던 울산이 1997년 이후에 처음으로 경제위기를 맞이함으로써, 실업문

제는 지역공동체의 문제로 발전하였다. 또한 경제여건이 현재와 같이 점차로 호전되고 광공업부문의 생산활동이 증가하였더라도, 이러한 추세가 곧바로 취업기회의 확대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 제조업의 각 기업들은 신규인력을 충원하기보다는 기존의 노동력을 완전 가동하여 생산성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산업으로의 취업 기회도 많지 않아 실업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실업률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출신과 여성 구직자들의 취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실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실업문제는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을 것이다.

Ⅲ. 실업대책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한국의 실업대책은 소위 'IMF관리체제'라고 지칭되는 경제위기의 시작과 동시에 본격화되었다. 실업자가 양산되던 초기의 정책들이 개선되면서, 실업자 생계대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하였고 정책의 내용도 다양해 졌다.¹³⁾ 예를 들어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지

13) 노동부가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한 실업대책의 울산지역 수혜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이 가장 광범한 수혜 현황을 기록하였다. 울산지역의 경우에 1999년 10월을 기준으로 782명(294개 사업체)이 채용장려금의 혜택을 받았고, 17,152명이 총 202억 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둘째, 신규 실업자들은 인턴사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았다. 대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신규 노동인력 가운데 447명이 인턴사원으로 취업하였고, 이 가운데 165명(36.9%)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셋째, 여성가장 실업자 가운데 108명이 노동부(노동사무소)가 주관하는 직업훈련을 받았고, 1999년 11월을 기준으로 15명이 취업한 상태이다. 울산지역의 수혜 현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오치룡(1999)을 참고.

급사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¹⁴⁾ 처음에 30인 이상의 사업장 취업자들로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였으나 1998년 10월부터 모든 사업체에 전면 적용하였고, 특히 월 노동시간이 80시간 이상이 되는 시간제 노동자와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임시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으로 적용하였다(노동부, 1998). 그러나 고용보험은 노동부의 주도로 전국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가 지역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실업대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 생활보호사업, 직업훈련사업이 울산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유익한 작업일 것이다. 또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대책들은 공공기관 이외에도 민간사회운동단체들에 의하여 보완되는 측면이 많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운동단체들이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랫동안 활약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회운동단체들의 실업문제 해결방식에 대해서도 점검작업이 필요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 현황

(1)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지역차원의 실업대책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게 생계비

14) 고용보험에서 중요한 또 다른 실업대책은 실업자발생을 최소화하는 선행적 실업대책이다. 실업자의 재취업가능성이 낮은 현재의 경제여건에서 가장 필수적인 실업대책은 “실직자의 수를 줄이는 대책”이기 때문에 선행적 실업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선행적 실업대책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기획단(1993)을 참고할 것. 또한,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김진구(1995)를 참고할 것.

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공공근로사업은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확대되었다. 고용보험가입 대상자가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들과 임시·일시직 노동자들에게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6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시직 출신 실업자들의 실업급여 수급권이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어서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단순히 생계비만을 지급한다면 실업에산이 비생산적으로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일을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로 생계비를 지급한다. 실직자들의 공공근로사업 내용은 단계별로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1단계에서는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하고자 공공취로사업을 부활하였고, 2단계에서는 1단계보다 다양한 13개 유형에 3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울산시정소식, 1998년 8월 25일자 보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은 1일 8시간, 주 5일간 근무하며, 노동의 종류에 따라서 1일 기준으로 2만 2천 원에서 3만 5천 원의 임금을 지급 받는다. 특히 2단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요건을 “신청당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15~65세의 연령층”으로 완화함으로써 1차 사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였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기간(1998년 8월 17일~1998년 12월 말) 동안 195억 5천여 만원(국비 181억 원, 지방비 14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5천 7백여 명에게 생계비를 지급하였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실업자의 입장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는 일정한 ‘노동’을 통한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업을 실행하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일례로, 울산시 중구의 경우에 2단계 사업에만 2,040명이 신청하였고 100명 이상이 신청한 지역이 9개 동에 이를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울산광역시 실업대책본부, 1998).

1999년 말까지 진행되어 왔던 1~4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 분포를 보면, 회사원·일용직·서비스직·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경력을 갖는 실업자들이 참여하여 왔다(표 4).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가족의 생계유지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가정주부와 대기업 생산직 중심의 노동시장구조로 인하여 울산지역 노동시장에서 취업기회를 찾지 못하는 여성 노동인력이 점차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가 호조됨에도 불구하고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는 일용직 출신의 실업자들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공공근로사업의 재편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자격에 관한 것이다. 1998년에 있었던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구직자 가운데 3,170명이 최종적으로 탈락하면서, '생계문제가 덜 시급한 사람들이 편입되고 자신은 탈락하였다'고

〈표 4〉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성별·전직별 현황(1998~1999)

(단위: 명, %)

구분	참여자 계	성 별		전 직 별				
		남	여	자영업 회사원	일용직 근로자	제조 서비스	학생 주부	기타 (농업 등)
합계	34,040 (100) ²	17,008 (49.9)	17,032 (50.1)	8,630 (25.4)	13,426 (39.4)	3,601 (10.6)	4,842 (14.2)	3,541 (10.4)
1단계	8,468 (100)	4,675 (55.2)	3,793 (44.8)	2,109 (24.9)	3,603 (42.5)	868 (10.3)	1,131 (13.3)	757 (8.9)
2단계	12,937 (100)	6,362 (49.2)	6,575 (50.8)	3,046 (23.5)	4,977 (38.5)	1,396 (10.8)	1,778 (13.7)	1,740 (13.5)
3단계	7,732 (100)	3,888 (50.3)	3,844 (49.7)	2,261 (29.2)	2,888 (37.4)	809 (10.5)	1,205 (15.6)	569 (7.4)
4단계	4,903 (100)	2,083 (42.5)	2,820 (57.5)	1,214 (24.7)	1,958 (39.9)	528 (10.8)	728 (14.8)	475 (9.7)

자료: 울산광역시(1999)

향의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농촌의 시간제 노동자 등은 자신의 임금보다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고, 주부와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생계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사례가 1~4단계에 걸쳐서 14%(4,842명)를 차지하였다. <표 4>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부 직업안정센터에 구직자로 등록된 실업자'에 한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였으나, 제한된 예산과 행정인력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는 한 '공공근로사업 수혜자의 선발자격'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둘째, 공공근로사업이 너무 다양한 사업영역을 포함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초점이 불투명하고 단순업무 종사자들의 근로욕구를 고취시키지 못하였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구분하여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급식학교조리보조, 유급 가정봉사, 청소년 지킴이 등 13개 유형에 3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 5> 참조). 그러나 정원관리, 산불감시, 자연정화, 폐기물단속, 공원관리 등과 같은 단순취로 성격의 업무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는 실업대책이 비생산적으로 집행된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을 감독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사업의 진행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취로성 사업은 배제하고 지역현안 중심의 생산적인 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었으나"(송태천, 1999), 공공근로사업에의 일시적 참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 결과, 실직자들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호응이 최근 들어서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999년 10월부터 새로이 추진하게 될 제 4단계

〈표 5〉 공공근로사업참여자의 연령별·사업별 현황(1998년 9월)

(단위 : 명, %)

구분	선발인원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합 계	5,746 <100>2) (100)3)	33 (0.6)	390 (6.8)	1,100 (9.1)	1,743 (30.3)	1,799 (31.3)	681 (11.9)
국가사업 ¹⁾	374 <6.5>	0	47	89	141	81	16
지자체사업	5,372 <93.5>	33	343	1,011	1,602	1,718	665
생산성사업	2,178 <37.9>	9	85	386	718	760	220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723 <12.6>	10	181	228	164	115	25
환경정화사업	2,471 <43.0>	14	77	397	720	843	420

주) 1) 국가사업은 민유림 가꾸기, 철도선로연변 보수사업, 대학자료 유물정리 기원사업, 전국교통량 지원사업, 취약지역방범 지원사업, 자원재사업, 고속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 >의 수치는 공공근로사업참여자의 사업별 분포

3) ()의 수치는 공공근로사업참여자의 연령별 분포

자료 : 울산광역시 실업대책본부(1998)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8천 927명으로 제 3단계의 1만 1천 756명보다 24%나 감소하였다(경상일보, 1999년 9월 29일). 따라서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이 요청되고 있다.

(2) 직업훈련

실직자들이 재취업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과 노동시장의 현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직업훈련제도가 정착된다면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위한 기반(자격증 등)을 마련함으로써 재취업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현재 직업훈련제도는 노동부가 고용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직업능력사업과 울산시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 저소득층을 위하여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의 두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울산시가 주관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15세 이상의 일반 실업자, 고교·대학 신규졸업자, 장애인, 모자보호대상 가운데 기술이 없어 취업을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6개월간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고용촉진훈련을 위하여 1998년에 32억 5천 만원(국비 26억 원과 시비 6억 5천 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전자기기, 자동차정비, 이·미용, 요리 등 지역 내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울산시 실업대책 종합본부, 1998). 또한 1999년에도 23억 원을 집행하여 1,9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울산시가 주관하는 고용촉진훈련은 직업훈련생에게 약간의 생계비를 제공한다는 점과 직업훈련의 성과가 좋은 학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첫째, 이제까지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것은 직업훈련 교육생들이 훈련기간 동안에 사용할 생계비가 없어서 훈련에 참여할 엄두를 못 내거나 참여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울산시는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훈련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훈련수당(1인당 월 3~33만원)을 지급함으로써 1998년 초부터 현재까지 26개 직종 1,843명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둘째, 교육훈련기관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훈련기관이 고용보험이나 기타 실업대책 관련 예산을 소모해버리는 것을 막는 장치를 부분적으로 마련하였다. 울산시는 44개 직업훈련기관(공공기관 1개, 인정기관 2개, 사설학원 41개)을 지정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훈련비용 가운데 75%를 훈련기간 동안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훈련생들이 교육을 마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였다. 교육 후 재취업 성

15) 필자가 1998년에 직업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구주들은 생계비 마련 때문에, 여성 주부들은 자녀양육 때문에 이제까지 직업훈련의 기회를 이용하지 못했었다.

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학원들의 교육내용이 부실해 지는 것을 부분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울산시 차원에서 진행된 고용촉진훈련이 원래의 의도대로 실직자들의 재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다. 직업훈련의 결과를 보면, 훈련기간 초기에 이미 19%가 중도에 탈락하였으며, 계속 훈련 중인 사람 1,193명을 제외할 경우에 교육을 완료한 사람은 296명에 불과하였다(표 6). 이것은 직업훈련 참여자들이 “직업훈련의 내용이 재취업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개인적 상황에서는 직업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고용촉진훈련사업 현황(1998년) (단위: 명, %)

구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계
입 소	405	625	241	271	301	1,843(100)
중도탈락	74	142	35	53	50	354(19.21)
수 료	58	138	32	44	24	296(16.1)
훈 련 중	273	345	174	174	223	1,193(64.7)

자료: 울산시 실업대책 종합본부(1998)

현재 울산시가 마련한 2000년도 직업훈련계획에 따르면 “직업훈련비용으로 16억 원을 사용하여 1,260명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에 참여할 구직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송태천, 1999). 따라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일’을 넘어서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재취업하도록’ 고용촉진훈련을 정비하여, 어렵게 마련한 지방정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 이외에도 교육내용과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후의 취업전망을 지도하며, 교육훈련생들이 교육과정에서 겪는 생계 및 가사부

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하여 직업훈련이 본래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3)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재의 저소득층 복지대책으로는 생활보호사업이 있다. 원래 생활보호사업은 '노동능력과 부양의무자, 그리고 일정액의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부조사업이다. 울산시의 경우 1998년 3월 말 현재 2,002 가구를 거택보호자로, 1,497 가구를 자활보호자로 선정하였다.¹⁶⁾ 거택보호자에게는 생계보조비와 의료·교육보호 등의 복지혜택을, 자활보호자에게는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생업자금을 융자하지만 생계보조비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량실업의 시대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실직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울산시는 보건사회부의 방침에 따라서 '가구재산 4,300만원 이하, 가구원 1인당 소득 23만원 이하'인 실직자 가구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 7만9천 원(가구수 1인의 경우)에서 32만원(6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1998년 9월 현재 울산시민 가운데 1,110가구의 2,978명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생계비와 자활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표 7).

한시적 생활보호정책은 기존의 저소득층 복지사업의 대상을 현실상황에 맞게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실업자의 생계유지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생계비지원 이외에도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보건, 의료, 학비 등의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들이 받는 복지혜택은 아동보육료 50% 감면, 시립병원 진료비 30% 감

16)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거택보호자는 가구재산 2천8백만 원, 월소득 22만원이하인 사람들이며, 자활보호자는 가구재산 2천9백만 원, 월소득 23만원이하인 사람들이다.

〈표 7〉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현황(1998년 9월)

(괄호 안은 세대수)

구분	계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계	2,978 (1,110)	1,870 (774)	1,104 (336)
중 구	1,017 (383)	552 (241)	465 (142)
남 구	749 (269)	401 (163)	345 (196)
동 구	481 (188)	335 (145)	146 (43)
북 구	284 (102)	162 (67)	121 (35)
울 주 군	447 (168)	420 (158)	27 (10)

자료 : 울산광역시 실업대책본부(1998)

면, 이동복지시설 입소 등에 국한되기 때문에, 당장의 수입이 거의 없는 실직자의 입장에서는 의료비와 학비지출의 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실직자들이 생활향상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도움 받고 싶은 복지항목은 생계비 지원 이외에도 일자리 알선(41.8%), 교육비(15.6%), 보건의료(6.6%), 주택자금 지원(5.8%)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¹⁷⁾ 따라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이외에 실직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결국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업대책은 단기적으로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연계, 실직자를 위한 복지지원 등의 분야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7)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9)를 참고할 것.

2. 시민단체의 실업대책 현황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실직자들에게 일자리와 생계비 일부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면, 울산시의 시민단체와 사회운동단체들은 실직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전개하는데 치중하였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만 해도 울산의 시민운동단체들은 다른 지역의 단체와 마찬가지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없었다. 특히 광공업 대공장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경험해 왔던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직장이 없는 실업자들의 문제보다는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생산현장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어 왔다. 따라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운동단체들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나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실업대란이 나타나고 특히 울산지역의 (주)현대자동차가 1997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고용조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실업문제는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다.¹⁸⁾ 따라서 울산지역의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실업자들의 재취업과 실직기간 동안의 생계유지, 그리고 실업에 따른 지역사회문제의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24일에 '울산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라는 민간실업지원기구를 결성하였다. 이 협의회는 울산지역의 노동계를 대변하는 민주노총 울산시협의회와 28개 시민운동단체(홍사단, 울산 경실련, 울산자원봉사센터, 울산 여성의 전화, 울산 참여자치연대 등), 그리고 30개 종교단체(기독교·천주교·불교 등 주요 종교조직)로 구성되어 울산지역의 시민운동조직 가운데 가장 많은 구성원을 갖는 대규모 민간운동조직으로 부각되었다.

18) 1997년~1998년에 있었던 울산지역의 고용조정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성균·조형제(1998)를 참고할 것.

이 협의회는 중구와 북구에 '실업극복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상담사업, 무료진료사업, 실직자쉼터운영, 실직자교육사업, 실업대책에 관한 정책연구사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내 민간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들은 다양한 실업대책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실직자에 대한 상담사업을, 각 구별 의사회와 치과의사협의회 울산지부는 실직자들의 무료진료사업을, 한국국제봉사기구는 실직자 쉼터를, 울산불교여성회와 자원봉사단체는 무료급식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울산 여성의 전화는 여성실업극복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서 저소득층 및 실직자 가정의 아동 보육을 위한 놀이방 시설을 운영하였고, 여성에 적합한 직업훈련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실업극복지원센터는 한겨레신문사가 주관하는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로부터 사업운영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실직자를 위한 무료급식사업의 사례와 같이 지역 내 사회·종교단체들이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이용하기도 한다.

울산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의 실업대책프로그램 가운데 실업자들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의 현황을 보면<표 8>, 1998년의 11월에는 1일 평균 54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했으나 1999년 3월 들어서 2배에 가까운 101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였다. 특히 1998년 12월부터 저소득 실직가정 돕기 결연 사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실직자가정을 대상으로 급식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급식인원이 대폭 증가하였고, 1999년 3월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이 무료급식을 희망하여 1일 평균 무료급식 대상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의 실업대책활동은 실업대란이라는 새로운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처음으로 시도하는 지역사회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울산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가 각종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라는 조직적 수준에

〈표 8〉 실업극복지원센터의 무료급식사업실적(1998년 11월~1999년 3월)

구 분	98년 11월	98년 12월	99년 1월	99년 2월	99년 3월
총급식일수(일)	15	22	21	20	22
총급식인수(명)	812	1,579	1,719	1,804	2,233
1일 평균급식인수(명)	54.1	71.8	81.9	90.2	101.5

자료 : 울산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1999)

머물러 있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실직노숙자쉼터의 실직자들이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활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민간의료인들의 지원활동과 연계가 부족하여 보건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났다(이상희, 1999). 현재 울산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울산시협의회와 58개 시민·종교단체는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이들의 상담사업·무료진료사업·실직자쉼터운영·실직자교육사업 등이 통합된 민간실업대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울산지역 사회단체들의 실업대책활동에서 나타난 두 번째 문제점은 실직자와 취업자들을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조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울산지역은 광공업 대공장 중심이라는 지역고용구조의 특징으로 인하여 하나의 기업체가 실시하는 정리해고는 한꺼번에 다수의 실업자를 양산한다. 또한 실업자들도 대공장 출신의 실업자와 영세사업체 출신 실업자, 그리고 상용직 출신 실업자와 임시·일시직 출신 실업자로 뚜렷이 구분된다. 따라서 동일한 기업에서 일해오던 사람들이 실업자와 취업자로 구분되고 있으며, 고용보험이나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업자와 그렇지 못한 실업자들로 나뉘는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같이 지역사회의 노동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회운동단체들은 이미 발생한 실업자의 문제보다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실업방지

대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실업자 가운데에서도 대공장 출신 실업자들의 생계유지와 재취업문제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영세사업체와 임시·일시직 출신 실업자들의 생계지원대책은 주로 종교·사회단체들의 몫으로 남아 있으나,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실업자집단의 욕구를 수렴하지 못한다.

IV 결론 : 지역차원의 실업대책의 개선방향

한국경제의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서 울산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실업대란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특히 울산은 광공업 대공장의 비중이 높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역고용구조의 특징으로 인하여, 광공업에서의 실업자 발생규모가 크며 광공업 이외의 산업에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실행하는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업대책은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문제점을 나타냈다.

울산지역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실업대책을 발전시키는 일이 필수적이지만, 이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행정부서가 마련한 실업대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차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실업대책을 집행한다면 실업자들의 생계유지와 재취업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실업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은 현재 실

시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실업대책을 보완하는 작업이다.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과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고려하면 앞으로 진행 될 실업대책도 현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0년 10월부터 새로이 시작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대로 집행 된다면,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갖는 문제점 등이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실업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해서 “막대한 실업예산이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비생산적 으로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울산의 사례에서 살펴 본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기초로 지역차원의 실업대책의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된 공공취로 성격의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고 공공성과 생산성을 충족시키는 사업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 공공근로사업이 취로사업 성격의 단순업무를 중심으로 한다면 실직자들의 근로의욕은 여전히 저하된 상태에 머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취로 성격의 업무보다는 공공성과 생산성을 충족 시키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울산과 같이 대공장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일정한 생산경험과 기술을 가진 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생산적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울산지역에는 도로·교통·환경·복지 등의 사회개발 분야가 낙후되었기 때문에, 실직자들을 공공건설사업이나 사회개발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분야가 발전할 것이다.

둘째,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임시·일시직 출신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취업알선망과 같은 고용인프라를 지역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 실직자를 위한 직업훈련의 목적은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내용이 지역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력의 수요-공급에서 불일치가 일어나 직업훈련의 성과가 별로 없다. 따라서 교육훈련이 본래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후의 취업전망을 지도하며, 임시·일용직 출신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 겪는 생계 및 가사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 지역 내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생산의 증가에 따라서 인력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넓혀야 한다.

또한 울산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는 직업훈련기관과 직업알선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울산지역 내 인력은행을 중심으로 구인·구직관련 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직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주지 동사무소-직업훈련기관-인력은행의 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신규 고학력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실업자 가운데 전산관련 업무의 경험자들을 동원하여 지역 내 고용정보망을 완성한다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고용인프라도 구축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실업정책과 시민단체들의 실업대책활동을 통합하여 지역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실업관련 행정조직은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실업대책 이외에도 자신의 고유업무가 따로 있어서 실업대책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앙행정부서가 지시하는 대책을 집행하는 차원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활동하고 있는 울산지역 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도 체계화된 실업대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과 시민단체들이 각 각 진행하고 있는 실업대책활동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경우에 행정기관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구분해야 하는데, 행정당국은 실업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활동을 재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등 행정기관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업무에 집중하고, 시민단체들은 전반적인 실업대책과 지역복지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실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선정하거나 감독하고 취업알선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현행 실업대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관건이 된다.

지역사회가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실업문제가 단지 실업자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문제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실업에 따른 빈곤문제는 실직자 본인의 경제적 상태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의료·보건·학업과 같은 삶의 질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실직자와 가족구성원들의 인간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복지사업과 실업대책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은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데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 김진구. 1995. “고용보험제도도입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나병균. 1998. “IMF사태와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실업자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발표회 자료집.
- 노동부. 1998. 『월간노동』 제32권 6월호
- 송태천. 1999. “울산광역시 2000년도 실업사업에 대해.” 울산지역 실업대책평가 및 향후과제에 대한 토론회.
- 오치룡. 1999. “울산지역 실업현황과 2000년 노동부 실업대책.” 울산지

- 역 실업대책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
- 울산광역시. 1999. 『울산광역시 실업대책상황자료』. 울산광역시.
- _____. 1998. 『울산광역시 실업대책상황자료』. 울산광역시.
- _____. 1997. 『울산통계연보』. 울산광역시.
- _____. 1996. 『울산백서』. 울산광역시.
- 울산상공회의소. 1998. 『울산지역 경제동향 보고서』.
- 울산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 1999. “1999년도 1/4분기 실업극복지원 센터 상담실 보고” 울산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 내부자료.
- 윤진호. 1998. “실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제와 사회』 창간 10주년 기념호. 한울
- 이병희. 1999. “실업구조의 변화: 고실업과 장기실업.” 『동향과 전망』 1999년 봄 여름 합본호 통권 41. 박영률 출판사.
- 이상희. 1999. “실업극복사업의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역할.” 울산지역 실업대책평가 및 향후과제에 대한 토론회.
- 이성균. 1999. “지역차원의 실업대책.” 『지역사회학』 창간호.
- 이성균·조형제. 1998. “울산의 노사관계: 1998년의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제8권 2호
- 이성균 외. 1999. 『울산광역시 복지지표 및 복지수요조사』. 사회과학연구소
- 이영도. 1998. “민주노총의 실업대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자료집.
- 전병유. 1989. “울산지역.” 한국사회연구소 편. 『한국사회노동자연구 II』. 백산서당
- 통계청. 1998a. 『1997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_____. 1998b. 『산업활동동향』 8월호
- _____. 1998c. 『지역통계연보』.
- 통계청 울산출장소. 1999a. 『산업활동동향』 9월호

- _____. 1999b. 『고용동향』 9월호
- _____. 1998a. 『산업활동동향』 8월호
- _____. 1998b. 『고용동향』 8월호
- 한국노동연구원. 1998a.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1998b. 『최근의 고용동향과 향후 실업전망』.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1998c. 『99년도 실업대책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3. 『고용보험제도 실시에 대비한 관련제도와의 관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1998. 『고용보험동향』.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1999.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경상일보. 1998년 5월 10일; 9월 8일; 9월 21일; 1999년 9월 29일자 보도

동아일보. 1998년 6월 10일; 8월 19일자 보도

울산시정소식. 1998년 8월 25일자 보도

중앙일보. 1998년 4월 7일; 6월 9일자 보도

한겨레신문. 1998년 10월 8일; 11일; 13일자 보도

Fazekas, Karoly and G. Gorzelak. 1998. "Restructuring and the Labor Market in Regions Dominated by Heavy Industry in Central Europe." *The Regional dimension of Unemployment in Transition Countries*. OECD.

Huber, Peter and P. Ochotnický. 1998. "Problems of the Local Market dominated by One Large Enterprise: An Overview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a Case Study of a Slovakian region." *The*

Regional dimension of Unemployment in Transition Countries.
OECD.

- ILO. 1998. "The social impac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Technical report for discussion at the high-level tripartite meeting on social responses to the financial crisis in East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n unpublished paper presented at the Bangkok meeting.

부산지역의 실업과 지역사회의 대응

김석준*

I. 부산지역 개관

1963년 직할시로 승격된 부산지역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던 한국 경제의 대외 관문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기록하면서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경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대내외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축적 전략으로서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지역 경제는 서서히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 초 세계 불황으로 인해 선진국 내부에서 산업구조의 재편성이 일어나면서 경공업 제품 수출이 벽에 부딪치게 되자, 정부는 중화학공업으로의 구조 개편을 시도하여 중화학 부문에 막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부산지역의 경우 이미

* 부산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교수

경공업이 상당한 정도 입지 해 있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이 새로이 입지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정부와 독점 대자본의 전략적 입지 선택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합판, 섬유, 의복 등 부산지역의 주종 산업들은 이상비대로 인한 성장력의 한계와 선진국의 강력한 규제, 그리고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 격화 등의 장벽에 부딪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도시 성장 억제 정책이 부과됨으로써 부산지역은 동남권의 성장 거점 도시, 중핵 도시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더욱 급속하게 진전된 제조업 구조 고도화 추세에 편승하지 못한 채 주력 산업인 신발 산업의 경쟁력 상실에 따라 부산의 제조업 기반은 더욱 취약해졌다(김석준, 1993:37~39).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주변 공업지역의 독자성이 강화되면서 부산과의 연계가 더욱 약화됨에 따라 동남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은 더욱 축소되었다. 또한 공업 용지의 부족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역외 이전, 주종 산업인 신발 산업의 연이은 도산, 대체 산업 육성 실패, 중앙 정부의 정책 실패와 지역 차원의 대응 부재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산의 경제력은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임정덕,

〈표 1〉 부산지역 경제의 전국 비중(1965~1998)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인구	4.9	5.7	7.0	8.3	8.7	8.7	8.7	8.4	8.2	8.1
제조업체 수	9.8	8.6	11.1	11.8	11.8	10.3	9.7	9.8	9.7	—
제조업취업자	18.1	15.9	17.7	15.5	15.1	12.2	7.9	7.6	7.4	—
제조업부가가치	17.5	15.0	11.3	11.1	9.3	7.7	6.0	4.6	4.1	—
수출실적	21.4	26.3	24.1	18.2	15.4	12.0	5.2	4.8	4.4	3.8
예금은행 예금	11.0	10.4	10.3	8.8	8.8	8.4	7.3	7.2	7.0	6.1
예금은행 대출금	15.1	8.6	9.1	8.6	8.1	8.4	6.5	6.1	5.8	5.6
어음교환액	—	12.0	10.4	15.6	13.8	3.0	3.7	3.4	3.1	1.7
시민총생산	7.0	9.4	9.5	9.4	9.3	7.8	6.7	6.7	6.4	—

주 : 1965년의 제조업 관련 지표는 1966년도 수치임.

자료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사회지표』 1999

1996:24~26).

이러한 부산지역 경제의 침체 상황은 부산지역 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부산지역 경제의 전국 비중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우선 제조업 부문과 관련해서 보면 제조업체 수는 1980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제조업 취업자수는 이미 1975년을 정점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5년부터는 제조업 종사자의 전국 비중이 인구 비중보다도 낮은 7.9%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부가가치의 전국 비중도 이미 1965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1990년대 들어와서는 그 비중이 인구 비중보다도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1970년대 후반 이후 서서히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부산지역 제조업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영세한 저부가가치 중심 업종으로 특화되어 가고 있다.¹⁾ 이러한 사실은 ‘제조업체 전국 비중’ > ‘인구 전국 비중’ > ‘제조업 취업자 전국 비중’ > ‘제조업 부가가치 전국 비중’ 순으로 나타나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금융 면에서도 1980년대 전반까지는 부산지역의 예금이나 대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 비율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예금이나 대출 모두 인구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산지역의 어음교환액이 전국에서 차지

1) 구체적으로 1998년 말 현재 부산지역 광공업체 1인당 부가가치는 4천3백32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제조업 1인당 급여액도 1천2백59만원으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국제신문, 1999년 9월 28일). 이러한 제조업의 침체에 따라 1997년도 부산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0.4%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 1985년 통계청이 지역내 총생산(GRDP) 집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었다. 그 결과 1인당 지역내 총생산도 1997년 말 현재 7백23만4천 원으로 전국 평균 9백82만8천 원의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일보, 1999년 8월 7일).

하는 비율은 199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부산지역 금융이 실물 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하여 아주 빈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부산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 유출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부산지역 조성 자금의 역외 유출 규모는 1985년의 경우 8천2백4십억 원으로 전체 조성 금액의 15.0% 정도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역외 유출은 급격히 늘어나서 조성 자금의 약 30% 이상이 역외로 유출되었다. 실제로 1997년의 경우 전체 조성 자금 52조3천1백3십6억 원의 41.0%인 21조4천5백7십7억 원이 역외로 유출되었다.²⁾ 이러한 지역 조성 자금의 역외 유출은 주로 재벌 기업의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는 단자회사나 투자신탁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다 높고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획득하려는 자본의 운동 논리상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 업체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함으

〈표 2〉 부산지역 경제변동 지표(1965~1997)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4	1995	1996	1997
인구증가율	전국	2.5	2.2	1.7	1.5	1.0	1.0	0.9	1.0	1.0	0.98
	부산	1.4	9.9	6.3	4.1	0.6	-1.5	-0.6	1.2	-0.4	-0.4
경제성장률	전국	12.7	7.6	6.8	-4.8	7.0	9.6	8.4	8.9	6.8	5.0
	부산	12.5	7.5	3.5	-	6.0	10.7	6.1	6.0	7.7	-0.4
시민총생산/국민총생산		7.0	9.4	9.5	9.4	9.3	7.8	6.8	6.7	6.7	6.4
시민소득/국민소득		142.7	139.6	110.9	113.4	88.4	84.5	76.9	79	80	69

주: 시민 총생산 및 시민소득 관련 1985년 이후의 수치는 지역 총생산으로 계산한 것임

자료: 한국은행 부산지점, 『1998년도 부산지역경제연보』; 부산상의, 『부산경제지표』 각 년도에서 작성.

- 2) IMF 이후 지역조성 자금의 역외유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1998년의 경우 지역 조성자금 55조3백7십5억 원 중에서 54.7%에 해당하는 30조1천1백2십2억 원이 역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조성 자금의 역외 유출 증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부산지점, 『1998년도 부산지역경제연보』(1999.8) 참조.

로써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서울 편중의 지역 불균형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김석준, 1996: 101~102).

이처럼 제조업 부문이 침체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일상화됨에 따라 부산지역은 성장 잠재력을 급속히 상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수준도 점차 열악해졌다.

<표 2>에서도 나타나듯이 부산지역의 인구증가율은 1985년부터 전국의 인구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예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³⁾ 그리고 지역의 경제성장률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이처럼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떨어짐에 따라 부산지역 시민 총생산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대 들어와서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1985년부터는 부산시민 1인당 시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1990년대 부산

3) 1990년대 들어와서는 서울지역도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5 인구주택 총조사 2% 표본 속보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전입 1,033천 명, 전출 1,917천 명으로 순이동(률)은 -884천 명(-35.6%)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부산은 전입 229천 명, 전출 457천 명으로 순이동(률)은 -228천 명(-30.5%)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인구의 감소는 서울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거지의 이전의 결과이고, 따라서 이들 전출자의 경우에도 일자리는 대개 서울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주야간 인구이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유입인구 955천 명, 유출인구 518천 명으로 437천 명의 유입초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서 부산의 경우 유입인구 52천 명, 유출인구 107천 명으로 55천 명의 유출초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단순히 주거지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시외로 이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비슷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영향은 지역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부산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 현상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1990년을 전후한 부산지역 경제성장률은 1988년 8.6%, 1989년 2.5%, 1990년 10.7%, 1991년 4.7%, 1992년 1.0%, 1993년 3.9%로 나타나고 있다(부산상의, 부산경제지표 1995, 27쪽). 따라서 1990년의 부산지역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돌출적인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

의 1인당 시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에도 못 미치는 현상은, 위에서 살펴본 제반 지표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 다른 지역의 소득이 늘어사라 기보다는 부산의 시민소득이 줄어들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역주민 소득의 상대적 감소와 전반적인 빈곤화를 초래한 것이다.⁵⁾

〈표 3〉 국내 6대 도시 주요 지표 비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비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천, 1996)	469	368	373	356	318	362	*
1인당 예산 수혜액(천, 1996)	680	643	708	663	721	720	***
재정자립도(% , 1996)	86.3	74.1	69.3	72.2	60.5	68.6	
세출중 사회개발비 비율(% , 1996)	33.3	31.9	28.7	32.7	33.0	32.8	**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 1996)	1.1	2.2	2.1	1.6	3.6	3.1	*
공무원 1인당 인구수(명, 1996)	190	218	213	199	193	193	***
경제성장률(불변가격, %, 1995)	8.4	3.9	6.6	5.9	9.5	6.3	***
소비자물가상승률(% , 1996)	8.9	10.4	9.3	8.0	10.9	11.1	*
실업률(% , 1996)	2.7	4.2	3.7	2.8	3.7	4.0	***
어음부도율(금액기준, %, 1994)	0.10	0.58	0.52	0.38	0.27	0.45	***
1인당 시내총생산(달러, 1996)	10,598	8,531	8,269	10,387	8,642	8,476	*
도로율(% , 1994)	19.6	14.1	17.6	16.0	14.9	22.3	***
1인당 도로연장(km, 1996)	0.7	0.6	0.7	0.7	0.8	1.5	***
인구 100인당 차량대수(대, 1996)	20.7	17.3	23.3	21.0	16.3	22.6	**
상수도 보급률(% , 1996)	99.9	97.7	98.4	95.3	93.1	93.7	
1일1인당 급수량(l, 1996)	477	406	446	476	308	432	**
하수도 보급률(% , 1996)	99.4	89.5	92.9	69.3	89.4	64.5	
공원율(% , 1993)	14.1	4.6	6.0	4.5	1.8	6.8	*
문화공간당 인구수(명, 1996)	5,584	5,730	6,420	7,781	4,341	3,336	*
범죄발생률(건/명 %, 1996)	3.31	3.05	3.07	2.90	3.76	2.65	
병·의원당 인구수(명, 1996)	2,380	2,735	2,619	3,147	2,439	2,305	**
인구 만 명당 의사수(명, 1996)	15.6	10.9	11.5	7.2	12.9	11.9	**
주택보급률(% , 1996)	69.6	76.1	78.1	72.8	87.0	92.6	*
가구당 평균 사용방수(개, 1995)	3.1	3.0	3.2	3.2	3.2	3.3	***
자가보유 비율(% , 1995)	39.7	44.2	43.9	57.4	48.1	50.6	*

주 : *** 6대 도시 중 최하, ** 6대 도시 중 5위, * 6대 도시 중 4위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7; 내무부, 『도시비교통계』, 1997에서 작성

5) LG경제연구원은 1998년 5월 IMF이후 실업률과 어음부도율, 물가, 산업생산증가율을 기준으로 지역별 경제교통지수를 조사한 결과 부산이 5.0으로 전국에

이에 덧붙여 부산지역의 각종 집합적 소비시설의 부족 등은 노동자를 포함한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표 3>에서 나타나듯이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은 6대 도시 중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는 <표 3>에서 사용된 총 25개의 지표 중에서 6대 도시 중 최하인 지표가 8가지, 5위인 지표가 5가지, 4위인 지표가 8 개지 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재정 및 공공서비스 부문과 관련해서는 1인당 예산 수혜액 및 공무원 1인당 인구수에서는 6위, 일반회계 세출 중 사회개발비 비율은 5위이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비율 등에서는 4위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제와 관련된 경제성장률, 실업률, 어음부도율 등은 6위이며 1인당 시내총생산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위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과 관련된 도로율, 1인당 도로 연장은 6위, 인구 100인당 차량 대수 등에서는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부산지역 교통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은 그나마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일 1인당 급수량에서는 5위로 나타나고 있다. 공원을과 문화공간당 인구수 면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가늠케 하는 병의원당 인구수나 인구 만 명당 의사 수는 모두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주택보급률은 4위, 가구당 평균 사용 방수는 3.0개로 6대 도시 중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자가 보유 비율은 44.2%로 4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지표를 통해서 부산지역 주택난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부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지역경제의 침체와 함께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었다.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부산일보, 1998년 6월 1일 참조.

II. 부산지역 실업의 현황

1. IMF 이전 부산지역 실업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산지역은 1990년대부터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 결과 부산지역은 IMF 이전부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가진 도시였다. 그런데 IMF 이전 부산지역의 높은 실업률은 제조업 종사자의 급격한 감소,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동안 부산지역의 주종산업이었던 신발산업의 사양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부산지역의 산업구조는 1990년대 들어와서 급격하게 변화였다. 1990년의 경우 광공업 취업자(A)의 비율이 38.6%(588천명)이었으나 1997년에는 광공업 취업자의 비율이 23.7%(370천명)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광공업 취업자가 2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다. 이처럼 제조업 취업자(A)가 급격히 줄어드는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현상은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전체 제조업 취업자(A) 중에서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취업자(B)의 비율(B/A)은 1990년 62.5%에서 1997년 50.1%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는 제조업에서도 5인 이하의 사업체(=비공식부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⁶⁾

한편 5인 이상 제조업체 종사자(B)는 1990년 367,585명에서 1997년에는 198,863명으로 7년 동안 168,722명 줄어들었다. 결국 7년 동안 5인 이상 제조업체 종사자가 약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버렸다. 이처럼 5

6) 이러한 부산지역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과 비공식부문의 증대 현상에 대해서는 김석준(1996)을 참조하라.

인 이상 제조업체 종사자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과정에서 신발산업 종사자(C)는 1990년 147,261명에서 1997년에는 22,354명으로 더욱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 결과 5인 이상 제조업체 종사자 중에서 신발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1990년 40.1%에서 1997년 11.2%로 줄어들었다.

〈표 4〉 부산지역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

	취업자				제조업	신발산업	B/A	C/B	실업률
	1차산업	2차산업(A)	3차산업	계(천명)	종사자(B)	종사자(B)	(%)	(%)	(%)
1990	2.1	38.6	59.3	1,525	367,585	147,261	62.5	40.1	3.4
1991	1.7	37.3	61.0	1,581	312,819	109,755	53.0	35.1	3.3
1992	1.5	34.3	64.2	1,597	283,286	83,199	51.7	29.4	3.3
1993	2.1	30.8	67.1	1,596	264,979	58,410	54.0	22.0	4.4
1994	2.2	28.5	69.2	1,627	245,218	45,139	52.8	18.4	4.2
1995	2.3	26.5	71.2	1,669	232,566	34,766	52.5	14.9	3.5
1996	2.1	25.0	72.9	1,671	219,798	28,242	52.6	12.8	3.4
1997	2.1	23.7	74.2	1,678	198,863	22,354	50.1	11.2	3.9

자료 : 한국은행 부산지점, 『1998년도 부산지역 경제연보』.

요컨대, 5인 미만의 비공식부문은 논외로 하더라도 5인 이상 제조업체 중에서 신발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일자리만 7년 동안 125천 개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신발산업에 종사하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대다수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만 실제로 재취업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이처럼 신발산업에서 대량으로

7) 실제로 1994년 8월 신발산업장에서 실직한 노동자 3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임정덕·김완표, 1996)에 따르면 실직노동자의 66.1%는 재취업한 상태였고, 33.9%는 실업상태였다고 한다. 재취업한 노동자의 경우 동종업종이 47.2%, 이종업종이 48.2%로 나타났으며, 고령, 저학력, 저경력 노동자일수록 가정부업과 파트타임 등 불완전 취업과 소규모 업체에 취업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신발산업에서 특징적인 저숙련 노동의 특성 때

방출되어 나온 노동자들이 부산지역의 높은 실업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찾기 힘들다. 그러나 주종산업인 신발산업에서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드는 데 반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신발산업 실직 노동자들이 정체적 과잉인구로 남아 있음으로써 부산지역의 실업률을 높이는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2. IMF 이후 부산지역 실업

IMF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표현되는 사상 초유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다. 가뜩이나 취약한 부산 경제는 IMF 사태 이후 부산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과 동남은행의 퇴출, 삼성자동차의 조업 중단 등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다.

<표 5>에서 나타나듯이 IMF 사태 이전에도 1995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던 생산지수 및 출하지수는 IMF 사태 이후 급속히 악화되었다가, 1999년 2/4분기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1995년의 8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재고지수도 1998년 1/4분기와 2/4분기에 급격히 늘어났다가 차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IMF 사태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재고지수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정상가동률은 IMF 사태 이후 1년 정도 경과한 1998년 4/4분기에 최저점에 달했다가 1999년부터는 조금씩 정상가동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7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IMF 사태의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신설법인 수와 부도업체 수이다. 부산지역에서는 1997년 1년간 2,490개의 법인이 새로 만들어지고, 1,924개의 업체가 부도를 맞았다. 그러나 IMF 사태 직후인

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전 직장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업체에 취업하거나 실직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표 5〉 IMF 이후 부산지역 경제동향 (단위: %, 개)

		1997	1998					199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9월	
제조업	생산지수	92.4	75.8	80.7	75.2	77.7	77.4	70.9	82.8	82.6	78.8	
	출하지수	93.4	75.2	83.0	78.7	78.3	78.8	69.7	82.7	81.8	78.1	
	재고지수	107.8	125.0	132.4	121.5	114.0	123.2	114.9	112.8	121.4	116.4	
	정상가동률	85.3	80.0	72.2	65.1	61.2	70.0	66.5	65.7	69.3	67.2	
신설법인수		2,490	560	558	561	708	2,387	729	903	771	2,403	
부도업체수		1,924	1,224	644	428	259	2,546	202	140	131	449	

주: 생산지수, 출하지수 및 재고지수는 1995년을 기준으로 한 것임(1995=100).

자료: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지역 경제동향』 각 호

1998년 1/4분기에는 560개의 법인이 새로 만들어진 반면, 1,224개의 업체가 부도를 맞았다. 같은 기간 동안 새로 만들어진 법인의 2배가 훨씬 넘는 업체들이 부도로 무너진 것이다. 이처럼 신설법인 수보다 부도업체 수가 더 많이 나타나는 추세는 1998년 2/4분기까지 계속되었다.⁸⁾ 1998년 3/4분기에 들어서면서 부도사태는 다소 진정되어, 신설법인수가 부도업체 수를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의 경우 부도업체 수가 신설법인 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9년 들어와서는 부도업체 수가 상당히 줄어든 반면 신설법인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⁹⁾ 이런 점으로만 보면 1999년 중반기 접어들면서

8) 한편, 부산상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상반기 부산지역 제조업 폐업 업체 수는 영세업체의 도산 가속화로 무려 731개에 달하고 있다. 이 수치는 1997년 같은 기간 480개에 비해 52.3% 증가한 것이다. 하루 평균 4개 업체들이 문을 닫은 셈인데, 그 결과 10,885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1997년 같은 기간의 7,872명보다 38.3%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폐업 업체당 평균 종업원은 14.9명으로, 규모가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폐업이 발생하였다(부산일보, 1998년 8월 13일 참조).

9) 1999년 들어서 신설된 법인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유통업(551개, 22.9%), 제조업(542개, 22.6%), 부동산임대업(445개, 18.5%), 건설업(434개, 18.1%), 운수창고통신통업(268개, 11.2%), 기타 산업(163개, 6.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은행부산지점, 『부산지역 경제동향』(1999. 10) 참조).

실물경제 부문이 서서히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조업 부문의 생산활동이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침체의 수렁에서 허덕임에 따라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 결과 부산지역 실업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실업률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표 6>에서 나타나듯이 부산지역의 실업자는 1997년 4/4분기에는 65천명 수준이었는데,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1/4분기에는 128천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처럼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임시근로자(-47천명)나 자영업주(-32천명)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1/4분기에는 주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근로자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파산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1998년 2/4분기부터는 상용근로자들이 주로 일자리에서 밀려나오고 있다.

여하튼 부산지역의 실업자는 1998년 동안 계속 늘어나 1999년 1/4분기에는 실업자수가 20만 명에 육박하였다. 그리고 실업률도 계속 상승하여 1999년 1/4분기에는 11.4%로 두 자리를 넘어섰다. 이러한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면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늘어만 가던 실업자와 높아만 가던 실업률은 1999년 2/4분기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9년 10월말 현재 실업자는 128천명, 실업률은 7.3%로 나타나고 있다.¹⁰⁾ 이처럼 1999년 2/4분기부터 실

10) 그런데 1997년 4/4분기와 1999년 10월의 수치만 비교해 보면, 15세 이상 인구는 16천명 늘어났고, 비경제활동인구는 24천명 늘어났다.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9천명 줄어들고 취업자도 71천명 줄어들었다. 그리고 실업자는 63천명 늘어났다. 여기서 '늘어난 15세 이상 인구'(16천명)와 '줄어든 경제활동인구'(9천명)를 합친 수치는 곧 '늘어난 비경제활동인구'(24천명)와 일치하는 데, 이는 실망실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1999년 10월의 실업자(128천명)에다 이 실망실업자(24천명)와 18시간 미만 취업자(28천명)를 뺀 의미의 실업자로 잡으면, 실업자는 180천으로 늘어나고 실업률은 $(128\text{천} + 24\text{천} + 28\text{천}) / (1756\text{천} + 24\text{천}) = 10.1\%$ 로 늘어난다.

〈표 6〉 부산지역 고용 동향 (단위 : 천명, %)

		1997	1998				1999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15세 이상 인구		2,970	2,975	2,978	2,980	2,983	2,982	2,983	2,985	2,986
비경제활동인구		1,205	1,220	1,214	1,220	1,221	1,245	1,255	1,239	1,229
경제활동인구		1,765	1,754	1,763	1,861	1,762	1,738	1,728	1,746	1,756
취업자		1,700	1,627	1,607	1,593	1,589	1,540	1,557	1,598	1,629
취 업 구 조	18시간 미만	10(0.6)	25(1.5)	37(2.3)	33(2.1)	27(1.7)	29(1.9)	33(2.1)	30(1.9)	28(1.7)
	36시간 미만	35(2.1)	64(3.9)	88(5.5)	100(6.3)	90(5.7)	98(6.4)	99(6.4)	101(6.3)	85(5.2)
	자영업주	435 (25.6)	403 (24.8)	408 (25.4)	409 (25.7)	411 (25.9)	400 (30.0)	386 (24.8)	390 (24.4)	403 (24.7)
	무급종사자	119 (7.0)	134 (8.2)	130 (8.1)	133 (8.3)	131 (8.2)	121 (7.9)	116 (7.5)	123 (7.7)	120 (7.4)
	상용근로자	495 (29.1)	507 (31.2)	486 (30.2)	469 (29.4)	460 (28.9)	450 (29.2)	452 (29.0)	461 (28.8)	455 (27.9)
	임시근로자	503 (29.6)	456 (28.0)	456 (28.4)	461 (28.9)	458 (28.8)	444 (28.4)	442 (28.4)	452 (28.3)	480 (29.5)
	일용근로자	147 (8.6)	128 (7.9)	127 (7.9)	122 (7.7)	128 (8.1)	127 (8.2)	160 (10.3)	173 (10.8)	172 (10.6)
실업자수		65	128	156	168	173	198	171	148	128
실업률(부산)		3.7	7.3	8.8	9.5	9.8	11.4	9.9	8.5	7.3
실업률(전국)		2.6	5.6	7.2	7.4	7.4	8.4	6.6	5.6	4.6

자료 : 통계청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고용동향』 각 호에서 작성.

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주로 일용근로자의 증대에 힘입은 것이다. 이는 이 시기 집중적으로 실시된 공공근로의 영향으로 짐작된다.¹¹⁾

한편 IMF 사태 이후 1999년 10월까지 취업구조의 변화 추이를 보면,

11) 그런데 부산시의 경우 1999년 확보한 공공근로예산 1,037억 원(국비 573억 원, 지방비 442억 원 등) 가운데 1단계 사업기간인 1/4분기에 42.1%(437억 원), 2단계인 2/4분기에 51.9%(538억 원) 등 94%(975억 원)를 대부분 집행하였다. 부산시는 남은 예산 62억 원으로는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시 추경예산에 90억 원을 반영하고 국비 7백 억 원을 지원해주도록 요청할 방침이었다(부산일보, 1999년 5월 28일 참조).

우선 36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1999년 10월의 경우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3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9%에 달하고 있다. 1997년 4/4분기와 1999년 10월을 비교해 보면, 중 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40천명), 다음으로 자영업주(-32천명), 임시근로자(-23천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26천명 늘어나고 무급가족종사자도 1천명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1999년 8월에는 1997년 4/4분기에 비하여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일용근로자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상용근로자가 줄어들고 일용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²⁾

그런데 일자리에서 대량으로 방출되어 나온 자영업주나 임시근로자들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늘어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의 보호 밖에 있으며,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부산의 높은 실업률은 이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런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¹³⁾ 많

12) 1997년 4/4분기의 경우 부산지역 전체 피고용자 중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43.2%였으나 1999년 10월의 경우 전체 피고용자 중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41.1%로 줄어들고 있다. 한편 1999년 10월 현재 부산지역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전국의 상용근로자 비율 47.3%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것이다. 이는 부산지역의 고용 불안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함을 보여준다.

13)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가 19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공근로에 참여한 실업자 200명과 구직등록기관에 접수한 실업자 500명을 대상

은 실직자들은 장기 실업자로 체류하게 된다.¹⁴⁾ 실업부조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장기 실업자들은 점차 일할 능력과 의지조차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가족 및 친족적인 연줄망에 의한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줄망에 의한 지원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등의 보호도 받지 못하면 실업자는 노숙자 등으로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팽개쳐지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부산지역은 IMF 사태 이전부터 전국 최악

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귀하가 부산지역에서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재취업될 가능성 아주 높다’ 9%, ‘재취업될 가능성이 약간 있다’ 43%, ‘재취업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34%, ‘재취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14%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한편 ‘6개월 이내에 재취업될 가능성이 별로 또는 거의 없다’고 응답한 실직자(47.8%)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재취업될 가능성이 없다면 언제쯤 취업이 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년 이내’ 35%, ‘2년 이내’ 26%, ‘취업될 것 같지 않다’ 39%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전체 실직자의 18.6%는 거의 취업을 포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산대사회조사연구소(1998)를 참조.

- 14)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1998)에 따르면, “언제 실직하셨습니다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990년 이전’ 2.0%, ‘1991~1996년’ 6.3%, ‘1997년 상반기’ 5.8%, ‘1997년 하반기’ 16.4%, ‘1998년 상반기’ 33.6%, ‘1998년 하반기’ 35.9%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실직한 지 1년 이상 된 응답자가 30.5%에 달하고 있으며, 실직한 지 2년 이상 되는 사람도 8.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8년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기혼 실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윤경자(1998)의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은 최저 1달에서 최고 98개월(9년 2개월)에 걸쳐 실직상태였으나 1년 이하의 경우가 전체의 70.8%를 차지하여 대다수가 IMF 사태로 인한 실직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 실직기간은 14.4개월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실직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실직자가 전체의 30% 정도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실업자 종합지원 부산센터에 따르면 “1999년 6월 기준 140명의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가 15.8%나 되며 갈수록 증가추세”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센터에서는 장기실업자에게 희망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부산일보, 1999년 7월 12일 참조.

의 경제적 침체 상황을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IMF사태 이후에는 지역 경제의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됨으로써 부산지역은 전국 평균을 3% 가량 상회하는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Ⅲ. 부산지역의 실업 대책

1. 부산시의 실업 대책

(1) 1998년의 실업 대책

1960년대 이래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통해 한국경제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을 유지함으로써 실업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IMF 관리를 받게 되면서 하루 평균 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140만 명에 달하고 실업률이 6.5%를 상회하게 되자, 정부는 3월 26일 「실업문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¹⁵⁾ 별다른 준비가 없던 상황에서 급박하게 닥친 실

15) “전체 실업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경제정책상의 전반적인 노력과 함께, 기능·연령·학력·생활수준·과거의 직업 등 실업자 유형에 알맞은 대책을 마련·추진하여,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욕과 능력을 유지·향상시키며 실업의 장기화를 예방”할 것을 목표로 한 정부의 실업종합대책은 “실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경영 안정 지원(job keeping)”, “새로운 일자리의 마련(job creation)”, “신속한 취업 알선(job placement) 및 취업능력을 높이는 직업훈련(job training)”,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social care)”의 네 영역의 사업 추진을 위해, 총 7조9천억 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서는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job keeping) 방안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업의 해고 회피노력 지원, 기업의 인력 감축시 근로자와 협의 설득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의 마련(job creation) 방안으로는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집행 및 확대, 공공근로사

업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¹⁶⁾ 정부의 실업 종합대책은 실업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업의 확대, 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수출기업 고용 확대,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방안으로는 실직자 재취직 훈련, 신규실업자 직업 훈련, 재직자 직업훈련, 구직구인 연계체제 강화 등을 열거하였다.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social care) 방안으로는 실업급여의 확충, 생활안정자금 지원, 영세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등을 들고 있었다. 이에 대해 상세한 것은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노동부, 「실업문제 종합대책」(1998.3.26)을 참조하라.

- 16) 이러한 정부의 실업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선 전경련에서는 정부의 종합대책의 문제점으로 ① 흑자 도산 방지 등 확실한 실업예방대책 미흡, ② 고용창출 대책의 실효성 미흡, ③ 중장기 예산확보 대책이 미비하고 정부의 재원확보 노력이 미흡한 등의 재원 조달상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면서, ①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안정, ②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과감한 민영화,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 ③ 재취업 촉진 훈련 확대 및 해외 인력 파견, 근로자 파견사업 등을 통한 실직자 재취업 촉진 등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전경련(1998)을 참조하라.

한편 국민승리 21은 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정부의 고용 유지정책은 실제로는 대량실업 촉진책이며, ② 공공투자사업 확장과 벤처기업을 통한 고용창출 정책은 실효성이 의문스러우며, ③ 직업훈련 계획 역시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④ 실업자 생활안정 대책도 실업급여 대상이나 급여 기간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고, 실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우며, ⑤ 재원 확보 방안도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승리 21은 ① 범국가적 실업대책기구 구성, ② 경제민주화를 통한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③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여 130만개의 일자리 창출, ④ 불법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⑤ 모든 실업자에게 최저임금 지급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국민승리 21(1998a; 1998b)을 참조하라.

여성 실업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조순경 교수는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해서 ① 현실적 기초의 결여, ② 실업 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③ 실업 정책의 가부장적 성격이란 측면에서 비판하고, ①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용 유지 및 창출, ② 고용평등기구 설치를 통한 여성고용 유지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조순경(1998)을 참조하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¹⁷⁾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하루 평균 10개 내외의 기업체가 부도를 내고 실업을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게 됨에 따라, 부산시는 1998년 2월 23일 'IMF 비상경제대책단'을 구성하여 시정운영을 경제위기 관리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3월 30일에는 내무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실업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시 차원에서의 실업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¹⁸⁾

그러나 이 시기 부산시 차원에서의 실업대책은 우선 실업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시나 방침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당면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응한 다분히 전시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¹⁹⁾ 구체적으로 부산시가 1998년 5월까지 추진한 실업대책에 따르면, ① 공공근로사업, ②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③ 실업자 재취업 및 자

17) 이 정부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대책 추진상황」 각 호를 참조하라.

18)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부산시, 「실업대책 상황실 세부운영계획」(1998.4.1)을 참조하라.

19) 예를 들어 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고 실업급여 대상자도 아닌 실직자들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은 생색내기 사업의 전형이었다. 부산시에서는 5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생계비를 지원 받게 되는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를 4,350명으로 설정해 두었다. 그런데 시가 각 구청에 배정한 대상자수는 실직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신청 한 달만에 배정이 끝날 정도였다(부산일보, 1998년 5월 15일). 또한 부산시가 실업자의 재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IMF극복지원센터도 '속빈 강정'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5월 29일까지 IMF극복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알선상담은 6,258명에 달하지만 실제 취업이 된 사람은 91명, 앞으로 취업 가능성이 있는 알선 건수는 783건에 불과하였다(부산일보, 1998년 6월 1일). 부산시의 고용촉진훈련 신청률도 예상 밖으로 저조하였다. 부산시는 1998년 4,200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4월 1일부터 시작된 고용촉진훈련에는 1,991명만 참가했고, 3/4분기 훈련을 위해 4월 한달 동안 신청한 사람도 750명에 그쳤다(부산일보, 1998년 5월 4일).

활을 위한 직업훈련, ④ 공공취업알선 기능 확대, ⑤ 소외계층 보호지원 확대, ⑥ 실직 발생 최소화 및 고용창출 노력 강화 등 6가지 부문에 걸쳐서 약 2,19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역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상정된 1,9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는 200억 원에 가까운 국비를 포함하여 294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²⁰⁾

이러한 부산시의 실업대책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부산지역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부산시가 주관하는 각종 대책 이외에도 부산지방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업 관련 대책들도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²¹⁾ 이에 따라 부산지역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직자 거리행진이 이루어지는 등²²⁾

20)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한 것은 부산시, 「실업대책추진」(1998년 5월)을 참조하라. 그리고 1998년 상반기까지 부산지역 실업대책 추진 실적 등에 대해서는 김만수(1998), 김석준(1998) 등을 참조하라.

21) 예를 들어 실업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부사업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5월 11일 현재 부산지역에서 683건의 대부신청을 받았지만 대부 적격 판정은 76.6%인 523건에 그쳤으며, 대부가능액수는 31억8천여 만원으로 신청금액 63억9천여 만원의 49.7%에 불과했다(부산일보, 1998년 5월 11일).

한편 부산지역 대학에서 실시중인 실직자 재취업훈련 모집에 고용보험 미적용자와 신규미취업자들이 대거 몰려들자 부산지방노동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고용보험적용자 위주로 접수받으라고 지시해 실직자 재취업 훈련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였다.(부산일보, 1998년 6월 13일)

22) '실직자 거리행진 준비위원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1998년 4월 18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지역 26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의 후원으로 부산지역 실직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직자 권리선언 및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날 채택된 '실직자 선언문'에서는 '실직자에게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제공', '부당 해고 중지'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처벌', '실직자들에게 최저생계비 지원', '실직자들의 각종 공과금과 세금감면'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실직자 거리행진의 날'로 정하고 실업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조직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부산의 실업 문제는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당선된 안상영 부산시장의 과제로 넘겨졌다.²³⁾ 그러나 “실업 및 영세민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당선 소감과는 달리 안상영 시장이 부임한 이후에도 부산시의 실업대책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⁴⁾

행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부산일보, 1998년 4월 18일 참조.

- 23) 안상영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실업대책으로 ① 매년 천여 개의 (벤처)기업을 만들어 연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 ② IMF 실업기금 모금운동, ③ 취로사업 확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④ 대학내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⑤ 저소득층 소외계층 생계보장 지원, ⑥ 노숙자 쉼터 운영, ⑦ 무료 급식센터 지원 등을 공약하였다. 이 중에서 ①과 ②를 제외한 다른 사항들은 이미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그리고 부산시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것들로서, 재원의 부족이나 정책 실행과정에서의 혼선과 준비 부족 또는 정책 자체의 부적절성 등으로 실업자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적지 않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IMF 실업기금 모금운동의 경우 내용이나 방향이 모호했지만, 1997년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금 모으기 운동’ 등의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그다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안상영 시장이 공약한 대로 천여 개의 기업을 만들어 10만 명의 일자리를 과연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론만 말하자면 부산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상당 기간에는 이러한 기업 만들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김석준(1998) 참조.

- 24) 여하튼 1998년 11월 25일까지 추진된 부산지역 실업대책은 ① 고용유지 정책으로는 신용보증지원은 596개 업체에 296억 원이 지원되었고, 중소기업지원으로 상반기에는 1,766개 업체에 1,493억 원이 운전자금으로 하반기에는 131개 업체에 204억 원이 구조조정 자금으로 지원되었다. ② 고용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에 14개 사업, 1,786개 사업장에 139억 800만원, 2단계에는 704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32,9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창업강좌에는 2,815명이 참가하였다. ③ 고용촉진훈련으로는 83억 원 8,527명의 목표 중 4,890명이 교육을 받았다. ④ 실직자 생계보호로는 62억 원으로 사업비로 17,416명을 목표로 생계보호 및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였다. ⑤ 시 조례에 의한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표 7〉 1998년도 부산시 공적부조 및 실업 관련 예산

(단위 : 억 원)

	IMF 이전		IMF 이후		총 액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계
공적부조 관련 예산	762	265	111	37.6	873	302.6	1,175.6
실업 관련 예산	6	6	753	204.4	759	210.4	969.4
총 계	768	271	864	242	1,632	513	2,145

자료 : 안홍순(1998).

실제로 부산시의 1998년도 공적 부조 및 실업관련 예산은 <표 7>에 나타나는 것처럼 IMF 사태 이전에 짜여진 예산에 IMF 이후에 추가된 예산까지를 포함하여 국비와 시비를 통틀어 2,145억 원에 불과하였다. 1998년 한 해 동안 정부의 실업대책 예산이 신용보증 확충, 사회간접지분 투자 등 간접적인 실업대책 예산은 제외하고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만 약 5조7천억 원에 달했으며, 부산시의 실업률이 전국 최고였고 전체 실업자 중에서 부산지역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10%를 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산시의 실업예산은 턱없이 적은 규모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부산시의 실업대책은 정부의 실업대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²⁵⁾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는 한편, 지역의 절박한 실업 문제에 대해

59억 원을 지원하고, 노숙자에 대한 쉼터 9개소를 설치하고 44개 급식시설을 통해 무료급식지원을 하였다(초의수, 1998:33~34).

- 25)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비판으로는 김태현(1999)을 참조하라. 이에 따르면, 정부의 실업대책은 ① 지표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실패하였으며, ② 그 이유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IMF 정책과 구조조정 및 유연화 정책을 전제하고 있었던 데다가, ③ 단기적이고 전시행정 위주의 사업방식을 택하고, ④ 불충분하고 단기적인 재원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바른 실업대책은 노동자 참여하의 민주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정책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실시하며, 사회적 안전 망을 완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거의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²⁶⁾

(2) 1999년의 실업 대책

1999년 부산시의 실업대책도 크게 보면 고용 유지 정책, 고용 창출 정책,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정책, 실업자 생활보호 정책의 4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초의수, 1998). 이러한 부산시의 실업대책 목표와 11월말 현재 추진 실적은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나타나듯이 1999년도 부산시의 실업대책은 실업대책반에서 담당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취업정보센터 기능강화와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이나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의 간접적인 실업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⁷⁾

26) 부산시민들은 민선 2기 안상영 시장의 시정 1년에 대해서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 서비스, 시민참여분야는 긍정적인 평가가, 실업, 복지, 교통,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부산일보, 1999년 6월 29일).

실제로 부산시는 구, 군청 공무원들에게 실업자를 배정하여 주1회 방문 상담을 벌여 구직을 돕는 “1실업자 1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하였으나, 상당수 구, 군청이 형식적으로 실업자 할당만 해놓거나 업무시간에 구직 돕기 활동이 불가능한 민원 부서 직원들에게까지 실업자를 4~7명씩 할당하는가 하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여 아르바이트 알선까지 취업 숫자에 포함시키는 등 “전시 행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부산일보, 1998년 11월 28일). 다만 기초단체인 영도구에서는 1998년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독자적으로 관내 실업자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고용촉진 계획을 마련하여 관심을 끌었다. 개별 방문을 통한 동별 실업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도구 관내 실업자는 8,192명으로 실업률이 10.3%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영도구의 실업률은 부산 전체 실업률 9.3% 보다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부산일보, 1998년 8월 6일).

27) 이러한 부산시의 실업대책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우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야외작업의 경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공무원들의 자세가 고압적이며, 기간이 짧고 급여가 낮은 것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의 경우 당초 목적과는 다른 인력배치,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업무에

한편 부산지방노동청에서는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을 지원하여 고용 유지와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직된 근로자 및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조정제도를 활용하여, 1999년 11월말 현재 456개 사에 117억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여 15,936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952개 사에 31억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여 1,509명의 실직자를 신규 채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1999년 4월 1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11월말 현재 93,966명의 실업자에게 707억 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정부지원 인턴제를 실시하여 대졸 인턴 4,642명의 인턴 수당 136억 원을 지원하였다(부산시실업대책실무협의회, 1999).

부산중소기업청에서도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인력지원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별도로 추진하였다. 부산중소기업청이 1999년 11월 15일 현재 자금지원 현황을 보면 경영안정 자금 272개 업체 617.7억 원, 구조개선자금 174개 업체 459억 원, 벤처 창업자금 91개 업체 152억, 기술개발자금 391개 업체 46.1억 원, C2 자금 183개 업체 436억 원 등 합계 1,111개 업체 1,710.8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원 현황은 업체 수에서는 전국의 10.3%, 지원액 면에서는 전국의 11.2%에

배치, 업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임금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 등이 제기되었다. 정보화 근로사업의 경우 원자료 확보 미비로 말미암아 작업 결과가 별 가치가 없게 되며,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꺼리며, 공공근로사업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모호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으며, 지원액이 부족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직업훈련을 시작하기 전부터 훈련이 끝난 뒤까지 상담을 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며, 교육기관에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으며, 훈련기간과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훈련비와 훈련수당과 관련한 불만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부산경실련(1999a)을 참조하라.

해당한다(부산시실업대책실무협의회, 1999).

〈표 8〉 1999년도 부산시 실업대책

(단위 : 억원)

	사 업	목 표	실적(1999.11월 현재)	진 도	비 고
주 ①	공공근로사업	총사업비 1,713억 근로계획 연 4,902천명	사업비 1,260억 근로인원 연 3,739천명	73.6% 76.3%	실업률 1.3% 역제 효과
사 회 복 지 과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30,112세대, 82,840명 53,411백만 원	20,327세대 49,130명 44,510백만 원	67.5% 83.3%	생계비 등 지원
	한시적 장애인 생계보조비 지원	7,800명 554백만 원	3,900명 227백만 원	50.0% 50.0%	생계보조수당 1인 월 45,000원
	취로사업 확대	사업비 9,890백만 원 계획인원 연 483천명	사업비 8,564백만 원 취로인원 420천명	86.6% 87.0%	노임 단가 1일 2만원
	노숙자 보호	사업비 1,503백만 원 쉼터 10개소 810명	보호인원 10개소 640명	— 79.0%	상담소 1개소 후송병원지정
기 업 지 원 과	중소기업 창업지원	자금공급, 입지공급 예비창업자 발굴지원	창업실적 257개 (벤처 149, 소호 108)	—	—
	중소기업 자금지원	운전자금 2,500억 원 육성자금 819억 원	운전자금 2,193억 원 육성자금 527억 원	87.7% 64.3%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2,336억
	중소기업 보증지원	1,600업체 800억 원	2,166업체 750억 원	— 93.7%	기본재산 예산 확보 175억 원
	중소기업 기술지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원 등 150억 원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 등 21.5억 원 외	—	—
	중소기업 판매지원	테즈락제품 판로확대 부산상품 상설전시관	부산상품 상설전시관 개장 등	—	부산국제신발 피혁제품 전시회
	중소기업 수출지원	해외시장 진출 전진기 지구 축 등	해외무역사무소 등 개설	—	382백만 불 계약
노 동 정 책 과	취업정보센터 기능강화	고용안정 정보망 확충	취업 8,633 (20.9%) 구직 41,206	—	취업정보센터 17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장터	—	채용박람회 1,495 채용 구인구직장터 105명 취업	—	—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계획인원 3,570명 사업비 3,958백만 원	위탁인원 5,066명 취업 267명 (15.1%)	—	자격취득 207명 (11.7%)

주①: 부산시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반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료: 부산시실업대책실무협의회, “회의서류”(1999.11.30)에서 작성.

한편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는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으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연리 8.5%로 대부를 실시하고 있는데, 1999년 11월 20일 현재 실적은 2,778건에 13,831백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수 면에서는 전국의 11.6%, 금액 면에서는 11.6%에 해당한다.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사업으로 월세 없이 전세 5천만 원 한도로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1999년 11월 20일 현재 실적은 건수 105건, 금액 4,019백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수 면에서는 전국의 9.2%, 금액 면에서는 9.0%에 해당한다(부산시실업대책실무협의회, 1999).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시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업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는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부산지역의 실업난을 해소하는 데에는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업정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부산의 실업 문제가 IMF 사태 이전부터 만성화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인 데다가, 그나마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정부의 실업 정책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별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지역의 실업대책 관련 행정기구들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²⁸⁾

28) 이와 관련하여 부산경실련에서는 실업대책 행정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부산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이 지적한 부산지역 실업대책 행정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실업대책 전반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하는 실업대책 위원회에는 다수의 공무원과 유관 기관장들만 참여하고 실업과 관련한 현장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맞는 실업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② 실업대책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성과는 없고 실업대책반의 검토결과가 그대로 결론이 되며, 회의 내용은 대부분 공공근로에 관한 것으로 실업 전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③ 실업대책위원회를 위한 실무기구인 실업대책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보건복지여성

2. 민간부문의 실업 대응

IMF사태 이후 실업 문제가 최대의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가 실업대책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²⁹⁾ 실업문제가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산지역에서도 이러한 민간부문에서의 실업 대책들이 다양하게 모색되었다.

우선 부산지역에서는 1998년 1월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포함한 20여 개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주권 수호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대개혁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가 결성되었다. 실업과 물가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시수를 위한 대중투쟁 확장에 주력하면서 이를 IMF 경제실태통치 반대투쟁으로 모아나갈 것을 목표로 결성된 이 시민대책위는 부당 노동행위가 일어나는 사업장에 대해 방문 투쟁을 조직하는 한편, 1998년 4월 전국 최초로 ‘실업자 거

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되면서 실무대책 주무부서도 노동복지과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전되었는데, 이는 결국 공공근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④ 행정관리국 소속 실업대책반에서 실업대책 전반에 대해 총괄 조정한다고 하지만, 하나의 ‘과’ 정도에 불과한 위상을 가진 부서에서 총괄 조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실업대책반은 공공근로사업 추진단위 정도로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경실련은 ① 실업대책위원회가 시장의 자문기구가 아니라 부산지역의 실정에 맞는 실업정책을 입안하고 의결하는 단위가 되어야 하며, ② 그러기 위해서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구성원들을 대폭 참여시켜야 하며, ③ 회의 내용도 공공근로사업뿐 아니라 부산시 실업문제 전반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④ 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부산경실련(1999b)을 참조하라.

- 29) 전국적으로는 전국적 시민단체와 노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최대의 실업대책기구로 실업극복국민운동이 결성되어 있다. 이 실업극복국민운동은 민간기금을 총괄 관리하며 제안사업을 심사하고, 실직자 돕기 결연 운동, 실직자지원센터 설립 등 목적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약 1천억에 가까운 자금이 모여 있다.

리행진'을 주도적으로 조직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후 임단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노총의 동력이 제대로 실리지 않고, 참여단체들의 결합이 이완되면서 사업의 중심이 '실업자(거리행진) 문제'로 좁혀지게 되었다.³⁰⁾ 그런데 시민대책위에서 주도한 이러한 활동은 실업자들의 요구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실업자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확산시켰지만, 실업자가 주체가 되는 조직 건설로는 나아가지 못하였고 구제 중심의 단기적인 처방에 매몰되는 경향이 강했다(공투본, 1999).

한편 날로 심각해지는 부산지역의 실업문제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실업 대책이 지역 차원에서 실행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감시 감독하기 위한 창구를 만들어낸다는 취지에서 부산지역실업대책협의회가 1998년 7월 7일 42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결성되었다. 실업대책협의회는 설립 이후 부산시 실업대책위원회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한편, 실업문제 관련 공청회와 실직자 거리행진 참여를 통한 여론화 작업을 주력하였다. 그리고 실직자 직접구호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실업극복 국민운동과 관련된 사업들을 참여단체별로

30) 이 시민대책위는 이후 1999년 3월 6일 '민중생존권 쟁취, IMF 반대 부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결성되면서 해소되었다. 이 공투본은 1998년 12월 12일 개최된 '정리하고 저지! 재벌해체! 생존권 사수! IMF 반대! 부산민중대회'(58개 단체 2,000여명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설공투체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부산본부 및 부산연합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것이었다. 공투본이 결성된 이후 지역의 연대투쟁은 이 공투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공투본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빈민 학생 등 기층연대투쟁의 중심을 세우고 제 세력을 견인해내는 활동을 즐기치게 전개함으로써 상설적인 투쟁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간 것으로 평가된다(이에 대해서는 공투본 내부 평가문건 참조). 공투본은 '실업반대 완전고용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업 문제에 대해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반대와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실업자 조직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였지만, 실질적인 실업 대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하게 진행하였다.³¹⁾ 그리고 실직가정을 위한 ‘희망의 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³²⁾

이러한 부산지역실업대책협의회 활동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실업자 종합지원 부산센터의 설립이라고 볼 수 있다. 1999년 5월 20일 설립된 실업자종합지원 부산센터는 순수한 민간 단체로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에서 연간 1억9천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실직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한편 실업자와 구인회사를 연결하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성, 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저소득 실직가정 후원 및 결연 운동을 연중 계속해서 펼치고, 노동부 인력은행과 연계해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취업박람회와 소규모 창업강좌도 계획중이다.³³⁾

이러한 부산지역실업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여러

31) 예를 들면 저소득 실직가정 돕기 범국민 결연 운동, 저소득 실직자 주거 안정 지원사업, 실직자 겨울나기 사업, 실직자 진로비 감면사업, 부산지역 실업장애인 지원사업, 여성실직자 재취업강좌 및 기능훈련, 정부실업정책 및 예산 모니터링 등의 사업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위한 연대(1999)를 참조하라.

32) 이 ‘희망의 카드’ 사업은 장기적인 실업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실직 가정에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유통기관, 의료기관, 학원, 이·미용업, 세탁소, 서점 등 다양한 업종을 회원업체로 모집하고 실업자들에게는 희망의 카드를 발급하여 이 카드를 가지고 회원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일정액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민간차원의 실업자 지원사업이다. 1999년 9월말 현재 가입업체는 131개 업체, 희망카드 발급자는 385명에 달한다.

33) 이러한 실업자종합지원부산센터의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구직	(남)	(여)	취업 알선	명수	구직 성공	구직제방	구직 대행	구인처	희망	건강	법률 기타	컴터 이용	총 내담
5월	229	155	74	116	—	0	방문 전화	125	5	—	129	5	—	335
6월	155	99	56	183	—	21	97	—	93	8	—	65	37	294
7월	176	108	68	297	—	27	84	—	107	3	—	118	22	359
8월	61	49	12	254	—	10	93	31	38	11	87	—	36	289
9월	59	44	15	256	191	12	55	65	34	3	23	—	25	214
계	680	455	225	1,106	191	70	329	96	397	30	110	312	125	1,476

자료 : 실업자종합지원부산센터, “사업결과 요약서,” 각 월호

단체들에서 다양한 방식의 실업대책 활동을 벌여 왔다.³⁴⁾

이러한 민간 차원의 실업대책 활동은 자발성과 적극성,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마련의 어려움, 행정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³⁵⁾ 다른 한편으로 민간 차원의 이러한 실업대책 활동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실업자 생계보호 역할을 대신해주는 단순 구호 사업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부의 실업대책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보완해 나간다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구조적 비판과 대안 모색보다는 온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김태현, 1999).

IV. 맺음말

1999년 8월에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들이 다양

- 34) 예를 들어 부산여성회는 여성실업대책본부를 결성하여, 재취업 강좌 개설, 상담실 운영, 여성실직자 거리 캠페인, 구직등록 운동, 여성실직자 쉼터 설치 등의 간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여성실직자장 거울 나기, 범국민 결연 사업 등의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여성 실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화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으며, 정부와 시 당국이 여성 가정에 대한 실업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였으며, 여성 실직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각하고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부산여성회, 1999). 한편 부산여성회와 부산YMCA가 사업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는 1~6개월 정도의 단기직업능력개발, 취업정보·취업알선, 근로여성 고충상담 등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김옥희, 1999).

지 역	사업주체	직종수	참가자	수료자	취업자	취업률(%)
동 구	부산YMCA	27	871	603	476	78.9
동래구	부산여성회	23	589	454	211	46.5

- 35) 1999년 부산지역 민간단체들의 실업대책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성조(1999)를 참조하라.

하게 제시되는 반면³⁶⁾ 실업률은 6% 이하로 떨어지면서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IMF 사태를 극복하고 정상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전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높은 실업률이 구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노동연구원, 1998:31).

지역경제의 쇠퇴로 말미암아 IMF 사태 이전부터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던 부산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나 계기가 없는 한 지금과 같은 고실업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 단기적으로 마련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³⁷⁾

그렇다면 당면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선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가능한 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는 한편, 더 이상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일자리를 잃는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취업훈련을 효율화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고용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에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일이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정부가 실업대책으로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실업대책들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기본으로 하고,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의존하면서 그나마 사회안

36) 199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4.6%를 기록하자 한국은행은 3.8%로 발표했던 경제성장률을 수정 전망할 계획이며, 민간경제연구소들도 당초 3~4% 정도로 전망했다가 5%대로 다시 상향 조정했다(한국노동연구원, 1999:13).

37)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가진 의의와 한계 등에 대해서는 김석준(1999)을 참조하라.

전망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태현, 1999; 정영무, 1998). 엄정한 평가와 점검을 통하여 정부의 실업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다듬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실업 대책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실업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용 및 실업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 강화해야 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업대책위원회 등 각종 실업대책기구들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고 이 기구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도 실질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대폭 허용함으로써 실업대책기구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김석준, 1998; 류장수, 1998; 초의수, 1998).

고실업의 문제가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업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무능력이나 불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체제의 모순에 의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니 만큼, 실업의 고통으로부터 구성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구성원 모두가 실업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간다는 사회적 연대와 심리적 지지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이인재, 1998). 앞으로는 실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우란. 1998. “외국의 성공적인 실업대책 사례와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바람직한 한국형 실업대책 세미나 발표논문. 1998. 4. 22.
- 국민승리 21. 1998a. “김대중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 1998. 4. 16.
- _____. 1998b. “실업방지, 생계보장을 위한 10대 요구안.” 1998. 4. 16.
- 김만수. 1998. “부산시의 실업대책과 향후 개선과제.” 한국노총부산본부 부산지역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1998. 9. 11.
- 김석준. 1999. 『부산지역 현실과 지역운동』. 부산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8. “민선자치 2기 부산의 정책과제: 실업문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 포럼』 7-8월호.
- _____. 1996. “부산지역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일 고찰.” 부산대학교 사범대. 『사대논문집』 제33집.
- _____. 1993. 『부산지역 계급구조와 변동』. 한울.
- 김옥희. 1999. “경제위기시대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실업대책의 개선방안-부산시를 중심으로” 부산 여성의 전화 실직여성가장 대책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999. 10. 5.
- 김태현. 1999. “정부 실업대책 비판과 민간실업대책 활동의 방향.” 민주노총 자료. 1999. 4. 7.
- 노동부. 1998. “실업대책 추진상황.” 각 분기 내부자료.
- 노동자를 위한 연대. 1999. “실업문제 극복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부산지역실업대책협의회. 『실업극복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 1999. 4. 2.
- 류장수. 1998. “부산의 실업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산의 실업현황과 해결과제.” 한국노총부산본부 부산지역 실업문제 해결

- 을 위한 대토론회. 1998. 9. 11.
- 민중생존권 쟁취, IMF 반대 부산공동투쟁본부. 1999. “실업자운동의 현황과 과제.” 부산지역실업대책협의회. 『실업극복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 1999. 4. 2.
-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1998. 『실직자 생활실태 및 실업대책에 대한 실직자/전문가 조사』.
- 부산경실련. 1999a. “정부 실업대책의 부문별 현황과 문제점, 정책적 과제.” 부산지역실업대책협의회. 『실업극복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 1999. 4. 2.
- _____. 1999b. “부산지역 실업대책 행정기구 개선을 위한 제안서.” 1999. 8.
- 부산상의. 1997. 『부산지역경제지표』.
- 부산시. 1998a. “실업대책 상황실 세부운영계획.” 1998. 4. 1. 내부자료.
- _____. 1998b. “실업대책추진.” 1998. 5. 내부자료.
- 부산시실업대책실무협의회. 1999. “회의서류.” 1999. 11. 30.
- 부산지역실업대책협의회. 1999. “99년 실업대책 평가와 2000년 과제 마련을 위한 워크샵.” 1999. 11. 26.
- 부산여성회. 1999. “여성실업자의 실태와 과제.” 1999년 내부자료.
- 안홍순. 1998. “부산광역시 실업관련 예산의 편성 방향.” 신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99년도 부산시 사회복지·실업 예산과 정책방향』.
- 윤경자. 1998. 『실직가족을 위한 전환기 대처 프로그램』. 여성정책연구소
- 이성조 1999. “민간단체의 실업대책 평가.” 부산지역 실업대책 협의회.
- 이인재. 1998. “지자체 실업대책.” 한겨레신문. 1998. 6. 12.
- 임정덕·김완표 1995. 『실직근로자의 직업탐색 및 이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노동부. 1998. “실업문제 종합대책.” 1998. 3. 26.
- 전경련. 1998. “고용 창출을 통한 실업 대책: 주요국의 경험과 실업대책 보완과제.” 1998. 4.
- 정영무. 1998. 『밀레니엄 파고』. 한겨레신문사.
- 조순경. 1998. “IMF 관리체제 시대의 실업정책: 문제와 대안.” 여성단체연합 주최 여성실업문제 토론회 발표논문. 1998. 4. 23.
- 초의수. 1998. “부산지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실업대책의 방향.”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제6집
- 통계청 부산사무소. 1998/99. “부산광역시 고용동향.” 매월 발행 내부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1998.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 한국노동연구원. 1999.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9년 2/4분기』.
- 한국은행부산지점. 1999. 『부산지역 경제동향』. 각 호

제 3 부

실업자의 사회적·심리적 상황

실직자들의 심리적 반응 : 춘천지역 사례 / 조은경

실업의 사회적 측면 : 춘천지역 사례 / 이재혁

실직자들의 심리적 반응 : 춘천지역 사례

조은경*

I. 들어가며

실직이라는 사건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좌절과 고민을 수반하는 중요한 스트레스 사건이다. 실직은 인생 목표 달성에 대한 좌절을 의미하며 좌절은 자기 자신 또는 주변에 대해서 적대적·비관적인 시각과 행동을 취하도록 만든다. 실직자 중에는 실직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자발적으로 하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1997년 말에 불어닥친 우리 나라의 경제 위기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상치 못한 실직의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 IMF 사태 이후에 실직한 가장 또는 도산한 중소기업체 사장이 자살을 했다가나 심지어는 실직자 가족이 동반 자살을 했다는 여러 사례들은 갑작스런 대량 실직의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실직자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자살기도 비율이 10배에서 15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awton &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Rose, 1986; Platt, 1984).

실직은 당장 닥쳐올지 모르는 경제적인 혼란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수반하는데 당사자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물질·심적 자원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대처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LaRocco, House & French, 1980). IMF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실직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혼란은 더욱 컸을 것이다. IMF 위기는 많은 국민들에게 정신적 외상을 입힌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단 한번 정신적으로 외상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의 정서, 사고방식, 행동양식 등 생활의 모든 장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 Eisenberg와 Lazarsfeld(1938)는 실직자들이 거치는 심리적 반응의 단계모형을 제시하였다. 실직 후 첫 단계에서는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면서도 실직자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아다니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는 모든 구직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점차 비관적이 되고 불안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실직상태가 계속되면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드는데, 실직자들은 실직 상태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만성적인 적응기로 들어서게 된다.

정부에서는 IMF 사태 이후 실업 극복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으나 그것이 실직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얼마나 충분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실직의 고통 중 경제적 원조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는 부분과 치유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좀 더 궁극적인 실업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직자의 숫자를 줄이려는 노력이나 일시적인 경제적 원조를 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직자들의 심리적 적응의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춘천지역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직 후 겪고 있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살펴보고, 그러한 심리적 반응들이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자료는 춘천지역에 살고 있는 실직자 3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세 집단의 표본에게 실시되었는데, 실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한 표본(219명, 남자 151명, 여자 68명), 노동부 춘천지역 사무소에 등록된 실직자 표본(125명, 남자 58명, 여자 67명), 그리고 재취업 훈련 교습생 표본(41명, 남자 24명, 여자 17명)이 조사되었다.

II. 조사 문항의 내용 및 특성

실직자들의 심리적 반응을 정서적 반응, 인지적 반응, 행동적 반응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1. 정서적 반응

1)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 실직과 관련하여 이전의 연구에서 관련성이 나타난 세 개의 하위 척도를 구성하였다. 간이정신진단 검사(Symptom Checklist-Revised; SCL-90-R,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에 관한 5개 문항, 불안에 관한 3개 문항, 적대감에 관한 3개 문항을 뽑아서 사용하였고¹⁾ '사회 전반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낀다'고 하는 문항을 적대감에 추가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에서 평정되었다(①'전혀 그렇지

1) '우울' 문항: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장래에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진다,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불안' 문항: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안절부절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적대감' 문항: 나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다,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고향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던진다.

않다' ~ ⑤'매우 그렇다'). 그러나 요인분석을 해본 결과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문항을 제외한 우울감의 4개 문항이 동일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적대감과 불안의 문항들이 동일척도로 분류되어 결과적으로 ‘우울감’과 ‘불안-적대감’의 2개 정서반응 요인으로 문항들을 재분류하였다. 각 요인들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 또는 불안-적대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뜻한다.

2) 위기감: 현재 상황에서 인생의 위기감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7점 척도에 답하게 하였다(①'전혀 느끼지 않는다'~⑦'가장 심각한 위기이다').

2. 인지적 반응

1) 기능적 사고: “직장을 잃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2) 역기능적 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마음이 든다”라는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실직에 대한 역기능적 대처방식을 강하게 나타낸다.

3) 현재 상황 개선 가능성: “귀하는 현재 상황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①'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⑤'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

4) 비관적인 미래관: “경기가 좋아져도 나의 어려움은 별로 나아지

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①‘전혀 아니다’ ~ 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5) 재취업될 확률: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재취업될 주관적 확률을 추정하게 하였다. 0%에서 100% 사이에 등간격으로 표시된 10개의 눈금 위에 자신이 재취업될 확률을 V 표하게 하였다.

3. 행동적 반응

실직 후 수면, 음주, 흡연, TV 시청 행동이 얼마나 줄었는지 혹은 늘었는지를 5점 척도에서 물어보았다(①‘많이 줄었다’ ~ ③‘변함없다’ ~ ⑤‘많이 늘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행동 지표의 하나로 정부기관에 구직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안타깝게도 본 설문조사에는 실직자의 다른 구직활동 정도를 물어보는 문항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4. 개인의 특성 변인

사람마다 실직을 당했을 때에 나타내는 심리적 반응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실직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개인 특성변인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1) 자기 존중감: 자기 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다. 자기 존중감 척도(Rosenberg, 1965) 10개 문항들 중 5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고용상태에 심리적으로 보다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으며(Shamir, 1986), 네덜란드의 신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 존중감이 실직과 관련된 심리적 불편감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chaufeli, 1992).

2) 구직 효능감 : 구직 활동에 있어서의 자신감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미시간 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에서 제작한 JOBS II Survey (Vinokur & Price, 1991)의 일부 문항을 국내의 다른 연구자(노연희, 1998)가 번역하여 사용한 것들이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제시되었으며(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⑦‘매우 그렇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구직활동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구직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재취업에 대한 기대를 높게 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이다. 구직 효능감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을 보면 자격증 구비여부, 취업정보 입수에 대한 자신감, 이력서 작성, 자기 설득에 대한 자신감, 능력이나 기술에 대한 자신감 등 취업에 필요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형식적인 요건에 관한 것들이다.

3) 실직에 대한 귀인 : 자신이 실직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6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그 원인들을 내적 원인들(자신의 능력과 기술 부족, 연줄이 없어서), 외적 원인들(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기업 혹은 고용주의 잘못된 경영, 경기불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 기타 원인들(자발적 실직, 기타)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자신의 실직을 내적 원인에 귀인시킨 사람은 37명(9.6%)이었고 외적 원인에 귀인시킨 사람은 224명(58.2%)이었으며 기타 원인에 귀인시킨 경우는 72명(18.7%)이었다(무응답자 52명, 13.5%).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정적 생활 사건에 대해서 개인특성(능력, 기술 등)에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낮은 정신건강 점수를 나타낸

다고 한다(Seligman, Abramson, Semmel, & von Baeyer, 1979). 또한, 실직에 대해서 내적 귀인을 하는 사람들은 외적 귀인을 하는 사람들보다 절망감을 크게 나타내며 재취업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Winefield, Tiggemann, & Winefield, 1992). IMF 체제라는 거대한 국가적 소용돌이 속에서 실직을 맞이한 사람들은 실직의 원인을 자기 외부에서 찾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며, 그런 경우에 비난의 대상이 외부로 향하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충격을 덜 받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직을 IMF 상황과 관련된 외적 원인에 귀인시키는 사람들과 자기 능력 또는 다른 원인에 귀인시키는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4) 사회적 지지: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종류를 가족 내의 지지(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와 가족 외의 지지(친인척, 친구, 옛 직장 동료, 이웃/동호인, 금융기관, 정부/시민단체)로 구분하였고, 정서적 지지(위안과 격려)와 도구적 지지(금전적 도움, 구직/창업 도움)도 구분하였다. 실직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실직의 스트레스를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는 실직자의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5. 각 척도 변인들의 신뢰도와 평균

본 연구의 목적으로 구성된 심리적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는 .67에서 .89에 분포하고 있어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각각을 단일 척도로 취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표 1〉 각 척도 변인들의 신뢰도와 평균

측정 변인	문항 수	신뢰도(a)	평 균	표준편차
자기 존중감	5	.67	3.47	.62
구직 효능감	5	.82	3.73	1.19
불안-적대감	8	.89	2.38	.89
우울감	4	.85	2.97	.91

6. 응답자의 심리적 반응 분포

본 연구에서 측정되었던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전체 응답자의 심리적 반응

심리적 변인	응답자 수	평 균	표준편차
불안 - 적대감	368	2.38	.89
우울감	369	2.97	.91
위기감	382	3.65	1.07
기능적 사고	371	3.49	1.26
역기능적 사고	373	2.09	1.11
비관적 미래	352	3.20	1.06
상황 개선 가능성	381	3.48	1.19
재취업 확률(%)	374	40.61	25.85
자기 존중감	369	3.48	.62
구직 효능감	367	3.73	1.19
정서적 지지	288	2.93	.77
도구적 지지	288	2.19	.61

주: 구직 효능감: 7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자기 존중감, 불안-적대감, 우울감, 기능적 대처, 역기능적 대처, 비관적 미래:

5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

기능적 대처: “직장을 잃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역기능적 대처: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마음이 든다”.

상황 개선 가능성: ①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 ~ ⑤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

정서적지지: ① 전혀 격려 없음 ~ ⑤ 많은 격려 받음.

도구적지지: ① 전혀 기대 안 함 ~ ⑤ 많이 기대함.

Ⅲ. 조사 표본 중 재취업 훈련 교습생의 특징

본 연구에는 가정방문 조사 실직자, 노동사무소 등록 실직자, 그리고 재취업 훈련 교습생 등의 세 집단이 포함되었는데, 그들 중 재취업 훈련 교습생의 특징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각 집단의 특성을 따로 살펴보았다(<표 3> 참조).

재취업 훈련 대상은 대졸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조사에 응한 교습생들의 연령은 20대가 39명(95.1%), 30대가 2명(4.9%)이었으며, 미혼자가 39명(95.1%), 기혼자가 2명(4.9%)이었고, 모두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서 이들의 인구학적 특징이 상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11명(26.8%)은 재취업 교육을 받기 전에 임시직 피고용자였으며 23명(56.1%)은 이전에도 무직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미취업이 지속되더라도 현재의 생활수준을 1~2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는 16명(39.0%)이 나 되었다. 많은 교습생들이(27명, 65.9%) 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며 가족의 주된 소득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재취업 훈련 교습생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현재의 실직 상황에서 경제적 압박을 그다지 심하게 받지 않는 사람들인 듯하고, 따라서 그들의 심리적 반응도 다른 두 집단의 실직자들과 다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교습생들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서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이 높았고, 적대감, 우울감, 역기능적 사고의 성향은 낮았다. 또한 다른 두 표본에 비해서 직장을 잃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기능적 사고 방식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으며, 현재 상황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이었고, 경기가 회복되면 자신의 어려움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경향을 보였다.

재취업 훈련 교습생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심리적 특징이 다른 두 표본 집단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 표본을 합

게 분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취업 교습생들의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두 표본 집단의 자료들만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표 3〉 조사 표본별 심리적 특성의 비교

심리적 변인 : 조사방법	평균	표준편차	F값
실직 기간(월) :			
1	11.19	10.97	3.88*
2	7.31	12.22	
3	9.45	6.62	
자기 존중감 :			
1	3.40	.61	4.09**
2	3.54	.59	
3	3.67	.69	
구직 효능감 :			
1	3.68	1.29	<1
2	3.77	1.08	
3	3.91	.95	
불안-적대감 :			
1	2.48	.90	3.23*
2	2.26	.86	
3	2.20	.84	
우울감 :			
1	3.05	.90	2.21
2	2.91	.91	
3	2.76	.92	
기능적 사고 :			
1	3.41	1.19	3.42*
2	3.48	1.39	
3	3.98	1.09	
역기능적 사고 :			
1	2.14	1.08	1.61
2	2.11	1.17	
3	1.80	1.08	
위기감 :			
1	3.73	1.05	1.61
2	3.51	1.10	
3	3.66	1.02	
상황개선 가능성 :			
1	3.38	1.14	4.15*
2	3.49	1.27	
3	3.95	1.09	
비관적 미래 :			
1	3.22	1.09	4.06*
2	3.32	1.02	
3	2.75	.84	
재취업 확률(%) :			
1	37.45	24.79	3.61*
2	45.29	26.86	
3	40.25	26.63	

주) 1=방문조사, 2=기관조사, 3=교습생. *p<.05, **p<.01

IV. 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반응들간의 관계

1. 경제적 곤란도와 심리적 반응

본 조사에서는 “미취업이 지속될 경우에 현재의 생활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항으로 응답자가 예상하는 경제적 곤란도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현재 본인의 소득과 가족 전체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각각 $r=.18$, $r=.37$), 실직 전 가족 전체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r=.24$) 현재 생활 수준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답하여 이 문항이 경제적 곤란도를 재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을 말해주었다. 한편, 실직 전 본인의 소득은 현재의 경제적 곤란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표 4> 참고).

현재의 생활 수준이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일수록 적대감, 우울감, 위기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적게 나타내었다. 바꾸어 말하면, 실직 후 자신의 경제 생활 수준의 하락을 가까이 지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부정적 정서반응을 강하게 경험함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생활수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이 높았고 자신이 현재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현재 생활 수준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표 5> 참고).

2. 소득요인과 심리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조사 당시의 응답자 본인 소득과 가족 전체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 위기감, 적대감 등을 적게 느꼈으며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 수준은 높았다(<표 4> 참고). 실직 전 본인의 소득보다는 현재의 본인의 소득 수준이 우울감, 위기감, 자기 존중감 및 구직 효능감 수준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본인의 소득이 많을수록 우울감과 인생의 위기감을 적게 느꼈으며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이 높았다. 또한, 현재 가구소득(본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이 높았을 뿐 아니라 적대감, 우울감, 위기감 등을 적게 느꼈고, 현재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믿음도 높았으며, 재취업될 확률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실직 전의 가구소득과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인의 소득보다 가족 전체의 경제적 수준이 실직에 대한 심리적 위기 반응을 더 잘 예측해주는 듯하다.

〈표 4〉 소득요인과 심리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현재 본인소득	현재 가구소득	실직 전 본인소득	실직 전 가구소득	본인의 소득변화	가족의 소득변화
현 재 가 구 소 득	.40**					
실 직 전 본인소득	.21**	-.01				
실 직 전 가구소득	.15*	.69**	.54**			
본 인 의 소 득 변 화	-.27**	-.18**	.89**	.46**		
가 족 의 소 득 변 화	-.19**	-.08	.75**	.67**	.81**	
자 기 존 중 감	.14*	.29**	.04	.24**	-.02	.03
구 직 효 능 감	.14*	.17**	.11	.18**	.04	.06
적 대 감	-.10	-.19**	.01	-.12*	.04	.03
우 울 감	-.13*	-.26**	-.04	-.19**	.02	.01
기 능 적 사 고	-.04	.10	-.14*	.06	-.12*	-.01
역 기 능 적 사 고	-.05	-.09	.02	-.03	.03	.05
위 기 감	-.10*	-.18**	-.10	-.16**	-.04	-.02
개 선 가 능 성	-.01	.20**	.07	.22**	.07	.12*
재 취 업 확 률	.002	.31**	.09	.29**	.09	.09
경 제 적 곤 란 도	.18**	.37**	.04	.24**	-.03	-.06
실 직 귀 인	.14*	-.12	.17*	-.01	.10	.11

주) 양방향 검증, *p<.05, **p<.01, 최소 사례수=213,

본인의 소득변화 = (실직 전 본인소득-현재 본인소득)

가족의 소득변화 = (실직 전 가구소득-현재 가구소득)

경제적 곤란도 = 현재생활 유지기간, 실직 귀인 : 1=내적 귀인, 2=외적 귀인

한편, 실직 전과 후의 소득의 차이(즉, 소득 감소)가 클수록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실직 전과 현재의 소득 차이는 심리적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다만 본인의 소득 감소가 클수록 '직장을 잃는다고 인생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기능적 사고를 적게 하며 다소 비관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었다.

V.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성별과 심리적 변인들간의 관계

실직자의 성별과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성차는 직업의 획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인에서만 나타났다(<표 5> 참고). 즉, 남성(평균 3.88, 표준편차 1.16)보다 여성(평균 3.44, 표준편차 1.26)의 구직 효능감이 더 낮았다. 그러나 3개월 후 재취업될 확률에 대해서는 남녀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기 존중감 수준에서도 성차가 없었

<표 5> 심리적 변인들의 성별 비교

심리적 변인 \ 성별	남 성	여 성
구직 효능감*	3.88	3.44
자기 존중감	3.45	3.46
재취업 확률(%)	39.18	42.05
적대감	2.42	2.37
우울감	3.01	2.97
기능적 사고	3.40	3.49
역기능적 사고	2.14	2.11
위기감	3.63	3.68

주) * 유의미한 성차 ($p < .001$)

다. 실직에 대한 귀인 방식에 있어서도 남녀 성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실직 남녀 전체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심리적 반응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단지 구직 활동에 있어서의 자신감 수준에서만 남성 실직자들이 좀 더 높았다.

2. 성별 및 혼인상태와 심리적 변인들간의 관계

앞에서 남성과 여성 실직자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해보았을 때에는 심리적 반응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상식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남성 가정이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기혼 남성이 미혼 남성/여성 혹은 기혼 여성보다 심리적 좌절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응답자들의 부양가족의 수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혼인상태에 따라서 응답자 본인이 직접 부양하는 가족의 수가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여성 응답자(평균 1.14명)에 비해서 남성 응답자들의 평균 부양가족 수(평균 2.07명)가 더 많았다. 또한 미혼자(평균 0.34명)나 이혼, 별거, 사별자(평균 1.82명)에 비해서 기혼자의 평균 부양가족 수(평균 2.64명)가 더 많았다. 부양가족의 수에 있어서는 성별×혼인상태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했다. 즉, 미혼인 경우에 남성과 여성 응답자의 부양가족 수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기혼인 경우에는 남성 응답자의 부양가족 수(평균 2.99명)가 여성 응답자의 부양가족 수(평균 1.91명)보다 많았다.

성별과 혼인상태의 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성차 보다는 혼인상태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남녀를 막론하고 미혼 응답자들이 기혼 응답자들보다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이 높았고 실직에 대한 적대감, 우울감, 역기능적 대처방식 등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들의 수준은 낮았으며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과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 남성 실직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실직의 스트레스를 특별히 더 심하게 경험할 것이라는 예상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남성들은 3개월 이내에 재취업될 확률에 있어서 혼인상태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혼인 상태에 따라서 재취업 확률을 매우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주관적 재취업 확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기혼 여성이었으며, 이혼, 별거, 사별한 여성들의 주관적 재취업 확률이 가장 낮았다.

한편, 모든 심리적 변인들에서 가장 부정적인 반응 패턴은 역시 이혼, 별거 혹은 사별한 응답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이혼, 사별 혹은 별거 상태인 사람들은 남녀에 관계없이 실직으로 인한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본 조사에 표집된 이혼, 사별 혹은 별거자의 수가 28명으로 매우 적어서 미혼 또는 기혼 응답자들과 직접적으로 통계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표 5>에 나타난 평균값들을 눈어림으로 살펴보면, 이혼, 사별 혹은 별거자들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서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이 낮은 반면에 적대감, 우울감, 위기감 등은 더 강하게 느끼는 듯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혼, 사별 혹은 별거자들 중에서도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하게 보이는 집단은 여성들, 즉 여성 가장들이었다. 여성이면서 이혼, 사별 혹은 별거 상태에 있는 실직자들은 모든 심리적 변인들에 대해서 다른 집단들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하였으며 재취업에 대한 기대도 가장 낮았다. 또한, 이혼, 별거, 사별 여성 응답자 집단의 심리적 갈등은 경제적 어려움과 직결되어 있었다. 다른 성별×혼인상태 집단에 비해서 이 집단은 실직 전과 현재에 본인의 소득, 본인 외 가족소득, 가구 총소득 모두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장 심한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의 근로 경력은 미혼 남성(평균 70.41개월)에 비해서 오히려 더 길었다(평균 162.05개월).

〈표 6〉 혼인상태별 심리적 반응의 비교

		자기 존중감	구직 효능감	적대감	우울감	역기능 사고	위기감	개선 가능성	비관적 미래	재취업 확률	부양 가족수
남성	1	3.58	4.12	2.29	2.86	2.35	3.53	3.85	2.91	44.07	0.41
	2	3.41	3.81	2.45	3.06	2.70	3.66	3.30	3.35	37.00	2.99
	3	3.45	3.35	3.03	3.34	2.81	3.75	3.13	3.25	40.00	2.63
여성	1	3.61	3.88	2.20	2.81	2.34	3.63	3.94	3.16	56.60	0.25
	2	3.47	3.25	2.41	2.95	2.52	3.61	3.15	3.34	35.69	1.91
	3	3.06	3.07	2.63	3.44	2.85	4.05	2.70	3.61	28.50	1.50
유의미한 효과		B**	A**, B**	B*	B**	B**		B**	B**	B**, A×B*	A**, B**, A×B**

주) N=334 (재취업 교육생 응답자는 제외되었다)

1=미혼, 2 = 기혼, 3 = 기타(이혼, 별거, 사별)

F 검증 : 성별(남/여) × 혼인상태(미혼/기혼)

A : 성차 주효과, B : 혼인상태 주효과

A B : 성별×혼인상태 상호작용. (기타 집단은 응답자 수가 너무 적어서 F검증에서 제외되었다.)

3. 실직자의 나이와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인생에서 여러 모로 기회와 양과 폭이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직업의 행로가 젊은 시절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이 실직, 특히 IMF 상황과 같은 원인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심리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겪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나타났다. 실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기능적인 사고는 적게 하는 반면에 역기능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은 실직자일수록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은 낮았으며,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도 약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재취업될 확률도 나이가 많은 실직자들일수록 낮게 추정하였다 (<표 7> 참고).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들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나이													
2. 성별	-.19**												
3. 교육수준	-.60**	-.06											
4. 실직귀인	.06	-.03	.10										
5. 자존감	-.26**	-.01	.31**	.17**									
6. 구직 효능감	-.24**	-.18**	.33**	.15**	.49**								
7. 적대감	.09	-.03	-.12**	-.13*	-.31**	-.22**							
8. 우울감	.13*	-.02	-.21**	-.13*	-.41**	-.29**	.67**						
9. 기능적 사고	-.22**	.04	.09	.01	.14*	.20**	-.02	-.02					
10. 역기능 사고	.17**	-.01	-.09	-.08	-.31**	-.21**	.45**	.43**	.06				
11. 위기감	.01	.03	-.07	-.15**	-.20**	-.17**	.38**	.40**	-.01	.15**			
12. 개선가능성	-.31**	-.04	.33**	.06	.16**	.25**	-.15**	-.21**	.07	-.18**	-.05		
13. 재취업 확률	-.22**	.05	.25**	.10	.22**	.34**	-.15**	-.23**	.02	-.14**	-.19**	.27**	
14. 현재생활유지기간	-.02	.02	.16**	.11	.20**	.11*	-.25**	-.28**	.03	-.10	-.28**	.12*	.09
15. 정서적 지지	-.07	.003	-.04	.03	.07	-.03	.06	.09	.02	-.01	.05	.13*	.02
16. 도구적 지지	-.23**	-.01	.13*	.12*	.10	.07	-.18**	-.18**	.06	-.06	-.28**	.22**	.24**
17. 음주량 변화	.14*	-.08	-.23**	.05	-.20**	-.20**	.27**	.27**	-.10	.26**	.06	-.13*	-.16*
18. 흡연량 변화	.03	-.12	-.11	.01	-.24**	-.15*	.41**	.37**	-.03	.22**	.22**	-.01	-.19**
19. TV 시청	.06	.00	-.08	.01	-.09	.05	.09	.12*	.05	-.06	-.01	.03	-.05
20. 수면변화	-.24**	.10	.04	.13*	.04	.04	-.14*	-.09	-.01	-.03	-.19**	.14*	-.05

주) 양방향 검증, * $p < .05$, ** $p < .01$, 성별: 1=남성, 2=여성, 실직귀인: 1=내적 귀인, 2=외적 귀인

아래에서 각 연령층별로 나타난 심리적 반응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다.

(1) 실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연령대별 차이

실직에 대한 정서적 반응들 중 적대감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연령차가 나타났으나(<표 8> 참고), 우울감과 인생의 위기감에서는 유의미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30대, 40대, 50대 실직자들이 적대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경제활동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20대와 60대 실직자들의 적대감 수준이 가장 낮았다.

〈표 8〉 정서적 반응의 연령대별 비교

연령 정서반응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값
적대감	2.24 ^a	2.42 ^{ab}	2.50 ^a	2.59 ^a	2.03 ^b	2.24 ⁺
우울감	2.87 ^a	2.98	2.96	3.24 ^a	3.09	1.69
인생의 위기감	3.50	3.78	3.82	3.63	3.25	1.71

주) * $p < .06$. 서로 다른 위첨자를 가진 평균들은 유의미도 5% 수준에서 서로 다름을 의미한다(Least Squared Difference 검증)

(2) 실직에 대한 인지적 반응의 연령대별 차이

40대 이상의 실직자들은 ‘직장을 잃었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기능적 사고를 20~30대 실직자들보다 적게 수용하고 있었고 ‘될 대로 되랴’는 식의 역기능적 사고는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40대 이상의 실직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자신이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도 20~30대 실직자들보다 더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경기가 좋아져도 자신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미래관을 수용하는 경향도 40대 이상의 실직자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3개월 이내에 재취업될 확률은 20대 실직자들이 가장 높게 추정하고 있었으며 다른 연령층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60대 실직자들의 재취업 확률 추정치가 가장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표 9> 참고).

실직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대 실직자들이 실직에 대해서 정서적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경험하고 있으며 실직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특성과 인지적 준비성도 가장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40대 이상의 실직자들은 실직으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직 극복에 필요한 자신감과 인지적 준비성도 가장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있어서 나이가 많을수록 구직활동의 부담은 커지고 취업의 가능성은 적어진다는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9〉 실직에 대한 인지적 반응의 연령대별 비교

연령 인지반응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값
기능적 사고	3.76 ^a	3.49 ^{ab}	3.35 ^{bc}	3.07 ^c	2.79 ^c	4.15**
역기능적 사고	1.89 ^b	2.11 ^{ab}	2.21 ^{ab}	2.41 ^a	2.20 ^{ab}	2.30*
비관적 미래	3.09 ^b	3.18 ^b	3.30 ^{ab}	3.41 ^a	3.92 ^a	2.21 ⁺
개선 가능성	3.82 ^a	3.65 ^a	3.06 ^b	3.12 ^b	2.44 ^c	9.92***
재취업 확률(%)	49.74 ^a	38.57 ^b	34.56 ^b	36.92 ^b	32.31 ^b	4.98***

주) * $p<.05$, ** $p<.01$, *** $p<.001$, + $p<.06$. 서로 다른 위치자를 가진 평균들은 유의미도 5% 수준에서 서로 다름을 의미한다(Least Squared Difference 검정).

(3) 실직에 대한 행동적 반응의 연령대별 차이

실직 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의 변화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표 10> 참고).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행동 변화는 음주, 수면, 이웃모임 참석, 봉사활동 횟수 등이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실직자들이 음주, 흡연 등이 늘었다고 하여 건강관리에 역기능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 경향은 나이가 많은 실직자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실직자들의 음주량은 전반적으로 약간 늘었다고 했는데 20대나 60대 실직자에 비해서 30대~50대 실직자들이 더 많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실직 후 수면의 양은 20대나 60대 실직자들은 다소 늘었다고 한 반면에 30대~50대 실직자들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50대 실직자들은 오히려 수면의 양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평균 2.97). 이웃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줄었다는 반응을 하였는데, 연령대별로는 20대~30대 실직자들이 가장 많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친구모임과 경조사 참석도 모든 연령대에서 줄었다고 반응했으나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10〉 연령대별 실직 후 행동변화

연령 행동유형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값
음주	3.03 ^a	3.52 ^{ab}	3.61 ^{ab}	3.57 ^{ab}	3.33 ^b	3.08**
흡연	3.51	3.84	3.67	3.71	3.50	<1
TV시청	3.89	3.87	3.94	4.16	3.77	1.22
수면	3.77 ^a	3.35 ^b	3.05 ^{bc}	2.97 ^c	3.54 ^{abc}	6.65**
아웃모임	2.34 ^{bc}	2.25 ^c	2.42 ^{abc}	2.57 ^{ab}	2.92 ^a	2.45*
봉사활동	2.10 ^c	2.33 ^{bc}	2.58 ^a	2.75 ^a	2.50 ^{abc}	2.62*
친구모임	2.44	2.36	2.44	2.50	2.92	1.28
경조사	2.47	2.35	2.44	2.68	2.75	1.77

주) 5점 척도: ① 많이 줄어듦 ~ ③ 변화 없음 ~ ⑤ 많이 늘어남, * p<.05, ** p<.01

(4) 구직활동의 연령대별 차이

안타깝게도 본 조사에는 구직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측정하는 문항이 결여되어 있어서 실직자들이 어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설문지 문항 중에 정부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여부를 물어보는 문항을 구직활동의 한 예로 간주하여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표 11> 참고). 정부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구직등록을 했다는 사람의 비율이 약 54.2%로서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45.8%)보다 약간 많았지만,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없었다($\chi^2(4) = 4.48$, n.s.).

〈표 11〉 정부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의 연령대별 비교

연령 행동유형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하였다	53 (54.6)	52 (56.5)	40 (58.8)	32 (50.8)	5 (31.3)	182 (54.2)
하지 않았다	44 (45.4)	40 (43.5)	28 (41.2)	31 (49.2)	11 (68.8)	154 (45.8)

주) 단위 : 명, 괄호 안은 각 연령대 내에서의 비율(%)이다. $\chi^2(4) = 4.48$, n.s.

(5) 연령대별로 살펴본 개인적 특성

실직 후 가족 구성원이나 타인들로부터 위안과 격려를 받은 정서적 지지의 정도는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대부분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평균 2.93, 표준편차 .77). 한편, 금전적 도움이나 구직/창업에 필요한 도움인 도구적 지지의 수준(평균 2.19, 표준편차 .61)은 정서적 지지의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30대 실직자들이 가족이나 가족 외의 근원으로부터 도구적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고).

20대나 30대의 실직자들에 비해서 40대 이상의 실직자들이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 수준이 더 낮았다. 40대 이상의 실직자들은 실직으로 인한 정서적 충격을 30대 이하의 실직자들보다 강하게 경험하며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지적인 방어기제나 자기 존중감 수준이 낮았다. 게다가 주변으로부터 취업에 필요한 도구적 도움을 얻을 길이 막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구직에 대한 효능감도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12> 연령별로 본 심리적 특성의 평균값

연령 척도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값
자기 존중감	3.61 ^a	3.57 ^a	3.36 ^{ab}	3.17 ^b	3.31 ^{ab}	6.94***
구직 효능감 (7점 척도)	4.06 ^a	3.84 ^{ab}	3.42 ^c	3.48 ^{bc}	3.03 ^c	5.06***
정서적 지지	3.03	2.95	2.85	2.87	2.84	0.62
도구적 지지	2.42 ^a	2.24 ^a	1.96 ^b	2.00 ^b	2.15 ^{ab}	7.16***

주) ** $p < .01$, *** $p < .001$. 서로 다른 위첨자를 가진 평균들은 유의미도 5% 수준에서 서로 차이를 의미한다(Least Squared Difference 검증). 구직 효능감은 7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그 이외에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6) 실직에 대한 귀인방식에 있어서의 연령 차이

전체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실직의 원인에 대해서 내적 귀인(10.1%)보다는 외적 귀인(69.2%)을 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것은 대량실직을

유발한 IMF 사태라는 명백한 사건이 능력이나 노력의 부족으로 돌리기엔 너무나 두드러진 실직의 원인으로 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표 7>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실직에 대해서 외적귀인을 할수록 적대감, 우울감, 위기감을 적게 느끼고 자기 존중감, 구직 효능감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나라와 경우가 많이 다른 외국의 실직자 연구에서 나온 결과(즉, 실직에 대한 외적귀인은 낮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결과)를 본 조사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각 연령층별로 실직에 대한 귀인방식을 살펴본 결과,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20대 연령층의 실직자들은 실직의 원인을 내적 원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다소 강했다(내적 귀인 : 외적 귀인 = 13.3% : 54.4%). 20대 응답자들 중에서 기타 반응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대졸 신규 미취업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자발적 실직 = 24명, 기타 원인 = 5명), 30대 응답자들 중에도 자발적 실직자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들은 신규 미취업자라기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들로 보인다. 실직과 같은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원인을 돌리는 내적 귀인을 할수록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20대 실직자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대 응답자들이 실직에 대해서 외적 귀인을 상대적으로 적게 한 것은 이들 중 신규 미취업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의 부족을 더 강하게 탓하기 때문은 아닌 듯하다. 따라서 20대 응답자들은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들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가장 강인함을 보여주었고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가장 높았다(<표 8>부터 <표 12> 참고).

한편, 40대 응답자들은 실직에 대해 외적귀인을 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내적 귀인 : 외적 귀인 = 11.3% : 82.3%),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보았을 때 사실은 내적 귀인을 한 사람들의 비율이 20대 다음으로 높았고 자발적 실직의 비율은 가장 낮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40대 응답자 중 비자발적 실직을 자신의 능력이 나 노력의 부족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로 인한 심리적 적응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표 13〉 실직에 대한 귀인방식의 연령별 비교

귀인방식 연령	내적 귀인	외적 귀인	기타// 자발적 실직: 기타 원인		합계
20대	12 (13.3)	49 (54.4)	29 (32.2)	24 : 5	90
30대	6 (7.4)	59 (72.8)	16 (19.8)	14 : 2	81
40대	7 (11.3)	51 (82.3)	4 (6.5)	3 : 1	62
50대	5 (8.3)	44 (73.3)	11 (18.3)	7 : 4	60
60대	1 (6.7)	10 (66.7)	4 (26.7)	2 : 2	15
합 계	31 (10.1)	213 (69.2)	64 (20.8)	50 : 14	308

주) 단위 : 명, 괄호 안은 %. $\chi^2(8) = 18.91, p < .01$

4. 교육 수준과 실직에 대한 심리적 반응

응답자의 교육 수준과 심리적 반응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7> 참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이 높았고, 실직으로 인해 적대감과 우울감 등 부정적 정서 반응을 적게 경험했고, 현재 상황을 자신이 개선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강하게 나타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3개월 내에 재취업될 확률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은 실직 후 적응하는 모든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듯하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1) 교육수준과 실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관계

응답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실직으로 인한 우울감과 적대감 수준이 높았다. 특히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실직자들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실직자들보다 우울감과 적대감을 더 강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실직 상황에서 느끼는 인생의 위기감 수준에서는 학력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모든 응답자들이 다소 심각한 인생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평균 3.64점/5점 척도).

〈표 14〉 교육수준과 실직에 대한 정서적 반응

정서반응 \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이상	F값
적대감	2.55 ^a	2.39 ^{ab}	2.24 ^b	2.64 ⁺
우울감	3.27 ^a	2.96 ^b	2.79 ^b	7.16***
인생의 위기감	3.79	3.56	3.63	1.38

주) *** $p < .001$, + $p < .07$

(2) 교육수준과 실직에 대한 인지적 반응의 관계

실직에 대한 기능적 사고 방식, 역기능적 사고 방식, 비판적 미래관 등에 있어서 교육수준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실직자들이 실직 극복에 도움이 되는 인지적 반응을 보다 강하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강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고졸자들과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들은 3개월 내에 재취업될 확률 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각각 41.9%와 47.9%) 중졸 이하의 실직자들은 재취업될 확률을 매우 낮게(29.83%) 지각하고 있었다.

〈표 15〉 교육수준과 실직에 대한 인지적 반응

학력 인지반응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이상	F값
기능적 사고	3.24 ^b	3.46 ^{ab}	3.61 ^a	2.05
역기능적 사고	2.31 ^a	2.10 ^{ab}	2.02 ^b	1.70
비관적 미래	3.37 ^a	3.31 ^a	3.06 ^b	2.20
개선 가능성	2.93 ^c	3.40 ^b	3.93 ^a	18.70***
재취업 확률(%)	29.83 ^b	41.90 ^a	47.90 ^a	12.77***

주) *** $p < .0001$

(3) 교육수준과 행동적 반응의 관계

교육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실직 후 생활 습관은 음주, 이웃모임과 봉사활동 참여였다(<표 16> 참고). 음주는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실직 후 전반적으로 다소 늘었다고 했는데(평균 3.38, 표준편차 1.10), 중졸 이하의 저학력 실직자들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응답했다($F(2,246)=6.77, p<.001$). 흡연, 수면, TV 시청 시간도 실직 후 늘었다고 응답했으나(음주: 평균 3.67, 표준편차 0.92, 수면: 평균 3.34, 표준편차 1.12, TV 시청: 평균 3.93, 표준편차) 교육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16〉 교육 수준별 실직 후 행동변화

학력 행동유형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이상	F값
음주	3.79 ^a	3.33 ^b	3.12 ^b	6.77**
흡연	3.91	3.60	3.57	2.39
TV 시청	4.06	3.92	3.82	1.69
수면	3.27	3.32	3.44	<1
이웃모임	2.50 ^a	2.46 ^a	2.21 ^b	2.77 ⁺
봉사활동	2.75 ^a	2.42 ^{ab}	2.18 ^b	3.20*
친구모임	2.44	2.50	2.39	<1
경조사	2.58	2.49	2.36	1.45

주) 5점 척도: ① 많이 줄어듦 ~ ③ 변화 없음 ~ ⑤ 많이 늘어남, * $p < .05$, ** $p < .01$,

⁺ $p < .06$

정부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의 비율에는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실직자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구직등록을 한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들은 63.4%가 구직등록을 했고 고졸 실직자들은 54.9%가 구직등록을 한 반면에 중졸 이하의 학력자들은 구직등록을 한 사람들이 44.9%로서 절반에 못 미쳤다.

〈표 17〉 정부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의 교육수준별 비교

학력 등록여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이상	계
하였다	40 (44.9)	79 (54.9)	64 (63.4)	183 (54.8)
하지 않았다	49 (55.1)	65 (45.1)	37 (36.6)	151 (45.2)

주) 단위 : 명, 괄호 안은 각 연령대 내에서의 비율(%)이다. $\chi^2(2) = 6.48, p < .04$

(4) 교육수준과 개인적 특성 변인의 관계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실직자들이 고졸 혹은 중졸 이하의 최종 학력을 가진 실직자들보다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실직자들의 자신감 수준이 가장 낮았다. 학력이 낮아질수록 구직에 대한 자신감도 낮아진다는 사실은 저학력 실직자들이 구직등록을 적게 하는 원인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낮은 자신감은 구직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 수준을 낮출 것이고 구체적으로 구직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도 위축되게 만들 것이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수준에서는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 금전적 도움 또는 구직/창업에 필요한 도구적 도움에 대해서는 전문대 이상 학력의 실직자들이 고졸 이하의 실직자들보다 많이 기대하고 있었다. 즉, 고학력 실직자들은 재취업에 필요한 자신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구직에 필요한 현실적인 여건도 더 유리한 것이다.

〈표 18〉 교육수준과 개인적 특성 변인들의 관계

학력 개인특성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이상	F값
자기 존중감	3.19 ^a	3.48 ^b	3.67 ^a	16.20***
구직 효능감	3.26 ^c	3.69 ^b	4.21 ^a	16.04***
정서적 지지	2.92	2.99	2.84	0.88
도구적 지지	2.07 ^b	2.15 ^b	2.32 ^a	4.13**

주) *** p<.0001

자기 존중감,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 5점 척도, 구직 효능감 : 7점 척도

(5) 교육수준과 실직에 대한 귀인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실직에 대해서 외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내적 원인과 기타 반응(자발적 실직 포함)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실직자들은 실직을 외적 원인에 귀인 시키는 경향이 가장 강했고(77.9%) 내적 귀인과 기타 원인에 대한 귀인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졸자들의 실직에 대한 외적 귀인 수준은 중졸 이하의 실직자들과 비슷하였으나(71.8%) 자발적 실직(17.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내적 귀인 반응(6.9%)보다 훨씬 많았다. 전문대 이상 학력의 실직자들은 실직에 대한 외적 귀인 경향이 가장 낮았고(56.7%) 자발적 실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23.3%). 즉, 학력이 높을수록 실직의 이유에 대해서 외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낮았고 자발적 실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9〉 교육수준과 실직에 대한 귀인

귀인방식 학력	내적 귀인	외적 귀인	기타// 자발적 실직 : 기타 원인		합계
중졸이하	9 (10.5)	67 (77.9)	10 (11.6)	6 : 4	86
고졸	9 (6.9)	94 (71.8)	28 (21.4)	23 : 5	131
전문대 이상	13 (14.4)	51 (56.7)	26 (28.9)	21 : 5	90
합계	31 (10.1)	212 (69.1)	64 (20.8)	50 : 14	307

주) 단위 : 명, 괄호 안은 %. $\chi^2(4) = 12.48, p < .01$

VI. 개인 특성 변인과 심리적 반응들간의 관계

실직자의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 수준, 귀인 방향 및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실직에 대한 정서, 인지, 행동 반응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7> 참고).

1. 자기 존중감과 심리적 반응들간의 관계

자기 존중감은 구직 효능감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r=.49$) 현재 상황 개선가능성과 재취업 확률 추정치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각각 $r=.16, .22$)를 보인 반면에 우울감, 적대감, 위기감, 역기능적 대처 등의 부정적 정서 요인들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보였다(각각 $r=-.41, -.31, -.20, -.32$). 즉,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직 상황에서도 심리적 정서적으로 더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 존중감은 교육수준($r=.31$) 및 본인의 현재 소득수준($r=.14$)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고려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요한다.

2. 구직활동 효능감과 심리적 반응간의 관계

구직활동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수록 적대감, 우울감, 위기감 등의 정서반응은 낮았고(각각 $r=-.22, -.29, -.17$)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역기능적 사고도 적게 하였다($r=-.21$). 한편 구직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직장을 잃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식의 기능적 사고를 많이 하였으며($r=.20$), 3개월 이내에 재취업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었다($r=.34$). 그러나, 남성일수록($r=-.18$), 나이가 적을수록($r=-$

24), 교육수준이 높을수록($r=.33$) 구직 효능감이 높다는 사실은 구직 효능감이 개인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직장을 구하는데 있어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 실직에 대한 인과귀인과 심리적 반응간의 관계

실직에 대해서 외적 귀인을 할수록 적대감, 우울감, 위기감 등의 정서적 반응을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각각 $r=-.13, -.13, -.15$).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기술 부족 혹은 연줄이 없는 것 등 실직을 자기 자신과 관련된 원인 탓으로 돌릴수록 우울감, 적대감, 인생의 위기감을 강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직에 대한 귀인방식과 실직에 대한 인지적 반응들(재취업에 대한 기대 포함)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개인 특성과 관련해서는,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실직에 대해 외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강했다(각각 $r=.17, .15$).

본 조사의 결과는 실직 등 부정적 생활 사건을 내적 귀인 할수록 낮은 정신건강 점수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IMF 사태로 인해 발생한 대량 실직은 실직에 대한 내적 귀인보다 외적 귀인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들었는데, 외적 귀인을 한 실직자들은 실직을 유발시킨 외부 요인들이 사라지면 언젠가는 다시 취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적 적응은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한편, 실직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하는 것이 재취업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재확인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그 이유는 본 조사의 응답자들 중 약 10%만이 실직에 대한 내적 귀인을 하고 있어서 외적 귀인을 한 실직자들과 비교하기에는 그 수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4.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반응간의 관계

<표 20>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실직자들이 가족 내외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수준과 도구적 지지 사이에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28$). 그런데,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내부의 구성원들로부터 위안과 격려를 많이 받을수록 가족으로부터 금전적 도움 또는 구직/창업에 필요한 도움도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각각 $r=.14, .25$). 그러나 가족으로부터 위안과 격려를 받은 정도가 가족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것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즉,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 내에서의 정서적 위안과 격려를 많이 받을수록 가족 내 구성원들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족 외에서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가족 외부로부터 위안과 격려를 받은 정도는 가족 내부의 구성원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기대하는 것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20〉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의 상호관계

	1	2	3	4	5	도구적 지지
1. 위안격려-가족 내						
2. 위안격려-가족 외	.66**					
3. 금전도움-가족 내	.14*	.10				
4. 금전도움-가족 외	.007	.13*	.61**			
5. 구직도움-가족 내	.25**	.21**	.44**	.16**		
6. 구직도움-가족 외	.22**	.33**	.13*	.32**	.59**	
정서적 지지						.28**

주) * $p<.05$, ** $p<.01$. 위안격려 → 정서적 지지, 금전도움, 구직도움 →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와 실직에 대한 심리적 반응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7> 참고), 실직자들이 가족 내외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현재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개선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r=.13$). 정서적 지지는 그 외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도구적 지지의 수준은 좀 더 많은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우선 나이가 적을수록($r=.23$), 교육수준이 높을수록($r=.13$) 주위로부터 도구적 지지를 많이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주위로부터 금전적 혹은 구직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할수록 현재 겪고 있는 적대감, 우울감, 인생의 위기감 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도구적 지지를 많이 기대할수록 현재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과 3개월 이내에 재취업될 확률도 더 높이 평가하였으며(각각 $r=.22$, $.24$) 현재의 생활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r=.22$).

실직 후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정서적인 위안을 얼마나 받느냐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정서적 지지의 효과는 현재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개선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대해서만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보다는 오히려 금전적 도움이나 구직에 필요한 도움을 기대하는 도구적 지지의 정도가 실직에 대한 정서 반응과 재취업에 대한 희망 등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실직자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실적인 도움에 대한 기대임을 시사해준다.

VII. 경제적 곤란도, 개인 특성 변인,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반응들간의 관계

실직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이 경제적 곤란도 이외에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제적 곤란도(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개인 특성 변인들 중 구직 효능감과 실직에 대한 귀인 방식(내적귀인=1, 외적귀인=2), 그리고 가족 내외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동시 회귀분석(simultaneous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²⁾

1. 우울감 수준에 대한 예측

현재 생활 수준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구직에 대한 자신감이 낮을수록, 가족 외부에서 금전적 도움이나 구직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할수록 우울감 수준은 높았다. 그러나, 실직에 대한 귀인 방식은 우울감을 예측해주지 못하였다. 실직자들이 우울감에 빠지는 것은 경제적 곤란도와 구직에 대한 자신감 및 사회적 지지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회귀 계수의 값이 낮은 것은 연구자가 실직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를 보고 싶은 독립변인들만 선별하여 회귀분석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자기 존중감은 구직 효능감, 우울감, 적대감 등과 높은 부정 상관관계에 있고 재취업 확률과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강력한 개인 특성 변인이다. 자기 존중감은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적 구조이지만 실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직 이전의 개인 특성 수준을 측정하지 못했으므로 어느 정도로 개인의 특성이 변화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자기 존중감 및 기타 개인 특성 변인들은 개념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 21〉 우울감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들

예 측 변 인	Beta	t	p
경제적 곤란도	-.23	-3.33	.001
구직 효능감	-.19	-2.78	.006
가족 외 도구적 지지	-.14	-1.66	.10
가족 내 도구적 지지	-.04	-.47	
가족 내 정서적 지지	.10	1.06	
가족 외 정서적 지지	.03	.34	
실직에 대한 귀인	.07	.95	
$R^2 = .134$			

주) 실직에 대한 귀인: 1=내적 귀인, 2=외적 귀인

2. 적대감 수준에 대한 예측

실직자의 적대감은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수록, 가족 외부로부터 금전적/구직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할수록 강했다. 그러나 구직 효능감, 실직에 대한 귀인방식 등의 개인적 특성 변인들은 적대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경제적 좌절과 그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적 전망이 희박할 때 적대감, 불안감, 공격적인 경향성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표 22〉 적대감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들

예 측 변 인	Beta	t	p
경제적 곤란도	-.22	-3.23	.001
가족 외 도구적 지지	-.19	-2.23	.03
구직 효능감	-.11	-1.63	
가족 내 도구적 지지	-.04	-.49	
가족 내 정서적 지지	.14	1.50	
가족 외 정서적 지지	-.002	-.02	
실직에 대한 귀인	.09	1.36	
$R^2 = .126$			

3. 재취업 확률에 대한 예측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재취업 될 확률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직 효능감과 가족 외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였다. 즉, 구직 활동에 대해서 자신감이 높을수록 재취업 확률도 높이 지각하였으며, 가족 외부로부터 금전적 도움이나 구직에 필요한 도움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수록 재취업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하였다. 재취업에 대한 기대는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경제적 곤란도보다도 실직자 본인이 생각하는 구직 활동의 자신감과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듯하다.

〈표 23〉 재취업 확률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들

예 측 변 인	Beta	t	p
구직 효능감	.29	4.47	.0001
가족 외 도구적 지지	.24	2.86	.005
경제적 곤란도	.06	.93	
가족 내 도구적 지지	.003	.04	
가족 내 정서적 지지	-.001	-.02	
가족 외 정서적 지지	.009	.10	
실직에 대한 귀인	-.05	-.82	
$R^2 = .159$			

4. 행동적 반응에 대한 예측

음주, 흡연, TV 시청 등의 증가는 실직이라는 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역기능적 행동 변화이다.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도, 개인의 특성 변인, 사회적 지지의 정도 등이 역기능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또한 실직 후 겪는 정서적 반응과 취업에 대한 희망 등이 역기능적 행동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회

귀분석에서는 우울감, 적대감, 재취업 확률을 추가로 예측변인에 포함 시켜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직 후 적대감을 강하게 느낄수록, 3개월 이내에 재취업 될 확률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음주, 흡연, TV 시청이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가족 내의 구성원이 아닌 가족 외부의 구성원들로부터 위안과 격려를 많이 받을수록 음주, 흡연, TV 시청이 많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가족 외의 사람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는 상황에는 친구 등을 만나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술과 담배를 하면서 위안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결론적으로, 음주, 흡연, TV 시청과 같은 행동적 반응은 경제적·도구적 요인들 보다는 정서적 요인들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24〉 음주·흡연·TV시청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들

예 측 변 인	Beta	t	p
가족 외 정서적 지지*	.45	3.43	.001
재취업 확률*	-.28	-3.24	.002
적대감*	.28	2.98	.004
경제적 곤란도	-.06	-.75	
구직 효능감	.02	.24	
가족 내 도구적 지지	-.03	-.25	
가족 외 도구적 지지	-.17	-1.18	
가족 내 정서적 지지	-.14	-1.08	
실직에 대한 귀인	.07	.79	
$R^2 = .385$			

VIII. 요약 및 논의

1. 조사결과 요약

본 장에서는 춘천지역 실직자들이 실직 후 나타내는 심리적 반응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심리적 반응을 정서적 반응(우울감, 불안·적대감, 인생의 위기감), 인지적 반응(기능적 사고, 역기능적 사고, 현재 상황 개선 가능성, 미래관, 재취업될 확률), 그리고 행동적 반응(구직 등록 여부, 음주·흡연·TV 시청 습관의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또한 심리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개인의 특성들을 조사하였다. 개인의 특성 변인으로는 자기 존중감 수준, 구직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구직 효능감 수준, 실직에 대한 인과 귀인의 방향, 가족 내외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및 도구적 지지의 정도를 포함하였다.

설문조사는 가정 방문을 통해(219명, 남자 151명, 여자 68명), 노동부 춘천지역 사무소에 등록한 실직자를 대상으로(125명, 남자 58명, 여자 67명), 그리고 재취업 훈련 교습생(41명, 남자 24명, 여자 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재취업 교습생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심리적 특징이 다른 두 표본집단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달랐기 때문에 재취업 교습생들의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두 표본집단의 자료들만을 분석하였다.

“미취업이 지속될 경우에 현재의 생활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항으로 응답자가 예상하는 경제적 곤란도를 측정하였는데 현재 본인의 소득과 가족 전체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실직 전 가족 전체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생활 수준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현재 생활 수준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의 생활 수준이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일수록 적대감, 우울감, 위기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적게 나타내었다. 또한 현재 생활 수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실직자일수록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이 높았고 자신이 현재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도 높이 평가했다.

조사 당시의 응답자 본인 소득과 가족 전체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 위기감, 적대감 등을 적게 느꼈으며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 수준은 높았다. 실직 전 본인의 소득보다는 현재의 본인의 소득 수준이 우울감, 위기감, 자기 존중감 및 구직 효능감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본인의 소득이 많을수록 우울감과 인생의 위기감을 적게 느꼈으며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이 높았다. 또한, 현재 가구소득(본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이 높았을 뿐 아니라 적대감, 우울감, 위기감 등을 적게 느꼈고 현재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믿음도 높았으며 재취업될 확률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실직 전의 가구소득과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인의 소득보다 가족 전체의 경제적 수준이 실직에 대한 심리적 위기 반응을 더 잘 예측해주는 듯하다.

한편, 실직 전과 후의 소득의 차이(즉,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정도)가 클수록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흥미롭게도 본 조사에서는 실직 전과 현재의 소득 차이는 실직에 대한 심리적 반응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본인의 소득 감소가 클수록 ‘직장을 잃는다고 인생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기능적 사고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직자의 성별과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에서는 구직 효능감에서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남성(평균 3.88)보다 여성(평균 3.44)의 구직 효능감이 낮았다. 그러나 3개월 후 재취업될 확률에 대해서는

남녀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기 존중감 수준에서도 성차가 없었다. 실직에 대한 귀인 방식에 있어서도 남녀 성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 남성이 미혼 남성/여성 혹은 기혼 여성보다 심리적 좌절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성별과 혼인상태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차 보다는 혼인상태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두드러졌다. 남녀를 막론하고 미혼 응답자들이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이 높았고 실직에 대한 적대감, 우울감, 역기능적 대처 방식 등의 수준이 낮았으며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과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다.

성차는 직업의 획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인들에서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들보다 남성 응답자들의 구직 효능감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직 효능감이 가장 낮은 집단은 이혼, 별거, 사별 여성 응답자였다. 한편 3개월 이내에 재취업될 확률에 있어서 남성들은 혼인상태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것을 나타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혼인 상태에 따라서 재취업 확률을 매우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주관적 재취업 확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기혼 여성이었으며, 이혼, 별거, 사별한 여성들의 주관적 재취업 확률은 가장 낮았다.

모든 심리적 변인들에서 가장 부정적인 반응 패턴은 역시 이혼, 별거 혹은 사별한 응답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이혼, 사별 혹은 별거 상태인 사람들은 남녀에 관계없이 실직으로 인한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본 조사에 표집된 이혼, 사별 혹은 별거자의 수가 매우 적어서(28명) 미혼 또는 기혼 응답자들과 직접적으로 통계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각 변인의 평균값을 눈어림으로 살펴보면, 이혼, 사별 혹은 별거자들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서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이 낮은 반면에 적대감, 우울감, 위기감 등은 더 강하게 느끼는 듯하다. 그리고 현재 상황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비

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서도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하게 보이는 집단은 여성들이었다. 이혼, 사별 혹은 별거 여성 실직자들은 모든 심리적 변인들에 대해서 다른 집단들보다 부정적 방향으로 응답하였으며 재취업에 대한 기대도 가장 낮았고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도 가장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이혼, 별거, 사별 여성 응답자 집단의 심리적 갈등은 경제적 어려움과 직결되어 있었다.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이 집단은 근로 경력은 상당히 길지만 실직 전과 현재에 본인의 소득, 본인 외 가족소득, 가구 총소득 모두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장 심한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실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적대감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연령차가 나타났으나, 우울감과 인생의 위기감에서는 유의미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적대감을 느끼는 수준에서는 사회 활동이 왕성한 30대, 40대, 50대 실직자들에서 가장 높았으며 20대와 60대 실직자들에서 가장 낮았다. 실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인 사고는 적게 하는 반면에 역기능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은 실직자일수록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은 낮았으며,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도 약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재취업될 확률도 나이가 많은 실직자들일수록 낮게 추정하였다. 3개월 이내에 재취업될 확률은 20대 실직자들이 가장 높게 추정하고 있었다.

실직과 같은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원인을 돌리는 내적 귀인을 할수록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한다. 본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실직의 원인에 대해서 내적 귀인(10.1%)보다는 외적 귀인(69.2%)을 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그러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20대 연령층의 실직자들은 실직의 원인을 내적 원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다소 강했고(내적귀인:외적

귀인 = 13.3% : 54.4%), 40대 응답자들은 외적귀인을 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내적귀인:외적귀인 = 11.3% : 82.3%). 그러나, 20대 실직자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적 귀인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대 응답자들 중에는 신규 미취업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적 귀인의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실직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20대 실직자들이 실직에 대해서 정서적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경험하고 있으며 실직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특성과 인지적 준비성도 가장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40대 이상의 실직자들은 실직으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직 극복에 필요한 자신감과 인지적 준비성도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있어서 나이가 많을수록 구직활동의 부담은 커지고 가능한 직업의 폭은 좁아진다는 현실의 문제가 심리적 스트레스와 직결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직에 대한 행동적 반응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행동 변화는 음주, 수면, 이웃모임 참석, 봉사활동 횟수 등이었다. 음주량은 모든 실직자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늘었다고 했는데 20대나 60대 실직자에 비해서 30대~50대 실직자들이 더 많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실직 후 수면의 양도 20대나 60대 실직자들은 다소 늘었다고 한 반면에 30대~50대 실직자들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50대 실직자들은 오히려 수면의 양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웃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줄었다는 반응을 하였는데, 연령대별로는 20대~30대 실직자들이 가장 많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친구모임과 경조사 참석도 모든 연령대에서 줄었다고 반응했으나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 응답자의 54.2%가 정부기관에 구직등록을 했다고 응답했는데 연령대별로 구직등록자의 비율에 차

이는 없었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과 실직에 대한 반응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존중감과 구직 효능감이 높았으며 3개월 내에 재취업될 확률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실직으로 인해 적대감과 우울감 등 부정적 정서 반응을 적게 경험했고 현재 상황을 자신이 개선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강하게 나타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지(위안과 격려) 수준에서는 학력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금전적 도움 또는 구직/창업에 필요한 도구적 도움은 전문대 이상 학력의 실직자들이 고졸 이하의 실직자들보다 많이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직에 대해서 외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내적 원인과 기타 반응(자발적 실직 포함)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실직자들은 실직을 외적 원인에 귀인 시키는 경향이 가장 강했고(77.9%) 내적 귀인과 기타 원인에 대한 귀인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졸자들의 실직에 대한 외적 귀인 수준은 중졸 이하의 실직자들과 비슷하였으나(71.8%) 자발적 실직(17.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내적 귀인 반응(6.9%)보다 훨씬 많았다. 전문대 이상 학력의 실직자들은 실직에 대한 외적 귀인 경향이 가장 낮았고(56.7%) 자발적 실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23.3%). 즉, 학력이 높을수록 실직의 이유에 대해서 외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낮았고 자발적 실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직에 대한 행동적 반응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정부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비율이 높았으며 중졸이하의 실직자들은 구직등록의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음주, 흡연, TV 시청, 수면 등 생활 습관의 변화는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실직 후 모두 증가하였다고 응답했는데, 음주는 중졸 이하의 실직자들이 특히 많이 늘었다고 했다. 반면, 친구모임, 이웃모임, 경조사,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빈도

는 전반적으로 실직 전에 비해서 줄었다고 응답했는데, 이웃모임과 봉사활동의 빈도는 고학력자일수록 더 많이 줄었다고 했다.

실직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예측해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제적 곤란도(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개인 특성 변인들 중 구직 효능감과 실직에 대한 귀인 방식, 그리고 가족 내외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감을 경험하는 정도는 현재 생활 수준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구직에 대한 자신감이 낮을수록, 가족 외부에서 금전적 도움이나 구직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할수록 높았다. 즉, 실직자들이 우울감에 빠지는 것은 경제적 원인과 개인의 특성 변인인 구직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적 지지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실직자의 적대감은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수록, 가족 외부로부터 금전적/구직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할수록 강했다. 그러나 구직 효능감, 귀인방식 등의 개인적 특성 변인들은 적대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경제적 좌절과 그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적 전망이 희박할 때 적대감, 불안감, 공격적인 경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재취업 될 확률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직 효능감과 가족 외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였다. 즉, 구직 활동에 대해서 자신감이 높을수록 재취업 확률도 높이 지각하였으며, 가족 외부로부터 금전적 도움이나 구직에 필요한 도움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수록 재취업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하였다. 재취업에 대한 기대는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경제적 곤란도보다도 실직자 본인이 생각하는 구직 활동의 자신감과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듯하다.

음주, 흡연, TV 시청 행동은 가족 내의 구성원이 아닌 가족 외부의 구성원들로부터 위안과 격려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실직 후 적대감

을 강하게 느낄수록 증가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재취업될 확률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음주, 흡연, TV 시청은 많이 증가했다. 음주, 흡연, TV 시청과 같은 행동적 반응은 경제적·도구적 요인들보다는 정서적 요인들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토론

본 연구는 춘천에 거주하는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결과를 전국의 실직자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한 실직자들의 심리적 반응이 IMF 사태 이후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겪은 심리적 반응에 비해서 얼마나 더 부정적인 것인지 비교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나타난 실직에 대한 반응들이 실직으로 인한 고유한 반응인지의 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결과의 분석에 실직 이전의 직업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직업 계층의 응답자들을 종합해서 살펴본 것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실직의 영향을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들은 대다수의 실직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의 증상은 심각한 심리장애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정신건강 수준의 저하로 해석하고 있으며, 실직에 대한 반응은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오경자, 1998).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실직으로 인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도 전문적인 개입이나 치료가 당장 필요한 수준의 것들은 아닐 것이며 재취업과 함께 대부분 호전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계속될 때에는 실직자들의 부적응 증상은 심각해져서 만성적으로 될 것이다. 본 조사에서 실직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겪고 있는 집단들이 부각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성 가장 실직자, 40대~50대 실직자, 저학력 실직자 집단이 그들이

다. 이들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더 강하게 하고 있었으며 구직에 대한 자신감은 훨씬 낮았고 재취업에 대한 희망도 적게 나타내고 있었다. 물론 이 집단들은 IMF 사태 이전부터 취업에 관해서는 한계 계층이었기 때문에 실직자 조사에서도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들이 실직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취약한 집단임은 분명하므로 실업 구제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외부로부터 기대하는 금전적 도움이나 구직/창업의 도움이 우울감이나 적대감 등의 부정적 정서 경험을 완화시킬 수 있고 재취업의 기대를 높일 수 있음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부의 실업난 완화 정책이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의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실직자들 사이에 정부의 실업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직자들이 가족 외의 도구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은 필요하다. 실직자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직업 훈련이나 공공근로사업 등 불안정 고용 형태를 통한 실업 대책은 일시적인 생계 대책이 될 수는 있지만 실직자들의 재활의지를 고양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직업훈련이나 공공근로사업 등이 제공하는 경제적 원조의 수준은 너무 미약하여 실직 가정의 경제적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실업 대책 사업들이 충분한 경제적 원조를 해줄 수 없다면 그것들이 가질 수 있는 긴장 완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실직자들의 구직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실업 대책 사업들이 실질적 취업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실직자들의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는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심리적 반응들은 실직 후 비교적 단기간에 발생

한 것들이다. 그러나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되지 못하였다.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인 반응들은 경제적 곤란이 해소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그 해결 방법이 안정된 취업과 궁극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심리적 붕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일·김재환·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출판사.
- 노연희. 1998. “실직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화 반응 및 대처행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1998. “실직이 개인의 심리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경제불황의 심리적 영향』. 1998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논문집.
- Eisenberg, P. and P. F. Lazarsfeld. 1938.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Psychological Bulletin* 35: 358-390.
- Hawton, K. and N. Rose. 1986. “Unemployment and attempted suicide among men.” Oxford: *Health Trends* 18: 29-32.
- LaRocco, J. M., J. S. House and J. R. P. Jr. French. 1980.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 Platt, S. 1984. “Unemployment and suicidal behaviour: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9: 93-11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aufeli, W. B. 1992.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in well- and poorly-educated school-leavers." *On the Mysteries of Unemployment*. The Netherlands: Kluwer.
- Seligman, M. E. P., L. Y. Abramson, A. Semmel and C. von Baeyer. 1979. "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242-247.
- Shamir, B. 1986. "Self-esteem and the psychological impact of unemploy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 61-72.
- Vinokur, A. and R. Price. 1991. *JOBS II Survey*. ISR: Michigan.
- Winefield, A. H., M. Tiggemann and H. R. Winefield. 1992. "Unemployment distress, reasons for job loss and causal attributions for unemployment in young people."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5: 213-218.

실업의 사회적 측면 : 춘천지역 사례

이재혁*

I. 문제의 설정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1999년 봄에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 춘천지역 실직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직이 당사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 의식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실직은 그들의 사회적 관계와 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직 상황이 그 당사자들이 유지해 온 사회적 관계와 의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실직의 경제적 측면에 치우쳐 온 기존의 연구들로부터 그 관심의 지평을 사회적 측면으로까지 확장시키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I. 실직의 원인

본 조사에서는 실업자 자신이 실업의 가장 주요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본 설문 에 대한 총 응답자 333명 중에서 경기불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 가장 많은 41.4%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자발적 실직이 각각 17.7%와 16.2%로 비슷했고, 자신의 능력과 기술부족 9.6%, 기업 혹은 고용주의 잘못된 경영이 8.1%, 기타 5.4%, 그리고 뺄(연줄)이 없어서 1.5%의 순서로 낮아지고 있다. 여기서 자발적 실직자 16.2% (54명)를 제외하고 응답자의 대다수인 83.8%가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실직을 당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들 중에서 실직의 원인을 순수한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돌린 응답자는 전체의 9.6%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IMF 실업 사태는 규모 뿐 아니라 그 성격에서도 많은 사회적 문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응답자들을 실직 당하기 전 최종 직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 보았다. 1) 비교적 일의 성격이 자율적이고 어느 정도 전문기술을 요하는 전문직과 기술직, 2) 공식적인 조직 내에서 일하게 되는 관리직과 사무직, 3) 자영업, 판매직, 서비스직 종사자, 4) 생산직 공장 노동자 및 농업 종사자, 5) 학생, 주부, 군인 등 전반적으로 현재 신규실업자. 이들 (실업 전) 직업계층별로 실직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우선 전문/기술직 실직자들을 보면 전체적인 응답분포에 비해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나 자신의 능력부족의 원인은 상대적으로 작고 대신 잘못된 경영 그리고 자발적 실직의 이유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관리/사무직 실직자의 경우 자발적 실직의 경우가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능력부족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다는 면

이 특징이다. 판매/서비스직 실직자는 자신의 능력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한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이유를 모든 집단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경영이나 정부 정책실패 등 외부 잘못에 대한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 노동직 실직자의 경우 정부 정책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한 응답비율은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자발적 실직의 경우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미취업, 즉 신규실업자의 경우 경기불황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 자신의 능력부족을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많이 실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표 3.1〉 실직의 원인 : 최종 직업종별 응답분포

(단위 : 명, %)

실직의 원인	최종직업종					전체
	전문/ 기술직	관리/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생산직	미취업	
자신의 능력과 기술부족	4 6.3%		14 15.1%	5 7.7%	8 25.0%	31 9.5%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11 17.5%	11 15.1%	12 12.9%	18 27.7%	5 15.6%	57 17.5%
기업 혹은 고용주의 잘못된 경영	11 17.5%	7 9.6%	4 4.3%	5 7.7%		27 8.3%
백(연줄)이 없어서	1 1.6%	2 2.7%			1 3.1%	4 1.2%
경기 불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	20 31.7%	32 43.8%	47 50.5%	27 41.5%	10 31.3%	136 41.7%
자발적 실직	12 19.0%	17 23.3%	14 15.1%	7 10.8%	4 12.5%	54 16.6%
기타	4 6.3	4 5.5%	2 2.2%	3 4.6%	4 12.5%	17 5.2%
전 체	63 100.0%	73 100.0%	93 100.0%	65 100.0%	32 100.0%	326 100.0%

한편 실직의 일차적 원인에 대한 견해는 응답자가 실직을 당함에 있어 IMF라는 외부적 상황이 얼마나 불가항력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의 상황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단기간 안에 재취업 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등의 주관적 인식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5점 척도로 본인 노력을 넘어서서 IMF가 실직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IMF 귀인)와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개선 가능성)을 질문하였고 또한 100% 만점의 기준에서 3개월 내에 재취업될 확률(재취업확률)이 얼마인지를 질문하여 보았다. 아래의 <표 3.2>는 실직의 주요 원인에 대한 응답별로 이상의 3가지 주관적 인식 항목들에 대한 평균치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IMF 위기가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믿는 정도는 5점 척도상에서 평균 3.61로 다소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편이며, 향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인 기대수준을(5점 척도상 평균 3.45) 보이고 있다. 그러나 3개월 이내의 재취업 확률에 대해서는 평균 39.8%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IMF 위기라는 상황적 요인이 궁극적으로 현재의 실업을 초래했다고 믿는 정도(IMF 귀인)는 실직의 원인으로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드는 사람들 사이에 압도적으로 높았다(5점 척도상 평균 4.21). 이들은 IMF 위기 자체가, 가능한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초래되었다고 믿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정부실패 $\Rightarrow$ IMF 위기 $\Rightarrow$ 본인의 실직이라는 인과관계를 기초로 가장 비판적인 관점을 보유하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집단은 또한 현 실직상황에 대한 개선 가능성과 주관적인 재취업 확률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기대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재취업 확률에 대한 평균 34.6%). 한편 이와는 반대로 실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고용주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들은 IMF 요인을 상대적으로 가장 작게 탓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평균 3.07). 추론해 보면, 이 집단은 잘못된 경영은

IMF 위기와는 다소 별개의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재취업 확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평균 47.6%). 이들 두 집단은 실직에 대하여 정부나 고용주 등 외부 요인을 탓하는 면에서는 공통되나 IMF에 대한 궁극적 원인 귀속(귀인)의 정도 그리고 재취업확률 등 향후 개선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점이 흥미로운 사실이다.

한편 가장 외부의 탓을 덜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 즉 자신의 능력부족을 실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한 사람들도 궁극적으로는 IMF 위기에 어느 정도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평균 3.42) 이는 자발적 실직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난 것(평균 3.49)은 다소 의외라 하겠다. 이들 두 집단 중에서 자발적 실직의 경우가 향후의 개선가능성이나 재취업확률 등의 면에서 비교적 높은 기대수준을 보이고 있으며(개선가능성 평균 3.76; 재취업확률 42.3%) 자신의 능력부족을 지적한 사람들은

〈표 3.2〉 실직 원인 집단별 실업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비교

실직의 원인	IMF 귀인	개선가능성	재취업 확률
자신의 능력과 기술 부족	3.4194 9.5%	3.5484 9.4%	36.1290 9.5%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4.2069 17.7%	3.0682 17.6%	34.5690 17.7%
기업 혹은 고용주의 잘못된 경영	3.0741 8.2%	3.4444 8.2%	47.5926 8.3%
백(연줄)이 없어서	3.2000 1.5%	3.6000 1.5%	32.0000 1.5%
경기 불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	3.5766 41.8%	3.4380 41.5%	39.7059 41.6%
자발적 실직	3.4906 16.2%	3.7593 16.4%	42.2642 16.2%
기타	3.5294 5.2%	3.5556 5.5%	47.6471 5.2%
전 체	3.6098 100.0	3.4485 100.0%	39.8165 100.0%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개선가능성 3.55; 재취업확률 36.1%).

여기서 우리는 IMF 사태에 따르는 실업난이라는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 속에서도 실제로는 이러한 등식이 실업자들이 실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항목들 사이에서는 다소의 의미 있는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편차는 개선가능성과 재취업확률에 대한 기대 수준의 측면에서도 차이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고: 통계적으로 실직의 원인 변수에 따른 집단간 평균 차이는 IMF 귀인 항목에서만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됨; $p < .05$ 수준).

Ⅲ.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

실업은 단순히 경제적 일거리, 혹은 경제적 수입원이 잠정적으로 없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실업이 가져오는 경제적 곤란은 가장 명백하고도 일차적인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이에서 나아가 실업은 실업자의 건강부터 심리적인 스트레스, 가정내의 문제, 그리고 주변과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활동 등에 걸쳐 포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호황기의 일시적(혹은 일시적이라고 본인이 믿는) 실업과는 달리 현재의 IMF 위기형 구조적 실업의 경우 이 같은 비경제적 측면들에서의 실업의 악효과는 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춘천의 실업자들이 실직으로 인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아보았다. 본인의 건강악화 등 총 10개의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들 중에서 실직 이후 가장 힘든 문제를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표시하게 하였다. 우선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총 385명의 응답자 가운데 10가지 선택지 중 10% 이상 선택되어진 요인들만 제시; 자세한 응답

결과는 아래의 <표 3.3> 참조).

우선 가장 힘든 문제로 총 응답자의 21.3%가 의식주 궁핍을 들고 있어 많은 실업자의 경우 기초적인 생활조차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냈다. 본인의 건강악화를 일차적 곤란으로 든 응답자도 12.7%나 되어 만일 실업이 장기화된다면 실업자들이 건강악화로 말미암아 재취업이 영구히 곤란하게 됨은 물론 공공적 의료지원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장 힘든 요인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한 사람들도 전체의 10.1%나 되었다. 한편 가장 힘든 문제에서 의식주 궁핍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요인은 두 번째로 힘든 문제에서 무려 33.0%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심리적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불안감 그리고 본인 능력에 대한 실망감은, 최소한 춘천실업자의 경우, 현재 드러나지 않게 실업의 고통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해석은 두 선택 요인들을 교차하여 고려해 볼 때 잘 이해될 수 있다 (아래의 <표 3.4> 참조).

두 요인을 교차해 본 결과, 첫 번째 어려움으로 의식주 궁핍과 두 번째 어려움으로 장래 불안감이 선택되어진 쌍(pair)이 385명 중 31명(8.1%), 그리고 본인능력 실망감(1번째)과 장래 불안감(2번째) 쌍이 30명(7.8%)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요인 pair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려움의 우선 순위를 바꾸어, 장래 불안감(1번째) + 본인능력 실망감(2번째) 쌍도 5.7%여서, 이들 두 요인을 결합하여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의외로 장래 불안감(1번째) + 의식주 궁핍(2번째) 쌍은 2.6%에 그쳤다).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라는 다소 주관적인 심리적 요인들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사실이다.

한편 우선적인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소득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설문

〈표 3.3〉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 : 가장 힘든 문제와 두 번째 힘든 문제 교차표

		실직이후 가장 힘든 문제 - 두 번째											전체
		건강 악화	배우자 불화	자녀 교육	친구 친지 관계 악화	의식주 공핍	부채	본인 실망감	주위 수치감	소일 거리 없음	장래 불안감	무응답	
실직이후 가장 힘든문제 - 첫 번째	건강악화		2	10	1	8	1	5		5	16	1	49
	배우자 불화	1		9	3	4	4	2		1	3		27
	자녀교육					11	4	6		7	11		39
	친구친지 관계악화		1	3		1		1			3		9
	의식주 공핍	6	5	8	1		13	7	4	6	31	1	82
	부채		2	2		2		2		1	8	1	18
	본인 실망감		1	2		2			8	2	30		45
	주위 수치감				1					2	7		10
	소일거리 없음	3					1		1		18	5	28
	장래 불안감	2	1	4	2	10	2	22	8	8		3	62
	무응답											16	16
전 체		12	12	38	8	38	25	45	21	32		27	385

대한 응답결과를 현재 월 가구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저소득 실업층과 상위소득 실업층으로 구분하여 각각 알아보았다. 각 집단별로 선택되어진 요인들 중에서 총 응답자의 10% 이상인 것들을 순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 : 소득층에 따른 구분

	가장 어려운 문제	두 번째 어려운 문제
저소득 실업층 (현재 월가구 소득 100 만원 이하 : 총 97명)	의식주 공핍(25.1%)	장래의 막연한 불안감(32.3%)
	본인의 건강악화(15.7%)	자녀교육(13.4%)
	장래의 막연한 불안감(12.1%)	의식주 공핍(13.9%)
	자녀교육(12.1%)	
상위소득 실업층 (현재 월 가구소득 100 만원 이상 : 총 116명)	장래의 막연한 불안감(25.9%)	장래의 막연한 불안감(31.0%)
	본인에 대한 실망감(18.1%)	본인에 대한 실망감(18.1%)
	의식주 공핍(14.7%)	소일거리 없음(12.1%)
	소일거리 없음(12.9%)	

위에서 보듯이, 현재 월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의 소득층에서는 가장 주요한 곤란으로 의식주 궁핍이 두드러지며 또한 건강악화로 인한 어려움도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악화 요인과 더불어 자녀교육상의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점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주목되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현재 월 가구소득 100만원 이상의 상위 소득층에서는 장래에의 불안감과 본인에의 실망감 요인들이 어려움을 주도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덧붙여 실업으로 인하여 마땅한 일상의 소일거리가 없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지적된 점이 저소득층과 대조된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월수 100만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의식주나 자녀교육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곤란에서 우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건강악화로 인한 곤란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반면에 비교적 경제사정이 낫다고 할 월수 100만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실업으로 인한 장래에의 불안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 등의 요인들이 현재 어려움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실업이 장기화되고 경제사정이 악화된다면 현재의 상위 소득층의 어려움은 점차 의식주, 건강 문제 등 현재의 저소득층의 곤경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혹은, 현재 실업자들 전반에 걸쳐 높게 나타나고 있는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요소의 많은 부분은 실업 저소득, 건강과 (자녀) 교육 부실, 재취업 기회 저하, 실업의 장기화, 저소득 심화 식의 악순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인지 모른다. 이 같은 예측은 설문 결과를 응답자의 실직기간에 따라 분류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동일 응답집단을 시간추이에 따라 조사한 것이 아니기에 간접적인 추론만이 가능). 아래의 <표 3.5>는 실직기간을 1~5개월, 6~12개월, 그리고 13개월 이상의 3집단으로 나누어 본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비교적 실업이 짧은 6개월 미만 집단에서는 장래에의 막연한 불안감이 가장 어려운 요인과 두 번째 어려운 요인 모두에서 모두 1순위로 꼽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실

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장래에의 불안감이 가장 큰 고통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편 실업이 익숙해짐에 따라, 즉 6개월 이상이 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각되게 되는데 의식주 궁핍, 건강악화 그리고 특히 자녀교육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직기간이 오래 될수록 문제가 이른바 앞서 언급한 상위 소득형에서 보다 저소득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어려운 요인에 대한 응답에서 장래에의 막연한 두려움이 실직기간의 차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높게 지적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표 3.5〉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 : 실직 기간에 따른 구분

	가장 어려운 문제	두 번째 어려운 문제
실직 6개월 미만 (총 97명)	장래의 막연한 불안감 18.6%	장래의 막연한 불안감 33.0%
	의식주 궁핍 14.4%	의식주 궁핍 11.3%
	본인 건강악화 14.4%	자녀교육 8.2%
실직 1년 이하 (총 111명)	의식주 궁핍 27.0%	장래의 막연한 불안감 35.1%
	본인 건강악화 14.4%	소일거리 없음 10.8%
	자녀교육 11.7%	자녀교육 9.0%
실직 1년 이상 (총 95명)	의식주 궁핍 22.1%	장래의 막연한 불안감 31.6%
	장래의 막연한 불안감 18.9%	의식주 궁핍 13.7%
	자녀교육 12.6%	자녀교육/부채 12.6%

실업과 곤궁의 악순환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불안감은 현재의 실업자들을 억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특히, 막연한 불안감으로 표현되는 심리적 억압상태는 객관적 현실 이상으로 실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듯 하며, 이것이 자칫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sy)과 같이 작동하여 실제로 실업자들의 미래를 그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현재의 경제적 곤궁도 문제이지만, 오늘은 어렵더라도 내일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오늘의 곤란을 참아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이 분명하다. 본 항목의 분석 결과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면, 그것은 오늘의 곤란에 대한 단기적인 경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내일への 확신을 실업계층에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IV. 실직 후 일상의 변화

실직으로 인하여 일차적으로 경제생활이 위축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실직은 일상의 여러 면에서 보다 포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정규적인 직장을 갖는다는 것 혹은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실직으로 인한 여러측면에서의 변화들을 추적하고자 했고 여기서는 우선 응답자 일상에 관한 변화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일상의 변화를 우리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조명하여 보았다; 가정내 대화, 음주·흡연 등 소일거리 점 스트레스 해소성 습관, 각종 모임 등의 (비공식적) 사회 활동. 설문되어진 항목들은 총 12개이며 우리는 각 항목에 대하여 실직 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많이 줄어듦에서 많이 늘어남까지의 5점 척도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1. 전체 응답경향

구체적으로, 설문되어진 항목들과 그들에 대한 전체응답 평균이 아래 <표 3.6>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평균적으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대화는 다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3 = 변화없음을 기준으로 평균 2.79), 자녀와의 대화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평균 2.95). 한편 소일관행의 측면에서 음주·흡연·TV 시청·수면 등 4 항목들 모두에

서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TV시청(평균 3.89)과 흡연(평균 3.67)은 상당히 늘어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각종 사회활동이나 교제는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2.61), 운동취미활동(2.53), 경조사(2.48), 친구모임(2.43) 순서로 위축의 정도가 심하며 특히 봉사활동(2.36)과 이웃모임(2.34)은 가장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과 이웃모임이 이른바 지역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들 모임의 위축 정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실업이, 만일 현재와 같이 포괄적인 수준에서 장기화된다면, 실업자들의 개별적 경제 문제를 넘어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위험요소로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3.6〉 실직후 일상변화: 전체 응답평균

	명	평균	표준편차
	194	2.7887	.9339
실직후 - 배우자대화	180	2.9500	.8000
실직후 - 자녀대화	273	3.3626	1.1133
실직후 - 읍주	217	3.6682	.9431
실직후 - TV시청	341	3.8886	.9200
실직후 - 수면	347	3.3401	1.1120
실직후 - 친구모임	334	2.4341	.8631
실직후 - 경조사	312	2.4776	.8136
실직후 - 이웃모임	279	2.3907	.8233
실직후 - 종교활동	185	2.6108	.9383
실직후 - 운동취미	274	2.5328	.9912
실직후 - 봉사활동	175	2.3600	.9356

2. 배경변수별 차이

앞서의 전체적인 응답 경향을 기초로 우리는 각 항목들에 대하여 성, 연령, 연고지, 교육, 소득, 최종직업 등의 배경변수별 집단에 따라 어떻게 응답이 달라지는지 조사해 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층과 연령층이 전반적으로 항목들에 대하여 가장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으

며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두 변수를 중심으로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된 항목들에 대한 응답 경향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육층

실직 후 음주와 TV 시청은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으로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도 저학력층에서 다른 두 학력층 보다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실업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할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흡연의 증가는 현재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음주·흡연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실직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저학력층의 재취업 기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웃모임과 봉사활동은 오히려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조사되었는데, 실직으로 인한 사회활동은 학력이 높은 층일수록 타격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이들 두 항목 이외에도 나머지 모든 사회활동 항목들에서 고학력 집단이 상대적으로 가장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는 일단 고학력층이

〈표 3.7〉 실직후 일상의 변화 : 교육층에 따른 평균 비교

교육층	실직후— 배우자대화	실직후— 자녀대화	실직후— 음주	실직후— 흡연	실직후— TV시청	실직후— 수면
중 졸 이 하	2.7667	2.8833	3.7913	3.9157	4.0625	3.2683
고 졸	2.8276	2.9655	3.3274	3.5955	3.9191	3.3165
전문대 이상	2.7979	3.4111	3.0842	3.5417	3.7243	3.4146
전 체 평 균	2.7916	2.9605	3.3481	3.6542	3.8817	3.3401

교육층	실직후— 친구모임	실직후— 경조사	실직후— 이웃모임	실직후— 종교활동	실직후— 운동취미	실직후— 봉사활동
중 졸 이 하	2.4430	2.5750	2.5000	2.7838	2.5333	2.7500
고 졸	2.5039	2.4921	2.4622	2.5632	2.6050	2.4167
전문대 이상	2.3659	2.3689	2.2069	2.5593	2.7795	2.1364
전 체 평 균	2.4381	2.4725	2.313	2.6066	2.5311	2.3563

주위의 사회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자신에 대한 기대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갖고 있으며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 자신의 실업 사실을 저학력층 보다 더욱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2) 연령층

음주의 경우 연령층별로 U자형 관계가 보이는데 40대를 중심으로 30~50대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20대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대는 신규실업의 경우도 많고 또 아직 구직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60대는 이미 산업활동에서 퇴임할 나이가 가깝다는 의미에서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한창 일할 나이인, 그리고 가정에 대한 경제적 의무감도 높은 40대와 그 인근의 30대, 50대의 경우 스트레스성 음주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음주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수면은 20대와 60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중년인 40~50대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응

〈표 3.8〉 실직 후 일상의 변화: 연령층에 따른 평균 비교

연령층	실직후—배우자대화	실직후—자녀대화	실직후—음주	실직후—흡연	실직후—TV시청	실직후—수면
20대	2.8889	2.8750	3.0217	3.5172	3.7586	3.6446
30대	2.8125	3.0847	3.50000	3.8125	3.8736	3.3596
40대	2.6170	2.9375	3.6122	3.6667	3.9375	3.0462
50대	2.8269	2.8269	3.5682	3.7073	4.1579	2.9661
60대	3.0000	2.9231	3.3333	3.5000	3.7692	3.5385
Total	2.7877	2.9500	3.3626	3.6682	3.8886	3.3401

연령층	실직후—친구모임	실직후—경조사	실직후—이웃모임	실직후—종교활동	실직후—운동취미	실직후—봉사활동
20대	2.4118	2.4687	2.3205	2.4909	2.3883	2.0714
30대	2.3373	2.3373	2.2368	2.5000	2.6000	2.3418
40대	2.4407	2.4355	2.4167	2.7222	2.5540	2.5758
50대	2.5000	2.6780	2.5660	2.8387	2.7073	2.7500
60대	2.9234	2.7500	2.9167	3.0000	2.8333	2.5000
Total	2.4341	2.4776	2.3907	2.6108	2.5328	2.3600

답하였다. 한편 사회활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20대와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오히려 위축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웃모임과 봉사활동에서 동일하게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일수록 더욱 많이 줄어들고 있다.

(3) 기타 변수들

성별로는 자녀대화와 흡연 항목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녀와의 대화에 있어서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다소 늘어난 반면 남성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자 평균 3.12 vs. 남자 평균 2.87). (음주와) 흡연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흡연의 경우 여성 평균 3.33 vs. 남성 평균 3.74).

소득층의 경우 현재 소득층과 이전 소득층 어느 기준에서도 모두 음주·흡연의 양은 저소득층에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의 경우 현재 저소득층은 상당히 늘어난 반면 현재 고소득층은 오히려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흡연변화 평균: 저소득층 3.49, 중간소득층 3.26, 고소득층 2.53). 앞서의 학력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실업자층의 음주·흡연 증가는, 일면 가중되는 실업스트레스를 반영하면서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건강악화와 이로 인한 재취업 기회의 열악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3. 항목들간의 상관관계

조사된 12개 항목들은 모두 실직 후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들에 있어서의 변화의 정도를 물어보고 있는 점에서 공통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이들 항목간에 서로 응답의 경향이 얼마나 연관을 갖고 있는가, 즉 상관 관계(correlation)를 조사해 본 결과 크게 배우

자대화·자녀대화, 음주흡연·TV, 친구모임·경조사·이웃모임, 종교활동·운동/취미·봉사활동 등의 4가지 군으로, 혹은 뒷부분의 두 군을 한데 묶어 총 3가지 군으로 묶을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여기서 수면 변수는 다소 애매한 연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함;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도 3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분석됨). <표 3.9>는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변수들의 상관관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가정 내 대화 변수들은 음주 흡연 변수들과 부정적인 관련을 갖고 있으며, 그러나 사회활동 변수들과는 긍정적인 상관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직 가정이 실업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붕괴되지 않았다면 사회와의 연결도 살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가정 내 대화 변수들이 사회활동 변수들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음주·흡연·TV 시청 변수들은 사회활동 변수들과 거의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음주·흡연·TV 시청은 한편으로는 가정 내 대화가 줄어드는 것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활동이 위축되는 것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음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 사회활동이 줄어드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스트레스 해소성 음주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실업자 혼자 마시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혼자 마시는 음주 관행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알코올릭(alcoholic)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관계 전반에 있어 악영향을 줄 것임이 분명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된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웃모임·경조사·친구모임 항목들 간에 보이는 매우 높은 양(positive)의 관계들이다. 비록 6가지 사회활동 변수 모두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양의 관계들을 맺고 있으나 이들 3가지 항목들 간의 관계는 그 정도가 매우 높으며 이는 친구, 친지, 이웃 등 주요한 사회적 연고는 실업으로 인해 거의 동시에 위축·단절됨을 의미한다. 연줄사회라 불릴 만큼 한국사회에서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구성되는 연고관계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의 기능을 갖는다. 실업자의 경우 특히 금전대출이나 구직·창업 등의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연고적 관계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한 때라 하겠다. 그러나 오히려 실업은 단순히 직장 혹은 거래처 관계라는 사업적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여타의 연고적 관계들에서도 동시적이고 급격한 단절을 초래함으로써 실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9〉 실직후 변화 항목들간의 상관관계

	실직후 배우자 대화	실직후 자녀 대화	실직후 음주	실직후 흡연	실직후 TV시청	실직후 수면	실직후 친구 모임	실직후 경조사	실직후 이웃 모임	실직후 종교 활동	실직후 운동 취미	실직후 봉사 활동	
실직후 배우자 대화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1.000	.611* .000	-.175* .028	-.281* .001	-.175* .017	.157* .031	.359* .000	.352* .000	.368* .000	.311* .0001	.422* .000	.275* .004
실직후 자녀 대화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611* .000	1.000	-.214* .0140	-.250* .005	-.156* .041	.172* .023	.327* .000	.257* .001	.265* .001	.231* .018	.261* .002	.052 .620
실직후 음주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175* .028	-.214* .010	1.000	.727* .000	.213* .001	-.064 .294	-.052 .397	-.103 .108	-.109 .103	-.048 .567	-.132* .048	-.067 .421
실직후 흡연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281* .001	-.250* .003	.727* .000	1.000	.276* .000	.033 .627	-.176* .010	-.223* .001	-.188* .010	-.133 .127	-.204* .006	-.086 .341
실직후 TV 시청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175* .017	-.156* .041	.213* .001	.276* .000	1.000	.205* .000	-.016 .774	-.101 .857	-.011 .857	.088 .245	-.061 .322	.058 .449
실직후 수면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157* .031*	.172* .023	-.064 .294	.033 .627	.205* .000	1.000	.210* .000	.139* .015	.169* .005	.042 .575	.165* .007	.015 .844
실직후 친구 모임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359* .000	.327 .000	-.052 .397	-.176* .010	-.016 .774	.210* .000	1.000	.715* .000	.733* .000	.479* .000	.444* .000	.424* .000
실직후 경조사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352* .000	.257* .001	-.103 .108	-.233* .001	-.010 .857	.139* .015	.715* .000	1.000	.788* .000	.569* .000	.456* .000	.544* .000
실직후 이웃 모임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368* .000	.265* .001	-.109 .103	-.188* .010	-.011 .857	.169* .005	.733* .000	.788* .000	1.000	.650* .000	.510* .000	.608* .000

실직후 종교 활동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311*	.231*	-.048	-.133	.088	.042	.479*	.569*	.650*	1.000	.439*	.604*
실직후 운동 취미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422*	.261*	-.132*	-.204*	-.061	.165*	.444*	.456*	.510*	.439*	1.000	.669*
		.001	.018	.567	.127	.245	.575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48	.006	.322	.007	.000	.000	.000	.000		.000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4. 요약변수 분석

앞서의 상관관계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는 12개의 항목들을 3개 군으로 나누고 각각의 군에 속한 항목들의 응답을 더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변수들을 만들어 보았다.

(1) 요약변수

실직 후-가족대화 = 배우자대화 + 자녀대화

실직 후-음주흡연TV = 음주 + 흡연 + TV 시청

실직 후-사회활동 = 친구모임부터 봉사활동의 6가지 항목들의 평균

각 요약변수의 평균은 5점 척도상에서, 가족대화 = 2.73, 음주흡연TV = 3.50, 사회활동 = 2.61로 나타났다. 즉, 3 변화 없음 기준을 볼 때, 전체적으로 가족대화는 다소 줄어들었으며 음주·흡연·TV 등 소일관행은 상당히 늘어났고 사회활동 전반은 상당히 위축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2) 배경변수별 집단 차이

앞서의 개별 항목들에 분석과 동일하게 우리는 어떠한 배경변수에서 요약변수의 응답이 차이가 나는지 조사해 보았다. 우선 아래의 <표 3.10>

은 분석결과를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연령층별 차이가 포괄적으로 변별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배경변수들의 집단간 차이는 주로 음주흡연 항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가족대화나 사회활동 요약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배경변수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아래에서는 항목들에 대한 응답경향에 대하여 연령층과 교육층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3.10〉 실직 후 변화 요약변수들에 대한 배경변수별 분석결과

	실직후-가족대화	실직후-음주흡연TV	실직후-사회활동
연령	*	**	*
성		**	
현 소 득		**	
이 전 소 득		**	
교 육		**	
연 고 지			
최 종 직 업		*	

* =significant at $p<.05$

** =significant at $p<.01$

(3) 연령층별 평균

연령층별로는 우선 가족대화에서 20대가 확연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나머지 연령층들은 다소 줄었다는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 반대로 음주·흡연·TV 시청의 경우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대조를 보인다. 사회활동의 경우 2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되었다는 점이 차이이며 일반적으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덜 위축되고 있다.

〈표 3.11〉 실직후 일상변화 요약변수 : 교육층에 따른 평균 비교

연령층	실직후-가족대화	실직후-음주흡연TV	실직후-사회활동
20대	2.1471	3.3249	2.5570
30대	2.7846	3.5806	2.5300
40대	2.7500	3.6198	2.6198
50대	2.7736	3.6222	2.7576
60대	2.9615	3.4444	2.8571
Total	2.7296	3.5024	2.6114

(4) 교육층

교육층간 차이는 음주항목에서 나타났는데 학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음주·흡연·TV시청 정도가 많이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비록 통계적으로 의미있지는 않지만; $p = .081$) 사회활동 측면에서 오히려 고학력층이 더 많이 위축되었다고 응답한 사실은 흥미 있는 점이다.

〈표 3.12〉 실직후 일상변화 요약변수 : 교육층에 따른 평균 비교

교육층	실직후-가족대화	실직후-음주흡연TV	실직후-사회활동
중졸이하	2.7623	3.6742	2.774
고졸	2.7742	3.5097	2.6247
전문대 이상	2.5897	3.3415	2.5260
Total	2.7332	3.4923	2.6105

(5) 실직기간

정확하게 배정변수는 아니지만 우리는 실직기간에 따라 일상의 변화가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여 보았다. 실직기간별 집단은 이전의 기준, 즉 6개월과 1년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가족대화나 음주·흡연·TV 항목들의 경우 실직기간 집단간에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활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경향은 같지만, 특히 실직 1년 이상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혹은 역설적으로 말하여 실직 6개월의 단기간에도 사회활동은 중장기 실업기간 집단에 못지 않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즉 사회활동이 실업과 더불어 급격히 위축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실

직기간을 어느 기준으로 삼아 실업집단을 나누느냐에 따라 본 분석결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유의).

〈표 3.13〉 실직 후 일상변화 요약변수 : 실직기간 집단에 따른 평균 비교

(() 응답자 수)

실직기간 집단	실직후-가족대화	실직후-음주흡연TV	실직후-사회활동
6개월 미만	2.6889 (45)	3.4111 (90)	2.6913 (88)
1년 이하	2.8162 (68)	3.5481 (104)	2.6620 (108)
1년 이상	2.7182 (55)	3.5644 (88)	2.4943 (88)
Total	2.7500 (168)	3.5095 (282)	2.6191 (284)

(6) 배경변수들의 상관관계와 설명력

배경변수를 집단 범주로 나누어 항목들에 대한 응답 경향을 비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는 배경변수들이 각 항목들의 증감 경향에 대해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선 요약변수들과 여러 배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가 <표 3.14>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성과 춘천연고는 가(dummy) 변수로 처리; 여성=1, 남성=0; 춘천연고자=1, 기타지역출신=0).

상관관계 결과를 우선 가족대화 요약항목에 대해 아무 배경변수도 의미 있는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 사회활동 요약항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배경변수들은 체계적인 관련이 없게 나타났는데 단지 교육년수 변수만은 부정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1) 상관관계나 뒤의 회귀분석 모두 변수들 간의 직선적 관계의 정도만을 재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있는 관계가 있고 없고는 모두 해당 변수 간의 직선적관계에 관한 언명이며 만일 변수간에 실제로 곡선적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상관분석은 이를 옳게 나타내지 못하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석하면, 교육년수가 늘어날수록 실직 후 사회활동 전반은 더욱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음주·흡연·TV 등 소일관행 요약 항목은 비교적 배경변수들과의 상관관계가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석하자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현재 소득이나 실직 전 소득이 낮을수록, 교육년수가 낮을수록, 그리고 실직에 대하여 IMF 상황 탓으로 돌리는 정도(IMF 귀인)가 클수록 음주·흡연·TV 등에 대한 소일관행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14〉 실직후 일상변화와 요약변수와 배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실직후—가족대화	실직후—음주흡연TV	실직후—사회활동
연령	-.005	.097	.074
성	.023	-.190**	.050
현 소 득	.077	-.188**	.028
이 전 소 득	.016	-.120*	-.048
소득감소율	-.055	.072	-.005
교 육 년 수	-.018	-.168**	.137*
춘 천 연 고	-.070	-.040	.24
실직기간(개월)	-.042	.072	-.64
IMF 귀 인	.039	.156**	-.013

*=significant at $p<.05$

**=significant at $p<.01$

다음으로 우리는 각 요약항목들의 증감 경향에 대하여 상기 배경변수들이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회귀분석을 통해 우리는 해당 항목에 대해 각 배경변수의 순수한 효과 혹은 설명력을 알아볼 수 있다.²⁾ 회귀모형은 2단계로 구성

2) 순수한 효과 (pure effect)란, 회귀분석을 통해 우리는 회귀모형에 함께 투입된 여타 모든 변수들에서 응답자가 차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변수의 설명력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다는 면에서이다. 여타 변수들의 효과를 제외하는 이같은 과정을 통계적 통제라 부른다.

하였는데 우선 ‘모델 1’에서는 성, 연령, 춘천연고, 교육년수, 현소득, 소득감소율 등 본질적인 배경변수들로 이루어지며 ‘모델 2’에서는 이러한 6가지의 배경변수들 외에 실직기간(개월)과 IMF 귀인 변수 등 실직과 관련된 변수들을 첨가하여 이루어졌다. 2단계로 모형을 구성한 이유는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말하는 배경변수들의 효과가 과연 실직 이후의 상태와 관련된 변수들을 넣었을 때 변화가 있는지, 즉 배경변수의 효과가 얼마나 구조적인지 보기 위함이다.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 실직 후 가족대화에 대한 회귀분석

본 항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8개 설명변수들 중 아무 것도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대화 요약항목은 본 회귀모형에서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³⁾

(8) 실직 후 음주·흡연·TV시청에 대한 회귀분석

앞의 상관관계 결과에서도 보였듯이 이 항목은 비교적 회귀모형을 통해 잘 설명되고 있다. 아래의 <표 3.15>는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6가지 배경변수들만으로 설명할 경우(모델 1), 음주·흡연·TV 등에 대한 소일경향은 성, 소득, 교육년수 등의 3가지 변수들에서 의미 있게 설명되고 있으며, 설명력의 상대적 크기는 열거된 순서와 같다(나

여타 모든 변수들에서 응답자가 차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변수의 설명력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다는 면에서이다. 여타 변수들의 효과를 제외하는 이 같은 과정을 통계적 통제라 부른다.

- 3) 이는 부분적으로 요약항목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배우자나 자녀를 대상으로 물었기 때문에 우선 미혼자는 모두 제외되었고 기혼의 경우도 자녀가 없거나 출가한 경우 등이 빠지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 수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표본 수가 작아지는 것은 통계적 유의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머지 3 변수들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자면 여타 5가지 변수들에서 응답자가 차이가 없다고 할 때, 각각 i) 여성 실업자보다는 남성 실업자가, ii)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iii) 교육년수가 낮을수록, 음주·흡연·TV 소일 경향이 많아지게 된다.

한편 6가지 배경변수들에 실직기간과 IMF 귀인 변수들을 포함시켰을 때(모델 2) 다소의 변화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성과

〈표 3.15〉 회귀분석: 실직후 음주·흡연·TV시청 변화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300a	.090	.068	.6430
2	.335b	.112	.083	.6378

a. Predictor (constant), 소득감소%, 춘천dum, 연령, 교육년수, 성별, 현가구소득

b. Predictor (constant), 소득감소%, 춘천dum, 연령, 교육년수, 성별, 현가구소득, 실직기간(개월), IMF귀인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4.089	.181		22.642	.000
	현 가구 소득	-1.208E-03	.001	-.160	-1.986	.048
	교육년수	-2.469E-02	.012	-.129	-1.983	.048
	연령	-6.265E-02	.001	.074	1.218	.224
	춘천dum	1.00E-02	.082	-.074	-.762	.447
	성별	-.247	.086	-.181	-2.879	.004
	소득감소율	1.543E-03	.001	-.094	-1.231	.249
2	(Constant)	3.741	.228		16.414	.000
	현 가구 소득	-1.141E-03	.001	-.151	-1.889	.060
	교육년수	-2.458E-02	.012	-.128	-1.988	.048
	연령	9.147E-04	.001	.068	1.117	.265
	춘천dum	-4.853E-02	.082	-.036	-.593	.554
	성별	-.240	.085	-.176	-2.820	.005
	소득감소율	-1.522E-03	.001	-.093	-1.225	.222
	IMF 귀인	8.184E-02	.035	.141	2.350	.010
	실직기간(개월)	3.571E-03	.004	.051	.847	.398

a. 종속변수: 실직후-음주흡연TV

교육년수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소득변수의 설명력은 조금 낮아지고 있고, 대신 IMF 귀인 변수가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본 항목에 대한 설명력의 크기는 성, IMF 귀인, 교육년수의 순서이며 여타 5가지 변수들은 의미 있는(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결과를 해석하자면 여타 7가지 변수들에서 응답자가 차이가 없다고 할 때, 각각 i) 여성실업자보다는 남성실업자가, ii) 실직에 대하여 IMF 상황에 이유를 돌리는 경향이 많을수록, 그리고 iii) 교육년수가 낮을수록, 실직 후 음주흡연 TV 소일 경향은 많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앞서 집단별 차이 분석에서와 비슷하게 저학력, 저소득 실업자의 음주·흡연 경향이 여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IMF 귀인 정도와 소일경향 간의 양(positive)의 인과관계는 다소 해석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IMF 귀인 변수를 현 상태에 대해 내 탓이 아닌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라고 해석하고, 나아가 외부 탓의 경우 심리적 자책감이 덜하다고 가정한다면, 본 결과는 외부 탓을 많이 할수록 혹은 심리적 자책이 적을수록 음주/흡연/TV시청 양이 많아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9) 실직 후 사회활동에 대한 회귀분석

본 항목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낮게 나타났다. 6가지 배경변수들만을 포함한 모델 1에서는 교육년수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실직관련 2변수를 포함한 모델 2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해석하자면, 나머지 7가지 변수들에서 응답자가 차이가 없다면 실업자의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사회활동 전반은 더 많이 위축되게 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위축 정도가 심하다는 결론은 앞서 집단간 차이 분석에서도 보여진 바 있다.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사회적 관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하고 폭넓은 사

회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9 춘천리포트> 참조). 학력과 사회관계 간의 이러한 일반적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실업이 특히 고학력 집단으로 갈수록 더욱 사회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분석결과는 극적 대조를 보인다는 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표 3.16〉 희귀분석 실적후 사회활동 변화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191a	.036	.013	.5775
2	.205b	.042	.011	.5782

- a. Predictor (constant), 소득감소율, 춘천dum, 연령, 교육년수, 성별, 현가구소득
 b. Predictor (constant), 소득감소율, 춘천dum, 연령, 교육년수, 성별, 현가구소득, 실직기간(개월), IMF귀인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2.763	.162		17.009	.000
	현 가구 소득	7.269E-04	.001	.110	1.330	.185
	교육년수	-2.868E-02	.011	-.172	-2.898	.011
	연령	1.057E-03	.001	.090	1.428	.155
	춘천dum	5.269E-02	.074	.045	.713	.476
	성별	5.684E-02	.077	.048	.738	.461
	소득감소율	7.408E-04	.001	.052	.658	.511
2	(Constant)	2.839	.207		13.739	.000
	현 가구 소득	7.194E-04	.001	.109	1.341	.190
	교육년수	-2.942E-04	.011	-.176	-2.624	.009
	연령	1.112E-04	.001	.094	1.498	.136
	춘천dum	5.312E-02	.074	.045	.716	.475
	성별	5.263E-04	.077	.044	.682	.496
	소득감소율	7.305E-04	.001	.051	.648	.517
	IMF 귀인	-5.067E-03	.032	-.010	-.160	.873
	실직기간(개월)	-4.607E-03	.004	-.075	-1.204	.230

a. Dependent Variable: 실적후-사회활동

V. 실직 후 사회 관계의 변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실직은 단순한 경제적 곤란의 차원을 넘어서 실직자와 그의 가정에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직자 개인의 일상생활과 가족관계 및 주변의 사회관계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장기실직으로 인한 이혼 및 가정해체의 경우가 급증하는 것들은 실업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극적인 한 예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조사에서는 실직으로 인하여 각종 사회적 관계들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보았다.

앞의 일상적 활동의 변화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실직으로 인해 배우자, 자녀, 부모형제, 가까운 친인척, 친구, 이웃 등 여섯 가지 사회적 관계들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물어 보았다. 응답자들은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악화됨 ~ 변화 없음 ~ 매우 좋아짐의 5점 척도에서 응답하였다.

1. 전체 응답 경향

5점 척도상에서 각 항목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응답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가지 항목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실업이 사회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에 부합하고 있다(아래 <표 3.17> 참조).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기혼자의 경우) 실직 후 배우자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관계의 악화 경향은 여타의 사회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평균 2.43). 다음으로 자녀관계와 부모형제 관계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를 벗어나서 친인척 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모두 다소의 악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

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 관계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으며 기타 가족관계, 친인척과 친구관계, 그리고 이웃관계 등 사회적 거리가 멀수록 비교적 덜 타격을 받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표 3.17〉 사회적 관계의 변화 : 전체 응답 평균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관계변화 - 배우자	194	2.24278	.6498
관계변화 - 자녀	186	2.7043	.6847
관계변화 - 부모형제	327	2.6728	.5913
관계변화 - 가까운 친척	312	2.7853	.4765
관계변화 - 친구관계	329	2.7416	.5848
관계변화 - 이웃관계	312	2.8254	.5512
Valid N (listwise)	159		

2. 배경변수별 집단 차이

일상의 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직으로 인한 사회관계의 변화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각 사회관계 항목들에 대한 응답이 성, 연령, 소득, 교육 등 배경변수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배경변수 중에서 사회관계 항목들에 대한 응답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없었다.

(1) 연령층별 차이

연령층은 자녀관계와 친인척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자녀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30대 실업자는 거의 변화가 없고(평균 2.95) 60대, 40대, 20대 순서로 점차 나빠지다가 50대에 오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평균 2.48) 나타났다. 30대와 50대의 대조는 명확한 이유를 찾기 힘든 부분이다. 한편 친인척 관

계의 경우 가장 작은 악화 경향을 보인 60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령층들에서는 일관되게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친인척 관계는 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경제난은 경조사 관련 모임을 위축시키게 됨으로써 자연스러운 친인척간의 교류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경조사 등을 통한 친인척 관계 유지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점이 연령층이 높을수록 실업 후 친인척 관계가 보다 악화되는 요인이 아닌가 추측된다. 한편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 20대 실업자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결과도 눈길을 끄는 사실이다(20대 평균 2.18).

〈표 3.18〉 실직후 사회관계 변화: 연령층별 평균비교

연령층	실직으로 인한 관계변화—배우자	실직으로 인한 관계변화—자녀	실직으로 인한 관계변화—부모형제	실직으로 인한 관계—가까운 친척	실직으로 인한 관계변화—친구관계	실직으로 인한 관계—이웃관계
20대	2.1765	2.6250	2.6471	2.8700	2.7652	2.8252
30대	2.4576	2.9500	2.7439	2.7901	2.6951	2.8780
40대	2.4706	2.6346	2.7018	2.7500	2.7258	2.7667
50대	2.3529	2.4808	2.5536	2.6379	2.7368	2.7895
60대	2.6875	2.7857	2.8462	2.9231	2.9231	2.9231
전체	2.4278	2.7043	2.6728	2.7853	2.7416	2.8254

(2) 나머지 변수들

성별 모든 항목에서 여자보다는 남자 실업자가 악화 경향이 더 많다고 응답했으며, 그러나 단지 이웃관계 항에서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분석되었다. 남자 실업자의 이웃관계 악화 정도는 여성 실업자보다 높았다(남자 평균 2.77 vs 여자 평균 2.91).

소득층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월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모든 사회관계에서 보다 많이 악화되고 있는 점이 일단 눈에 띄는 점이다. 한편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 현재 월가구 소득 25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두 소득층에서는 상당한 악화경향이 발견되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통계적으로는 배우자 항목만이 의미 있는 집단간 차이라고 분석됨).

〈표 3.19〉 실직후 사회관계 변화 : 소득층별 평균비교

현소득층	실직으로 인한 관계변화 —배우자	실직으로 인한 관계— 자녀	실직으로 인한 관계변화 —부모형제	실직으로 인한 관계— 가까운친척	실직으로 인한 관계변화 —친구관계	실직으로 인한 관계— 이웃관계
저소득층	2.3476	2.6718	2.6300	2.7500	2.7136	2.7879
중간소득층	2.4828	2.7500	2.7027	2.8485	2.7887	2.8750
고소득층	3.0000	2.7143	2.7083	2.8095	2.8549	2.9130
전체	2.4128	2.6867	2.6544	2.7774	2.7441	2.8175

기타 연고지, 최종 직업층, 교육층 그리고 실직기간집단 등의 변수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3. 요약변수 구성과 분석

우리는 질문된 6가지 사회관계들을 혈연적 관계와 비혈연적 관계로 나누어 각각의 군에 대한 요약변수와 또한 이들 전체에 대한 요약변수를 만들어 보았다.

$$\begin{aligned}
 \text{요약변수 : '관계-혈연'} &= \text{배우자관계} + \text{자녀관계} + \text{부모형제} \\
 &\quad + \text{가까운 친인척관계} \\
 \text{'관계-비혈연'} &= \text{친구관계} + \text{이웃관계} \\
 \text{'관계sum'(사회관계)} &= 6가지 항목 모두의 평균합
 \end{aligned}$$

먼저 이들 요약변수들의 응답 경향을 보면, 전체요약변수인 '관계sum'은 평균 2.72로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관계들은 다소 악화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혈연적 관계가 비혈연적 관계보

다 더 많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혈연 관계 평균 2.65 vs. 비혈연 관계 평균 2.78).

한편 우리는 개별항목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세 요약변수들에 대해서도 배경변수들에 따라 어떠한 응답 차이가 나는지 조사해 보았다. 유감스럽게도 요약변수에 나타난 응답 경향은 성, 연령, 교육, 소득, 연고지, 실직기간 등의 배경변수에 의해 효과적으로 변별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통계적 기준에서 말한다면 단지 연령층이 혈연적 관계 요약변수에 대한 응답에서 의미 있는(at $p < .05$ level)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비록 통계적 기준으로는 의미 있는 집단간 차이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심상 소득층에 따른 평균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의 <표 3.20>에서 보듯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혈연 관계와 비혈연 관계 양면에서 모두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비혈연적 관계에 있어서 고소득층은 거의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소득층 평균 2.95). 사회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소득이 낮은층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사회관계 요약변수 : 현 소득층별 평균 비교

현소득층	관계-혈연	관계-비혈연	사회관계
저소득층	2.6053	2.7333	2.6753
중간소득층	2.6912	2.8359	2.7635
고소득층	2.7086	2.9565	2.8363
전 체	2.6331	2.7748	2.7071

다음으로 우리는 각 요약변수들에 대해 전 절에서와 동일한 구성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즉 성, 연령, 교육년수, 현 가구소득, 소득감소율, 춘천dummy 등 6가지 배경변수들로 모델 1을 구성하고 이들에 다시 실직기간과 IMF 귀인 변수들을 첨가하여 모델 2를 구성하여

각 요약변수들에 대한 설명력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세 요약변수 모두에 대해 현 가구소득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혈연적 관계, 비혈연적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관계 모두에서, 만일 회귀모형에 포함된 나머지 배경변수들에서 응답자가 차이가 없다면, 소득이 낮을수록 관계가 악화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래 <표 3.21>은 전체 요약변수인 ‘사회

<표 3.21> 회귀분석 : “사회관계” (관계 sum)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250a	.063	.035	.4045
2	.265b	.070	.033	.4049

a. Predictor (constant), 춘천dum, 현가구소득, 연령, 성별, 교육년수, 소득감소%

b. Predictor (constant), 춘천dum, 현가구소득, 연령, 성별, 교육년수, 소득감소%, 실직기간(개월), IMF 귀인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2.599	.144		18.058	.000
	현 가구 소득	1.668E-03	.001	.302	2.941	.004
	교육년수	-6.655E-03	.009	-.507	-.776	.439
	소득감소율	2.031E-03	.001	.166	1.687	.093
	연령	4.672E-05	.000	.008	.107	.915
	성별	2.397E-02	.062	.28	.389	.698
	춘천dum	-9.470E-02	.058	-.113	-1.623	.106
2	(Constant)	2.714	.170		15.949	.000
	현 가구 소득	1.626E-03	.001	.294	2.854	.005
	교육년수	-6.047E-03	.009	-.052	-.703	.483
	소득감소율	2.063E-03	.001	.168	1.711	.089
	연령	6.058E-05	.000	.010	.139	.890
	성별	2.005E-02	.062	.024	.324	.746
	춘천dum	-.100	.059	-.120	-1.703	.090
	실직기간(개월)	-8.325E-04	.003	-.019	-.277	.782
	IMF 귀인	-3.003E-02	.024	-.086	-1.235	.218

a. Dependent Variable : 사회관계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결론적으로 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배경변수의 영향력은 현 소득수준이 거의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요인임을 분석 결과는 말하고 있다. 즉, 실직 이후에라도 어느 정도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혹은 유지가 가능한 기간 내에서는) 가정이나 그 외의 사회관계들도 그다지 타격이 심하지 않지만 경제력이 크게 떨어진 경우는 곧 사회적 관계의 위축 내지 단절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실업의 효과가 단순히 경제적 곤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V.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도움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일에는 실업자가 맺고 있는 주변의 여러 사회적 관계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관계의 도구적 활용 혹은 보다 쉬운 말로 연고 동원은 물론 실업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일이다. 각종 연고주의, 계, 상거래상의 단골거래 등등, 그리고 심지어 사회내의 각종 음성적 관행까지도 포괄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도구적 활용이라는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 관계는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capital)의 측면이 있는 것이다. 실업이라는 곤궁과 그 극복을 위해서 사회관계의 동원 즉 아는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관계가 도구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의 이면에는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수수되는 혜택과 편의 제공이 상호 혜택적이어야 한다는, 일종의 호혜성의 가정이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깔려있다. 문제는 실업이라는 의미 자체가 실업자 입장에서 더 이상 그러한 호혜성을 상대에게 확신시킬 경제적 능력이 결여된

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실업자의 경제력 상실은 한편으로는 실업자 입장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한 도움을 더 요구하게 만드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호혜성의 기초를 훼손함으로써 사회관계 상대방의 입장에서 실제로 도움을 주는 일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미묘한 사회관계상의 딜레마는 특히 현재의 IMF형 실업사태와 같이 다수의 사람이 급작스럽게 실업을 당하며 또한 전반적인 경제불황이 실적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앞서 실업이, 혹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궁극적 사회관계의 위축과 단절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도 사회관계상의 호혜적 균형이 무너지기에 따라 비롯된다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역시 비슷한 논지에서 고학력층에서 저학력층에 비해 사회활동의 경향이 더욱 위축된다는 사실도 사회관계의 호혜적 균형이 무너지기에 따라 특히 고학력 실업자 입장에서 소위 아쉬운 티를 보이지 않고자 하는 자존심의 발로가 상당부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조사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실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 혹은 반대로 얼마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조사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의 도움을 구별하여 물어보았다. 급전대출, 구직이나 창업시 도움, 그리고 격려와 위안 등 심리적 도움. 급전대출 도움은 주로 실업의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대한 도움의 정도를, 구직·창업 도움은 물적 지원과 정보제공 및 알선 등을 모두 포함하여 주로 향후 실업에서 벗어나는 데에 대한 도움의 정도를, 그리고 격려·위안 도움은 주로 실업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도움의 정도를 묻고 있다는 면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3가지 측면의 도움에 대하여 본 설문에서는 부모·자녀, 형제, 친인척 등의 혈연관계, 동창·친구, 옛 직장동료·거래처, 이웃·동호인 등의 비혈연관계, 그리고 금융기관, 정부, 시민단체 등의 공식기관들로부터 각각 얼마나 도움을 받았거나 기대할 수 있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하였

다. 척도는 다른 설문들에서와 비슷하게 전혀 기대안함 ~ 보통 ~ 아주 많이 기대함 식으로 구성되었으며, 3을 기준으로 부정적 경향과 긍정적 경향을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대출, 구직, 격려라는 3가지 측면들 각각에 대해 응답결과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들을 요약변수로 묶어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1. 급전대출의 도움

실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의 하나는 사회적 신용이 끊기는 일이다. 직장을 잃었을 때 신용카드의 사용이 급격히 제한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실직은 따라서 수입원이 없어진다는 의미 외에도 신용을 제한함으로써 저금과 차용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어렵게 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는 공식 금융제도는 물론 아는사람을 통한 비공식적 대출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급전대출이 얼마나 용이하나를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대답하고 있다(아래의 <표 3.22> 참조). 먼저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통한 용자는 담보능력의 제한 등으로 인해 상당히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평균 1.97),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여타 연고관계를 통한 기대수준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는 비실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 대조적인 결과이다(<'99 춘천리포트> 참조). 이웃·동호인이나 옛 직장동료 등을 통한 대출의 어려움도 금융권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친인척(평균 2.13)과 친구(2.24), 그리고 형제(2.31)의 순서로 기대수준이 나아지다가 부모·자녀(2.38)의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대출기대를 나타냈다. 대출의 경우 공식적인 금융제도의 통로가 크게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자녀나 형제 등 가족 관계에 보다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의존도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기대수준에

〈표 3.22〉 대출 용이성 : 전체 평균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급전도움-부모/자녀	340	1.00	5.00	2.3765	.9341
급전도움-형제	335	1.00	5.00	2.3075	.8675
급전도움-친인척	319	1.00	5.00	2.1317	.7900
급전도움-친구	328	1.00	5.00	2.2439	.8717
급전도움-직장	292	1.00	5.00	1.9760	.7572
급전도움-이웃	280	1.00	5.00	1.9286	.7395
급전도움-은행	299	1.00	5.00	1.9732	.9155
Valid (listWise)	243				

머물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구직·창업 도움

구직·창업에 대한 도움(이하 구직도움)은 급전대출에 대한 도움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움의 성격상 보다 미래지향적이라는 면에서 구별할 수 있다. 또한 급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나 연고적 알선 등 비물질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다. 급전대출이 비교적 사회적 관계의 친밀성에 비례한다면 구직도움은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과 크기에 보다 영향을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23>에서 보듯이, 급전대출의 경우와 유사하게 구직에 대한 평균적 기대는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계에 따른 다소의 편차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말한다면 이웃과 친인척, 옛 직장동료 관계 등에서의 도움 기대는 가장 낮은 편이며 다음으로 부모·자녀, 형제 등 가족관계와 정부·시민단체를 통한 도움 기대가 조금 높고, 친구관계를 통한 도움 기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급전대출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친밀도에 비례하여 용이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면 구직 도움의 경

우 조금 다른 원칙에서 상대적인 기대감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표 3.23〉 구직/창업 도움 기대감: 전체 응답 평균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구직도움-부모/자녀	347	1.00	5.00	2.2478	1.0323
구직도움-형제	342	1.00	5.00	2.2047	.9312
구직도움-친인척	334	1.00	5.00	2.0299	.8590
구직도움-친구	344	1.00	5.00	2.3140	1.0103
구직도움-옛직장	316	1.00	5.00	2.0411	.9570
구직도움-이웃	316	1.00	5.00	1.9430	.9102
구직도움-정부	319	1.00	5.00	2.2351	1.1728
Valid N(listWise)	274				

3. 위안과 격려

앞서 우리는 현재 실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장래의 막연한 불안감 혹은 자신에 대한 실망감 등의 다소 심리적 스트레스가 예상 밖으로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변으로부터의 정서적 위안과 격려는 실업의 어려움을 이기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배우자로부터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사회적 관계나 통로를 통해 실업자들이 얼마나 심리적 도움을 받았는지 조사해 보았다.

심리적(혹은 정서적) 도움은 금전이나 구직의 경우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났다. 아래의 <표 3.24>에서 보듯이, 우선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 등의 가족관계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의 정서적 도움을 받았으며 비혈연 관계에서는 친구를 통한 정서적 도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인척 관계를 통한 정서적 도움은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옛 직장 동료, 이웃 관계의 순서로 도움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 시민·자선 단체 등을 통한 정서적 도움은 상당히

〈표 3.24〉 정서적 도움 경험 : 전체 응답평균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위안격려-배우자	197	1.00	5.00	3.2487	1.0371
위안격려-부모/자녀	335	1.00	5.00	3.2149	.9704
위안격려-형제	332	1.00	5.00	3.1024	.9962
위안격려-친인척	320	1.00	5.00	2.8344	.9861
위안격려-친구	331	1.00	5.00	3.1601	.9794
위안격려-옛직장	298	1.00	5.00	2.7550	1.0036
위안격려-이웃	287	1.00	5.00	2.5366	1.0633
위안격려-시민단체	260	1.00	5.00	1.9154	.9426
Valid N (listWise)	148				

낮은데, 정서적 도움의 말 그대로 이는 주로 사적 관계를 통해 수수되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4. 요약변수 분석

우리는 대출, 구직, 격려의 각 측면들에서 항목들을 혈연 관계와 비혈연 관계로 나누어 요약변수를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다시 이들과 제도 항목을 합하여 대출, 구직, 격려 각 측면을 대표하는 단일 요약변수를 구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도움의 각 측면에 있어서의 혈연-비혈연 항목들을 한데 묶어 요약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요약변수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text{대출-혈연} = (\text{부모자녀} + \text{형제} + \text{친인척}) / 3$$

$$\text{대출-비혈연} = (\text{친구} + \text{옛 직장 동료} + \text{이웃/동호인}) / 3$$

$$\text{대출sum} = (\text{대출-혈연} + \text{대출-비혈연} + \text{금융기관}) / 3$$

$$\text{구직-혈연} = (\text{부모자녀} + \text{형제} + \text{친인척}) / 3$$

$$\text{구직-비혈연} = (\text{친구} + \text{옛 직장 동료} + \text{이웃/동호인}) / 3$$

$$\text{구직sum} = (\text{구직-혈연} + \text{구직-비혈연} + \text{정부/시민단체}) / 3$$

$$\text{격려-혈연} = (\text{배우자} + \text{부모자녀} + \text{형제} + \text{친인척}) / 4$$

$$\text{격려-비혈연} = (\text{친구} + \text{옛 직장 동료} + \text{이웃/동호인}) / 3$$

$$\text{격려sum} = (\text{격려-혈연} + \text{격려-비혈연} + \text{시민단체/자선단체}) / 3$$

$$\text{도움-혈연} = \text{대출-혈연} + \text{구직-혈연} + \text{격려-혈연}$$

$$\text{도움-비혈연} = \text{대출-비혈연} + \text{구직-비혈연} + \text{격려-비혈연}$$

$$\text{도움sum} = \text{대출sum} + \text{구직sum} + \text{격려sum}$$

(1) 전체 응답평균

대출, 구직, 격려 3측면을 비교해 볼 때 우선 대출과 구직 도움의 경우 동일하게 매우 낮은 수준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평균 2.16과 2.17). 이에 비해 격려는 다소 나은 편이나 보통 수준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평균 2.74). 전반적으로 사회관계를 통한 도움에 대한 기대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도움sum' 평균 = 2.35) 사적 관계를 통한 실업극복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이 말은 그러나 정부나 제도적 지원이 대신 많다는 것은 아니다. 실업자 자신의 응답을 통해 보면 오히려 그 반대라 할 수 있다).

한편 각 측면들에 대해 혈연 관계와 비혈연 관계를 비교해 보면 각 측면들에서 공통적으로 혈연 관계의 도움이 비혈연 관계 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도움-혈연' 평균 2.50 vs. '도움-비혈연 2.36). 대출과 특히 격려의 경우 혈연적 관계에서의 도움은 상대적으로 확연히 높은 편이며, 그러나 구직의 경우는 혈연과 비혈연 간의 구분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업자들은 사적 관계를 통한 도움을 별로 기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대수준 안에서는 혈연을 통한 도움을 비혈연을 통한 도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

〈표 3.25〉 대출, 구직, 격려 측면에 대한 요약변수 : 전체 응답평균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대출-혈연	343	1.00	5.00	2.2843	.7726
대출-비혈연	319	1.00	5.00	2.0878	.7585
대출sum	337	1.00	6.00	2.1635	.7473
구직-혈연	349	1.00	5.00	2.1552	.8207
구직-비혈연	339	1.00	5.00	2.1239	.8691
구직sum	341	1.00	5.00	2.1745	.7563
격려-혈연	338	1.00	5.00	3.0668	.8941
격려-비혈연	327	1.00	5.00	2.8751	.8487
격려sum	334	1.00	5.00	2.7431	.7904
도움-혈연	335	1.00	4.50	2.4982	.6080
도움-비혈연	327	1.00	4.50	2.3588	.6317
도움sum	319	1.00	4.50	2.3458	.5655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배경변수별 집단 차이

12개 요약변수들의 응답결과에 대해 우리는 현 소득층, 이전 소득층, 연령층, 교육층, 성장연고, 성, 최종 직업층 그리고 실직기간 등 각 변수의 집단들에 따라 응답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ANOVA 분석; 유의수준 $p < .05$). 그 결과 연고지, 성, 최종직업, 실직기간 등의 변수에서는 거의 변별력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대신 현 소득층, 이전 소득층, 연령층, 그리고 교육층의 변수들에 있어서는 요약항목들에 포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들 중 두 소득층 변수들과 연령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현 소득층

대출관련 항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대감 속에서도 소득층이 올라갈수록 혈연과 비혈연에 관계없이 모두 대출 용이성이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은 상대적으로도 매우 낮은 대출 기대를 보임으로써 여타 소득층에 비해 금전 융통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한편 혈연 관계에의 의존도가 (월 가구소득 100만원~200만원 사이의) 중간 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비혈연 관계를 통한 대출 용이성은 고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점이 발견된다. 이는 부분적으로, 고소득층이 보다 다양한 사회관계를 맺고 있다는 일반적인 추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 다 하겠다. 구직 도움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기대수준 안에서 특히 저소득층은 사적 관계를 통해서 거의 도움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 있는 점은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비혈연적 관계를 통한 구직 기대수준이 혈연적 관계를 통한 기대수준 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대출에서의 경향과 비슷하게 고소득층의 다양하고 넓은 연결망 특성을 통해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정서적 도움('격려')의 경우 소득집단간 차이는 거의 없이 보통의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정도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한편 3측면의 도움들을 모두 종합해서 볼 때, 특히 혈연관계를 통한 도움의 측면에서 중간 소득층이나 고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의 낮은 기대수준이 주목되는 결과이다(-- $p < .05$: 대출-혈연, 대출-비혈연, 대출sum, 도움-혈연).

〈표 3.26〉 도움 요약변수: 현 소득층별 집단 평균 비교

현소득층	대출-혈연	대출-비혈연	구직-혈연	구직-비혈연	격려-혈연	격려-비혈연
저소득층	2.1274	2.0009	2.0700	2.0736	3.0729	2.8606
중간소득층	2.6256	2.1878	2.2771	2.1378	3.0789	2.9459
고소득층	2.4938	2.4167	2.2051	2.3400	3.0533	2.8267
Total	2.2776	2.0808	2.1342	2.1111	3.0728	2.8787

현소득층	대출sum	구직sum	격려sum	도움-혈연	도움-비혈연	도움sum
저소득층	2.0199	2.1301	2.7489	2.4295	2.3142	2.2943
중간소득층	2.3701	2.1934	2.7626	2.6437	2.4344	2.4288
고소득층	2.4893	2.2467	2.7367	2.6267	2.5116	2.4980
Total	2.1453	2.1555	2.7513	2.4985	2.3590	2.3436

나. 이전 소득층

사회적 관계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연속적이다. 또한 한 사람이 맺는 사회적 관계는 어느 정도 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런 측면에서 실직 전 소득층은 현재의 도움 정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출의 측면에서 이전 소득층의 효과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대수준 안에서, 소득층이 낮아질수록 대출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혈연과 비혈연 관계 모두에서 동일하다. 특히, 혈연적 대출의 경우 저소득층의 기대수준은 절대적인 기준에서만 아니라 상위 소득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이 눈에 띄고 있다. 이에 비해 이전 중간 소득층과 특히 고소득층은 아직은 비혈연 관계보다는 혈연관계를 통한 대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신용의 측면에서 실직전 저소득층은 혈연적 관계에서도 거의 차단당하고 있으며 이와 대비되어 이전 고소득층은 어느 정도 혈연적 관계에서는 금전 융통의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적 관계를 통한 구직 도움의 경우도 (역시 전반적으로 부정적 수준이지만) 소득층이 낮아질수록 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적 도움의 경우 이전 중간 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혈연을 통한 도움의 경우 두드러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전 저소득층의 낮은 도움 기대수준은 상위 두 소득층과 구별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혈연 관계를 통한 도움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실직 이전 저소득층은 사실상 현재 경제적 궁핍 이외에도 혈연적 관계를 통한 도움의 가능성마저 막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p < .05$: 대출-혈연, 대출-비혈연, 대출sum, 격려-혈연, 도움-혈연, 도움sum).

〈표 3.27〉 도움 요약변수 실직 이전 소득층별 평균 비교

이전소득층	대출-혈연	대출-비혈연	구직-혈연	구직-비혈연	격려-혈연	격려-비혈연
저소득층	1.8775	1.9113	1.9714	2.0686	2.8885	2.7718
중간소득층	2.3212	2.0234	2.1415	2.0810	3.1887	2.9745
고소득층	2.4946	2.2784	2.1720	2.1386	2.9982	2.7527
Total	2.2740	2.0786	2.1117	2.0954	3.0633	2.8606

이전소득층	대출sum	구직sum	격려sum	도움-혈연	도움-비혈연	도움sum
저소득층	1.8433	2.0592	2.6631	2.2475	2.2340	2.1517
중간소득층	2.1383	2.1280	2.7948	2.5705	2.3946	2.3728
고소득층	2.4048	2.2448	2.6694	2.5652	2.3908	2.4308
Total	2.1540	2.1478	2.7262	2.4970	2.3570	2.3147

다. 연령층

연령층별로는 전반적으로 20대~30대와 40대~50대 간의 대조가 가장 눈에 띄는 결과이다. 대출과 구직의 경우 모두 40대~50대의 장년층은 20~30대의 젊은 연령층보다 사적 관계를 통한 도움에 대해 기대수준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혈연관계를 통한 대출의 경우 20대는 타 연령층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두고 높은 기대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대출 미혼의 신규실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60대 고령층이 혈연관계를 통한 대출기대도 상대적 기준에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20대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들의 비혈연 대출기대와 비교해 보면 혈연에 대한 높은 금전용 통상의 의존도를 볼 수 있다. 구직 도움의 경우 특히 혈연 관계에서의 도움에 대해 40대의 낮은 기대 수준은 20대의 수준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서적 도움의 경우 연령층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적관계를 통한 대출과 구직의 측면에서 40대~50대의 어려움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20대~30대와 비교하여 실직 시점에서 이미 많은 나이는 한편으로는 재취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어렵게 하면서 동시에 사적 관계를 통한

대출이나 구직에서도 불리하게 만드는, 일종의 이중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p < .05$: 대출-혈연, 대출sum, 구직-혈연, 도움-혈연, 도움-비혈연, 도움sum).

〈표 3.28〉 도움 요약변수 연령층 평균 비교

연령층	대출-혈연	대출-비혈연	구직-혈연	구직-비혈연	격려-혈연	격려-비혈연
20대	2.5650	2.2349	2.3024	2.2116	3.1529	2.9784
30대	2.2892	2.1151	2.2386	2.1360	3.0088	2.9213
40대	2.0323	1.9942	1.8795	2.0359	3.0175	2.7994
50대	1.9399	1.8842	2.0480	2.0311	3.0470	2.7684
60대	2.4048	2.0595	2.0543	2.1282	3.0179	2.5000
Total	2.2843	2.0878	2.1552	2.1239	3.0668	2.8751

연령층	대출sum	구직sum	격려sum	도움-혈연	도움-비혈연	도움sum
20대	2.3501	2.3075	2.7789	2.6792	2.4968	2.4805
30대	2.1641	2.2095	2.7522	2.5354	2.4122	2.3922
40대	1.9954	2.0465	2.6773	2.2760	2.2195	2.1792
50대	1.9563	2.0167	2.7357	2.3426	2.2222	2.2076
60대	2.2500	2.1026	2.7173	2.4509	2.1667	2.3387
Total	2.1635	2.1745	2.7431	2.4982	2.3588	2.3458

(3) 도움 요약변수간 상관관계

사적 관계를 통한 대출, 구직, 격려 3측면에서의 도움 정도는 서로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요약변수들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대출, 구직, 격려의 각 측면 내에서 모두 혈연적 도움의 정도는 비혈연적 도움의 정도와 상당히 높은 양의(positive) 상관을 맺고 있는 점이 조사되었다. 즉, 내용이 무엇이든 혈연적 관계의 도움을 많이 기대하거나 받는 실직자는 비혈연적 관계에서의 도움도 역시 많다는 것이다. 한편 대출도움과 구직도움 사이에, 그리고 구직도움과 정서적 도움('격려')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나, 이에 반하여 대출도움과 정서적 도움 사이에는 관련이 상당히 약하거나 의미 없다고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즉, 사적 관계를 통해 금전적 도움을 많이 기대하는 실직자는 구직·창업에서의 도움도 많이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구직도움의 기대가 큰 실업자는 정서적 도움도 많이 받았으나, 금전도움을 많이 기대하는 것과 정서적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은 다소 별개라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혈연·비혈연의 차이에서 보자면 한 측면에서 혈연적 도움의 정도가 큰 경우는 다른 측면들에서도 혈연적 도움이 많으며 이는 비혈연 도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혈연을 통한 대출과 구직, 구직과 격려 도움들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관련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비혈연을 통한 대출과 구직, 구직과 격려 도움들도 높은 관련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3측면들간에 혈연적 도움과 비혈연적 도움이 엇갈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한 관련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혈연을 통한 도움과 비혈연을 통한 도움이 정확하게 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사회적 관계를 통한 도움에 대한 분석

사회관계를 통한 도움에 있어 대출, 구직, 격려의 3측면 각각에 대한 요약변수들과 또한 모든 측면들에 걸쳐 혈연적 도움과 비혈연적 도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약변수들 그리고 혈연·비혈연·제도 등을 망라하여 종합적인 도움의 정도를 요약하는 ‘도움sum’ 등 6가지 변수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들의 응답 경향이 어떠한 변수들을 통해 달라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들 6가지 요약항목들에 대해 현 가구소득, 소득감소율, 이전가구소득, 연령, 성(남자=0, 여자=1), 춘천연고(춘천연고=1, 기타지역=0) 등의 기초 배경변수들과 실직기간, 실직 후-가족대화, 실직 후-음주·흡연·TV, 실직 후-사회활동, IMF 귀인, 사회관계(실직 후 사회관계 변화에 대한 요약변수) 등의 실업변수들이 어떠한 영향력 혹은 설명력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가. 상관관계

아래의 <표 3.29>는 요약항목들이 여러 설명변수들과 갖는 (1차)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각 설명변수의 증감에 따라 도움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간략히 기술해 보기로 한다. 우선 소득에 관련된 변수들이 배경변수들 중에서는 비교적 효과적인 변별력을 나타내는데, 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출도움을 보다 용이하게 생각하게 되며, 도움의 3가지 측면들을 종합하여 말할 때 혈연이나 비혈연 관계 모두에서 도움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 소득층에서와 유사한데 이전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시점에서 사회관계를 통한 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혈연관계를 통한 도움에서 보다 높은 기대수준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실직전후로 소득감소율이 클수록 사회관계를 통한 대출은 보다 어렵게 여겨지게 되며 또한 종합적으로 혈연을 통한 도움도 덜 기대하게 된다. 교육년수는 대출경향과 연관이 있는데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사회관계를 통한 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여기게 된다.

한편 배경변수들에 비해 실직변수들이 전반적으로 요약항목들에 대해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실직기간이 길수록 사회관계를 통한 대출은 점차 어렵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구직과 격려 도움 경향들은 실직기간과 별 상관이 없게 나타났다. 반대로 실직 후 일상변화에 관한 변수들은 전반적으로 도움항목들과 연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실직 후 가족대화가 많을수록 사회관계에서의 대출과 구직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움의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혈연과 비혈연 관계 모두에서 도움의 기대가 높아지게 된다. 실직 후 음주·흡연·TV 등이 늘어나는 것은 대출을 용이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음의(negative) 관련이 있으며 그러나 반대로 정서적 도움(격려)을 많이 받은 것과는 비례하고 있다. 실직 후 사회활동이 활발히 유지될수록 역시 주위로부터의 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생각하게 되며, 모

든 도움의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히 혈연관계로부터의 도움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된다. 한편 실직을 자신보다는 IMF라는 상황적 요인에 돌리는 정도가 많을수록 주위로부터의 대출과 구직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직 후 사회관계의 변화 방향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도움 항목들과 높은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데, 즉 평균적으로 주위 사회관계가 양호하게 유지될수록 대출과 구직 도움에 대해 보다 용이하게 생각하거나 기대하게 되며 또한 모든 도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혈연과 비혈연 모두에서 도움에 대한 기대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⁴⁾

〈표 3.29〉 도움 요약변수들과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Person correlation	대출sum	구직sum	격려sum	도움-혈연	도움-비혈연	도움sum
현 가구소득	.264**	.089	-.017	.152**	.136**	.160**
소득감소율	-.137*	-.083	-.022	-.0134*	-.114	-.118
이전가구소득	.263**	.081	-.041	.124*	.089	.158**
교육년수	.155**	.046	-.059	.069	.070	.064
연령	-.075	-.084	-.067	-.032	-.063	-.109
성	-.004	.022	.033	.035	-.019	.001
춘천연고	.008	-.080	-.095	-.023	-.070	-.070
실직기간	-.125*	.079	.038	.014	-.019	.009
실직후-가족대화	.320**	.153**	.189	.179*	.216**	.277**
실직후-음주흡연	-.194**	.051	.124*	.022	-.007	-.010
실직후-사회활동	.258**	.029	.063	.127*	.088	.128*
IMF 귀인	-.124**	-.161**	.083	-.036	-.058	-.081
사회관계	.377**	.172**	.030	.257**	.240**	.258**

* =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 = $p < .01$ 수준에서 유의함

- 4) 상관관계는 변수간에 원인-결과식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위에서와 같이 설명변수들이 인과관계를 갖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해전달의 편의상 인과관계인 듯 기술하기로 한다.

나. 회귀분석

우리는 6가지 도움 요약변수 각각에 대하여 위의 설명변수들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아래의 <표 3.30>은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⁵⁾ 전반적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대출-sum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성공적이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해 각 도움항목에 대해 설명변수들의 순수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면에서 도움이 된다.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출 도움의 경우 회귀식에 포함된 9개의 설명변수들 중에서 실직 후-사회활동, 현가구소득 그리고 IMF 귀인 변수들이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변수들간에 대출도움 정도에 대한 설명력은 나열된 순서와 같다. 해석하자면, 만일 여타 8개 변수에서 응답자가 차이가 없다면, 각각 i) 실직 후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유지될수록, ii) 현재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iii) IMF 상황에 실직의 원인을 돌리는 경향이 작을수록, 사회관계를 통한 대출에 대해 용이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늘어난다.

구직 도움의 경우 IMF 귀인 변수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실직 후 음주·흡연·TV시청 변수, 그리고 춘천연고 변수와 연령변수가 비슷한 수준에서 다소 약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석하자면, 여타 8가지 설명변수들에서 응답자가 차이가 없다면, 각각 i) 실직의 원인을 IMF 상황으로 여기는 정도가 작을수록, ii) 실직 후 음주·흡연·TV시청 양이 늘어날수록, iii) 비춘천연고가 춘천연고에 비해, 그리고 iv)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관계를 통한 구직의 도움을 더 많이 기대하게 된다.

격려 도움의 경우 실직 후 음주·흡연·TV 변수가 유일하게 설명력을

5) 설명변수 중 소득감소율과 이전 가구소득은 현 소득수준 변수와의 공변(collinearity)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실직후-가족대화 변수는 미혼자 표본들을 누락하기 때문에 각각 회귀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나타났다. 해석하자면, 여타의 8가지 설명변수들에서 응답자가 차이가 없다면, 실직 후 음주·흡연·TV시청 양이 늘어날수록 사회관계를 통한 격려와 위안을 많이 받게 된다.

도움의 측면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혈연을 통한 도움('도움-혈연')과 비혈연을 통한 도움('도움-비혈연')은 모두 실직 후 사회활동과 현 가구소득 변수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석하자면, 만일 여타 8가지 설명변수들에서 응답자가 차이가 없을 때, 각각 i) 실직 후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유지될수록, ii) 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혈연적 연고와 비혈연적 연고를 모두에 걸쳐 도움을 더 많이 기대하게 된다. 한편 혈연적 도움과 비혈연적 도움은 모두 실직 후 사회활동과 현 가구소득에 의해 의미 있게 설명되는 점에서 공통되나 그 영향력의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혈연적 도움에 대해서는 실직 후 사회활동이 보다 설명력을 가지나 비혈연적 도움의 경우에는 현 가구소득이 보다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혈연, 비혈연, 제도 등 모든 통로의 도움들을 종합하였을 때('도움sum') 그 정도는 실직 후-사회활동, 현 가구소득, 연령, 그리고 춘천연고 변수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그 설명력의 크기는 나열된 순서와 같다. 해석하자면, 만일 여타 8가지 설명변수들에서 응답자가 같다면, 각각 i) 실직 후 사회활동이 활발히 유지될수록, ii) 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iii)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vi) 비춘천연고인 경우가 춘천연고인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주위나 제도 등을 통한 도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도움 항목에 걸쳐 전반적으로 현 가구소득과 실직 후 사회활동 변수의 설명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혈연적 도움과 비혈연 도움, 그리고 이들에 제도적 통로를 통한 도움을 합친 도움sum 등 모든 도움의 종합적인 요약변수들에서 이들 두 변수는 모두 의미 있는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혹은 보다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실업

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위축·단절되어 있을수록 사회적 관계를 통한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춘천 연고 실업자가 구직도움이나 종합적인 도움('도움sum')에서 비춘천연고 실업자보다 기대수준이 낮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며, 현재로서는 춘천연고인들의 일반적인 연출적 특성에 대한 추론에 의뢰하는 것 외에는 적합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라 하겠다.

〈표 3.30〉 도움 요약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Beta coefficient	대출sum	구직sum	격려sum	도움-혈연	도움-비혈연	도움sum
현가구소득	.212***			.138**	.131**	.151**
교육년수						
연령		-.104*				-.132**
성						
춘천연고		-.105*				-.102*
실직기간						
실직후-음주흡연		.113	.137**			
실직후-사회활동	.256***			.151**	.109*	.156**
IMF 귀인	-.098*	-.176***				
R ²	.184	.070	.046	.051	.048	.075

* = significant at $p < .10$

** = significant at $p < .05$

*** = significant at $p < .01$

(각 모형에서 Beta 계수 중 $p > .10$ 인 것들은 구체적인 수치의 제시를 생략함)

VI. 실업과 사회의식

본 조사에서는 IMF 경제위기와 이후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들을 실업자들에게 질문하여 보았다. 이 설문들을 통해 우리는 실업자들이 현 사회 상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의식의 단편

을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질문된 문항들은 다음의 4가지이며 각 항목에 대해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귀하는 다음의 주장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나의 자녀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하 장기 희망으로 약칭).
- 사람들을 믿고 살기가 점차 어려워진다(사회적 신뢰).
- IMF 이후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가난해 진다(불평등).
- 경기가 좋아져도 나의 어려움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경기 회복).

1. 전체 응답 평균

사회 의식 항목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매우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IMF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은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평균 4.42). 특히 이 주장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렀다.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 혹은 사회적 신뢰의 수준 또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평균 3.72). 경기회복에 따라 개인적으로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다소 부정적인 수준이었다(평균 3.20). 예외적으로 자녀 세대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희망은 다소 긍정적인 수준을 보임으로써 나머지 항목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평균 3.55).

〈표 3.31〉 사회의식 : 전체 응답평균

	주장-나의 자녀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장-사람들을 믿고 살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주장-IMF이후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주장-경기가 좋아져도 나의 어려움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평균	3.5507	3.7194	4.4171	3.2045
중앙값	4.0000	4.0000	5.0000	3.0000
표준편차	.9589	.9451	.6658	1.0558

2. 배경변수별 집단 차이

앞의 절들에서와 동일한 분석 절차를 적용하여, 우선 위 항목들에 대한 배경변수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현 소득층과 연령층에서 비교적 포괄적으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ANOVA; $p < .05$ 기준).

(1) 현 소득층

사회적 신뢰에 대한 평가는 일관되게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편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정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뢰 항목과 비슷하게 저소득층은 부정적인 견해를 그리고 고소득층은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이에 반하여 불평등 심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소득층이 가장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

〈표 3.32〉 사회의식 : 현소득층별 집단 평균 비교

현소득층	주장-나의 자녀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장-사람들은 믿고 살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주장-IMF이후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주장-경기가 좋아져도 나의 어려움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저소득층	3.5249	3.8404	4.4601	3.3732
중간소득층	3.5156	3.5316	4.2716	3.0519
고소득층	3.7368	3.3846	4.6154	2.6800
Total	3.5379	3.7264	4.4250	3.2379

고 있는 점이 다소 역설적으로 주목되고 있다(-- $p < .05$: 신뢰, 불평등, 경기회복).

(2) 연령층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서 전반적으로 30대-40대-50대까지가 보다 부정적이었으며 20대와 60대가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이었다.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정의 호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연령층이 높아 질수록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으로 되고 있다. 이는 앞서 사회관계로 부터의 도움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취업이나 새로운 사업의 시작에 있어서 40대-50대가 갖는 나이에 따른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추론된다(-- $p < .05$: 신뢰, 경기회복).

〈표 3.33〉 사회의식: 연령층별 집단 평균 비교

연령층	주장-나의 자녀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장-사람들은 믿고 살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주장-IMF이후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하는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주장-경기가 좋아져도 나의 어려움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것이다
20대	3.4881	3.5313	4.3588	3.000
30대	3.5732	3.7889	4.4333	3.1839
40대	3.6786	3.9394	4.5303	3.3016
50대	3.5645	3.8730	4.4355	3.4127
60대	3.1667	3.2308	4.2308	3.9167
Total	3.5507	3.7194	4.4171	3.2045

(3) 실직기간

실직기간에 따른 집단간 의식 차이는 신뢰 항목과 불평등 항목에서 발견되었다. 사회적 신뢰에 대하여 실직 1년 이상의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IMF 이후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실직 1년 이상의 집단은 상대적으로 가장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p < .10$: 신뢰, 불평등).

〈표 3.34〉 사회의식 : 실직기간에 따른 집단별 평균 비교

실직기간	주장—나의 자녀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장—사람들은 믿고 살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주장—IMF이후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주장—경기가 좋아져도 나의 어려움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것이다
6개월미만	3.5362	3.6292	4.3890	3.1954
1년이하	3.50055	3.6481	4.4200	3.2523
1년이상	3.4730	3.9302	4.5889	3.2235
Total	3.543	3.7279	4.4618	3.2258

(4) 기타 변수들

교육층 : 경기회복 항목에서 중졸 이하와 고졸 집단은 다같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중립적인 견해를 보인 면에서 대조를 이룬다(평균: 중졸이하 3.37, 고졸 3.31, 전문대졸 이상 2.98).

연고지 : 사회적 신뢰에 대해 춘천 연고 집단이 상대적으로 가장 덜 부정적이었고 강원출신, 기타지역으로 갈수록 부정적 견해가 높아지고 있다(평균: 춘천연고 3.60, 강원연고 3.85, 기타지역 3.91).

최종 직업층 : 사회적 신뢰에 대해 전문·기술직이었던 사람들의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견해가 생산직 출신의 가장 부정적인 견해와 대조를 이룬다(평균: 전문기술직 3.39 vs. 생산 노동직 3.88).

3. 사회의식 편차에 대한 설명

앞 절에서와 동일한 설명변수들을 이용하여 우리는 사회의식 4항목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항목별로 장기희망 변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회귀모형은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설명변수별로는, 모든 항목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실직 후-사회활동 변수는 가장 포괄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아래의 <표 3.35> 참조).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 세대에 대한 희망('장기 희망')에 대한 분석에서는 실직 후 일상에 대한 두 변수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여타 8가지 변수에서 응답자가 동일하다면, 각각 i) 실직 후 사회활동이 활발히 유지되고 있을수록, ii) 실직 후 음주·흡연·TV시청 등에 대한 양이 작을수록, 자녀세대는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강하다.

사람들에 대한 불신('사회적 신뢰')의 경우 실직 후 음주·흡연·TV 변수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IMF 귀인, 현 가구소득, 춘천연고 변수 순서로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해석하자면, 만일 여타 8가지 설명변수들에서 응답자의 차이가 없다면, 각각 i) 실직 후 음주·흡연·TV시청 등의 양이 늘어날수록, ii) 실직이 궁극적으로 IMF 상황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클수록, iii) 현 가구소득이 작을수록, 그리고 iv) 춘천 연고인 보다는 비춘천 연고인이, 사회적 불신에 대한 정도가 높아진다.

IMF 위기 이후 불평등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IMF 귀인 변수가 가장 큰 변별력을 갖고 있었으며 실직 후 사회활동 변수도 높은 변별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항목들에서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석하자면, 만일 응답자간에 여타 8가지 변수들의 수준이 동일하다면 각각 i) 실직에 대한 원인이 궁극적으로 IMF 상황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ii) 실직 후 사회활동이 많이 위축·단절되었을수록, 사회 내에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회복에 따라 자신의 어려움이 나아질 것이냐의 문제에 대하여는 현 가구소득, 실직 후 사회활동 그리고 성의 순서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만일 여타 설명변수 8가지에서 응답자가 차이가 없다면, 각각 i) 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ii) 실직 후 사회활동이 더 많이 위축·단절되었을수록, 그리고 iii) 남성보다는 여성이, 경기가 회복되어

도 자신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강하게 된다.

분석 결과에서 사회적 불신의 정도나 불평등에 대한 비판의식 등 부정적 인식이 IMF 귀인의 경향이 강할수록 높아진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결과라 하겠다. 또한 실직 후 사회활동이 위축되어 감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자신의 상황이 경기회복 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장래 세대에 대한 전망도 보다 비관적이 된다는 사실은 주목되는 점이다. 또한 남성 보다는 여성이 경기회복과 개인상황 개선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비관적이라는 사실도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열등한 위치라는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볼만한 결과라 하겠다.

〈표 3.35〉 사회의식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Beta coefficient	장기희망	사회적 신뢰	불평등	경기회복
현가구소득		-.124*		-.155**
교육년수				
연령				.114*
성				
춘천연고		-.121**		
실직기간				
실직후-음주흡연	-.123*	.169***		
실직후-사회활동	.135**		-.168***	-.121**
IMF귀인		.136**	.206***	
R ²	.051	.099	.109	.076

* = significant at $p < .10$

** = significant at $p < .05$

*** = significant at $p < .01$

(각 모형에서 Beta 계수 중 $p > .10$ 인 것들은 구체적인 수치의 제시를 생략함)

VII. 결과요약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실업의 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실직 경험이 실직자들의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사회 의식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다시 정리해서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직의 원인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333명 중에서 경기불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 가장 많은 41.4%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자발적 실직이 각각 17.7%와 16.2%로 비슷했고, 자신의 능력과 기술부족 9.6%, 기업 혹은 고용주의 잘못된 경영이 8.1%, 기타 5.4%, 그리고 뺨(연줄)이 없어서 1.5%의 순서로 낮아지고 있다. 여기서 자발적 실직자 16.2%(54명)를 제외하고 응답자의 대다수인 83.8%가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실직을 당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들 중에서 실직의 원인을 순수한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돌린 응답자는 전체의 9.6%(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후의 일상생활 변화와 관련하여 평균적으로(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대화는 다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3 =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평균 2.79), 자녀와의 대화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평균 2.95). 한편 소일관행의 측면에서 음주·흡연·TV시청·수면 등 4 항목들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TV 시청(평균 3.89)과 흡연(평균 3.67)은 상당히 늘어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각종 사회활동이나 교제는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변화 변수들의 상관관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가정 내 대화 변수들은 음주흡연 변수들과 부정적인 관련을 갖고 있으며 그러나 사회활동 변수들과는 긍정적인 상관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직 가정이 실업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붕괴되지 않았다면 사회와의 연결도 살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직 후 음주·흡연·TV 시청에 대한 회귀 분석의 결과 타 변수들에서 응답자가 차이가 없다고 할 때, 각각 i) 여성실업자보다는 남성실업자가, ii) 실직에 대하여 IMF 상황에 이유를 돌리는 경향이 많을수록, 그리고 iii) 교육년수가 낮을수록, 실직 후 음주·흡연·TV 소일 경향은 많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실직 후의 사회관계 변화를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관계의 악화 경향은 여타의 사회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녀관계와 부모·형제 관계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를 벗어나서 친인척 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모두 다소의 악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 관계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으며 기타 가족관계, 친인척과 친구관계, 그리고 이웃관계 등 사회적 거리가 멀수록 비교적 덜 타격을 받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월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모든 사회관계에서 보다 많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 현재 월가구소득 25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두 소득층에서는 상당한 악화경향이 발견되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혈연적 관계, 비혈적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관계 모두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관계가 악화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직 후 사회 관계를 통한 도움에 대해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통한 용자는 담보능력의 제한 등으로 인해 상당히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평균 1.97),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여타 연고관계를 통한 기대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웃·동호인이나 옛 직장동료 등을 통한 대출의 어려움도 금융권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친인척(평균 2.13)과 친구(2.24), 그리고 형제(2.31)의 순서로

기대수준이 나아지다가 부모·자녀(2.38)의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대출기대를 나타냈다. 대출의 경우 공식적인 금융제도의 통로가 크게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자녀나 형제 등 가족 관계에 보다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의존도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기대수준에 머물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직에 대한 평균적 기대는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관계에 따른 다소의 편차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말한다면 이웃과 친인척, 옛 직장 동료 관계 등에서의 도움 기대는 가장 낮은 편이며 다음으로 부모·자녀, 형제 등 가족 관계와 정부·시민단체를 통한 도움 기대가 조금 높고, 친구 관계를 통한 도움 기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 등의 가족 관계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의 정서적 도움을 받았으며 비혈연 관계에서는 친구를 통한 정서적 도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인척 관계를 통한 정서적 도움은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옛 직장 동료, 이웃 관계의 순서로 도움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 시민·자선 단체 등을 통한 정서적 도움은 상당히 낮는데, 정서적 도움의 말 그대로 이는 주로 사적 관계를 통해 수수되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대출, 구직, 격려의 세 가지 측면을 비교해 볼 때 우선 대출과 구직 도움의 경우 동일하게 매우 낮은 수준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격려는 다소 나은 편이나 보통 수준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관계를 통한 도움에 대한 기대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사적 관계를 통한 실업 극복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각 측면들에 대해 혈연 관계와 비혈연 관계를 비교해 보면 각 측면들에서 공통적으로 혈연 관계의 도움이 비혈연 관계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출과 특히 격려의 경우 혈연적 관계에서의 도움은 상대적으로 확연히 높은 편이며, 그러나 구직의 경우는 혈연과 비혈연 간의

구분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업자들은 사적 관계를 통한 도움을 별로 기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대수준 안에서는 혈연을 통한 도움을 비혈연을 통한 도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출, 구직, 격려의 각 측면 내에서 모두 혈연적 도움의 정도는 비혈연적 도움의 정도와 상당히 높은 양의 상관을 맺고 있는 점이 조사되었다. 즉, 내용이 무엇이든 혈연적 관계의 도움을 많이 기대하거나 받는 실직자는 비혈연적 관계에서의 도움도 역시 많다는 것이다. 한편 대출 도움과 구직 도움 사이에, 그리고 구직 도움과 정서적 도움(‘격려’)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나, 이에 반하여 대출 도움과 정서적 도움 사이에는 관련이 상당히 약하거나 외미 없다고 나타난 것이 특징이나.

도움의 측면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혈연을 통한 도움과 비혈연을 통한 도움은 모두 실직 후 사회활동과 현 가구소득 변수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석하자면, 만일 여타 설명변수들에서 응답자가 차이가 없을 때, 각각 i) 실직 후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유지될수록, ii) 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혈연적 연고와 비혈연적 연고를 모두에 걸쳐 도움을 더 많이 기대하게 된다. 한편 혈연적 도움과 비혈연적 도움은 모두 실직 후 사회활동과 현 가구소득에 의해 의미 있게 설명되는 점에서 공통되나 그 영향력의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혈연적 도움에 대해서는 실직 후 사회활동이 보다 설명력을 가지나 비혈연적 도움의 경우에는 현 가구소득이 보다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의 경험에 사회의식에 미친 영향을 보면, 사회의식 항목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매우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IMF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은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특히 이 주장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

자의 절반에 이르렀다. 사람들에게 대한 보편적인 믿음, 혹은 사회적 신뢰의 수준 또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에 따라 개인적으로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다소 부정적인 수준이었다. 예외적으로 자녀 세대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희망은 다소 긍정적인 수준을 보임으로써 나머지 항목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신뢰에 대한 평가는 일관되게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편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정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뢰 항목과 비슷하게 저소득층은 부정적인 견해를 그리고 고소득층은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이에 반하여 불평등 심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소득층이 가장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점이 다소 역설적으로 주목되고 있다.

분석 결과 사회적 불신의 정도나 불평등에 대한 비판의식 등 부정적 인식이 IMF 귀인의 경향이 강할수록 높아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또한 실직 후 사회활동이 위축되어 감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자신의 상황이 경기회복 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장래세대에 대한 전망도 보다 비관적이 된다는 사실도 주목되는 점이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경기회복과 개인상황 개선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업과 지역사회

인 쇄 2000년 7월 5일

발 행 2000년 7월 10일

편 집 한림대학교

발행인 한 달 선

발행처 한림대학교 출판부

등 록 제48호(1983. 3. 10)

주 소 200-702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번지

TEL: (0361) 240-1720~1722

FAX: (0361) 241-8352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9,000원

ISBN 89-87086-25-9 93330